

2017

한국서양사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 역사 속 민주주의 위기와 대안 모색

2017.

5. 26. FRI

-

5. 27. SAT

서울여성플라자 회의실



한국서양사학회

since 1957

**주최**

한국서양사학회, 5.18기념재단

**주관**

한국서양사학회 창립60주년 기념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후원**

한국연구재단, (주)한국학술정보

---

2017 한국서양사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 역사 속 민주주의 위기와 대안 모색

---

일 시 | 2017년 5월 26일 (금) - 5월 27일 (토)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회의실

주 최 | 한국서양사학회, 5.18기념재단

주 관 | 한국서양사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후 원 |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정보



#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서양사학회’가 올해로 창립 60돌을 맞았습니다. 한국서양사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국민의 ‘촛불혁명’으로 정부 교체를 이룩한 현 시점에서 ‘민주주의의 위기와 그 극복을 위한 대안’을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를 열게 되어 더욱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학술대회에서 그동안 한국서양사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주신 한국서양사학계의 원로 선생님이신 서강대 명예교수 이보형 선생님, 서울대 명예교수 나종일 선생님, 인제대 명예교수 이광주 선생님, 서강대 명예교수 차하순 선생님께 학회 전체를 대신하여 공로패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도 큰 기쁨입니다.

이 학술대회를 지원해주신 5.18기념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정보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축사를 해주시는 5.18기념재단 차명석 이사장님과 서울대 명예교수 나종일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학기 말에도 귀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학술대회 준비에 지난 1년 동안 수고를 해주신 한국서양사학회 창립 60주년 기념학술대회 조직위원 선생님들과 한국서양사학회 임원선생님들의 노고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서양사학회는 언제나 한국사회의 변화와 함께 하면서 고유한 학문적 연구뿐 아니라 서양의 역사 경험 속에서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비판적·성찰적으로 연구하는 실천적 학술 활동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런 학회 전통 속에서 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그 극복을 위한 대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민주주의의 다양한 양상과 성장·발전 과정 등을 앞서 경험한 서양 각 지역의 역사에 대한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이해를 통해, 민주주의 후퇴와 위기, 배경과 원인, 대안과 해법을 위한 노력과 움직임에 대해 논쟁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서양의 민주주의 역사 경험 자체를 논하더라도 서양 민주주의와 한국 민주주의의 상호 관계, 공통성과 차별성 등에 대한 비교사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향후 한국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보다 바람직한 민주주의 모델의 모색과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내일 토요일까지 1박 2일동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제52대 한국서양사학회장  
한국서양사학회 창립 60주년 기념학술대회 조직위원장  
강성호 배상

# 축사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한국서양사학회의 여러 학자 분들, 내빈 여러분, 그리고 각계의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한국서양사학회 60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37년 전 신군부의 군사반란에 맞서 5월 18일에 시작된 5.18민주화운동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1980년 5월 26일 신군부는 광주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최종 진압작전을 예고한 상황이었고 이 시각 광주시민들은 이에 맞서 전남도청에서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국군 최정예 공수부대에 맞서 케케묵은 구식 무기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정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남도청에는 살겠다고 남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예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았던 것입니다. 결국 5월 26일 그들이 남은 것은 계엄군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으리라는 산술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군부의 불의와 야만음, 그리고 광주시민의 의로움을 죽음으로써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80년 5월 26, 27일 그들이 남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실정법은 전두환 등 신군부를 내란목적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들의 의로움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난 37년 동안 진행된 5.18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운동에 역사학자들의 특별한 노고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다양한 해석들이 경합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5.18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최초에 서양사의 렌즈를 통해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양의 경험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와 성찰이 없었다면 5.18이라는 복합적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매우 협소하고 제한적인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한국서양사학회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과거 서양의 경험이 우리의 역사와 경험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해주었듯이, 5.18이라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경험이 서양사 연구자들에게도 다른 사회의 역사와 경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렌즈가 되어주길 기대해 보게 됩니다.

다시 한 번 5.18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과제를 진지하게 토론하는 장을 마련해 주신 서양사학회 임원 분들과 실무자 분들,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모든 연구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경청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5·18기념재단 이사장

차명석

# 프로그램

## 2017년 5월 26일 (금)

12:00 - 13:00 **대회 등록**

13:00 - 14:30 **개회**

개회사:

축사:

사회:

민유기(경희대)

### 제1부 서양사 연구와 한국사회: 회고와 전망 I

13:40 - 15:00 **패널토론**

권원수(서울교대) / 김택현(성균관대) / 최혜영(전남대) /  
손세호(평택대)

사회:

양희영(서울여대)

### 제2부 서양사 연구와 한국사회: 회고와 전망 II

15:15 - 16:55 **패널토론**

권형진(건국대) / 김남섭(서울과기대) / 설혜심(연세대) /  
이용재(전북대) / 장문석(영남대) / 차용구(중앙대)

사회:

박진빈(경희대)

### 제3부 우리에게 서양사란 무엇인가?

17:10 - 18:00 한국서양사학회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역사에세이 공모전 수상자 발표

사회:

홍용진(서울시립대)

18:00 - 20:00 만찬

## 2017년 5월 27일 (토)

### 학문후속세대 발표회

09:00 - 09:50 옥타비아누스/아우구스투스 와 아폴로 숭배

발표: 안재은(서울대)

영국의 제국 프로파간다와 전쟁미술, 1939-1945

발표: 조호희(고려대)

사회:

이용일(대구교대)

#### 제4부 보수주의와 민주주의

- 10:00 – 11:45 식민지 보수주의-19세기말 알제리 반유대주의 폭동과 시민권  
    발표: 문종현(세종대)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우익들: 분열과 논거 약화  
    발표: 박상철(전남대)  
"트럼프 민주당원"의 탄생: 2016년 미국 대선과 백인 노동계급  
    발표: 이찬행(성균관대)
- 좌장:  
이영림(수원대)
- 토론:  
김용우(교원대) /  
김정욱(인천대) /  
박지배(한국외대)
- 11:45 – 12:40 오찬

#### 제5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

- 12:40 – 14:25 프랑스혁명기의 수동시민과 민주주의  
    발표: 박윤덕(충남대)  
최초의 러다이트운동과 기계파괴의 정치경제학: "기계 파괴"  
와 "기계 규제"의 정치적 역설(emphasis)  
    발표: 박찬영(명지대)  
라틴아메리카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포퓰리즘의 출현-아르헨  
티나의 사례  
    발표: 박구병(아주대)
- 좌장:  
황보영조(경북대)
- 토론:  
권윤경(공주대) /  
염운옥(고려대) /  
김윤경(서울대)

#### 제6부 민주주의 위기와 대안 모색

- 14:40 – 16:25 민주주의 위기를 넘어  
- 독일68의 구심점 APO(의회외부저항운동)의 '위대한 거부'  
    발표: 정대성(부산대)  
세기 전환기 반자본주의 운동과 신(新)사회운동의 딜레마:  
탈(脫)물질주의와 문화주의 이론의 한계와 참여민주주의의 변질  
    발표: 박우룡(한국외대)  
아렌트와 소렐의 폭력론 비판: 대안으로서의 고대 그리스 시민사회  
    발표: 최자영(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 좌장:  
김창성(공주대)
- 토론:  
정용숙(중앙대) /  
신동규(창원대) /  
김경현(홍익대)

#### 제7부 서양사의 거울로 본 한국 민주주의

- 16:40 – 17:45 5.18광주항쟁의 성격과 세계사적 위상  
    발표: 최영태(전남대)  
    종합토론: 나인호(대구대) / 김동춘(성공회대) / 박태호(서울과기대)
- 17:45 – 18:00 한국서양사학회 공로상 및 우수석사논문상 시상
- 18:00 – 20:00 만찬
- 좌장:  
곽차섭(부산대)

# 자료집 목차

## 제1부 서양사연구와 한국사회: 회고와 전망 I

- ▶ 에고히스토리 토크쇼 1부 패널 답변 3

## 제2부 서양사연구와 한국사회: 회고와 전망 II

- ▶ 에고히스토리 토크쇼 2부 패널 답변 19

## 제3부 우리에게 서양사란 무엇인가?

- ▶ 한국서양사학회 60주년 기념 설문조사 45

## 학문 후속세대 발표회

- ▶ 옥타비아누스/아우구스투스와 아폴로 숭배 안재은 55
- ▶ 영국의 제국 프로파간다와 전쟁미술, 1939-1945 조호희 61

## 제4부 보수주의와 민주주의

- ▶ 식민지 보수주의-19세기 말 알제리 반유대주의 폭동과 시민권 문종현 73
- ▶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우익들: 분열과 논거 약화 박상철 83
- ▶ “트럼프 민주당원”의 탄생: 2016년 미국 대선과 백인 노동계급 이찬행 91

## 제5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

- ▶ 프랑스혁명기의 수동시민과 민주주의 박윤덕 99
- ▶ 최초의 러다이트운동과 기계파괴의 정치경제학: “기계 파괴”와 “기계 규제”의 정치적 역설(emphasis) 박찬영 101
- ▶ 라틴아메리카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포퓰리즘의 출현-아르헨티나의 사례 박구병 114

## 제6부 민주주의의 위기와 대안 모색

- ▶ 민주주의 위기를 넘어 정대성 125
  - 독일 68의 구심점 APO(의회외부저항운동)의 ‘위대한 거부’
- ▶ 세기 전환기 반자본주의 운동과 신(新)사회운동의 딜레마: 탈(脫)물질주의와 문화주의 이론의 한계와 참여민주주의의 변질 박우룡 133
- ▶ 아렌트와 소렐의 폭력론 비판: 대안으로서의 고대 그리스 시민사회 최자영 145

## 제7부 서양사의 거울로 본 한국 민주주의

- ▶ 5.18광주항쟁의 성격과 세계사적 위상 최영태 155



---

## 제1부 서양사연구와 한국사회: 회고와 전망 I

---

사회 : 양희영(서울여대)

▶ **패널토론:**

김원수(서울교대) / 김택현(성균관대) / 손세호(평택대) / 최혜영(전남대)



## 에고히스토리 토크쇼 1부

김원수(서울교대)

### I. 서양사 연구자로서의 성장 배경과 계기

#### 1.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특별히 서양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서양이란 관심대상에서 비판대상에서 반성대상으로의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다.  
중고등학교 시 60년대 구미 록뮤직과 대중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대학 시절 근대화와 식민화와 관련한 제국주의와 국제관계에 대한 학문적 관심  
세계사속의 한국사에 대한 사학사 인식의 필요성

#### 2. 직업 연구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입니까?

1970년대 한국 역사학계의 외교사/국제관계사 연구의 결여 및 외교사/국제관계사에 대한 관심  
1980년대 초 일본의 역사왜곡 본격화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연구협의의 관계사 연구 참여와 역사학회의 「회고와 전망」에 외교사 영역 신설  
1980년대 초 역사학회의 「러일전쟁과 일본의 한국침략」 공동프로젝트에 참여.

### II. 정치사회적 변화의 영향

#### 1. 역사가로서 선생님께서 인상적이었던, 또는 영향을 주었던 사건, 현상, 경험(한국사, 세계사)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가. E.H.Carr 사후 1984-5, History today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획  
오늘날 역사학의 다원화에 대한 관심과 역사비평사의 『오늘날의 역사학』(1992) 공동 번역 주도. 신문화사예의 관심  
나. 90년대 냉전체제의 해체에 따른 오늘날의 역사학에 대한 관심과 2000년 8월 6-13일 오슬로에서 개최된 19차 International congress of historucal science의 millenium congress 주제(main theme)의 Patrick O'Brien, Jerry Bentley Reinhart Koselleck, Georg Iggers 등의 구상 지구화의 역사화와 글로벌 히스토리에 대한 관심의 계기.

#### 2. 서양사 연구자에게 한국사회의 문제나 정치현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문제에 대한 사고를 자극한 구체적 경험 또는 계기가 있는지요? 또는 이 문제와 관련된 사고의 변화를 겪으셨는지요?

1980년 대 이후 지속적인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사학사적 접근의 필요성  
1990년대 이후 민주화에 따른 역사청산에 대한 역사학의 과제

### III. 전공영역 선택 배경과 이유

#### 1. 그간의 연구를 어떤 관점 또는 이유에서 진행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근현대사에 있어서 왜 한반도에는 열강의 개입과 전쟁위기가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한 국제관계와 세계사적 접근의 필요성

#### 2. 선생님의 연구 주제나 연구 방법, 연구 과정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혹은 나름의 성취나 의미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움: 한국사 연구자인지 동양사 연구자인지 서양사 연구자인지에 대한 비판  
외교/ 국제관계를 역사학과 접촉하는데, 그리고 오늘날의 역사 연구에 있어서 국제관계와 세계사의 상관성을 역사화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성과 : 러일전쟁 연구에 있어서 기존의 만한문제에 편향된 관점에서 한국문제를 연계하여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계함으로써 러일전쟁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려는 시도. : 용암포사건의 역사화(실증)와 동 사건을 동시대 국제관계사와 연계.

### IV. 70년대 학번 연구자 세대의 특징.

#### 70년대 학번 서양사연구자 세대가 갖는 연구자 문화의 특징이나 학문연구의 경향이 있을까요? 세대적 의의와 한계를 (앞세대, 뒷세대와 비교해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역사학의 하위 영역에의 전문성 확립 노력  
식민사관과 국가사관의 극복의 교량적 역할  
사관의 편향성 극복의 견인차 역할

### V. 서양사학계의 과제와 전망.

#### 1. 서양사학계 내적으로는 어떤 연구 주제나 관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역사학의 하위영역으로서 현재사(현대사) 연구 영역의 확대와 세계사 연구 영역의 확립

#### 2. 한국사회에서 서양사학 또는 서양사학계가 의미를 가지려면 어떤 사회문화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탈국가사를 위한 한국적인 이론적 합의 도출  
세계사 연구와 교육의 활성화 노력 및 제도적 장치 마련

## 에고히스토리 토크쇼 1부

김택현(성균관대)

1.

광주 민중 항쟁으로 시작된 지난 1980년대는 참으로 험악하고 야만적인 시절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을 지배한 정권은 지배를 행하긴 했으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는 없었다.

학문을 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시절의 엄혹함이 오히려 연구자들로 하여금 현실과 유리된 채 아카데미즘에 빠지는 것을 제어했다고 할 수 있다. 젊은 연구자들은 이 시기에 분출된 저항 운동과 보조를 맞춰 여러 학문 분과에서 ‘운동으로서의 학문’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새로운 연구단체들을 구성했다. 이들은 기존 학계의 폐쇄적이고 개인적인 연구 행태와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면서 집단적으로 연구활동을 조직했고, 실천적이고 과학적이고 당파적인 연구를 지향했다. 그 연구의 지침이 된 것은 주로 마르크스주의였다. 은밀하게 유통된 일본 서적의 영인본이라든가 혹은 소련의 과학 아카데미에서 발간한 영문판 서적들의 영인본을 통해서 마르크스주의를 본격적으로 접하게 된 많은 연구자들은, 비록 전공분야는 다르더라도, 그것을 무기로 삼아 현실의 변혁운동에 나름대로 기여하고자 했다. 마르크스주의는 젊은 연구자들이 기존 학계의 헤게모니에 도전하기 위해 다시 불러낸 공통의 저항 코드였다. 물론 변혁운동과 학술운동 내부에서 정세분석이라든가 한국사회의 성격이라든가 변혁운동의 전략과 전술 등의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때로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양상을 보여 주면서 전개되기도 했지만, 각 정파들은 다른 정파와의 논쟁에서 자신들의 이론을 정교화하기 위해 애썼고 그것을 통해 변혁이론의 심화에 기여했다.

당연히 역사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새로운 역사연구 단체들이 등장했다. 많은 역사연구자들은 (마르크스주의의 이론과 방법으로) 자본주의의 이행과 발전, 농민·노동자 등 민중의 저항운동, 식민지 민족해방운동, 사회주의 혁명 등을 역사학의 의제로 설정함으로써 한국 역사학계의 학문적 지형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다. 이 시기는, 당시의 연구자들에 의한 마르크스주의의 수용이 다소 교조적이고 미숙했다하더라도, 비판적 성찰의 대상은 될지언정 결코 부정과 비난과 비웃음과 청산의 대상은 될 수 없는 소중한 시기였다.

그러나 80년대 말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파산은 이곳의 변혁운동과 연구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혼란을 가져다주었다. 87년 대선에서의 합법적 승리에 도 불구하고 아직도 헤게모니를 잡지 못하고 있던 지배집단은 그 세계사적 변화를 기회로 점차 헤게모니를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 국내외의 정세 변화 속에서 1990년대에 들어와 변혁운동세력과 진보적인 연구자 단체들은 점차 이전의 운동노선과 학술운동의 방향을 재점검하고 반성하면서, 혹은 부정하고 청산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기 시작했다.

그 대안의 모색기에 마르크스주의를 상대화한다든가 아예 폐기함으로써 지난 시기의 실천적인 학술운동을 손쉽게 정리해 버리는 경향이라든가, 지난 시기를 추상적 이론과 관념성이 지배한 시기로 보고 새삼 학문연구의 현실성과 구체성을 주장하는 실증주의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모두는 아카데미즘으로의 후퇴, 지배 권력에의 굴복으로 보였다. 특히 자본주의와 시민사회 비판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의 포기는 현실 비판을 위한 유력한 이론적 무기를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1980년대에 이 땅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실천적인 학술운동은 필자와 같이 서양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들에게 자기 전공에 대해 적지 않은 자괴감을 갖게 했고 연구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고민하게

했다. 물론 서양사 연구자들 중에는 예컨대 서양 민중의 저항운동을 공부하거나 서양의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을 통해, 혹은 마르크스주의의 이론과 사회주의 혁명의 역사적 경험을 탐구하는 것을 통해 한국의 변혁운동에 나름대로 기여하고자 했다. 그 같은 시도는 의미 있는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거나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서양사 연구자의 고민을 연구 소재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것이었고, 연구의 소재가 진보적이라 해도 그것이 연구(자)의 급진성을 곧바로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양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는, 정세 변화에 따라 여러 학문 분야에서 새로운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던 90년대에 들어 와서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고민스런 문제였다.

이 고민은 서양사 연구자로서의 '위치(location)'에 대한 고민이었다. 물론 그 위치는 단지 지리적 위치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론적, 정치적 위치였다.

이 위치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던 중 '서발턴 연구 그룹'의 작업을 접하게 되었다. 서발턴 연구 그룹은 역사 연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이론적인 문제들을 새롭게 제기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역사학계에서 지배적인 민족/국민 담론과 근대의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극을 주었고, 나아가 과거에 관한 보편적인 지식체계/분과학문으로서의 근대 역사학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 2.

역사학은 19세기 유럽의 대학에서 독자적인 연구대상을 갖는 분과학문으로 제도화되었고, 합리적인 연구방법과 글쓰기 형식을 지닌 근대적인 지식체계로서의 틀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유럽의 19세기에 자본주의 경제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지배적 지위를 장악하게 된 부르주아들은 민중(people)을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장악한 정치적, 법적 지배기구인 국가 안에 통합했다. 이 국민-국가의 지배자들은 시민들을 자신들의 지배의 기반으로 양성하기 위해 근대적인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유럽 대학에서 근대 역사학은 부르주아가 지배하게 된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과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적 과정을 가르치는 분야가 되었다. 그 역사적 과정이란 굴곡은 있었으나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 자본의 역사였다. 이렇듯 근대 역사학에서의 연구와 서술의 기본 틀은 자본의 역사를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표현하는 국민-국가가 되었으며, 유럽의 부르주아는 그런 식으로 과거를 구성함으로써 그들의 현재의 헤게모니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했다. 그 과정에서 역사학은 국민-국가와 불가분의 권력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성된 근대적 지식체계와 분과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은 19세기 서양의 제국주의적 지배 과정에서 비서양 지역에 이식되어 타자에 대한 서양의 지적 우월성과 문명화 사명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제국주의에 협력하는 식민 엘리트들을 양성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기능했다. 식민지 역사교육의 결과 식민 엘리트들도 식민지의 역사가 근대로 전진해야만 하는 것으로, 독자적인 국민-국가를 갖는 것은 그 전진을 (국민-)주체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정치적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엘리트주의적인 식민지배 이데올로기의 세례를 거쳐 근대와 근대성은 이제 보편적인 역사과정과 가치규범이 되었고, 그것 이외에는 역사적 발전이란 것을 상상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국민-국가는 근대(성)의 보편적인 실현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 틀이 되었다.

그 동안 알게 모르게 한국사 연구는 국민(민족)주의라는 협소한 관점에 서있는 반면 서양사 연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서양사 연구도 주로 영국사나 독일사나 프랑스사와 같이 국민-국가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와 똑같이 국민-국가 중심적인 역사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역사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근대라든가 전근대 혹은 고대라든가 중세 등의 개념들, 혹은 국민-국가와 시민사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이성과 합리주의, 진보와 발전 등의 개념들은 서양에서 생성된 것들이다. 그리고 역사학에서 그 개념들은 단순히 시간상의 전후관계라든가 객관적 사실을

지시하는 중립적이고 물가치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가치판단이 게재되어 있는 것들로 소비되어 왔고, 그에 따라 그 개념들에 일치하는 사실들을 만들어 내지 못한 비서양 지역의 역사와 사회는 늘 후진적이고 정체된 사회로 규정되어 왔다. 그 같은 규정에 맞서 비서양의 역사에도 그러한 개념들로 지시될 수 있는 사실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서양의 역사의 모방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역사학이든 서양의 역사학이든, 혹은 한국의 한국사든 동양사든 서양사든, 역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식민 담론으로서의, 또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근대 역사학의 이론과 개념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의 역사와 사회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만큼 세계는 지금 서양에서 기원하는 자본의 전지구적 지배 하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를 연구하고 현실을 인식하는 데에서 권력으로서의 자본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즉 서양 중심주의적 근대성 및 그것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식민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대성과 식민성에 꿈쩍없이 포획되어 있지만 그것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난제의 해결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역사학의 경우 그 불가능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 역사학과 ‘거리 두기’가 필요할 것 같다. 다시 말해 ‘어떻게’ 역사를 연구할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역사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해 봐야 하며, 거기에서 역사연구자들의 자기비판이 시작되어야 한다. 즉 비판적 역사학에서 역사학 비판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요구가 역사연구자들로 하여금 역사학을 거부하라는 것은 아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역사학이 없어지는 것도 아닐 테고, 역사학이 존재하는 한 역사연구자들은 계속 생겨 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역사를 연구할 수밖에 없다면, 그 동안 식민적인 근대 역사학에서 중심적이었던 담론을 그 내부로부터 비판하여 그것의 모순을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기존 역사 담론의 질서를 해체시키는 것, 그 동안 역사학의 정체성을 뒷받침 해 온 지배적인 명제들이나 개념들을 의심하거나 다르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는 말이다.

이것을 대안 없는 비판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것이 비판 없는 대안보다는 나을 것이다. 대안은 지배 담론이나 권력 외부의 자유로운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같은 외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안은 지배 담론과 권력 내부에서의 비판이 열여섯히는, 그 내부의 틈새로부터 찾아야 하는 것이다.

### 3.

최근 서양사 분야에서는 현실에서 발생하거나 제기되는 국내외의 ‘시사적인’ 문제들과 유사한 사례들을 과거의 서양에서 찾아내 연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서양사 연구자가 아카데미즘에서 벗어나 현실의 문제에 실천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함축하며, 그러한 실천에서 서양사 연구의 현재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욕망을 시사한다.

그러나 과연 연구 소재가 시사적인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해서 역사연구의 현재성과 실천성이 담보되는가?

현재하는 것은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과거에 관한 서사/담론들이다. 따라서 역사연구의 현재성과 실천성은 현실의 사건들과 유사한 과거의 사건들의 진상이나 실체를 탐구하는 데에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에 관한 현존하는 (과거의 혹은 현재의) 지식/담론들이 어떻게 지금의 아카데미와 현실 사회에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대항-이데올로기적 위치에서 검토하고 비판하는 데에 있다.

김택현

## 에고히스토리 토크쇼 1부

손세호(평택대)

### I. 서양사 연구자로서의 성장 배경과 계기

#### 1.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특별히 서양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고교 시절에 독서에 탐닉하여 윈스턴 처칠의 『제2차 세계대전사』, 『후르쇼프 회고록』, 『광복20년』, 『한국전쟁』, 『태평양전쟁』 등의 역사 관련 책을 읽으며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학에 입학해 신학을 전공하면서도 1학년 때부터 John Bright의 *A History of Israel* 등과 같은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책을 흥미롭게 읽은 기억이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서양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대학 4학년 재학 중 군에 입대해 복무 중 1980년 5월 광주민주화 항쟁과 관련된 일로 서울 시내 대학에 군인으로 주둔하며 당시 전공이었던 신학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내 존재 문제를 역사가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학 졸업 후 역사를 전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다. 대학원 입학 준비하며 대학원 전공이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로 세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서양사로 전공을 선택하게 된 것은 대학에서 이미 서양 문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책을 완독한 바 있는 데다 학부에서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현대교회사, 한국교회사 등 이른바 서양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자가 붙은 과목을 많이 들었기에 서양사를 전공하는데 많은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더불어 역사를 전공하기로 마음먹은 후 학부 졸업 전에 사학과에서 최선홍, 김정수, 김용섭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며 역시 서양사가 내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 2. 직업 연구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입니까?

고등학교 시절부터 갖고 있던 생각 중 하나는 내가 고등학교 재학 중 세계사 선생님과 지리 선생님께서 수업을 들으면서 인생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게 되었기에, 나도 선생이 되어 학생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대학 재학 중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 후 교사가 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 4년간의 교육만으로는 내가 과연 학생들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할 수 있다면 공부를 더 한 다음에 교단에 서자라는 마음을 먹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석사만 마치고도 시간강사로 대학 강단에 설 수 있는 환경이었고, 막상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니 대상이 중고생은 아니라도 대학생들에게 내가 선생으로서 강의를 통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길하겠다는 생각에 대학 선생의 길을 택하고자 하여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직업적 연구자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 II. 정치사회적 변화의 영향

1. 역사가로서 선생님께서 인상적이었던, 또는 영향을 주었던 사건, 현상, 경험(한국사, 세계사)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역사가로서의 길을 택하게 된 사건은 앞서 언급한대로 광주민주화 항쟁이 커다란 계기가 되었고, 이후 대학원 박사과정을 다니던 시기에 여러대학의 서양사 전공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모여 서양사연구자협의회를 조직해 스터디 그룹 활동을 하던 중 일어난 이한열 열사 사건과 이어진 6·10 항쟁 등의 일련의 민주화 투쟁이 서양사 연구를 통해 이 땅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2. 서양사 연구자에게 한국사회의 문제나 정치현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문제에 대한 사고를 자극한 구체적 경험 또는 계기가 있는지요? 또는 이 문제와 관련된 사고의 변화를 겪으셨는지요?

대학원 석사과정부터 미국사를 전공했기에, 80년대를 지나오면서 반미주의가 팽배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은 미국사 연구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했다. 당시 친미나 반미나의 이분법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이고 또 파헤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천착해야 하겠다는 경험을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역사를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III. 전공영역 선택 배경과 이유

1. 그간의 연구를 어떤 관점 또는 이유에서 진행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사를 전공으로 선택하게 된 배경은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생각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역사를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알고 싶은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이었다. 그 이유는 당시 그 나라들이 가장 잘 나가고 있었기에 그들의 역사를 통해 국민성이라든가 선진국이 된 배경 등을 배워 우리나라도 그들처럼 잘 살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대학원을 서강대로 진학했을 때 마침 우리나라 미국사 학계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이보형 선생님이 계셨는데, 지금 청주대에 계신 조승래 선배가 미국사를 전공해보면 어떻겠냐는 권유를 했을 때 앞서 말한 나라 중 한 나라가 미국이었기에 거리낌 없이 미국사를 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석사논문을 미국 노예제폐지 운동가인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William Lloyd Garrison)을 주제로 삼게 된 것은 당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을 위한 운동 중 하나를 택해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에드워드 벨러미(Edward Bellamy)로 택하게 된 이유 역시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가 없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해 유토피아적이기는 하나 미래 사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벨러미를 통해 당시 무너져 내리고 있던 현실 사회주의의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기도 했다.

2. 선생님의 연구 주제나 연구 방법, 연구 과정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혹은 나름의 성취나 의미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사를 전공하면서 연구 주제, 방법, 과정 등에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지만, 당시 미국사를 전공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왜냐하면 서양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들로부터도 그들이 지닌 유럽중심주의적 사고로 말미암아 미국사에 무슨 깊이가 있고 뭘 배울게 있느냐는 식의 일종의 차별을 겪기도 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미국사 연구자의 수가 유럽사 연구자에 비해 월등히 적었기 때문에 학문적 외로움이랄까 하는 것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사회의 반미주의적 분위기로 인해 미국사를 연구한다고 하면 당연히 친미주의자이겠거니 하고 색안경을 쓰고 보는 그런 시각이 불편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사를 전공하는 소장 연구자들도 많아졌고, 유럽사와 그 밖의 서양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들도 그런 편견을 갖지 않는 것 같아 조금은 외로이 미국사 연구를 해 온 사람의 입장에서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하면 그것이 성취감이라고나 할까?

#### IV. 70년대 학번 연구자 세대의 특징

##### 70년대 학번 서양사연구자 세대가 갖는 연구자 문화의 특징이나 학문연구의 경향이 있을까요? 세대적 의의와 한계를 (앞세대, 뒷세대와 비교해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70년대 학번 연구자들은 박정희의 유신 시대를 대학이나 대학원 시절에 직접 겪어야 했던 세대이기에 아무래도 독재와 억압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민감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당연히 사회주의나 노동사 등 민중의 해방과 관련한 연구에 많이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선 세대의 서양사 선구자들은 아무래도 서양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제한된 가운데 무척 열악한 연구 환경에서도 주춧돌을 놓는데 기여한 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 70년대 학번 연구자들은 뒷세대와 비교해서도 끼여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세대적 의의와 한계를 짚어보자면 내 생각에는 이른바 국내파와 유학파가 공존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학문적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했던 세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 뒷세대의 경우에는 유학파가 주류를 이루면서 70년대 학번 연구자들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에서 다양한 연구주제로 국내 서양사 학계의 발전에 커다란 보탬을 하고 있지만, 점차 학문 후속 세대가 줄어드는 경향이 우려스럽기도 하다.

#### V. 서양사학계의 과제와 전망.

##### 1. 서양사학계 내적으로는 어떤 연구 주제나 관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서양 여러 나라의 현지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신진 연구자들이 돌아오면서 연구 주제도 무척 다양해지고 심도 있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한편 너무 세분된 연구 주제들로 인해 서양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대화의 단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각 전공별로 공통의 주제를 묶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오래전부터 있어오기는 했지만, 당장의 시의성에 끌려 눈길을 끄는 주제보다는 인기는 없어도 또한 서양의 서양사 학자들의 관심사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꼭 풀어야 할 주제들을 선정해 공동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2. 한국사회에서 서양사학 또는 서양사학계가 의미를 가지려면 어떤 사회문화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사 연구자들이 미국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중요한 시사 문제들에 대해 미국사 연구자들에게 글을 요청하거나 인터뷰를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우리의 경우도 극소수의 서양사 연구자들이 최근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서양에서 일어나는 중요 사건에 관해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 잘 모르는 정치인과 언론에게 기고나 인터뷰 등을 통해 전문가로서 활동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서양사학의 위상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 에고히스토리 토크쇼 1부

최혜영(전남대)

### I. 서양사 연구자로서의 성장 배경과 계기

#### 1.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특별히 서양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하니 좀 우습기도 한데요, '진리를 깨닫기'에 좋은 학문인 것 같아서 사학과를 택했습니다. 당시 우리 학번 (77학번)은 계열별 모집으로 1학년 성적으로 2학년 올라가면서 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저는 인문계열 전체 수석으로 사학과를 지원했어요(성적이 되는 친구들은 대개 영문과, 국문과 가던 상황). 처음 사학과 들어갈 때는 프랑스 혁명사에 관심이 있었는데, 수업 중에 동양사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서 졸업 논문은 동양사에 대한 것을 썼어요. 그 교수님이 대학원 오라고 하셨지만, 대학 졸업하면서 직장을 잡았어요, 아마 그 때 갔으면 동양사를 전공했겠지요. 몇 년 뒤 대학원에 진학할 즈음에는 크리스티교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기독교 관련 역사를 하고 싶어서 서양사로 전환했습니다.

#### 2. 직업 연구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입니까?

사학과에 지원해서 갔는데, 사실 대학교 때 강의를 들으면서 왠지 역사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해서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직장을 잡았어요. 직장이 무척 즐거웠지만, 무언가 허전한 맘이 있었는데, 아마도 연구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박사 과정을 수료한 다음에는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유학 생활에 올랐습니다. 사표 낼 때 아는 분들 대부분이 반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안정된 직장을 왜 버리는지, 결혼은 언제 할 것인지, 유학해서 학위를 받을 수 있을지, 학위를 받는다고 해도 돌아와서 어떻게 될지 등등의 이유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사학과를 택했던 이유처럼, 그냥 연구하는 길이 저의 길 같았고, 또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학위 받고 돌아와서는 왜 사람들이 반대하셨는지 현실적인 면에서 이해도 되었습니다.

### II. 정치사회적 변화의 영향

#### 1. 역사가로서 선생님에게 인상적이었던, 또는 영향을 주었던 사건, 현상, 경험(한국사, 세계사)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 2. 서양사 연구자에게 한국사회의 문제나 정치현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문제에 대한 사고를 자극한 구체적 경험 또는 계기가 있는지요? 또는 이 문제와 관련된 사고의 변화를 겪으셨는지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친구들이 유신체제 반대 데모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교 휴교령이

내려져서 한 학기 두 번 정도 수업하였던 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학교 정문 앞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학교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교수님이 가정방문도 오시고,... 그런데 시장에 가면 참 남루한 듯 보이시는 분들이 데모하는 학생들 욕을 하는 것입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 때만 하더라도 대학 졸업하면 취업이 그리 어렵지 않을 때인데, 그래도 개인의 입신양명보다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동참하겠다고 데모도 하는데, 이에 대한 오해나 반감이 가장 커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당시 통제 받던 방송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겠죠. 대학교 때 TIME지를 집에서 받아보았는데, 가끔 우리나라 관련 기사가 오려져있을 때도, 매직으로 그여져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 어머니도 항상 대학생들 나무람하고 그러하셨는데, 미국에 사는 따님 집에서 한참 지내고 돌아오셔서 '학생들이 데모할 만하더라'로 생각이 바뀌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나 소식을 접할 수 있었던가가 생각의 차이를 낳았겠지요.

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대구에서 살던 저는 그런 일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언론이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는 자기 이웃은 죽어가고 전시를 방불케 하는데 TV를 틀면 이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쇼 프로그램만 그냥 나와서 참으로 울분이 컸다는 광주 분들 말씀이 참으로 큰 울림이 되어 왔습니다.

역사라는 것도 그만큼 왜곡되기 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곡시켜 거짓말하는 것도 진짜 문제이고, 거짓말 않더라도 이야기안하는 것 자체도 크나큰 왜곡일 수도 있고요. 이는 우리 역사가들에게 정확하게 해당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가들은 정말 진실하게, 균형 잡히게 서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진실한가, 무엇이 균형이나 하는 문제로 다시 논쟁에 빠져들겠지만...

해외 사태로서는 최근 그리스 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가 가장 위기라고 난리치던 그 해 여름 제가 아테네에 있었는데, 한국 언론들의 호들갑이나 과장이 참 심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스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카페에서의 즐거운 만남이나 식사나 일상의 생활이 그대로 이어지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언론만 접하면 그냥 모든 것이 영망진창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처럼 잘 못 알고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당시 그렉시트를 앞둔 그리스 국민 투표의 결과 및 그리스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한 그리스 지식인은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면서, 결과가 어떻든 우리 국민 다수가 선택한 길이면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안고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해서 오히려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경제 위기인데도, 다수의 그리스인들은 시리아 등지에서 그리스로 온 난민들을 도와주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작년 이들을 도와준 그리스 섬사람들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야한다는 뉴스도 나왔었지요. 물론 황금새벽당 같은 극우당도 있지만, 아테네 대학생들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인간이라면서 난민들에게도 그리스인들과 똑같은 처우를 해주라는 데모도 벌이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내려온 인간중심적 사고, 민주주의의 영향인가 싶기도 했고, 경제적으로 더 잘 사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 III. 전공영역 선택 배경과 이유

1. 그간의 연구를 어떤 관점 또는 이유에서 진행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2. 선생님의 연구 주제나 연구 방법, 연구 과정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혹은 나름의 성취나 의미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학원에 진학할 무렵 로마 시대 기독교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를 연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로마 시대 기독교와 관련한 연구 주제를 찾던 가운데, 외국에서는 연구가 활발한데 한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율리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이에 대해서 석사와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크리스티교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였지만 기독교를 싫어하면서 기독교의 대안으로 헬레니즘 문화를 육성하고자 하였던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였지만, 그리스어로 글을 썼기 때문에 관련 텍스트도 읽을 겸, 그리스 국가 장학금도 받게 되어서 그리스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율리아누스가 쓴 글이나 사상을 이해하려다 보니 그가 읽었던 문헌이나 사상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야말로 그리스 로마 문화와 기독교 사상 양자에 대한 독서를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하게 유학 생활 가운데 매일 관련 책들을 수년 동안 읽다보니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관심 분야가 그리스 로마 문화 전체로 확대 되었던 것 같고, 논문도 다양한 주제로 써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 사람이다 보니, 한국이나 동양사와 저절로 비교하게 되어서, 한동안은 동서 교류 문화(특히 신화소를 중심으로)에 꽂혀서 중국까지 출장 연구도 가면서 관련 논문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것도 재미있고 저것도 연구하고픈 주제들이 많아서 좋기는 합니다.

연구 과정이랄까 방법과 관련해서는 일단 관심이 가져지는 한 주제가 있으면, 온갖 관련 사료나 문헌을 읽고 이리저리 생각하고 깊이 파고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가설을 세우고 이를 논증하는 작업을 할 때는 매우 즐겁고 ‘exciting’함을 느끼고요, 실제로 글로 옮겨 적고 다듬고 완성시키는 단계에 오면, 아기를 낳을 때의 고통이 조금 느껴지는 듯 합니다.

#### IV. 70년대 학번 연구자 세대의 특징

70년대 학번 서양사연구자 세대가 갖는 연구자 문화의 특징이나 학문연구의 경향이 있을까요? 세대적 의의와 한계를 (앞세대, 뒷세대와 비교해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세대적 의의와 한계: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컴퓨터도 없었어요. 대학원 논문 쓸 때도 컴퓨터 활용이 여의치 않아서 원고지에 일일이 쓰고, 좀 틀리면 새로운 원고지에 새로 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컴퓨터 사용을 하게 되니 특히 <원고 수정>이 넘 쉬워져서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터넷 이런 것이 없었으니, 자료 수집의 한계점이 컸어요. 필요한 책이나 논문 구하려면 해외 주문을 해야 하는데, 비싸기도 하고, 시간도 걸리고 해서 진짜 어려웠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서양사 공부한다는 것이 자료 접근 측면에서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유학을 갔을 때 얼마나 기쁘든지, 온 도서관이 통째로 관련 책으로 차 있었으니깐요. 지금도 아직 한계점은 있겠지만, J Stor, 페르세우스 등 각종 유용한 사이트나 전자 책 등을 편하게 접할 수 있어서 후속 세대가 정말 좋을 듯합니다.

정보가 없었을 시절에는 중요한 책 몇 가지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독창적인 세계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료가 너무 많아서 헛갈릴 수 있는데, 우직하게 깊이 파고 드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 V. 서양사학계의 과제와 전망

### 1. 서양사학계 내적으로는 어떤 연구 주제나 관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대학교 때는 부전공을 경제학을 했는데 역사를 경제사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지요. 지금은 특별히 이런 주제나 관점이 확대되어야한다기 보다는, 모든 다양한 분야와 영역, 다양한 관점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나 인간 사회나 역사가 워낙 다양한 면이 많은 존재이다 보니깐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나 관점을 취해서 공부하다보면 서양사학계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 2. 한국사회에서 서양사학 또는 서양사학계가 의미를 가지려면 어떤 사회문화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날 우리나라 중등 교육을 생각하면 세계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현재 대학교 신입생들 가운데 세계사 배우고 오는 학생들이 드문 것 같더군요. 동양사는 그래도 <동아시아사> 비슷한 관련 교과목도 있는 듯한데 서양사에는 쟁쟁한 학생들이 많아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서양사학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별적 차원으로는 '대중적 글쓰기'에 교수님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적인 연구를 기본으로 하시면서도,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글로 봉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가 히트를 치고, 십자군 등 온갖 주제를 다루더니 이어서 <그리스인 이야기>도 쓰는 모양입니다. 열심히 쓰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장점도 많은 책이지만 문제점도 없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제 전공 이야기를 맡긴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도 생각합니다. 한국사 스타 강사 설민석 씨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까요? 요즘 서양사 교수님들 가운데서는 보다 대중적인 글쓰기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더 많은 분들이 쌓은 학문과 지식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도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잘 안되기는 합니다...



---

## 제2부 서양사연구와 한국사회: 회고와 전망 Ⅱ

---

사회 : 박진빈(경희대)

▶ **패널토론:**

권형진(건국대) / 김남섭(서울과기대) / 설혜심(연세대) / 이용재(전북대) /  
장문석(영남대) / 차용구(중앙대)



## 에고히스토리 토크쇼 2부

권형진(건국대)

### 1. 역사에서의 문화적 전환, 언어적 전환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고 하지만, 개별 연구자의 연구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각국사, 시대사, 정치사가 견고하게 수성하고 있다는 인상이 듭니다. 서양사 연구나 교육에서 종래의 시기구분, 지역구분, 영역별 분류는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사실 현재 한국서양사 전공자들이 처한 현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각국사, 시대사, 정치사라는 서양사 패러다임이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와 부정이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서양사를 강의하고 있는 교수로서 강의의 제목과 구성에서 여전히 각국사, 시대사, 정치사는 가장 중요한 골격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래의 방식이 확고하게 토와리를 틀고 자세를 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가 독자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 명맥이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방송매체 등에서 다양한 주제, 전지구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문화현상(음식, 예술 등)에 대한 방송을 제작하면서 대중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국가사나 시대사, 정치사의 소위 '기본'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상품화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소위 제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전공자들은 이런 상업화된 역사해석에 매우 소극적이며 어떤 부분에서는 적대적이기까지 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과거 역사학이 매우 정치적이고 이념적이었던 시절에 역사학을 공부하고 체화시킨 우리 세대의 역사가들이 최근의 가벼운 문화현상으로서의 역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일견 이해가 됩니다. 한국사 영역에서는 소위 일반 독자나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벼운' 역사가 '대박'을 치는 것이 대체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서양사 연구와 교육에서 종래의 시기구분, 지역구분, 영역별 분류는 상당 기간 유효한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역사가들도 등장하겠죠. 저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강의에서 기존의 시대사나 국가사 중심의 구성을 주제별 구성으로 변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적이냐 아니냐는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적어도 아직까지 학기초 폐강과목에 제 강의를 포함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강생이 구름떼처럼 몰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연구 영역에서도 서양사라는 분야에 한정해서 연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독일현대사를 전공하게 된 출발점은 어떤 의미에서 한국의 현대사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외국인 정책과 관련된 이주정책입니다. 다양한 학문분야와의 공동작업이기는 해도 저의 역할은 여기서도 독일사 또는 현대 독일이 중심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에 대해 짧게 답변드리자면, 종래의 구분법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은 일조일석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학이 발전하는 오랜 과정을 통해 자리잡고 틀을 갖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과 시대의 요구에 맞춰 변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모르죠, 아무도 그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입만 열면 사용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역사학의 방법도 '삼디프린터(입체성형기)'로 찍어내는 방법이 생길지는...

2. 영화나 TV드라마, 웹툰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에서 역사는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인기를 끄니다. 역사 강사가 가장 각광받는 TV 연사이며, 그의 책은 몇 개월째 판매 순위 수위에 올라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단 역사와 대중 역사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 대중화, 어떻게 보십니까? 집필하고 계시는 연구에서나 학과에서의 교육 양쪽 측면에서 필요할까요?

분명한 것은 강단 역사에서도 수강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강의평가를 강사의 중요한 평가척도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가 고대부터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도 역사에 관심을 갖는 다수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문학으로서 역사학의 본령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교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가 없는 역사서는 그 존재의 미에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서 대중의 흥미를 끌 수 있는가는 역사가 지금까지 항상 유지해 온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제가 역사학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항상 고민해오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에 대한 저만의 답을 찾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대중화는 역사학계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와 교육에서 이러한 '재미'를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을까는 각각의 개인의 능력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서양사 전공자의 연구물(논문, 서적)은 극히 소수의 독자만을 가진 '그들만의 리그' 또는 '외인구단'으로 전락했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서양사론에 실린 연구논문들에 대한 다른 연구자들의 인용지수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연구주제나 연구분야가 갈수록 세부화, 파편화되면서 전공자들조차도 안읽는 그런 연구물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의 전임들이 연구업적을 위해 일반 독자가 읽기 어려운 전문연구물에 몰두하고 있는 것도 이런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더라도 결국 재미가 첨가된 연구나 저작물은 결국 역사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역사가 개개인의 관심과 노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학회나 연구자 집단의 공동노력이 병행된다면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 지난 10년간 한국연구재단이 주도하는 연구의 형식이나 주제가 우리 학계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젝트 기반의 연구경향의 공과를 평가해 본다면 어떨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역사를 직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생활인이라는 점에서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연구의 형식과 주제를 따라야 하는 프로젝트의 수주가 개인연구자로서나 학회 또는 학교의 성과로 인식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틀에 맞춘 연구방식이 역사학, 좁게는 한국의 서양사 연구자들의 질적향상에 기여했는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프로젝트 신청과 당락여부가 각각의 연구자의 경제적 현실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사용 주제를 잘 선정하고 연구재단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양적인 결과물을 쏟아내는 그런 제도가 진정한 역사연구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저도 일정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과제를 수

행하는 연구팀을 보면 일정 기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주제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10여년간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학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인문학, 특히 역사학 관련 지원사업은 연구주제에 따라 다양한 기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1년 또는 3년짜리 단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역사학의 속성상 부적절합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단순히 1~3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연구자 개인이 할 수 없는 사업도 존재합니다. 최소 20~30년의 장기적인 작업을 요구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평생 한 프로젝트를 연구하다가 정년퇴임하면 그의 제자가 연구를 이어받아 세대를 이어가며 하는 연구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한국사 영역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나 국학연구원이니 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연구기관들이 60년 이상의 장기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양사보다는 환경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1년 예산을 배정받아 나눠주는 식의 학문진흥책은 단기적으로 숫적 증가에는 기여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학문발전에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환경 확산으로 전통적인 학회중심의 연구자 교류가 해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매일 같이 프로젝트 연구발표회나 소학회의 학술대회 안내문을 받으면서 이 모든 학회에 참석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보자면 이러한 프로젝트 연구들이 신진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해주고 연구주제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화의 부정적인 측면은 그래도 적은 서양사 연구자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갈수록 줄어들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양사학회가 매년 주관하고 있는 서양사연합학술대회가 서양사연구자들이 만날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도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회차원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4. 선생님은 앞으로 10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서양사 연구자로 다음 10년을 살고자 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리정돈을 잘하고 계획을 세워서 사는 성격이 아니라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도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할 일은 차고 넘칩니다. 게을러서 그 일들이 밀리고 밀려 항상 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현재의 연구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정말 개인적인 관심사인 문화, 예술, 일상생활에 대한 재미있는 역사주제들을 이것저것 닦치는 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재미있는 이런 주제들이 다른 사람들, 독자들에게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역사문화에 관한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삽니다. 국가, 민족, 시대 구분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책 말입니다.

## 에고히스토리 토크쇼 2부

김남섭(서울과기대)

### 1. 역사에서의 문화적 전환, 언어적 전환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고 하지만, 개별 연구자의 연구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각국사, 시대사, 정치사가 견고하게 수성하고 있다는 인상이 듭니다. 서양사 연구나 교육에서 종래의 시기구분, 지역구분, 영역별 분류는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돌이켜 보면, 1980년대 후반 제가 대학원생으로서 처음으로 학문에 입문할 때, 주변의 서양사 전공 선배들은 주제나 방법론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군사정부의 오랜 억압에 국내의 노동자들은 대대적인 파업과 시위로 대응하고 있었고, 급진적인 학생 운동가들은 노동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또한 국내 학계에서도 서구 학계의 영향을 받아 종래의 정치사나 지성사, 사상사가 퇴조하고 있었고, 대신 사회사나 일상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는 중이었다. 제가 소련 농업 집단화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 주제를 거쳐 박사학위 주제로 소련의 공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겪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선택한 것도 이런 상황의 전개와도 무관하지 않지 싶다.
- 하지만 제가 박사학위를 완성한 2000년대 초반에는 이미 서구 역사학계는 이른바 언어적, 문화적 전환의 열풍 속에서 새로운 세대의 역사학자들이 사회사를 넘어 문화사로의 진입을 본격화하고 있었다. 전공분야였던 러시아 현대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서구 학계에서는 문화사 열풍이 몰아닥치고 있었고, 일부 연구자들은 담론 분석을 통해, 예컨대 스탈린체제를 이해하는 데 종래의 정치사 중심의 전체주의 학파나 사회사 중심의 수정주의 학파가 해명하지 못한 스탈린 체제의 소련 일반인들의 내면 세계나 생활 세계를 일정 정도 밝히는 데 성공하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은 저의 연구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어 문화사적 관점에서 소련 체제의 견고성을 설명하는 논문을 쓰기도 하고 그에 관한 중요한 책을 번역하여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지금도 이 분석 틀은 여전히 저의 주요한 학문 관심사이기도 하다.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사나 지성사가 학문적으로 낡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문화적 전환의 파고가 높은 지금의 러시아 현대사 분야에서도 정치적 사건이나 인물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며, 많은 사태를 설명하는 데 어떤 점에서는 결정적이기도 하다. 가령 스탈린 체제를 형성하는 데 스탈린 개인의 정치적 행위가 결국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신보수주의’ 학파의 주된 설명이며, 이 설명은 사회사나 문화사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예컨대 스탈린 대테러의 동기를 밝히는 데 매우 유효하다. 뿐만 아니라 문화사적 관점에서 볼 때도 지성사는 새롭게 부각되기도 한다. 소련인들 사이에서 이른바 ‘세계관’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구성되어 체제의 버팀목으로 작동하는지는 소련인들의 ‘주체성’ 형성 문제와 관련하여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될 만큼,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이 교리의 집합체로서가 아니라 생활 세계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주요 요소로서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 일국사나 유럽 중심적 시대구분의 한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그 문제점을 지적해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역사가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대, 중세, 근대라는 범주가 유럽 사회의 역사적 경험에서 파생되었고, 중국이나 인도, 아프리카, 이슬람 세계 등 비서구 지역의 역사적 경험에는 맞지 않으며, 심지어 유럽의 역사 자체를 설명하는 데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역설해왔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서구 학계와 그것을 반영한 한국 학계

의 일각에서는 지난 10여 년 전부터 지구사(global history)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지구사가 이룰테면, “대규모 이주, 제국의 팽창, 원격지 무역” 등 한 사회나 한 지역을 뛰어넘는 ‘교차 문화적’ 현상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일국사나 유럽사를 중심으로 하는 기왕의 세계사 인식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사가 어느 한 지역이나 민족이 나머지 지역이나 민족을 압도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과정이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민족과 지역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동등하게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루어지는 교류의 역사라는 문제 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남는다. 그것은 한국의 역사학계, 특히 서양사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실제로 관철하는 경험적 역사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 이러한 사정이 역사가들이 전통적인 일국사나 시대구분의 결합에 폭넓게 동의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서양사와 세계사 강의가 지구사가 제기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여전히 유럽 중심적 관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 아닐까 한다.

**2. 영화나 TV드라마, 웹툰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에서 역사는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인기를 끄니다. 역사 강사가 가장 각광받는 TV 연사이며, 그의 책은 몇 개월째 판매 순위 수위에 올라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단 역사와 대중 역사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 대중화, 어떻게 보십니까? 집필하고 계시는 연구에서나 학과에서의 교육 양쪽 측면에서 필요할까요?**

- 역사 대중화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어느 연구자의 지적대로, 대중들이 현대 사회를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사고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실 세계가 모순과 부조리에 가득하면 할수록 인류의 역사적 경험을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현실에 필요한 교훈과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인간의 삶이란 자연세계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실험이 불가능하다는 자명한 명제 앞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대중화를 누가 수행할 것인가이다. 즉 현 시점에서 역사 대중화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 저는 한국 서양사학계의 전반적인 수준이 세계학계와 견줄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지난 수십 년 동안 연구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또 연구 주제도 점점 다양해져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만큼 질적인 제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저의 활동 분야인 러시아사학계에서 이런 문제점은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가장 큰 약점은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천착한 연구서(monograph)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드문드문 출간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이며, 집필된 논문에서 드러나는 문제의식도 많은 경우 세계 학계와의 흐름과는 동떨어져서 고립적으로 설정되기 일쑤다. 자기 연구의 사학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기왕의 성과에 무슨 공헌을 하고 있는지 불명확할 때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 연구자들이 역사 대중화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여 활동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것은 역사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결과를 행여 낳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한국 서양사학계의 질적인 취약성을 낳은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연구에서 문서고 자료를 상대적으로 경시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다. 역사학에서 독창적 연구는 1차 사료, 특히 미발간 문서고 자료에 바탕을 둘 때 진정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에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을까 한다. 어떻게 보면 연구의 성패는 새로운 문서고 자료의 발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우

리 학계는 이 사실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다. 발표된 논문의 내용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은 아마도 근원적으로는 문서고 자료에 대한 탐색 부족이 결국 새로운 발상, 새로운 해석의 출현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는 것이다. 문제 의식은 많지만, 그 문제 의식을 구체화하는 경험적 연구가 많지 않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우리 학계의 어느 지면에서도 1차 사료에 대한 깊이 있는 학문적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실도 마찬가지로 매우 의미심장하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서양사 전문 역사가들이 주로 있어야 할 곳은 각국의 문서고이지 TV 브라운관 속이 아니다.

**3. 지난 10년간 한국연구재단이 주도하는 연구의 형식이나 주제가 우리 학계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젝트 기반의 연구경향의 공과를 평가해 본다면 어떨까요?**

-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연구재단과 인연이 별로 없다. 박사학위를 마친 후 연구재단에 신청한 연구계획서는 거부당하기 일쑤였으며, 운 좋게 대학에 정규직을 잡은 후에는 연구재단의 사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따라서 최근 연구재단이 어떤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평소 느껴왔던 점을 조금 지적하고자 한다.
- 우선 재단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인문한국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 및 해외 지역학 연구소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수십 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주요 연구소에 쏟아부어왔다. 그 결과, 일부이기는 하지만 학자들에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최소한 이나마 마련해주고, 또 학술 대회 등을 통해 세계 학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사업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흘렀음에도 투자된 자금 규모에 비해 그 성과가 알차게 축적된 것 같지는 않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학술 대회는 프로시딩이나 논문집 발간 형태로 그 흔적을 남겼지만, 대체로 1회성에 그쳤을 뿐 보다 장기적인 계획 아래 그 성과를 이어 받아 연구를 심화시키는 작업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투여 받는 역사학 관련 연구소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 저는 그것이 학술 대회 같은 화려한 사업보다는 개개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데 있다고 본다. 즉 앞에서 지적한 문서고 탐색의 부족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많은 1차 사료를 수집하여 연구자들이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다. 어느 분야든 역사가들이 특정 주제를 연구할 때 외국에서 발간된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 등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공통된 1차 문서가 있기 마련이다. 많은 경우 그것들은 최근 기술의 발달로 전자 문서화되어 있고, 의지와 자금만 있으면 구입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미발간 문서고 자료들도 체계적으로 국내 연구소에 집적될 수 있다면 외국 역사를 공부하는 개개 연구자들이 글을 쓰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해당 국가의 문서고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에서는 재단의 지원을 받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러시아 사이의 외교 관계와 관련하여 러시아 문서고에서 반출한 문서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이런 면에서 국가가 이왕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런 기본적인 사업을 가능케 하는 '토대연구' 지원에 좀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한다.

- 프로젝트 기반의 연구가 가진 장점은 이처럼 대규모 자금과 인력을 동원함으로써 집단적 논의를 통해 특정 연구 주제를 심도 있게 천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 연구가 반드시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야 우수한 연구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어떤 점에서 역사 연구는 기본적으로 개개 역사가들의 외로운 지적 투쟁이며 연구재단도 이 점을 잘 깨닫고 있는 것 같다. 재단은 시간강사,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우수학자, 저술출판 등의 사업을 통해 개개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개개인의 연구가 세계적인 연구 동향의 맥락에서 독창적인 연구 성과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고민하는 것일 터이다.

#### 4. 선생님은 앞으로 10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서양사 연구자로 다음 10년을 살고자 하시나요?

- 우연찮게 향후 10년의 시기는 제 입장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역사학자로서 마지막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질문이 이 기간 동안 아마도 생계에 큰 위협을 받지 않는 역사학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라는 명령처럼 들려 기분이 묘하다.

- 2년 전 저는 일부 뜻을 같이하는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한국냉전학회’라는 새로운 연구 단체를 만들었다. 이 학회에는 역사학자들뿐만 아니라 사회학자, 정치학자, 인류학자, 문학자, 과학사가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저는 학술회의나 연구 모임, 사적인 대화 등을 통해 그들로부터 냉전 시대의 소련 역사라는 특정 주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지적 자극과 영감을 크게 받았다. 서구와 러시아에서는 역사학자들 사이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소련의 냉전 경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고민이 러시아사 연구자들 사이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가 냉전 연구를 새롭게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런 빈 틈을 메꾸고자 하는 의도에서였으며, 당연히 향후 저의 개인 연구 의제도 이 주제를 중요한 것으로 포함하고 있다. 지난 해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 소련의 냉전 경험에 대한 중요한 외국 저작을 우선 번역 출간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앞으로는 이 번역서가 소련의 냉전 역사에 대한 방향을 잡는 데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소련의 냉전 경험을 정치외교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탐구해보고 싶다. 냉전 시대 소련에 관한 세계 학계의 연구도 스탈린 시대 연구처럼 문화적 전환에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령 냉전시대 제1세계에 대한 소련의 트랜스내셔널한 문화적 공세가 냉전의 전개에 미친 영향 같은 것이 좋은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냉전시대 제2세계와 제3세계에서 소련이 수행한 경제적 역할도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대학원 시절 이래로 관심을 가져왔던 스탈린 체제에 대한 연구도 지속할 생각이다. 이 시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개인적 연구는 주로 테러와 굴라그에 대한 연구에 집중된 편이다. 스탈린 시대에 테러와 굴라그는 체제 작동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지만, 스탈린 체제는 인민들의 동의와 순응을 유발하는 다른 사회적-문화적 기제도 충분히 이용하였다.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다소 소홀하였고, 이 부분을 폭넓게 보충하는 연구를 통해 스탈린 체제를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조만간 내놓기를 강력히 소망해본다.

## 에고히스토리 토크쇼 2부

설혜심(연세대)

### 1. 역사에서의 문화적 전환, 언어적 전환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고 하지만, 개별 연구자의 연구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각국사, 시대사, 정치사가 견고하게 수성하고 있다는 인상이 듭니다. 서양사 연구나 교육에서 종래의 시기구분, 지역구분, 영역별 분류는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무엇이 변했는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다. 영국사의 경우에는 사회사와 문화사에 밀려 정치사가 한동안 침체기였다가 최근 다시 ‘정치사의 귀환’이라 불리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대사 역시 각국사에 비해 아직은 그 영역을 수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각국사인데, 이는 최근 역사학에서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인 트랜스내셔널사의 부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부상한 트랜스내셔널사는 국경을 넘나들거나 심지어 해체하여 역사연구의 틀을 재설정한다. 이런 접근법은 사실 1960~70년대의 월드히스토리(Western Civilization류의 강좌의 개설과 동반), 1990년대의 글로벌히스토리(경제학자들이 선도한 globalization이라는 개념과 발맞추어 브랜드화 된 영역), 심지어 비교사나 인터내셔널히스토리와의 많은 공통분모를 지닌 분야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트랜스내셔널사의 특징이나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는데 주저하기도 한다.

전통적인 이민사에서 그 뿌리를 찾기도 하는 트랜스내셔널사의 특징은 국민국가단위에서 포섭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역을 주목하고, 공간과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역사의 복잡성을 강조한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 도외시되었던 사료를 발굴하거나 이용하고, 특정한 역사적 현상의 글로벌한 측면을 짚어내는 동시에 각국사가 강조해 온 “예외주의(exceptionalism)”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새로운 시각이 역사적 시대의 재설정(re-periodization)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즉, 익숙한 시대구분에 균열을 주고, 트랜스내셔널적 시각에서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을 발견하거나 설정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트랜스내셔널사는 현재 매우 강력하고도 유용한 역사연구의 새로운 시각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히려 각국사, 시대사, 정치사가 ‘왜 아직도 유효할 수밖에 없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향후 역사학의 지향점과는 다른, 현실적 차원에서의 구성주의적 논의이기도 하다. 사실 보다 큰 틀에서 학문을 보자고 하는 움직임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 견고한 아성을 쌓은 분과학문, 혹은 학문분과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학제적 연구, 큰 틀의 설정에 대한 요청과 통섭이나 융합 등에 대한 요청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왔던 것이다. 이미 1934년 미국 사회과학연구회가 ‘학제간 연구 중요성’을 선포한 이후 지역연구와 같은 새로운 분과학문이 생겨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다양한 협동과정이 개설되었다.

역사학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은 이미 1930년대에 시작되었다. 프랑스 아날학파의 탄생과 발전과정이 이런 변화의 움직임을 대변하는데 특히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은 파편화되고 전문화된 역사학의 전통을 비판하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전체사’를 추구했다. 그가 추구한 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범위를 엄청나게 확장시킨 그야말로 ‘거대한 역사’였다. 브로델은 사회과학적 성과물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시간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가 보기

에 사회과학은 시간 지속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현재만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초월한 초장기적인 구조에 관심을 가지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브로델의 후계자들은 ‘거대한 역사,’ 혹은 전체사를 계속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거대한 역사의 희생자인 ‘작은 역사들’을 부활시켰다. 거대한 틀 속에서 외면당했던 ‘사건’과 ‘개인’을 부활시켰으며 사건의 대명사로 낙인찍혀 금기시되던 ‘정치’를 부활시켰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브로델의 후계자들은 다학문적인 성격에 집중한 나머지 계량화에 함몰되거나 이론의 검증에만 몰두했다. 애초에 아날운동이 추구하고자 했던 이유를 망각한 채 그들이 반대하려 했던 법칙정립적 사회과학과 비슷한 행보를 걷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견고한 아성을 쌓아온 분과학문들은 아날을 비롯한 제반 통합적 시도를 두고 다른 학문에 관한 어설픈 지식을 동원하는 표피성(superficiality)을 지적하며 강한 혐오를 드러냈다. 트랜스내셔널사처럼 넓은 지역을 아우르는 주제는 오늘날에도 이런 표피성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표피성의 문제는 임마누엘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이나 패트리샤 시드(Patricia Seed)가 지적한 바 있는 특정분과가 사용해온 용어의 유의미성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미 충분히 발달한 각 학문분과들은 특정시대, 특정상황에 맞는 용어를 만들어왔고, 그 용어가 지닌 정통성과 유의미성을 전제로 연구가 진행된다. 갑자기 공간적, 시간적으로 고찰의 범위가 넓어질 때는 그런 용어나 개념의 의미가 종종 흐려지며(예를 들자면, 고대의 노예제와 19세기 미국의 노예제는 다르다), 현재 사용되는 개념과 과거의 용례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는 것을 본령으로 삼는 역사학의 본질에서 멀어질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각국사, 시대사 등이 현실적으로 유효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 학문적 비대칭성을 꼽을 수 있다. 비대칭성은 학문적 교류나 지식의 확대가 일방성을 띠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역사학의 경우에는 특히 고중세 전공자와 근현대 전공자 사이에 나타난다. 라틴어 등 언어라는 도구가 가져오는 장벽으로 인해 고중세사 전공자가 근현대사로 범위를 확대해 갈 수는 있지만 근현대사 전공자가 고중세를 포괄하기는 훨씬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고중세사 전공자가 자유롭게 근현대사를 넘나들고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자료의 희소성을 전제로 훈련받은 고중세 학자들에게 근현대사의 넘쳐나는 자료는 또 다른 훈련과정인 선별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시대나 국가를 넘어 모든 것을 포괄하기에는 이미 분과 학문의 성과들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날 만큼 축적되었고, 분화될 대로 분화된 학문분야들은 나름의 훈련과정을 강화해왔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학문적 깊이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는 한 트랜스내셔널사와 같은 분야는 연구의 깊이를 더하기보다는 단순한 외연의 확장으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서도 트랜스내셔널사가 기존의 각국사나 시대사를 온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또 다른 분과학문의 형식으로 사학과라는 아카데미 구조 속에 자리잡곤 한다.

학문 외적으로도 각국사나 시대사가 계속 유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존재한다. 일단 학문 분류체계가 그렇고, 학회의 구성 역시 그렇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영국사학회>를 필두로 <프랑스사학회>, <미국사학회>, <독일사학회>, <러시아학회(구 슬라브학회)>와 같은 각국사 학회들이 조직되었다. 이처럼 강대국 위주로 편성된 각국사 학회는 사실 스페인, 이탈리아, 멕시코, 동유럽 등과 같이 비열강을 다루는 학자들을 주변화시키는 셈이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베로아메리카학회>, <아프리카학회>, 본격적으로 트랜스내셔널사를 표방하는 <이민인종연구회>가 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민인종연구회>의 구성원 대부분은 여전히 각국사학회의 멤버십을 유지한다. 오

늘 이 자리의 패널 구성 역시 결국 각국사와 시대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더욱 심각하게는 대학에서의 교수채용공고가 시대사와 각국사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 기존의 견고한 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2. 영화나 TV드라마, 웹툰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에서 역사는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인기를 끈다. 역사 강사가 가장 각광받는 TV 연사이며, 그의 책은 몇 개월째 판매 순위 수위에 올라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단 역사와 대중 역사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 대중화, 어떻게 보십니까? 집필하고 계시는 연구에서나 학과에서의 교육 양쪽 측면에서 필요할까요?**

이 문제는 사실 고민이 많은 주제이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TV에서 활약하는 한 역사강사의 성공담을 들면서, 나와 성이 같다는 이유를 들어 은근히 비교하거나, 그의 성공으로 인해 역사전공자들의 앞날이 밝을 것처럼 말하곤 한다. 하지만 이것은 질문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전혀 별개의 영역이다. 마치 몇 년 전부터 사회나 기업에서 ‘인문학 열풍’에 대해 떠들어왔지만 ‘문송(문과라서 송구합니다)’이라는 현실은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역사 대중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아레나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첫째, 팩션, 게임 등에 이용되는 역사콘텐츠, 둘째 문화센터로부터 중고교 특강, 지자체 단위의 역사 강좌 및 답사 등의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역사대중화가 있다. 둘째와 셋째는 역사전공자의 저서와 무관하지 않은데, 첫째와 셋째는 특히나 영리를 추구하는 출판사나 방송국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심지어 대부분은 ‘기획’된 대중화이다. 그리고 이 기획에서 역사학자는 일반적으로 철저히 배제되어 있거나 기껏해야 조연을 맡을 뿐이다. 이처럼 역사학자가 장악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는 역사 대중화는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 문제들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자.

우선, 역사콘텐츠에서 왜곡과 일반화 등의 문제이다. 팩션이나 게임과 같은 장르는 본질적으로 오락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재미를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더욱이 스토리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단선적 흐름으로 압축해 버리곤 해서 역사학의 최대 장점인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없애버린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역사가들은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역사가들은 그런 오류를 일일이 지적하기도 하고, 다른 역사가들은 아예 그런 장르를 애써 무시하기도 한다.

둘째, 수용성(receptivity)의 문제이다. 역사서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대중에게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고 말할 수 없다. 즉, 얼마나 많이 읽히느냐와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아무리 좋은 글을 쉽게 써서 출판한다 할지라도 대중의 일반적인 지식의 질 저하로 인해 어렵다는 평을 듣기가 일쑤이며, 파편적인 정보만을 구하는 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술서와 대중서 사이의 중간문학(middlebrow literature)조차도 오늘날에는 읽기 힘든 장르로 분류되는 추세다. 그런 탓인지 최근 서구에서는 심지어 전문연구(논문)조차도 그 내용이 훨씬 평이해지고, 친절해지고 있다.

셋째, 역사대중화에 있어 이른바 ‘먹히는 주제’가 따로 있다는 점이다. 대중들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보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며, 특히 우리나라 대중들에게는 민족주의적 주제, 혹은 서양의 이야기일 지라도 우리나라 역사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기업의 경우는 기업과 국가의 운명을 등치하여 ‘대국굴기(大國崛起)’류의 이야기

나 현재 정재계에서 논의되는 핫 토픽(예를 들어 브렉시트나 4차 산업혁명)을 기업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선별적으로 요약정리해서 들고 싶어 한다. 특히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주도하는 역사대중화 기획들에는 침략과 정복, 팽창을 당연시하거나 심지어 동경하는 시각이 매우 강하다는 문제점도 나타난다.

넷째, 최근 역사학자는 기술적 환경, 즉 플랫폼(상품거래를 위해 구축된 환경이나 구조 및 규칙)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과거에 역사를 전달하는 매체가 책이나 논문이었다면 이제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플랫폼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추세다. 이제 글자 수의 제한이라든가 화면에 들어가기 위해 내용을 줄여야 하는 등 형식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긴 호흡의 논리적 전개를 훈련받은 역사학자들이 적응하기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상징하는 독자들의 기호에 맞추어 콘텐츠를 가공하다 보면 내용의 요약, 축소, 왜곡, 단순화, 일반화, 비주얼 자료와의 연계가 필연적이고, 그 과정에서 역사학자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수많은 문제점이 생겨나게 된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실 역사가들이 대중화 명제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 최소한 나는 그렇다. 일단 역사가는 최소한 독자나 시청자, 게임사용자가 역사콘텐츠를 접하면서 무엇을 얻으며 무엇에 재미를 느끼는가를 읽어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조르지 뒤비가 말했듯이 “학자는 어떻게 해야 독자들을 즐겁게 하고 예의 있게 독자들의 시선을 끌고 사로잡을 수 있는지 알아야 그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실 픽션이나 게임을 통해 역사의 파편을 접한 사람들은 종종 진지한 역사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차원에서 접근하자면 역사연구자들은 그들의 욕구를 통해 역사학의 외연을 넓힐 수 있고, <튜더스(Tudors)>와 같은 영드를 본 결과 대학원에 진학을 결심했다는 사례들을 보면 그런 영향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역사학자들이 이런 역사대중화 흐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도 느낀다. 일단 왜곡된 픽션 등에 대한 교정을 논문이나 기타 기고문, 혹은 KBS <역사저널 그날>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도할 수 있다. 혹은 매일같이 소비되는 역사에 대해 역사학자들이 일종의 자문기구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역사저널 그날> 등이 피드백이나 애프터서비스의 역할을 한다면, 오히려 콘텐츠의 설계에서부터 참여하는 방식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자면 <다운튼 애비(Downton Abbey)>와 같은 드라마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영국사가 앨리스테어 부르스(Alistair Bruce)가 참여해서 만들어졌다. 그는 <King’s Speech>, <The Young Victoria>등의 제작에도 참여했다. 우리나라도 간혹 한국 역사물에서 자문교수를 기용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것이 할리우드나 영국의 방송국만큼 기구화되지는 않았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역사는 엄청나게 다양하게 매일같이 소비되고 있고, 그 자체가 대중화의 통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TV역사물과 다빈치 코드 같은 소설들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관광, 컴퓨터 게임, 인터넷 계보학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영역에서 역사가 동원되고 있다. 그리고 역사학자는 강의실을 벗어나 대중강연, 미디어를 통한 소개, 역사관련 프로그램에의 적극적 참여나 기획,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수립에의 참여와 같은 활동을 통해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사소하게는, 불쑥 전화로 걸려오는 방송사 프로그램의 자문과 같은 일들에 대해서도 합당한 자문자로서의 위치와 금전적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학자 체면에 낮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작은 노력들이 향후 후학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게 할 초석이 된다면야 당연히 해야 하지 않는가. 역사대중화 이슈에서 역사학자들이 정당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아마도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3. 지난 10년간 한국연구재단이 주도하는 연구의 형식이나 주제가 우리 학계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젝트 기반의 연구경향의 공과를 평가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은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학문적 영역에서의 정부주도의 화이트/블랙리스트 작성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몇몇 키워드를 제시하면 그것이 곧 수년 동안 프로젝트의 주제가 되곤 해 왔다. 한동안 프로젝트 지원자들 사이에 “융복합이라는 말만 강조하면 무조건 붙는다”는 이야기가 회자되었을 정도다. 이는 학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돈을 이용해 통제하는 심각한 국가차원의 개입이다.

특히 지난 십여 년 간 한국연구재단의 행태는 특히 학문후속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정부주도의 프로젝트가 거의 유일한 편당인 역사 연구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관심 있고 전문성 있는 분야나 주제를 파고들 여지를 앗아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런 프로젝트는 개인연구 이외의 학술대회나 대외활동 등 매우 소모적인 ‘보여주기’식의 가시적 성과를 요구한다. 그렇게 적게는 몇 년, 많게는 십년 이상을 프로젝트에 매진하게 되면 특정주제에 대한 연구집단이 양산될 수는 있지만 개별적으로 갖고 있던 연구역량이 현저히 후퇴한다고 생각한다.

2002년 내가 포함되어있던 학진의 집단프로젝트에서 한 명의 연구자가 깜빡 잊고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던 탓에 나는 징계대상이 되었고 그 후 거의 십여 년 동안 학진에서 일체의 연구과제에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나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었고 다양한 주제를 탐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일단 한국연구재단의 공통주제/제안의 범위를 현격히 축소시키고, 자유과제의 폭을 넓히는 한편, 세금감면이나 기타혜택을 통해 다른 기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학술지원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학의 경우는 대학차원의 교수연구비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외부에서 연구비를 수주해 올 것을 강제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 역시 대학예산을 정부가 상당부분 틀어쥐고 있기에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대학의 자율화, 학술진흥재단의 운영이나 연구비 지원에서의 자율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4. 선생님은 앞으로 10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서양사 연구자로 다음 10년을 살고자 하시나요?**

사실 앞으로 10년 동안 서양사 연구자로 살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하겠다. 사회환경과 아카데미 환경이 급변하고, 생애주기의 문제(노화)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계속 연구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

최근에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수요가 큰 분야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현재 대학입시며 편입의 과정에서, 그리고 한동서를 아우르는 역사학 연구자들 사이에 입문수준의 ‘역사학연구방법론’에 대한 갈증이 큰 것 같다. 특히 서양사 학자들이 써 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조만간 서양사 입문이나 역사학 입문도 새롭게 쓰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향후 십년 안에 과연 이 수요에 내가 조금이라도 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팀을 꾸려 하는 방법도 있

지만 언제나 나는 다른 연구자들에게 부담을 줄까 두려워한 나머지 혼자 작업을 해 왔기 때문에, 팀 작업의 현실성에 대해 부정적이다.

혹시라도 연구방법론에 대한 책을 쓸 기회가 있다면 사료분석, 역사해석에 있어서도 암묵지(tacit knowledge)와 명시지(explicit knowledge)가 있다는 문제를 다루고 싶다. 사실 암묵지[개인적이지 문화적인 요소가 관여하고 있으며 특정 집단 내에서 어느 정도 공유될 수 있고 체화되는 일종의 밈(meme)의 형태로 작동]의 문제야말로 뛰어난 역사가가 지닌 본질의 하나로, 인문학, 특히 역사학이 특화해서 다룰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니, 나는 그동안 한국 서양사학계에서 별로 다루지 않았던 주제를 소개하는데 연구의 무게중심을 두었던 것 같다. 트래블로그, 의사학, 지도, 제국주의와 젠더성, 물질문화와 소비자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런 연구의 후속작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스스로가 외로운 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계속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새로운 주제를 연구하고 소개하고 싶다.

## 에고히스토리 토크쇼 2부

이용재(전북대 사학과)

### 1. 역사에서의 문화적 전환, 언어적 전환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고 하지만, 개별 연구자의 연구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각국사, 시대사, 정치사가 견고하게 수성하고 있다는 인상이 듭니다. 서양사 연구나 교육에서 종래의 시기구분, 지역구분, 영역별 분류는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990년대부터 소위 ‘포스트모던’ 시대에 역사학의 ‘전환(turn)’이 논급된 지 20여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 서양사 연구의 내용과 성격이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지고 쇠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사학이 여전히 각국사, 시대사, 정치사 등으로 파편화된 연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들리기도 합니다만, 기존의 분류방식으로는 포괄하기 힘들 정도로 연구 내용이 다변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학보〉에서는 격년제로 〈회고와 전망〉을 실고 여기서 분과 사학회별로 연구 성과를 점검합니다. 그런데 한 사례를 들자면, 프랑스사학회에서는 회원들의 연구를 점검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정치사, 사회사, 문화사 따위의 전통적인 분류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제간 연구가 활발해지고, ‘젠더’, ‘기억’, ‘이주’, ‘트랜스내셔널’ 등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주제가 각광을 받으면서 특정 논문을 어느 한 분야에 속한 것으로 한정시키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역사 연구에서는 대상이 되는 특정 시대와 지역이 우선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접근하는 방법론이 꽤 다채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서양사 연구자들이 융복합의 시대에 새로운 역사학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개별 연구자들의 크고 작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양사의 연구와 교육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시적 안목에서 국내의 역사학 동향을 휘둘러볼 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각국사별 편제와 동양사/서양사의 이분법입니다.

서양사 연구가 각국사별로 편제된 것은 사실 국내 서양사학의 발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서양사 연구자들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여러 언어와 여러 지역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양사 연구가 미국사학회, 프랑스사학회, 영국사학회, 독일사학회, 러시아사학회 등등 각국사별로 제도적인 틀을 갖춘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이러한 각국사별 역사 연구 방식은 서양의 ‘근대’가 ‘네이션’을 주축으로 형성되어 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언어를 두루 통달하기를 연구자에게 기대하기도 쉽지 않으니, 어느 한 나라의 역사를 자세하게 연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유럽통합의 현실과 ‘트랜스내셔널’의 연구추세에 비추어보면, 각국사별 접근방식은 ‘교류’와 ‘섞임’이라는 역사의 본질을 잡아내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양사 관련 학회들이 각국사별로 편제되어 있다 보니, 연구자가 자기 전공이 아닌 다른 국가의 역사에 관심을 두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대학에서 서양사 강의는 (미국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국가별이 아니라 ‘서양문화사’, ‘서양 고/중세사’, ‘서양 근/현대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양사 교육의 필요를 위해서라도 연구자들이 각국사의 범주를 벗어나서 ‘비교사’, ‘교류사’, 더 나아가 ‘트랜스내셔널’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의 서양사 연구와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동양사/서양사라는 이분법적 인식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에게 익숙한 자국사/동양사/서양사의 구분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서양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부터가 ‘서양’이고 어디까지가 ‘동양’인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상상의 지리학’에 익숙해 있습니다. 대학 교육도 한국사(학과)와 세계사(학과), 더 나아가 동양사와 서양사로 나뉘어 있습니다.

최근에 대학에서 <글로벌히스토리과 세계화>라는 강좌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세계 인식이 정말로 편향되어 있다는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지금껏 교과서에서 배운 ‘동양’과 ‘서양’ 사이에 있는 광대무변한 땅 유라시아,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여태껏 배워본 적도 가르쳐본 적도 없으니 말입니다. 역사 무대의 한복판에서 ‘동’과 ‘서’를 이어주던 거점 지역이 오히려 역사의 주변부로 천대받고 있는 꼴입니다. 우리는 ‘서양’ 중세 천년 동안 찬란한 역사문화를 일구어 온 곳이 기독교 유럽이 아닌 오리엔트 이슬람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기독교’라는 등식에 익숙해 있는 우리에게 이슬람 역사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일뿐입니다.

따라서 서양사의 연구와 교육이 ‘글로벌’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우선은 이슬람권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동양-서양’의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역사학계의 유행어로 떠오른 ‘글로벌히스토리’는 지구상의 모든 지역을 다 다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역이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유럽 역사가들은 자국사를 ‘글로벌’의 관점에서 다시 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양사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서양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쯤 집고 넘어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2. 영화나 TV드라마, 웹툰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에서 역사는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인기를 끌었다. 역사 강사가 가장 각광받는 TV 연사이며, 그의 책은 몇 개월째 판매 순위 수위에 올라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단 역사와 대중 역사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 대중화, 어떻게 보십니까? 집필하고 계시는 연구에서나 학과에서의 교육 양쪽 측면에서 필요할까요?**

학교와 책을 통해서보다 영화나 TV 드라마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더 많은 역사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은 ‘안방극장’이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특유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TV 사극과 각종 역사관련 프로그램을 거의 매일 저녁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 매체가 전달하는 이러한 흥미 위주의 역사인식은 때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나친 과장과 왜곡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단 역사와 대중 역사 사이의 간극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한’ 고민은 자국사가 역사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한민국에 사는 ‘행복한’ 국사학자들의 몫입니다. 서양사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TV나 대중매체에서 서양사 관련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사와는 달리 서양사는 일부 마니아층을 제외하면 일반인의 관심범위에 들기 힘듭니다. 더구나 세계사(서양사)는 고등학교에서 거의 배우지도 않고 대학입시 과목으로 채택되기도 힘들다보니, 대학 신입생들의 서양사 지식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역사의 대중화’라는 명제를 놓고 서양사연구자들은 역사에 대한 대중의 과잉섭취를 고민하기 이전에, 대중의 관심끌기를 모색해야 합니다. 서양사 교육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확실한 해결책은 물론 교육정책과 입시제도 등 제도적인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겠지만, 사실 실현가

능성이 희박합니다. 현재로서는 서양사연구자 개개인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역사의 대중화를 위해 서양사연구자들은 강의실을 벗어나서 지역과 현장에서의 문화강연,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역사 프로그램에의 참여 등등의 기회를 더욱 늘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TV 등 대중매체에서 서양사 관련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 인기강사라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서양사연구자 모두에게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서양사 관련 지식을 대개는 책을 통해서 얻습니다. 대학 강단에서의 서양사교육 침체와 무관하게, 사회 저변에는 인문학에 대한 열의가 자못 대단하고 서점에서는 서양사 관련 베스트셀러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서양사 베스트셀러들은 대개 국내 연구자의 저서가 아니라 번역서들입니다. 서양사 번역서들은 꽤 잘 팔립니다. 그만큼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둔탁한 필체와 개설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내 서양사연구자들이 쓴 책들은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솔직히 말해서 재미있지도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역사의 '대중화'를 그저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양사 독자층의 확대를 위해서는 오히려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잘 쓴 역사책, 고급수준의 역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과 대중성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대중화를 고민하는 서양사연구자라면 우선 자신의 연구역량을 십분 발휘해서 알찬 저술을 내놓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 3. 지난 10년간 한국연구재단이 주도하는 연구의 형식이나 주제가 우리 학계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젝트 기반의 연구경향의 공과를 평가해 본다면 어떨까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 지원은 여러 형식이 있기는 하지만, 프로젝트 위주의 연구를 우선하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프로젝트형 연구는 대개의 경우 공동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개별적으로 분산된 연구 풍토를 극복하고 공동 연구의 분위기를 진작한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형 연구는 연구자들이 참신한 연구주제를 개발해내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의 연구지평을 넓혀주고 연구쇄신을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구재단의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또 심사해본 경험으로 말하자면, 개선되어야 할 점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프로젝트는 응모해서 선발하는 식으로 연구지원을 하는 까닭에, 참여자들은 가능한 한 참신하고 눈에 잘 띄는 연구주제를 제시하려 합니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유행과 시류에 따른, 또는 시의성이 강한 연구주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일회적인 연구로 끝나기 십상이며, 후속 연구와의 연결성도 부족할뿐더러 연구성과가 확산되고 공유되기도 힘듭니다. 다음, 공동 연구의 틀을 갖추어야 하는 까닭에, 참여연구자 수에 맞추다보니 때로 불필요하게 연구주제의 영역과 내용이 축소되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때로는 불충분한 연구로 때로는 방만한 연구로 끝나고 맙니다.

요컨대 프로젝트형 연구의 단점은 일회성 연구로 그치고 장기적인 후속연구로 수렴되기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자신의 전공분야를 긴 호흡으로 연구해서 알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프로젝트형 연구보다는 일정한 수준을 인정받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전공영역을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요컨대 저술 지원 등을 더 늘리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 4. 선생님은 앞으로 10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서양사 연구자로 다음 10년을 살고자 하시나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양사 연구자라는 명찰을 단 지 20년 정도 지났으니, 이제 정년까지 10년 정도 남은 셈이군요. 연구자 생활을 시작한 2000년대 초반은 국내 서양사학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성장발전한 시기인 동시에 정체 또는 후퇴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한 시기인 듯합니다. 연구자 수가 비약적으로 늘고 각국사별로 학회들이 창립되면서 연구성과도 풍성해졌지만, 그와 동시에 인문학 위기, 학문후속세대 고갈 등등 급속한 여건변화를 겪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의 서양사학은 숨 가쁘게 오르막을 달리자마자 어느새 내리막을 걷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서양사학회 60주년을 맞이한 오늘날, 한국 서양사학의 앞날이 그리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든 여행과 체험을 통해서든 누구나 쉽게 서양을 만나고 느낄 수 있는 시대에, 서양사학은 사회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의 독점적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서양사학의 존립기반과 정체성을 되물어야 할 때가 멀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인문학의 위기 또는 해체를 서슴없이 예단하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서양사 지식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솔직히 앞으로 10년 간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돌이켜보니 지난 10년 동안은 내가 가진 서양사 전문지식이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쓰임새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려고 여러 주제들을 건드리며 일회성 공부를 해온 듯합니다. 게다가 대학에서 연구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연구재단의 프로젝트에 끌려다니면서, 이것저것 개별 논문들만 양산해온 듯합니다. 젠더, 기억, 역사교육, 혁명, 노동, 유럽통합 등등 잡다한 주제에 대한 파편화된 연구가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별려놓은 이러한 잡다한 연구들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저술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은 연구자에게 당연한 숙제입니다. 하지만 서양사연구자로서 궁극적으로 해보고 싶은 일은 '서양 문명' 또는 '유럽 정체성'을 다른 사회들, 다른 문명권과 비교해 설명하는 일종의 문명 탐방기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프랑스 역사를 '전공'하지만 서양사 일반, 아니 서양문명 자체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오랜 세월 서양사를 연구하고 교육해온 경험을 살려 비교문명사적인 안목에서 '서양'을 논구해보려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사 관련 고전 번역에 꾸준히 매진할 것입니다. 인문학이든 서양사학이든 학문의 위기와 침체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역설적이지만 '원천'으로 돌아가 되짚어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후대의 연구자들을 위해서는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논문을 남기는 것보다는 해당 고전에 대한 좋은 번역서를 남기는 것이 더욱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독자들에게도 연구저서를 제공하는 것보다 고전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또 솔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논문이나 저서는 어느새 사라지지만 고전 번역은 오래 갑니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프랑스 역사가 토크빌을 연구합니다만, 한참 전에 토크빌의 『앙시앵 레짐과 프랑스혁명』을 번역했고, 이제 『아메리카의 민주주의』의 번역을 끝냈습니다. 토크빌의 고전 두 권을 번역하는 데 그에 대한 논문 열 편을 쓰는 것 못지않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고 솔직히 자부합니다. 서양사 분야에는 번역되어야 할 고전들, 엉터리 번역서들이 아직도 넘쳐납니다. 서양사연구자들에게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연구논문도 쓰고 동시에 고전 번역도 남기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 에고히스토리 토크쇼 2부

장문석(영남대)

### 1. 역사에서의 문화적 전환, 언어적 전환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고 하지만, 개별 연구자의 연구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각국사, 시대사, 정치사가 견고하게 수성하고 있다는 인상이 듭니다. 서양사 연구나 교육에서 종래의 시기구분, 지역구분, 영역별 분류는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때 역사학계(서양사학계)를 풍미한 이른바 ‘포스트모던’ 역사학 논쟁도 이미 과거가 된 지 오래입니다. ‘문화적 전환’이니 ‘언어적 전환’이니 하는 말들도 오래 전에 잊힌 듯합니다. 뜨겁게 달궈진 논쟁의 팬이 이제 차갑게 식어버린 셈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동결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설명하면, 논쟁의 성과가 후속 연구들에 녹아들어갔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설명하면, 이론적 논쟁과 개별적 역사 연구가 서로 평행선을 그리며 각자 제 갈 길을 갔다고 말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런 점에서 질문에서처럼 표면적으로는 많은 것이 변했지만 실상은 여전히 각국사와 시대사, 정치사 등의 전통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전통이 유효한가, 또 유효하지 않다면 대안은 무엇인가를 논하는 것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 쟁점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비록 이론적 논쟁과 개별적 역사 연구, 간단히 말해 이론과 역사가 서로 평행선을 그리며 각자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아예 이론 자체가 부재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이론에 대한 관심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관심 자체가 부재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이론의 과잉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이론의 과잉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의 결핍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론은 결핍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생산되고 논쟁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연구를 자극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이론의 부재는 불행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이론의 부재 상황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역사 연구가 견고하게 수성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특정 시대와 국가의 경계 안에서 정치사 혹은 제도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역사 연구 방식이 반드시 과소평가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연구 방식이 시대를 종단하고 국경을 횡단하며 부문들을 접합하는 새로운 연구 방식을 비난하거나 거부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확실히, 새로운 연구 방식은 그 자체 역사가 짧고 그래서 축적된 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탄탄한 연구라는 인상을 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역사가들에게 새로운 연구 방식은 어설프고 미숙한 것으로 치부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통적’ 역사가 ‘새로운’ 역사를 관용하고 기다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어린이 대하듯이 한 수 접고 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동등한 대화 상대자로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신구의 진지한 대화 속에서만 역사학의 새로운 모색은 가능할 것입니다.

신구의 대화를 통한 역사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첫 단계는 전통적인 분류법을 상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 구분법의 사례를 들어보죠. 저는 다른 많은 분들처럼

19세기를 ‘근대’로, 19세기 후반 혹은 20세기를 ‘현대’로 보는 분류법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19세기와 20세기를 하나의 시대로 묶어 설명한 책을 번역하게 되면서 이를 ‘근대’로 불러야 할지 ‘현대’로 불러야 할지 일순 당혹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혹감은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유럽의 ‘현대’는 프랑스 혁명 이후 빈 체제의 성립에서 시작된 시기를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의 어느 시점에서 자르지 않고) 연속적으로 읽어낼 때 더 잘 파악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시기 구분만큼이나 국가 구분도 상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저는 이탈리아 자동차 기업을 전공했지만, 굳이 ‘이탈리아’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자동차 기업을 전공한 역사학자인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나라의 자동차 기업들의 역사와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탈리아 기업을 공부하다가 이탈리아의 빼어난 자유주의자를 알게 되어 지성사에 심취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통적 분류법과 특정한 전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역사학의 시작일 것입니다.

**2. 영화나 TV드라마, 웹툰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에서 역사는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인기를 끄니다. 역사 강사가 가장 각광받는 TV 연사이며, 그의 책은 몇 개월째 판매 순위 수위에 올라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단 역사와 대중 역사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 대중화, 어떻게 보십니까? 집필하고 계시는 연구에서나 학과에서의 교육 양쪽 측면에서 필요할까요?**

저는 일단 제도권의 전문 역사가들이 아마추어 역사가나 재야 역사가의 작업을 좀 더 열린 자세로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들의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들으면서 재미를 느끼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포퓰리즘적인’ 요소들을 탐지하게 되면 즉각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강단 역사와 대중 역사, 전문 역사와 아마추어 역사 사이에는 언제나 비판적 거리와 긴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전문 역사가들이 스스로를 대중 역사와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대중 역사를 비판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스로 대중화 작업에 참여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또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전문 역사가들이 대중화 작업에 뛰어든 필요는 결코 없겠지만, 일부 전문 역사가들, 그러니까 일찍이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가 말한 ‘열정적 소수’가 그런 대중화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열정적 소수’의 전문적인 안목과 식견이 ‘학문의 포퓰리즘’이라는 덫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면서 동시에 역사학과 대중의 만남을 의미 있게 추천해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역사 대중화 작업이 학술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대신 대중적 인기를 확보하는 작업으로, 일종의 제로섬 게임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컨대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나 카를로 치폴라(Carlo Cipolla)와 같은 학자들이 쓴 베스트셀러들도 가만히 보면 결코 쉽고 단순한 책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책은 종종 난해하고 복잡합니다. 그렇더라도 독자들은 그들의 책을 읽고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요. 학술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중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쉽고 단순하게 쓰는 것만이 대중화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구조와 문맥이 난해하고 복잡하더라도 독자들이 작가에게 요구하는 삶의 문제들을 정곡을 찔러 제기할 수 있을 때 역사 대중화 작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문득 사물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데 왜 단순하게 만드느냐는 어느 프랑스 역사가

의 역설적 항변이 떠오릅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 대중화의 성패는 단지 글을 읽기 쉽게 쓰는 ‘스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중이 제기하는 삶의 치열하고도 복잡한 요구들을 예리하게 포착할 수 있는 현실적 감각과 인간적 관심입니다. 만일 그런 삶의 요구들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표현할 수 있는 전문 역사가가 있다면 그는 역사 대중화를 위해 아주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 대중화는 한 두 사람의 유능한 역사가들이 개별적인 작업으로 감당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역사학계의 주요한 일부가 집합적으로 감당해야 할 우리 시대의 긴급한 아젠다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금 당장 더 많은 연구자들이 더 많이 토론해야 할 것입니다.

사족을 달자면, 서양사 연구자들이 서양사 교육의 문제에도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서양사 교육이 위축되는 현상은 역설적이다 못해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마땅히 글로벌 시대에 서양사를 배우는 일의 기쁨과 보람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중등 교육 수준에서 서양사가 포함되어 있는 교과목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교과서를 다시 쓰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양사 교육을 위해 단순히 주입식·암기식 ‘망라주의’가 아니라 삶의 요구를 정확히 짚어주는 새로운 내러티브를 개발해야 합니다. 나아가 대학 교육 수준에서도 서양사와 세계사, 서양사와 한국사의 관계를 생산적으로 재정립하면서 다양한 학문분과들과 접속하는 창의적인 교수법과 교과목을 개발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양사학회 차원의 대담하고도 공격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3. 지난 10년간 한국연구재단이 주도하는 연구의 형식이나 주제가 우리 학계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젝트 기반의 연구경향의 공과를 평가해 본다면 어떨까요?**

저는 지난 10년간 한국연구재단의 프로젝트 사업이 학문 발전에 나름대로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축에 속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한국연구재단의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연구재단도 그동안 사업 진행에서 발생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검토하면서 기성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생산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연구재단의 학문적 기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문적 재생산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기 위한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학위소지자 등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프로젝트 사업의 ‘유연화’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모험적이고 혁신적인 주제와 방법에 대해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연구 성과도 논문 중심에서 벗어나 다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논문, 저서(학술서/대중서), 역사, 칼럼, 강연, 기타 각종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 생산물들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4. 선생님은 앞으로 10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서양사 연구자로 다음 10년을 살고자 하시나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왔지만 서양사를 공부하기로 한 선택과 결정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것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선택과 결정이 훌륭한 것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10년을 어떤 서양사 연구자로 살고자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양사를 재미있게 공부하는 연구자로 살고 싶다고 대답하고자 합니다. 서양사 공부를 아주 잘 하지는 못해도 재미있게 하는 연구자 말입니다. 여기에 첨언하면 서양사 공부의 '재미'에 '의미'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연구한 것이 타인에게 '의미있게' 다가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밖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서 말했듯이 역사의 대중화만큼이나 역사의 이론화에도 몰입해보고 싶습니다. 역사가가 단지 이론을 검증하는 일만이 아니라 스스로 이론을 만드는 일에 뛰어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학은 물론이요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과학문들과의 접촉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접촉을 통해서만 역사와 이론의 진지한 만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찍이 이탈리아의 저명한 미시사가인 조반니 레비(Giovanni Levi)는 이론과 내러티브가 균형을 이루는 이상적인 역사학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데, 제게도 그런 유토피아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론과 내러티브가 균형을 이루는 유토피아는 제게는 새로운 인간 '과학'으로 나아가는 관문처럼 여겨집니다.

저는 지금 인간 '과학'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표현이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간 '과학'에 대해 한두 마디 첨언해두고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직관에 따라 이야기하자면, 근대 문명은 '자연'과학을 낳았지만 '인간'과학을 낳지는 못했습니다. 근대 문명 자체를 낳은 것이 르네상스 인문주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연과학은 그 이후에 혁명적으로 발전하여 공학과 산업으로 이어졌지만 인문주의의 진화는 불행히도 어디에선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 중단된 진화의 선을 연결하여 인간 '과학'을 창출하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단 근대 문명의 초심인 인문주의로 돌아감으로써 근대 문명 말기에 새로운 인간과학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듯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인간과학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정말이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문명적 위기를 낳은 중요한 원인들 중 하나가 다름 아닌 자연과학과 인간과학 사이의 불균형이기 때문입니다. 필경 이론과 내러티브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역사학이 그와 같은 미래의 인간과학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렇듯 디딤돌을 놓는 작업에도 어김없이 '열정적 소수'의 헌신성과 유능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도 '열정적 소수'의 힘에 미력이나마 보탬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 에고히스토리 토크쇼 2부

차용구(중앙대)

1. 역사에서의 문화적 전환, 언어적 전환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고 하지만, 개별 연구자의 연구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각국사, 시대사, 정치사가 견고하게 수성하고 있다는 인상이 듭니다. 서양사 연구나 교육에서 종래의 시기구분, 지역구분, 영역별 분류는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별 연구자가 시기, 지역, 영역을 넘나드는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 개별 연구자의 연구방법과 관련해서는 특정 국가, 시대, 영역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하지만, 교류와 접촉이 일상화되어 가는 글로벌 시대에 역사학도 일국사 중심의 역사해석이 갖는 문제점을 동시에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국사적, 일방적 역사해석은 다른 국가에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긴장과 갈등보다는 평화를 위한 역사학은 국가중심적 역사해석의 일방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시기구분, 지역구분, 영역별 분류에 의한 연구방법론을 거부하지 않지만, 시기·지역·영역에 국한된 편협한 시각으로 인한 해석의 일방성 역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학교 수업과 관련해서도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기와 지역, 영역의 구분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역사 진행의 단계적 연속성과 “얽힌 역사entangled history”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각국사, 시대사, 정치사 연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 사고와 융합적 교육도 필요하다.

2. 영화나 TV드라마, 웹툰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에서 역사는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인기를 끄니다. 역사 강사가 가장 각광받는 TV 연사이며, 그의 책은 몇 개월째 판매 순위 수위에 올라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단 역사와 대중 역사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 대중화, 어떻게 보십니까? 집필하고 계시는 연구에서나 학과에서의 교육 양쪽 측면에서 필요할까요?

학문이 대중문화에 편승해서 하향 평준화할 필요가 있을지? 강단 역사와 대중 역사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역사 연구자가 대중을 위해 집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문 역사가의 연구 목적이 될 필요는 없다.

일반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역사적 소재를 새롭게 발굴해서 역사대중화에 기여하고 역사를 친근하게 만드는 작업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역사학자가 역사대중서 집필에 몰두한다면, 이는 학문의 상업화에 가깝지 않나?

3. 지난 10년간 한국연구재단이 주도하는 연구의 형식이나 주제가 우리 학계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젝트 기반의 연구경향의 공과를 평가해 본다면 어떨까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프로그램은 연구 활성화와 학문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특정 주제를 지정해 신청을 받는 주제지정공모(톱다운) 방식의 지원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정 공모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문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통제될 것이다. 연구자 주도 연구지원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연구자와 한국연구재단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서양 사학회 차원에서 한국의 학술지원 거버넌스 조직 현황을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서 현행 정부의 연구지원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4. 선생님은 앞으로 10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서양사 연구자로 다음 10년을 살고자 하시나요?

지금까지의 연구주제와 영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고민 중이다. 그동안 젠더사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논문과 학술서의 형태로 국내외에서 출간하였다. 특히, 젠더사는 국외에서도 아직 생소한 영역으로, 서양 중세사의 특정 주제를 젠더적으로 접근하는 연구자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일종의 연구 공백(lacuna)으로 한국의 학자가 외국학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이다.

앞으로는 일국사적 시각을 탈피해서 초국가적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독일과 동유럽의 국가들(예를 들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발트 해 3국 등)의 관계사를 연구할 계획이다. 개별적으로 교류와 문화변용의 연구방법을 통해서 랑케의 서유럽 중심적 서양사 해석을 재고찰하려고 한다.

연구방법의 초국가적 전환(transnational turn)은 국가단위의 공간연구를 벗어나 초국가적 공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민족국가를 더 큰 공간적 영역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국가와 국가의 침투성(transit)과 이 과정에서 진행된 문화의 삼투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초국가적 전환은 국가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나, 동시에 국가의 상징적·정치적 집단기억 형성과정을 더 큰 공간적 영역에서 재고찰함을 의미한다.

또한, 비서양사를 전공하는 타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문화접촉과 변용의 사례들을,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의 영역에서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지역과 지역,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성과 소통의 문제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초국가적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1) 국가주도의 집단기억 형성과정과 그 역사적 배경을 밝힌다.
- 2) 정부의 기억정책 형성 과정에서 역사학과 역사 연구자가 기여한 역할을 드러낸다.
- 3) 일국사적, 공식적 집단기억이 갖는 기억의 일방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체한다.
- 4) 이를 통해 다른 국가의 상처를 치유하고 역사갈등 해결에 기여한다.
- 5) 사료의 (일국사적) 정전화 과정을 드러내, 이를 초국가적으로 다시 해석한다.



---

## 제3부 우리에게 서양사란 무엇인가?

---

사회 : 홍용진(서울시립대)

▶ 한국서양사학회 회원 설문조사 발표

▶ 역사에세이 공모전 수상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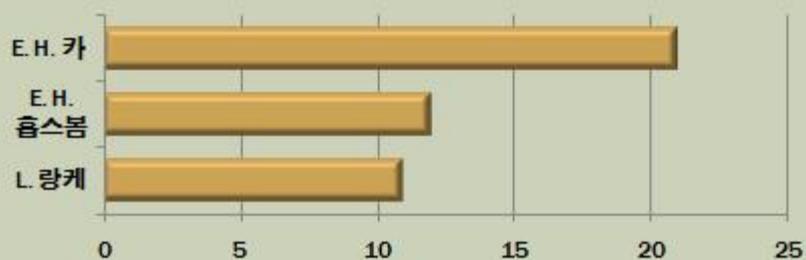
## 1. 가장 영향력 있는 서양의 역사가는?

### ▪ 기타

투키디데스(2),  
 마테오,  
 아우구스티누스,  
 야콥 부르크하르트,  
 앨런 J. P. 테일러,  
 에드워드 기번,

에드워드 사이드,  
 에른스트 라부르스,  
 위르겐 쿠키,  
 존 모릴,  
 피에르 노라,  
 테오도르 몸젠

## 2.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서양의 역사가는? (총 63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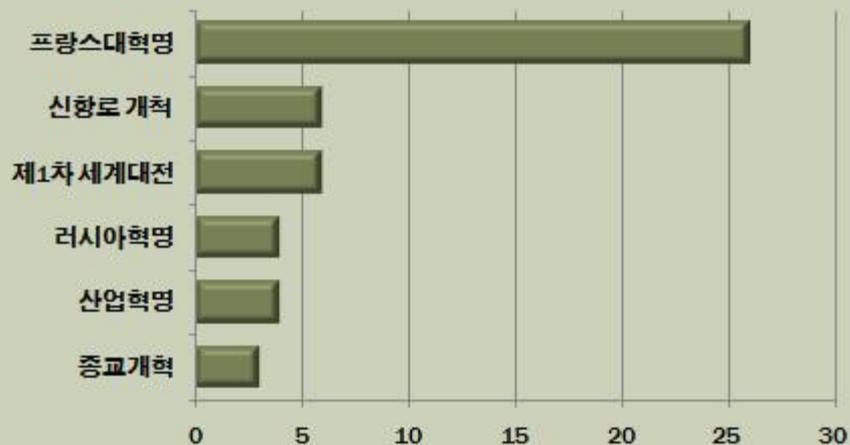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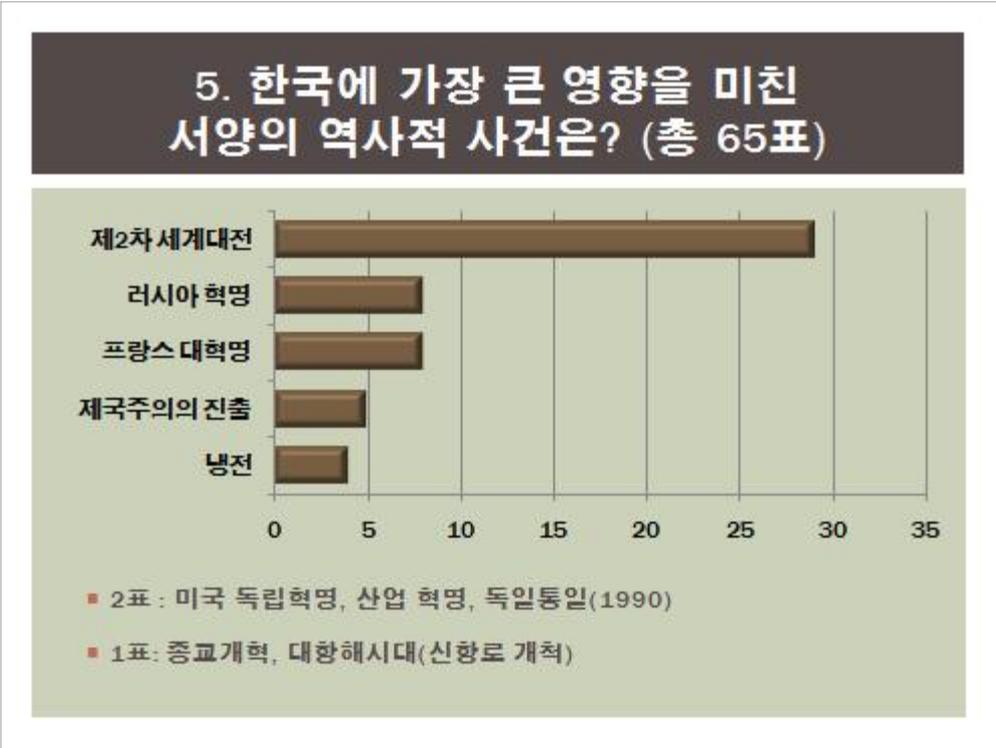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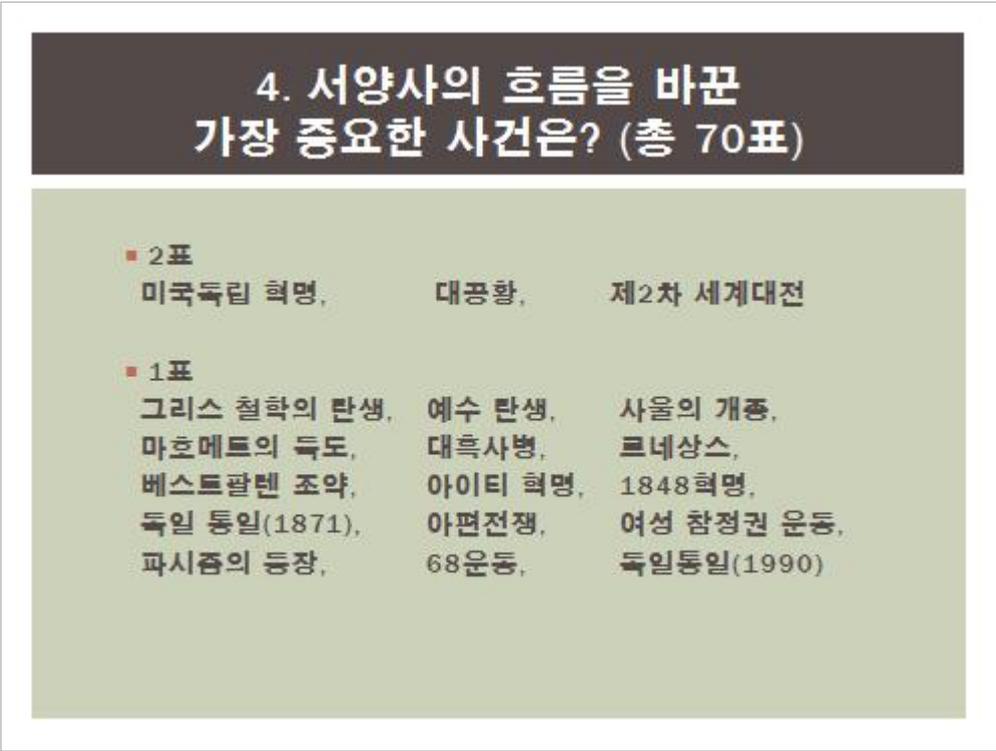
- 기타 : K. 마르크스(4), E. P. 톨슨(3), F. 브로델(2)  
 토인비, 액튼 경, M. 블로크, P. 앤더슨, 미셸 푸코,  
 하워드 진, 임매뉴얼 윌러스틴, 부르스 커밍스,  
 (조익설, 허승일)

### 3.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혹은 과소평가 된 서양의 역사가는? (총 51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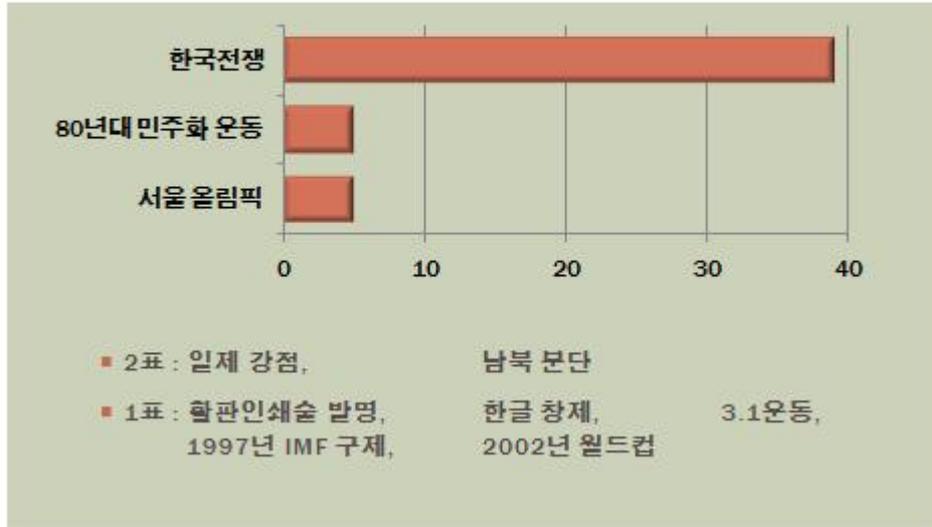
- 2표  
 레오폴트 폰 랑케, 두키디데스,      리처드 에반스, 한스 올리히 벨러      잠바티스타 비코,
  - 1표  
 나탈리 제먼 데이비스, 레몽 카젤, 쿠도비코 A. 무라토리, 미셸 드 세르트, 시드니 민츠, 알베르 마티에즈, 에른스트 라브쿠스, 위르겐 코카, 이븐 할둔, 조안 W. 스크, Q. 스킨너, 피터 터친, 후르세프스키      다니엘 타르타코프스키, 로날드 타카키, 마이클 하워드, 바실 데이비슨, 시어도어 쥘딘, 알베르 소블, 에른스트 H. 칸토로비치, 윌리엄 E. B. 듀보이스, 장프랑수아 마리니에, 존 H. 엘리엇, 토니 주트, 필립 D. 커턴,      드니 리세, 로버트 W. 데이비스, 막스 베버, 윌라 피츠패트릭, 아우구스티누스, 에드워드 P. 톰슨, 요한 스킨리체스, 윌리엄 A. 윌리엄스, 제레미 다이아몬드, 칼 뵉커, 프로코피우스, 헨리 아담스,
- 잘 알려지지 않아 모르겠음**

### 4. 서양사의 흐름을 바꾼 가장 중요한 사건은? (총 70표)





## 6. 서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한국의 역사적 사건은? (총 58표)



## 7. 서양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는? (총 67표)

### ■ 카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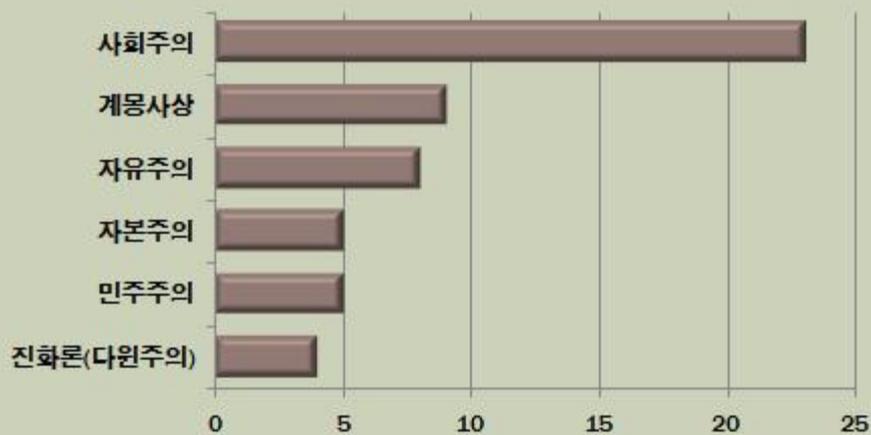
- 4표 : G. W. F. 헤겔, 미셸 푸코, 존 로크
- 3표 : 아우구스티누스, 엠마누엘 칸트, 예수
- 2표 : 아리스토텔레스, 르네 데카르트, 장자크 루소, 막스 베버
- 1표 : 플라톤, 토마스 아퀴나스, 마르틴 루터, 토머스 모어, 토머스 홉스, 프리드리히 니체, J. M. 케인스, S. 프로이트, 알프레트 아들러

## 8. 한국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서양의 사상가는? (총 64표)

### ■ 카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36)

- 4표 : G. W. F. 헤겔
- 3표 : 막스 베버, 예수
- 2표 : 미셸 푸코, 찰스 다윈
- 1표 : 아우구스티누스, T. 아퀴나스, 마르틴 루터,  
 장자크 루소, 존 로크, E. 칸트,  
 애덤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토머스 맬서스,  
 오귀스트 콩트, 우드로 윌슨, J. M. 케인스,  
 장폴 사르트르, 존 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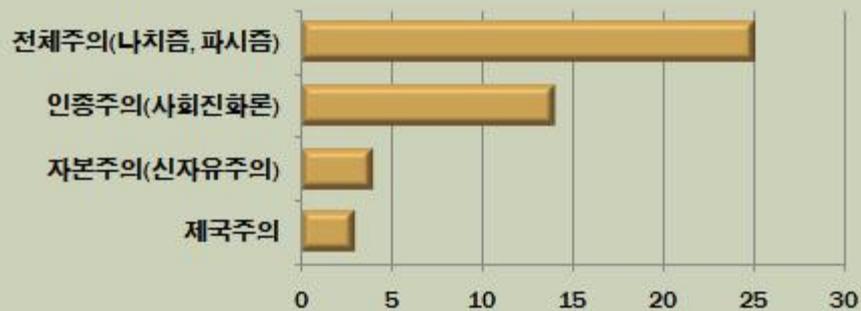
## 9. 세계사의 발전을 추동한 서양의 사상 혹은 이념은? (총 66표)



### 9. 세계사의 발전을 추동한 서양의 사상 혹은 이념은? (총 66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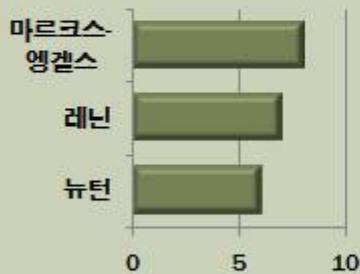
- 2표 : 낭만주의
- 1표 : 크리스티교, 14세기 유명론, 개인주의, 증상주의, 사실주의, 프로테스탄티즘, 합리주의, 민족주의, 공화주의, 페미니즘

### 10. 세계사의 퇴보를 낳은 서양의 사상 혹은 이념은? (총 58표)



- 2표 : 낭만주의
- 1표 : 플라톤주의, 크리스티교, 이신론(Deism), 자유주의, 반공주의, 민족주의, 관념론 철학, 공산주의, 문명충돌론, (십자군운동)

## 11. 세계사의 발전에 기여한 서양사 속의 인물은? (총 60표)



- 2표 : 민중(민초)들, 나폴레옹, 루터, 마틴 루터 킹, 스탈린, 케인스, 에디슨, 프랭클린 루즈벨트
- 1표 : 국제 상인들, 로베스피에르, 데카르트, 무하마드 알리, 버락 오바마, 볼테르, 빌리 브란트, 알렉산드로스 3세, 애덤 스미스, 앨버트 아인슈타인, 에밀린 팡크허스트, 에라스무스, 에이브러햄 링컨, 시에에스, 예수, 올리버 크롬웰,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존 로크, 너무 많음

## 12. 세계사의 퇴보를 낳은 서양사 속의 인물은? (총 63표)

### ■ 아돌프 히틀러 (37표)

#### ■ 이오시프 스탈린 (8표)

- 3표 : 마가렛 새처, 조셉 매카시
- 2표 : 브리스 옐친
- 1표 : 1970년대 자본가들, 나폴레옹, 로스차일드(네이션, 빅터), 고르바초프, 루즈벨트, 베니토 무솔리니, 예수, 크리스토포로 콜롬보, 허버트 스펜서, 너무 많음

---

## 학문 후속세대 발표회

---

사회: 이용일(대구교대)

▶ 옥타비아누스/아우구스투스와 아폴로 숭배

발표: 안재은(서울대)

▶ 영국의 제국 프로파간다와 전쟁미술, 1939-1945

발표: 조호희(고려대)



## 옥타비아누스/아우구스투스과 아폴로 숭배

안재은(서울대)

- I. 서론
- II. 공화정기 아폴로 숭배의 성격
- III. 옥타비아누스의 수호신 아폴로
- IV. 아우구스투스 시대 아폴로 숭배의 성격과 한계
- V. 결론

### I. 서론

옥타비아누스의 아폴로 숭배는 내전과 1인 지배체제의 확립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 아래서 발 전해왔다. 아폴로 숭배의 발달 과정은 당시의 혼란스러웠던 정치상과 아우구스투스 권력의 성격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아폴로의 이미지가 어떤 매체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에 국한될 뿐, 그 이미지가 언제, 그리고 왜 사용되었으며 혹은 사용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시대적 맥락 및 아우구스투스 체제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폴로와 옥타비아누스/아우구스투스의 관계는 단순히 도상학적, 문학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여 다각도에서 조명해야 한다. 내전기 동안 파당의 지도자였던 옥타비아누스에게 아폴로 숭배는 어떤 의미가 있었으며, 내전이 종식되고 원수정이라는 신체제를 수립하면서 그 의미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본고는 당시 옥타비아누스/아우구스투스가 처했던 정치적 및 종교적 상황을 고려하여 아폴로와의 관계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 및 쇠락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로마 초기에 아폴로가 어떠한 입지와 속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3장에서는 옥타비아누스가 왜 아폴로를 수호신으로 삼았고 이를 활용했는지 살펴볼 것이며, 4장에서는 아우구스투스 치세에서 아폴로 숭배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II. 공화정기 아폴로 숭배의 성격

로마인들에게 종교는 어떠한 신념 혹은 가치관이라기보다는 의례와 제식에 가까웠고, 숭배의 기저에 있는 원칙은 'do ut des', 즉 '~할테니 ~해달라'였다.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는 일명 '신들과의 평화(pax deorum)'을 잘 유지해야 했으며, 원로원과 사제가 이를 관장했기 때문에 로마의 종교는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을 가졌다. 하지만 공화정 말, 국가 종교가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자 많은 유력자들이 특정 수호신과의 긴밀성을 강조하며 수호신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드러냈다. 이처럼 특정한 신이 개인의 수호신이 되는 것은 로마사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의 수호신으로 아폴로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아폴로가 그 전까지는 그다지 유명하거나 영향력이 크지 않은 신이었기 때문이다. 원래 그리스에서 아폴로는 주로

신탁을 통한 예언의 권능을 가지고 있던 신이었다가, 로마인들이 남부 이탈리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 시대에 쿠마이를 거쳐 로마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로마에서 신탁의 신 아폴로는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 로마인들에게는 이미 시빌라 신탁집과 점(Divination)이라는 오랜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인들은 '예언'보다는 아폴로의 부수적 속성이었던 '치유'에 더 관심을 가졌다. 기원전 433년, 로마에 전염병이 창궐하자 "인민의 건강을 위하여" 아폴로 신전을 세울 것을 신에게 서약했고, 2년 후 '치유의 신 아폴로(Apollo Medice, Apollo Paean)'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다.

아폴로의 속성은 제2차 포에니 전쟁 때부터 좀 더 복합적으로, 특히 승리와 결부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원전 212년 처음 시행된 아폴로 제전(ludi Apollinares)의 기원이 된 유명한 예언가 마르키우스의 신탁이 이를 보여준다.

"로마인들이여, 만일 너희들이 적들을 -아득히 먼 곳으로부터 온 종기들을- 몰아내고자 한다면, 아폴로를 위해 기꺼이, 그리고 매년 제전을 거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제전이 올바르게 시행된다면 너희들은 영원히 기뻐하게 될 것이며 너희의 나라도 더욱 좋아질 것이다. 자비롭게 너희의 목초지를 돌보아 주는 신이 적들을 물리쳐 줄 것이기 때문이다."<sup>1)</sup>

치유의 신인 아폴로가 어떻게 적들을 물리쳐 준다는 것일까? 이는 아폴로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치유보다 상위의 속성인 '정화'이기 때문이다.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 전염병의 창궐은 종교적 오점이고, 이를 정화하는 것은 곧 사람들의 '치유'를 의미했다. 승리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보았듯 적(hostis)들은 곧 종기(vomica)이고, 종기를 치유하는 것, 즉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폴로의 역할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화'의 개념은 상황에 따라 폭넓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아폴로의 역할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하지만 아폴로의 영향력은 여전히 미미했다. 치유의 신으로는 새로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유입되었고, 승리는 마르스, 유피테르 등 로마의 주요 신들과 결부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이다.

공화정 말, 한 세기에 가까운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로마의 종교는 국가 종교에서 점차 사적인 것으로 변모했다. 이는 본디 로마인 모두를 위한 존재였던 신들이 특정 가문, 혹은 개인의 신으로 전유되기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신들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도구로, 혹은 특정 인물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명분으로 이용되었다. 아폴로가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이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옥타비아누스가 그를 자신의 수호신으로 내세우면서부터였다.

### Ⅲ. 옥타비아누스의 수호신 아폴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옥타비아누스가 처음부터 아폴로를 자신의 수호신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옥타비아누스는 아폴로 외에도 다양한 신성을 활용하였고, '옥타비아누스의 수호신 아폴로'라는 개념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변화를 거쳐 악티움 해전을 정점으로 비로소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카이사르의 피살 직후 옥타비우스가 로마 정계에 막 진출했을 때 그가 의존했던 이미지는 아폴로가 아니라 자신의 양부 카이사르였다.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일은 죽은 카이사르에 대한 신격화였고, '신격 율리우스의 아들(Filius Divi Iulii)'이라는 독특한 지위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다져

1) Livius, *Ab Urbe Condita* 25, 12, 9

나갔다. 당시 그가 발행한 주화에 주로 등장했던 신격은 아폴로가 아닌, 신격화된 카이사르의 및 그와의 혈통을 강조할 수 있는 베누스와 아이네아스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옥타비아누스가 좀 더 직접적으로 아폴로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때는 필리피 전투 무렵부터로 보인다. 당시 아폴로와 관련이 깊었던 것은 오히려 공화주의자들, 브루투스과 카시우스였다. 아폴로가 가진 예언의 힘, 그리고 정확의 힘이 합쳐져 아폴로의 이미지는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승리 후 옥타비아누스는 초신(招神, evocatio)의 일환으로, 적들이 적극적으로 선전했던 슬로건인 아폴로를 차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36년, 팔라티누스 언덕에 아폴로 신전을 봉헌하겠다는 맹세는 옥타비아누스와 아폴로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보여준다. 옥타비아누스가 구매한 팔라티누스 언덕의 집에 번개가 내려쳤고, 장복관들(haruspices)은 이를 아폴로 신이 그 자리를 원하는 징조라고 해석했다. 다른 신도 아닌 ‘아폴로’가 그 자리를 원한다는 해석, 그리고 건립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자의적인 행동들- 개인적인 징조를 국가적인 징조로 해석하여 신전을 건립한 것, 원로원의 의결 없이 신전 공표를 발표한 것, 본래 신전 건립을 관장하는 제사 담당 15인 사제관이 개입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옥타비아누스는 이미 이즈음부터 아폴로를 자신의 수호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무렵 그의 정적들은 이미 수호신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웠고, 옥타비아누스는 이들과의 정쟁을 통해 수호신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나갔다. 기원전 36년 폼페이우스에게서 승리를 거둔 후 옥타비아누스는 폼페이우스가 만들어놓은 넵투누스의 이미지를 활용하였고, 안토니우스와의 경쟁을 통해 신을 활용한 선전 전략이 정점에 이르렀다.

옥타비아누스-아폴로는 서방과 질서, 전통과 금욕을 상징했고, 안토니우스-디오니소스는 동방과 무질서, 새로움과 쾌락을 상징했다. 안토니우스는 디오니소스의 이미지를 취함으로써 동방에서 지지 세력을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로마인들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로마인들이 보기에 안토니우스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저버린 것으로 보였다.

기원전 31년,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여 내전의 최종적인 승자가 됨으로써 치열했던 수호신들 간의 경쟁도 아폴로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이 역사적인 전투가 벌어진 곳 근처에는 아폴로의 신전이 있었고, 옥타비아누스는 아폴로가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다주었다 생각했다. 본래 ‘승리’는 아폴로의 부수적인 속성으로 생각되었지만, 악티움 해전의 승리로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수호신이 ‘승리’를 가져다주는 승리의 수호신이라 생각하기 시작했다.

로마로 귀환한 옥타비아누스는 공화정의 틀 안에서 공화정의 전통과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대체하고자 했다. 약 500년 정도 로마인들에게 ‘치유의 신’이었던 아폴로는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수호신’이 되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이 내전을 종식시킨 승리자임을 강조하고자, 가장 중요했던 전투인 악티움의 승리를 가져다 준 아폴로를 승리의 신으로 추앙했다. 기존에는 ‘승리’가 ‘정확’의 일환이었다면, 이제는 ‘정확’의 의미는 거의 사라지고 ‘승리’의 이미지만 강조되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집과 매우 가까운 곳에 신전을 세움으로써 수호신에 대한 애착을 표현했다. 신전과 개인의 거주지가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것은 로마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이 신과 비견되는 존재임을 묵시적으로 보여주었다.

#### IV. 아우구스투스 시대 아폴로 숭배의 성격과 한계

권력자로서 옥타비아누스의 정당성은 내전을 종식시켰다는 데 있었다. 내전의 종식을 가져온 악티움 해전의 승리는 곧 아폴로의 이미지로 대변되었다. 승리의 수호신, 그리고 로마의 1인자 옥타비아

누스의 수호신 아폴로는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1인자가 되었으니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신이 되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많은 문인들은 여전히 아폴로 신을 찬미했지만, 정작 공식적인 공간 및 숭배에서 아폴로의 모습은 차츰 자취를 감추었다.

한편으로는 아우구스투스와 아폴로의 특수한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신에 대한 숭배를 공식화하지 않은 이중적인 태도는 아우구스투스의 권력 자체가 위장, 혹은 모호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체제에는 사적인 근거와 공화정적 전통이 모호하게 뒤섞여 있었고, 아폴로 숭배 또한 이러한 맥락 안에 있었다.

내전 이후 옥타비아누스는 1인 지배체제를 갖추어나가면서도 공화정의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고, 언제나 자신이 공화정의 전통을 따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신격화하려는 시도들을 하기 시작했다. 아폴로 신전은 수호신과의 관련성을 통해 옥타비아누스의 신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아폴로 신전의 봉헌을 약속한 것은 완공되기 한참 전인 기원전 36년이었지만, 봉헌된 것은 8년이 지난 기원전 28년이었다. 본래 봉헌을 약속한 계기는 번개가 친 우연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마침 아폴로의 도움으로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게 되자 신전 건립의 목적은 다소 바뀌었다. 악티움 해전의 승리를 강조하고 이 승리를 가져다 준 신의 가호를 선전할 필요가 생겼던 것이다. 이 시기에 유독 아폴로와 관련된 프로파간다가 성행했던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기원전 18년 무렵이 되자 아우구스투스의 1인 지배체제는 안정되기 시작했다. 기원전 17년에 시행된 백년제(Ludi Saeculares)는 새로운 시대, 즉 아우구스투스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호라티우스는 『백년제 찬가』에서 아폴로와 아우구스투스의 관계를 의식하여 아폴로의 역할을 몹시 강조하였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된 이후 아폴로 숭배는 오히려 쇠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독 아폴로가 강조된 호라티우스의 찬가, 그리고 베르길리우스와 오비디우스 등 아폴로에 대한 찬미가 넘쳐나는 당대의 작품들을 본다면 아폴로의 숭배의 쇠락이라는 것은 매우 모순적으로 보이는 일이다. 하지만 문학적 영역에서 문인들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적인 찬미와 아우구스투스라는 집권자에 의해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숭배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문학에서는 “아폴로”라는 단어가 “시(poem)”와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로 술하게 등장했지만, 아우구스투스의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각종 건축 및 숭배에서 아폴로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적 숭배에서 아폴로가 배제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기원전 17년 이후, 다소 불안했던 권력이 안정됨에 따라 아우구스투스는 ‘선조들의 습속(mos maiorum)’, 즉 전통을 회복시키려 했다. 아우구스투스는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 잊혀져있던 국가종교를 되살리고, 전통 풍속들을 복원하고자 했다. 이러한 개혁과 선전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전통 종교의 신들이 필요했다. 지지기반이 없는 외래의 신인 아폴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설득력과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었다. 대신 마르스, 베누스 등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이 다시금 강조되기 시작했다. 아우구스투스의 행보 역시 전통적이고 공적인 것에 집중되었다. 아폴로 숭배와 같이 아우구스투스 자신과 관련된 사적인 일들은 차츰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평화의 제단(Ara Pacis)’과 ‘아우구스투스 광장(Forum Augustum)’은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우구스투스의 귀환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평화의 제단에 새겨진 부조들은 아우구스투스의 이데올로기를 무엇보다 잘 보여준다. 특히 벽 바깥쪽의 프리즈 부조 장식들은 로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보여준다.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건국 신화는 로마의 과거의 모습을, 남쪽과 북쪽에 있는 원로원 의원들과 사제들, 황가의 행렬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당시 로마의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로마 여신과 텔루스 여신은 로마제국의 영광과 황금시대가 도래할 미래를 보여준다. 결국 아우구스투스가 평화의 제단을 건립한 이유는 자신 및 후계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신이 세운

체제가 앞으로 영구히 이어질 것이라는 영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아우구스투스 광장, 특히 그곳에 위치한 마르스 신전 역시 이와 비슷한 이데올로기를 보여준다. 마르스 신전의 박공에 율리우스 가문의 시조신이자 로마의 국가 형성과 관련이 있는 마르스, 베누스, 게네트릭스, 신격 율리우스를 함께 새겨넣음으로써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가문의 역사와 로마 형성의 역사를 동일시하였다. 광장에 있는 직선 회랑의 양 옆에 있는 조상(彫像)들 또한 율리우스가의 역사와 로마의 역사를 상징하며, 그것이 모두 아우구스투스에게로 수렴됨을 보여준다.

공화정의 전통과 개인의 권력이 모호하게 뒤섞여 있던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아폴로는 양 쪽 어느 곳에서도 확실한 입지를 다지지 못했다. 공화정에서 전통적으로 아폴로가 가지고 있던 '치유의 신'이라는 이미지는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의 수호신으로 전유하면서 사라져갔다. 게다가 아폴로는 본래 지지기반이 취약한 외래의 신이기 때문에 베누스, 마르스와 같은 전통적인 신들만큼 아우구스투스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보장해 줄 수 없었다.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 아폴로의 입지는 점차 좁아져 갔다. 아폴로는 아우구스투스의 개인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에 국한될 수밖에 없던 것이다.

게다가 아폴로는 아우구스투스의 수호신이라기보다는 악티움 해전 승리의 신으로 여겨졌다. 진정으로 아우구스투스를 수호해주고, 숭배된 대상은 아폴로가 아닌 아우구스투스의 게니우스(genius)였다. 대신관의 자격, 그리고 기원전 2년에 수여받은 국부(Parens Patriae)의 자격에 근거하여 아우구스투스의 게니우스 숭배가 시작되었다. 게니우스, 특히 가장(pater familias)의 게니우스는 가정의 수호신 라레스(Lares)들, 그리고 베스타(Vesta)와 함께 숭배되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각 가정에서, 개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특정 신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아폴로와 같이 특정한 신이 개인의 수호신이라는 개념은 로마인들에게 매우 낯설었고, 로마인들에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었다.

## V. 결론

기원전 1세기, 끊임없는 내전으로 혼란스러웠던 로마에서 자신을 지키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많은 유력자들은 수호신을 내세웠다. 이것은 로마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옥타비아누스가 택한 것은 아폴로였다. 처음 정계에 입문했을 때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후광 밖에는 기댈 곳이 없었고, 혼란에 빠진 로마에서 자신을 지키고 권력을 손에 넣을 전략이 절실했다. 그는 정적들과의 싸움을 통해 수호신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얻은 것들은 자연스레 자신의 전략의 일부로 수용하였다.

악티움 해전이 끝나자, 아폴로는 내전의 승리를 가져다 준, 승리의 수호신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 아폴로의 주된 속성이 치유였다면, 전쟁 이후에는 승리의 이미지가 강조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폴로가 본디 가지고 있었던 정확나 치유 같은 속성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 졌고, 아우구스투스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수호신이라는 인식만 남게 되었다.

아폴로가 옥타비아누스의 수호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다. 본디 로마인들은 개개인마다 자신의 게니우스라는 수호령을 가지고 있었기에 특정한 신이 수호신화(化)되는 일은 없었고, 이러한 수호신의 개념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내전이라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개인은 더욱 많은 신의 가호를 필요로 했고, 이러한 바람이 수호신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유력자들이 앞다투어 수호신을 내세우던 모습은 아우구스투스 시대 권력이 안정되자 사라졌다. 아폴로 숭배 또한 마찬가지였다. 아우구스투스의 권력이 안정되자 그는 개인적인 프로파간다에 몰두하

기 보다는 로마 전체를 위한 프로파간다를 펼쳤다. 로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평화의 제단은 아우구스투스가 만들어갈 미래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중에 아폴로의 자리는 없었다. 아폴로는 어디까지나 옥타비아누스 개인 권력을 정당화시켜주는 존재였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가 죽은 후 그의 쇠락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이후의 황제들도 자신의 게니우스를 가지고 있었을 뿐, 옥타비아누스처럼 특정한 수호신을 내세우지는 않았다.

이러한 형태의 수호신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은 로마가 또다시 혼란을 겪게 되는 3세기 무렵이다. 황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던 이때, 황제들은 ‘무적의 태양신(Sol Invictus)’이라는, 자신을 지켜주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를 수호신으로 삼았다.

결국 옥타비아누스/아우구스투스의 아폴로 숭배는 내전, 혹은 잇단 전쟁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타난 매우 특수한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그리스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던 외래의 신이 로마의 1인자의 수호신이 되어 숭배되고 선전되었다. 하지만 공적인 기반과 사적인 권력이 모호하게 뒤섞여 있던 아우구스투스 시대에서 아폴로는 어디에서도 확고한 지위를 가지지 못했다. 국가의 전통적인 신들, 그리고 게니우스에 대한 숭배로 인해 아폴로 숭배는 점차 쇠락해갔다. 이것은 아폴로 숭배가 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권력의 모호성에 기인하여 발전하였기에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한계였다.

## 영국의 제국 프로파간다와 전쟁미술, 1939-1945

조호희(고려대)

### 서론

- I. 전쟁예술가자문위원회(WAAC)와 전쟁미술
    - I-1. 공보부의 프로파간다 정책
    - I-2. 전쟁예술가자문위원회(WAAC)의 활동과 조직
    - I-3. 케네스 클라크와 ‘영국적인 미술’
  - II. 전쟁동원 프로파간다: 전쟁미술 해외 순회전시
    - II-1. ‘영국의 전쟁’: 미국 전시
    - II-2. ‘영연방의 전쟁’: 자치령 순회전시
    - II-3. ‘영제국의 전쟁’: 식민지 순회전시
  - III. 제국통합 프로파간다: 식민지 전쟁미술 수집과 전시
    - III-1. 안토니 그로스의 《전투 중인 인도》 전시
    - III-2. 식민지화가계획
- 결론

### 서론

2차대전 시기 영국은 총력전에서의 총력승리를 위한 영제국 동원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총력프로파간다를 생산했다. 영국은 영연방의 개념을 법적으로 확립하고 궁극적 제국해체를 목전에 둔 시기에 대규모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 때 영국에게 제국은 승리를 위한 수단이자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목적이었다. 공보부(Ministry of Information)는 활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동원해 프로파간다를 펼쳤다. 이 논문은 그 가운데 순수미술, 그 중에서도 전쟁미술의 국가적 수집과 전시를 통한 프로파간다에 주목할 것이다.

전쟁이라는 급박함 속에서도 생산효율성이 현저히 낮은 전쟁미술을 프로파간다로 활용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전쟁미술은 언어적 수사가 없는 순수미술이라는 점에서 ‘고급문화’를 활용해 지배계급을 대상으로 삼은 공보부의 ‘간접적’ 프로파간다 방침에 잘 부합했다. 둘째로, 예술 자체가 ‘자유’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전쟁미술은 다양한 사조의 미술을 아우르는 컬렉션을 구성해 반파시즘의 맹주로 ‘자유’와 ‘다양성’의 수호자로서의 정체성을 만들기에 용이했다.<sup>1)</sup> 마지막으로, 전쟁미술은 ‘전쟁기록’으로 생산되어 전간기에 제국전쟁박물관에 전시로 대중적 인기가 검증된 매체였다.<sup>2)</sup>

2차대전 시기 영국의 독특한 프로파간다 매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에서 이에 관한 연구는 손에 꼽히게 적다. 맥레인, 발푸어, 테일러 등이 영국 공보부와 프로파간다활동에 관한 연구를 했으나 전쟁미술은 거의 소개되지 않는다.<sup>3)</sup> 그나마 전쟁미술에 주목한 것은 오히려 미술사학자들이다.<sup>4)</sup> 그 중에

1) Barbara McCloskey, *Artists of World War II* (London, 2005), p.71.

2) R. T. Stearn, “War and the Media in the 19<sup>th</sup> Century: Victorian Military Artists and the Image of War, 1870-1914”, *RUSI*, vol.131, issue.3, 1986.

3) Ian McLaine, *Ministry of Morale: Home Front Morale an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in World*

서도 전쟁미술 생산과 수집을 담당했던 전쟁예술가자문위원회(War Artists' Advisory Committee, WAAC) 자체에 주목한 연구자는 포스(Brian Foss)와 설(Rebecca Searle)이 전부다. 이들은 WAAC와 전쟁미술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예술의 정치적 활용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지만 이미지 해석에 집중해 WAAC 전시에 대해서는 오류도 있을 정도로 소홀한 측면이 있다.<sup>5)</sup> 두 연구자 모두 WAAC 전시에 내재된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는 논하지 않았다. 이에 이 논문은 WAAC의 활동과 전시를 역사학적 관점에서, 특히 제국 프로파간다의 측면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영국은 세계대전의 위기 속에서도 제국적 정체성을 엄두에 두고 프로파간다를 펼쳤다. 전쟁미술 전시에 반영된 영제국의 다층적 특성을 바탕으로 전시 영국의 문화적 식민지배의 구상을 분석할 것이다.

## I. 전쟁예술가자문위원회(WAAC)와 전쟁미술

### I-1. 공보부의 프로파간다 정책

2차대전 시기 영국의 정부주도 프로파간다는 대상에 따라 수행조직이 나뉜다. 적대국 프로파간다는 정치전쟁집행부에서 담당했고 동맹국, 중립국, 국내 프로파간다는 공보부 관할이었다. 국내외 프로파간다의 공통된 특징은 감정선전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이다.<sup>6)</sup>

2차대전 프로파간다가 1차대전의 기초를 계승했기 때문에 공보부 프로파간다의 핵심은 1차대전에 이어 '간접적' 프로파간다에 있었다. 전체주의 국가와의 경쟁을 위해 '프로파간다 같이 보이지 않는 프로파간다'가 중요했다. 가장 보편적인 매체는 라디오와 영화였다. 그 중 가장 공식적인 특성을 지닌 것은 BBC의 라디오 방송이다.<sup>7)</sup> 2차대전 시기 BBC는 보도의 자율성을 유지하며 늘 '사실'전달을 내세워 영국이 제국주의 국가의 인식표를 떼고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자로 보이도록 노력했다. 프로파간다가 '중립적 사실'을 바탕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원칙도 1차대전의 유산이다.<sup>8)</sup> 이와 같이 문화적 수단을 통해 엘리트 계층부터 설득하는 방식의 공보부 선전원칙들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프로파간다가 바로 WAAC의 전쟁미술이었다.

### I-2. 전쟁예술가자문위원회(WAAC)의 활동과 조직

전쟁이 벌어지자 케네스 클라크는 1차대전의 사례를 들어 해석적 기록의 수집을 위한 조직으로 전쟁예술가자문위원회(WAAC) 설치를 공보부에 제안했다.<sup>9)</sup> 그 결과 공보부가 전쟁미술의 선전적 가

*War II*(London, 1979); Michael Balfour, *Propaganda in War, 1939-1945*(London, 1979); Philip M. Taylor, *British Propaganda in the 20<sup>th</sup> Century*(Edinburgh, 1999).

4) Meirion and Susie Harries, *The War Artists: British Official War Art of the Twentieth Century*(London: 1983); Alan Ross, *Colours of War: War Art, 1939-45*(London, 1983); Stuart Sillars, *British Romantic Art and the Second World War*(London, 1991); Barbara McCloskey, *Artists of World War II*(London, 2005); Monica Bohm-Duchen, *Art and the Second World War*(Surrey, 2013).

5) Brian Foss, *British Artists and the Second World W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War Artists' Advisor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Ph.D Thesis(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on, 1991); Brian Foss, "Message and Medium: Government Patronage National Identity and National Culture in Britain, 1939-1945", *Oxford Art Journal*, Vol.14, No.2(1991); Brian Foss, *War Paint: Art, War State and Identity in Britain 1939-1945* (London, 2007); Rebecca Searle, *Art, Propaganda and the Experience of Aerial Warfare in Britain during the Second World War*, Ph.D Thesis(University of Sussex, 2011)

6) 니콜라스 잭슨 오쇼네시, 『대중을 유혹하는 무기: 정치와 프로파간다』(한울, 2009), pp.174-218

7) Donald Sassoon, *The Culture of the Europeans*, 오숙은, 이은진, 정영목, 한경희 역, 『유럽문화사4 1920~1960』(뿌리와이파리, 2012), p.461.

8) Taylor, *British Propaganda in the 20<sup>th</sup> Century*, p.36.

치와 전쟁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전쟁예술가자문위원회가 1939년 11월 16일에 정식으로 출범했다.<sup>10)</sup> 공보부가 WAAC를 설립한 이유는 예술의 정치적 활용가치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술을 ‘문화적 프로파간다’로 간주한 영국문화원의 영향에 더해 1930년대에 예술은 ‘자유’와 결부된 매체로 여겨져 반파시즘의 상징이 되었다. 덕분에 WAAC는 총 £96,000의 재정을 지원받으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활동했다.

WAAC는 위원장 케네스 클라크 외에 예술분야 자문위원 3명, 사무비서 1명, 그리고 정부부처 대표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정부부처 대표위원으로는 해군, 육군, 공군, 국내안보부, 병참부, 생산부, 전시수송부, 공보부에서 1명씩 파견되었다. 전쟁의 경과에 따라 위원 구성이 계속 바뀌었지만 클라크만은 끝까지 WAAC의 위원장으로 조직을 이끌었다.

WAAC는 세 가지 목적으로 전쟁미술 사업을 전개했다. 첫째로, WAAC는 ‘전쟁의 모든 양상을 담은 해석적 역사기록물’로 전쟁미술을 수집했다. 생산효율성의 측면에서 전쟁미술은 사진이나 포스터를 따라갈 수 없었다. 그럼에도 전쟁미술을 ‘기록물’로 수집한 것은 순수미술만이 가지는 ‘해석적’ 특성이 전쟁에 대한 코멘트를 부여하는 가치를 가졌기 때문이다.<sup>11)</sup> 둘째로, 전쟁미술은 프로파간다의 일환으로 내셔널갤러리에서 전시되었다. 2차대전 중 런던 내셔널갤러리는 소장품을 모두 외곽의 창고로 이관하고 빈 공간을 전쟁미술 전시, 음악 공연, 식당으로 활용해 1일 평균 수 천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했다.<sup>12)</sup> WAAC는 나아가 영국 전역의 지방과 해외로 순회전시를 보냈다. 운송 중 침몰위험, 종군화가 전사의 리스크를 안고 블리츠 중에도 전시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전쟁미술의 프로파간다적 유용성이 높이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WAAC는 전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화가들을 보호하고, 신진 화가 발굴을 통해 영국 미술계의 발전을 도모했다. 결과적으로 37명의 화가들이 정규직 공식전쟁화가로 고용되었고, 약 100명의 화가들이 단기계약직으로, 그 외 264명의 예술가들이 WAAC에 작품을 판매했다.<sup>13)</sup>

### I-3. 케네스 클라크와 ‘영국적인’ 미술

WAAC는 설립부터 해체까지 영국의 유력한 미술사학자이자 예술행정가인 위원장 케네스 클라크가 이끈 조직이다. 화가 고용, 작품구입, 전시기획, 재정사용 등 클라크의 결재를 거치지 않는 일이 없었다. 아울러, 클라크는 현대 영국 미술사학계의 거장으로 술한 저서를 통해 ‘영국적’ 미술의 개념을 확립하고 ‘국민교육’에 중대한 기여를 한 인물이다. 그러므로 WAAC의 전쟁미술, 그리고 전시담론 분석에 선행해 클라크의 예술관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클라크는 1903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부유한 가정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가문의 막대한 부는 클라크가 원하는 커리어를 추구하는 데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 그는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약 5년의 큐레이터 커리어를 거쳐 1934년 31세의 나이로 최연소 내셔널갤러리 관장에 취임했다. 전후 클라크는 관직에서 물러나 후학양성과 집필활동에 전념하며 명성을 얻었다. 1946년 옥스퍼드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1969년에는 그가 직접 제작과 연출에 참여한 BBC 「문명(Civilization)」 시리즈로 국가적 명성을 얻었다.<sup>14)</sup>

클라크는 예술이 인간정신 고양에 효과적이라고 믿었고 이는 공보부가 대중매체에 더해 굳이 순수미술을 프로파간다로 활용한 데 영향을 끼쳤다. 그는 “세상의 모든 핵무기와 강제수용소도 인간정

9) Foss, *War Paint*, p.160.

10) Ministry of Information. Artists' Advisory Committee Terms of Reference (IWM:GP/72/a1).

11) *War Pictures at the National Gallery*, 1942 (IWM:K83/1648).

12) McCloskey, *Artists of World War II*, p.73.

13) Foss, *War Paint*, pp.23-26.

14) Matthew, Harrison (ed.), *Oxford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pp.817-819.

신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할 것이고, 인간정신은 언제나 시각적 형태로 계승될 것”이라며 미술의 위대함을 주장했다.<sup>15)</sup> WAAC는 이런 클라크가 “내가 2차대전 시기 중 한 모든 일 중 유일하게 가치 있는 활동”으로 평가할 정도로 자부심을 가진 것이었다.<sup>16)</sup> WAAC 컬렉션의 주를 이루는 풍경화는 클라크가 가장 영국적인 미술로 여겼던 장르다. 목가적 풍경은 1차대전 이후 줄곧 영국인들의 심상을 지배했다. 영국의 풍경화에는 일종의 ‘영웅’에 해당하는 주인공이 있고, 그 영웅의 존재로 풍경화는 ‘역사화’가 되었다. 풍경화가 ‘역사화’로서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전쟁미술이 전쟁의 기록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 II. 전쟁동원 프로파간다: 전쟁미술 해외 순회전시

### II-1. ‘영국의 전쟁’: 미국 전시

WAAC가 국가 지원을 받아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프로파간다적 특성에 있었다. 때문에 WAAC는 세계 각지에서 전시를 열었다. 그 시작이 1941년 5월 23일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서 열린 《전쟁에 처한 영국(Britain at War)》이다. 이 전시는 미국의 참전을 유도하라는 공보부의 요구에 따라 기획되었다. 1차대전 이후 영국의 노골적 전쟁 프로파간다에 질린 미국인의 뇌리에 프로파간다는 용어 자체만으로도 천박하다는 인식이 박혀있었다.<sup>17)</sup> 따라서 대중이 프로파간다로 인식하지 않을 만한 매체, 즉 순수미술을 활용하게 되었다.

미국 전시장소로 MoMA의 섭외는 클라크의 개인적 명망에 더해 MoMA의 적극적 관심 덕에 쉽게 성사되었다. 전시에 반영된 예술의 정치적 활용성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sup>18)</sup> 아울러 MoMA는 운송문제로 전시가 지연되자 미술에 더해 영화, 포스터, 만화, 사진 등 전쟁을 묘사하는 거의 모든 매체의 작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며 전시규모를 확대했다.<sup>19)</sup> MoMA가 자체적으로 캐나다에서 1차대전 전쟁미술을 대여하고 카탈로그에 T. S. 엘리엇(Eliot)에게 축시 <영국제도의 수호(Defense of the Islands)>를 요청해 실기까지 했다.

WAAC가 《전쟁에 처한 영국》에서 취한 프로파간다 전략은 ‘영국의 전쟁’을 면면이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강한 반제국주의 정서를 고려해 영국은 제국이 아닌 브리튼일 뿐임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제국적 색채를 뺀 ‘영국’의 전쟁 프로파간다로 기획했다. 여기서 전쟁미술은 “르포르타주”이자 “독재와 공격성에 대한 자유로운 인간정신의 승리”라고 주장했다.<sup>20)</sup> 전시 관람만으로도 자유와 민주를 지키는 일조한다고 느끼도록 장치한 것이다.

전시 작품구성에서 ‘영국의 전쟁’을 넘어 ‘모두의 전쟁’이라는 담론을 읽을 수 있다. 이는 WAAC가 이후 기획한 모든 해외전시에 적용된다. 군인과 민간인 ‘모두’가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 작품들이 선정되었다. 관람자의 감성에 호소하기 좋은 여성[그림1]과 어린이[그림2]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필수적이었다. 미국도 참여해 마땅한 인상을 심기 위해 연합군 측의 외국인도 소개되어야 했다. 영국군 소속으로 참전한 두 명의 미국인 초상화가 전시를 위해 제작되었다.<sup>21)</sup> 이들은 “유럽의 전쟁을 모두의

15) Clark, *Landscape into Art*, p.143.

16) Clark, *The Other Half*, p.55.

17) Taylor, *British Propaganda in the 20<sup>th</sup> Century*, p.44.

18) Monroe Wheeler, “Foreword”, *Britain at War* (The Museum of Modern Art, 1941).

19) Kenneth Clark이 Douglas William에게 보낸 서신, 1941년 2월 4일; Alfred Barr가 Kenneth Clark에게 보낸 서신 (IWM:GP/46/24/4a).

20) Herbert Read, “The War as Seen by British Artists” (IWM:GP/46/24/4a).

21) E.M.O’R Dickey가 Commodore Peake에게 보낸 서신, 1940년 10월 18일 (IWM:GP/46/24/4a).

전쟁으로 만든 사람들”이라고 소개된다.<sup>22)</sup>

MoMA에서의 전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 전시는 개막 첫 날 3천명의 관람객을 동원했고 2주에 걸친 전시기간 동안 2백건이 넘는 언론리뷰를 받았다. WAAC는 《전쟁에 처한 영국》의 성공 후 자치령과 식민지 순회전시를 기획했다. 이후 전쟁미술 해외전시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전쟁에 처한 영국》의 의미가 크다.

## II-2. ‘영연방의 전쟁’: 자치령 순회전시

자치령 순회전시는 전쟁의 주체를 영연방으로 설정해 영연방 공동체의 유대를 확인하고 결속을 강화하고자 했다.<sup>23)</sup> 전시의 프로파간다 포인트도 보다 직접적인 반-나치 선전과 자치령들의 전쟁공로 인정에 있었다. 미국 전시에서 자유, 다양성, 독창성의 가치를 구현해도 독일과 직접 비교하지는 못한 것과 대조적이다.

자치령 전시는 캐나다부터 시작했다. 캐나다 전시는 미국에 있던 《전쟁에 처한 영국》에 캐나다 공군 장교 초상화 9점, 뉴펀들랜드 별목꾼 그림 2점, 그리고 헨리 카(Henry Carr)의 시골 풍경화와 찰스 페어스(Charles Pears)의 해전 풍경화 각 1점이다. 이 전시는 캐나다 내셔널갤러리 최다관람객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뉴질랜드-호주 전시에서는 군사소재 작품의 비중이 더 크다. 뉴질랜드와 호주 출신 군인 초상화들도 다수 포함되어 자치령의 전쟁공로를 확인해주었다. 북미 전시와의 큰 차이점은 외국인의 참전을 그린 작품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군사소재 그림의 대상이 달랐다. 전쟁 동원 목적의 북미 전시에서는 항공모함, 역사적 기함 등 규모가 큰 군함들이 전투 중인 그림이 많다. 반면, 자치령 전시에서는 소해함, 잠수함, 호송선 등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군함들이 주를 이룬다. 또, 영국본토항공전의 진행에 따라 스피트파이어기와 허리케인기도 새롭게 소개된다. 다양해진 전황을 반영해 시의적절한 전시를 구성한 것이다. 이 전시는 뉴질랜드에서 “그림이 글보다 더 효과적이므로 더 많은 전쟁미술 전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을 정도로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sup>24)</sup>

## II-3. ‘영제국의 전쟁’: 식민지 순회전시

1941년 당시 공보부가 미주와 자치령 외의 지역에 전시를 보낼 가치가 없다는 방침이었음에도 예외적 프로파간다 목적으로 서인도제도 순회전시가 결정되었다.<sup>25)</sup> 공보부는 소요와 반란으로 정치가 불안한 서인도제도에 미술전시를 보내 영국에 호의적 정서를 조장하고자 했다. 아울러, 서인도제도에 체류하는 미국인들에 대한 선전효과도 기대했다. 공보부는 전시작품의 수량, 내용과 관계없이 제국 중심부의 고급 문화를 누릴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면 이를 감사히 여겨 정치적 안정이 따라올 것이라 생각했다.<sup>26)</sup>

전시의 진행은 쉽지 않았다. 클라크가 전시에 반대했으나 공보부의 압력에 굴복해 전시가 성사되었다. 원저공의 총독파견 후 미국인 관광객이 대거 유입된 바하마를 의식해 전시 구성품의 수준이 낮지는 않았으나 현지 전시개최가 난항을 겪었다. 1942년 1월 자메이카부터 시작한 전시의 이동이 곤란했던 것이다. 카리브해와 멕시코만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특히 트리니다드 주변 해협과 바하마가 위치한 멕시코만 동부에서 독일과 해전이 벌어지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트리니다드 전시는 지연되었고, 버뮤다 전시는 해군 편으로 운송되었으며, 바하마 전시는 결국 무산되었다.

서인도제도 전시에서 전쟁의 주체가 영제국으로 설정된 점에서 제국적 이데올로기가 드러난다. 미

22) Herbert Read, “The War as Seen by British Artists” (IWM:GP/46/24/4a).

23) 공보부 장관은 카탈로그에서 전쟁미술을 ‘영연방 국민들의 인내와 용맹을 드러내고 우리가 함께 지키는 자유의 표현’으로 소개한다. (IWM:GP/46/24/14).

24) F. Jones가 Batterbee에게 보낸 서신, 1945년 4월 30일 (IWM:GP/46/24/14).

25) Proposal for Overseas Planning Committee, 1941년 6월 10일 (IWM:GP/46/62).

26) H. D. Molesworth, *War Pictures by British Artists*, 1941 (IWM:GP/46/62).

국 전시에서는 제국적 요소를 완전히 빼고 자치령 전시에서는 영연방 파트너의 옷을 입은 것과 대조적이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영국이 미국, 자치령 전시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그토록 강조한 반-나치 담론을 서인도제도 전시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후에도 제국적 질서를 유지하고 싶은 지역에서 ‘식민지배’와 충돌하는 관념인 ‘자유’는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자유’의 자리를 대체한 가치는 ‘일상성의 정신’이었다.<sup>27)</sup> 존 암스트롱(John Armstrong)의 <A Farm in Wales[그림3]>와 에드먼드 캡(Edmond Kapp)의 <Play Upstairs Interrupted[그림4]>와 같은 풍경화들이 ‘일상성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들이다.

전시작품 구성에도 식민지라는 전시국의 특징이 반영되었다. 이 특징은 해당국가의 공로를 상징적으로 인정해주는 초상화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서인도제도 전시에서 초상화는 총 44점 중 6점에다 카탈로그 표지까지 장식할 정도로 비중이 컸지만 주인공은 모두 영국인이었다. 군에서는 요청했으나 WAAC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며 거절한 까닭이다. 전시 작품의 수는 다른 전시의 절반에 그치고 별도의 전시제목, 카탈로그 축사, 서문이 들어가지 않은 점에서 WAAC가 서인도제도 전시에 큰 공을 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Ⅲ. 제국통합 프로파간다: 식민지 전쟁미술 수집과 전시

#### Ⅲ-1. 안토니 그로스의 《전투 중인 인도》 전시

WAAC는 제국전선의 전투현장과 전쟁협력을 소재로 북아프리카, 몰타, 에티오피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란, 중국을 아우르는 ‘제국의 전쟁’을 담은 작품을 수집하고 전시했다. 그 중 1943년 11월 내셔널갤러리에서 열린 안토니 그로스(Anthony Gross)의 개인전 《전투 중인 인도(India in Action)》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전투 중인 인도》는 인도와의 정치적 갈등에 따라 인도부(India Office)가 프로파간다 목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1943년 11월 18일 내셔널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sup>28)</sup> 가장 특징적인 작품으로는 다양한 민족 출신의 연합군이 한 자리에 둘러앉은 장면을 묘사한 <Group of 4th Indian Division, and the Mascot, Comprising Gurkhas, Punjabi-Mussulmans, Dogras, Madrasis, Sikhs, Pathans and Royal Sussex[그림5]>가 있다.

《전투 중인 인도》는 국내적으로는 인도 식민지의 유용성을 알리고, 국제적으로는 영국이 인도 독립을 위한 합리적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과시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전시되었다. 이를 위해 인도부와 공보부는 《전투 중인 인도》의 성공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도부 장관 레오폴드 에이머리(Leopold Amery)는 “인도와 영국이 ‘자유’라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역사의 중요한 장을 쓰고 있으며 “인도의 정치적 문제들이 전후에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원만한 해결에 대한 희망을 표했다.<sup>29)</sup> 적극적 홍보도 빠질 수 없었다. 종이보급 제한으로 모든 신문이 지면을 줄이던 상황에서 『일러스트레이티드런던뉴스(Illustrated London News)』는 그로스의 작품 4점을 컬러인쇄하고 5페이지 분량으로 리뷰를 발행했다. BBC에서도 하루 세 번이나 뉴스를 통해 홍보했다. 공보부는 보도 건수는 적어도 내용이 충분히 훌륭하다고 평가했다.<sup>30)</sup>

국내전시와는 다른 목적으로 1944년부터 해외전시도 추진되었다. 공보부는 프로파간다적 관점에서 《전투 중인 인도》가 인도주둔 영국군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특히 호주에서 태평양전쟁사령부의

27) H. D. Molesworth, *War Pictures by British Artists*, 1941 (IWM:GP/46/62).

28) 전시는 ‘전쟁 중인 친족’, ‘아라칸 전투’, ‘이집트전투’, ‘인도 4사단’의 4개 시리즈로 나뉘어 총 52점으로 구성되었다. Anderson이 Gregory에게 보낸 서신, 1944년 3월 28일 (IWM:GP/46/24/14).

29) “India in Action”, *Birmingham Post* (IWM:GP/46/98).

30) Ivor Lambe이 Gregory에게 보낸 서신, 1944년 3월 9일 (IWM:GP/46/98).

노고를 올바르게 알리는 데 유용하다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전투 중인 인도》는 해외전시에서 대단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 전시 관계자들은 전시의 인기와 별개로 전시개최 사실에 의의를 두고 만족했다. 호주 주재 영국고등판무관은 전시의 성공여부를 관람자 수만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고 공보부 제국국도 아무것도 안 한 것 보다는 훨씬 낫다고 여겼다. 공보부는 적어도 전시 관람자들은 “암담한 전쟁의 현실에 영국군이 빛을 비춘다”는 프로파간다 교훈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실험적 가치가 있다고 만족했다.<sup>31)</sup>

### III-2. 식민지화가계획

적은 비용으로 전후에도 제국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식민지를 문화적으로 종속시켜 식민지 내에서 영국 지배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 일환으로 WAAC는 1941년 6월 ‘식민지화가계획(Native-born Colonial Artists Scheme)’ 시행을 결정했다. 이는 식민지에서 현지의 토착화풍으로 전쟁미술 대회를 열어 유력인사의 우수작 시상 후 수상작을 WAAC가 심사해 구입하는 계획이었다. 전쟁참여라는 식민지의 제국에 대한 충성의 기록을 남기면서도 포스트식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친영 예술가들을 양성하는 과정인 셈이다. 대상국으로는 우간다, 골드코스트, 나이지리아, 자메이카, 실론이 선정되었다.<sup>32)</sup>

식민지화가계획의 시행시기, 방법, 결과는 국가마다 다르다. WAAC는 우간다, 나이지리아, 자메이카, 실론에서 그림들을 받아 총 17점의 그림을 구입했다. 식민지 화가들의 작품은 대부분 1기니에 구입되었다. 작품의 소재들은 왕립아프리카소총군단, 전쟁기금 모금, 군인들의 출병과 귀환, 인종 간 전쟁협력 등을 소재로 했다. 전쟁미술 컬렉션 중 가장 프로파간다적인 작품들이 이 계획으로 수집되었고 1943년부터 1945년 사이에 내셔널갤러리에서 전시되었다.<sup>33)</sup> 식민지의 협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은 아키놀라 라세칸(Akinola Lasekan)의 <A Reflection on the Savings Week in Lagos[그림6]>이 있다. 또, 존 우드의 <ARP in Jamaica[그림7]>와 이반 페리스(Ivan Peries)의 <Combined Control and Report Centre[그림8]>은 영국이 식민지와 함께 식민지를 방어하기 위해 전쟁 중이라는 메타포가 있다.

식민지화가계획에서 가장 WAAC가 모순을 보여 흥미로운 부분은 구입된 작품을 그린 화가들의 배경이다. WAAC는 유럽미술의 아류가 아닌 식민지만의 독특한 토착미술을 원한다고 누차 식민지 총독부에 강조했다. 그런데 실상은 달랐다. 우간다의 경우 계획에 참가한 14명의 화가 중 절반인 7명이 영국계 대학교인 마케레레대학 학생이었다. 특히 P. W. G. 말로바(Maloba)는 로마-카톨릭계 미션스쿨에서 성모상 조각능력이 탁월해 총독부인 후원으로 마케레레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케이스다. 라세칸은 영국에서 유학하며 화가 겸 교사로 나이지리아 독립 후에도 현대미술계의 중요한사가 되었다. 자메이카의 존 우드는 아예 출신이 영국인이었다. 실론의 이반 페리스와 조지 클라센은 전통예술에 저항하며 스리랑카 현대예술계를 이끈 ‘43그룹’의 창립멤버들이다.<sup>34)</sup> 이들은 모두 훗날 호주와 영국으로 이민을 갈 정도로 서구지향적인 화가다.<sup>35)</sup> WAAC가 직접 “독특한 식민지 미술”이라는 평가를 거쳐 구입한 작품들은 사실 철저히 영국식 교육과 유럽예술 영향을 받은 화가들의 것이

31) Anderson이 Mansergh에게 보낸 서신, 1945년 4월 4일 (IWM:GP/46/24/14).

32) Sabine가 Cox에게 보낸 서신, 1941년 10월 20일 (IWM:GP/46/68).

33) Akinola Lasekan의 <Nigerian Soldiers Returning from the Victorious East African Campaign>, <A Reflection on the Savings Week in Lagos>, John Wood의 <ARP in Jamaica>, Ivan Peries의 <Combined Control and Report Centre>가 대표적이다.

34) 식민지화가계획 작품목록, (IWM:GP/46/68).

35) *43' Group Colombo Exhibition Catalogue: Exhibition of Paintings, Etchings, Drawings & Sculptures at the Royal Festival Hall*, 1985.

었다. 결과적으로 WAAC는 식민지 예술계에서 굵직한 영향을 발휘할 예술가들의 작품을 구입함으로써 친영 네트워크에 포섭하고 그들의 작품을 영국에 전시해 제국통합 프로파간다를 수행했다.

## 결론

기존의 제국질서가 위태하고 전후 세계질서는 불확실하던 시기 세계대전이라는 위기는 마지막으로 영제국의 결속을 다지고 제국이 '부활'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배의 제국'에서 '영향력의 제국'으로의 안정적 전환을 고심하던 때 맞이한 통합은 영국의 영향력을 제국에 확고히 심어줄 수 있는 기회였다. 궁극적 제국종식이 불가피할 경우 무력충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국의 도덕적, 문화적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를 위한 이데올로기 선전에 전쟁미술은 유용한 매체였다.

공보부는 약 £96,000를 투자해 400여명의 화가로부터 6천점에 달하는 전쟁미술 컬렉션을 수집했다. 영국인 화가와 식민지 화가가 그린 전쟁미술은 영국, 미국, 자치령, 식민지에서 전시를 통해 영 제국 구성원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동료애를 과시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그러나 영국이 추구한 '제국'에 대한 신념과 '자유'의 가치는 동시에 추구하기에 모순적인 정체성들로 서로 양립하기 어려웠다. 특히, 식민지가 개입될 경우, 예술로 '자유'를 구현하는 한편 제국을 결속하느라 일관적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모순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AAC 전쟁미술은 '전쟁 르네상스'라고 불릴 정도로 공습의 포화 속에서도 영국과 해외에서 전시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결과적으로, WAAC는 전쟁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영국은 물론이고 자치령과 식민지에서 큰 호응을 얻어 전쟁동원과 제국통합 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WAAC와 전쟁미술 전시의 성과를 양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공보부가 지속적으로 재정을 할애해 프로젝트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그 프로파간다적 가치가 증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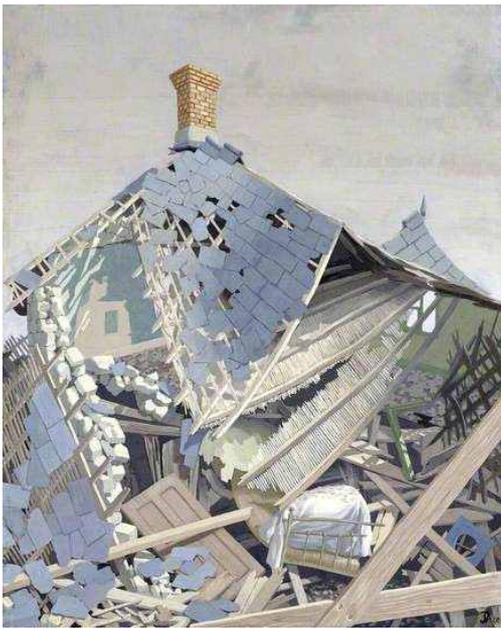
[부록] 전쟁미술 그림자료



【그림 1】  
Anthony Gross, <ATS at Mess, 1940>, ink and wash on paper, 196x323mm, Imperial War Museum, Art.IWM ART LD87



【그림 2】  
Ethel Gabain, <Evacuees in a Cottage at Cookham>, 1940, lithograph, 530x442mm, Imperial War Museum, Art.IWM ART LD426



【그림 3】  
John Armstrong, <A Farm in Wales>, 1940, tempera on gesso panel, 636x510mm, National Museum Wales, A2088



【그림 4】  
Edmond Kapp, <Play Upstairs Interrupted>, 1941, ink on paper, 448x330mm, Imperial War Museum, Art.IWM ART LD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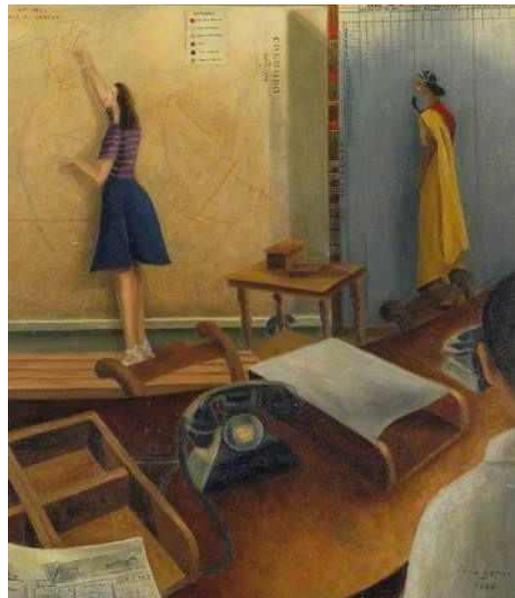
【그림 5】  
Anthony Gross, <Group of 7 Brigade and the Mascot, 4th Indian Division, Comprising Gurkhas, Punjabis, Musselmans, Dogras, Madrasis, Sikhs, Pathans and Royal Sussex Regiment>, 1943, ink and wash on paper, 381x558mm, Imperial War Museum, Art.IWM ART LD3179



【그림 6】  
Akinola Lasekan, <A Reflection on the Savings Week in Lagos>, 1942, watercolour on paper, 203x260mm, Imperial War Museum, Art.IWM ART LD3079



【그림 7】  
John Wood, <ARP in Jamaica>, 1941, oil on canvas, 958x850, Imperial War Museum, Art.IWM ART LD3150



【그림 8】  
Ivan Peries, <Combined Control and Report Centre>, 1943, oil on canvas, 825x625mm, Imperial War Museum, Art.IWM ART LD4201

---

## 제4부 보수주의와 민주주의

---

좌장: 이영림(수원대)

토론: 김용우(교원대) / 김정욱(인천대) / 박지배(한국외대)

▶ 식민지 보수주의-19세기 말 알제리 반유대주의 폭동과 시민권

발표: 문종현(세종대)

▶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우익들: 분열과 논거 약화

발표: 박상철(전남대)

▶ “트럼프 민주당원”의 탄생: 2016년 미국 대선과 백인 노동계급

발표: 이찬행(성균관대)



## 식민지 보수주의-19세기 말 알제리 반유대주의 폭동과 시민권

문 종현(세종대학교)

1. 머리말
2. 알제리를 향한 프랑스인들의 이주
3. 알제리 유대인의 시민권(1870년 크레미외 법령)
4. 반유대주의의 확산
5. 결론

### 1. 머리말

보수주의자에서 파생된 보수주의는 일반적으로 특정 사회집단의 법적, 경제적 특권과 권리를 수호하려는 이념으로 볼 수 있다. 급진적이면서도 단기간의 사회적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주의는 프랑스에서 대혁명 시기를 거치며 형성된 반혁명세력, 즉 반공화주의자, 왕당파, 가톨릭 세력 등이 표방하는 정치적 이념이었다. 19세기 동안 프랑스 보수주의자들은 무엇보다 근대 민주주의의 중심원리인 보통선거권의 확대에 비판적이었다. 재산과 교양을 소유하지 못한 시민들, 이른바 자격 없는 자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결국 프랑스 공동체의 퇴락과 몰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유산계급만을 위한 정치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려 하였다.

한편 프랑스 대혁명 이후 제기된 성인 남성 보통선거권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프랑스 본국을 넘어 식민지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었다. 만일, 프랑스 대혁명 과정에서 제정된 헌법을 식민지에도 적용시킨다면 생 도맹그(Saint-Domingue)에서 노예제도는 폐지해야 하고, 노예를 비롯한 유색인에게도 시민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sup>1)</sup> 여러 식민지가 프랑스라는 동일한 헌법의 지배를 받는 통합체(un ensemble)내에서 하나의 부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부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혁명정부 내에서 치열한 논쟁의 중심이었다. 다시말해 이것은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원주민(indigène)'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의제였다. 식민지 영토를 프랑스 공화국의 일부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식민지 독립을 인정할 것인지, '원주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식민모국과 식민지에서 제1 공화국에서부터 시작되어 1830년 프랑스가 알제리를 침공한 이후 다시 공화국의 이름을 회복한 제2, 제3 공화정 아래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오늘날 프랑스 극우 정치세력과 일부 공화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이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권리를 가진 프랑스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정치적 선동의 역사는 프랑스 식민주의 역사와 분리될 수 없다. 1945년 이전까지 알제리의 무슬림 원주민은 프랑스의 시민이 아닌 신민으로 간주되었고, 알제리는 프랑스 법이 일반법으로 적용되나 알제리 총독의 행정명령이 특별법으로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이법역이자 법적 예외상태에 놓인 식민지였다. 1848년 헌법은 “알제리와 여러 식민지 영토는 프랑스 영토로 선언되었으며, 특별법(loi spéciale)에 의해 본 헌법의 규정 아리에

1) 옥영수, 「프랑스혁명과 인권-세계화 시대에 다시 읽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서양사학연구』, 25호, 2011, 75~76쪽.

놓이게 될 때까지는 개별법(lois particulières)들로 규제된다”라고 알제리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있다.<sup>2)</sup> 따라서 알제리 무슬림은 법에 의한 통치 대상인뿐 법적 권리를 소유한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2 공화국 시기, ‘야만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는 원칙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전쟁은 오로지 국민(nation)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명화 되지 않은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알제리에서 벌이는 전쟁은 평화 회복(pacification)이지 전쟁이 아니었다.

제3 공화정기 알제리 식민지 정책의 중심 목표는 알제리에 대한 유럽화 혹은 백인화였다. 이것은 혼합적인 인구(une population hétéroclite)로 구성된 알제리를 단일화, 동질화 시키려는 시도였다. 선박의 발달로 인해 마르세이유와 알제의 거리가 마르세이유와 파리의 거리보다 가까워지면서 알제리 이주식민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가 추진한 이주정책은 알제리인의 저항과 프랑스와 다른 기후, 토양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실패의 연속이었다. 결국 식민지의 정치적 안정화를 위해서 프랑스 정부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프랑스인 수를 증가시킬 귀화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프랑스 국적자로 귀화시킬 대상 중에서 먼저 선택된 대상은 알제리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이 지중해 지역에서 온 유럽계 이주자들(스페인인, 이탈리아인, 말트인 등)들이었다. ‘이슬람의 집(dar al-Islam)’, 즉 무슬림 세계에서 덤미(dhimmis)로서 차별(?)받고 있는 유대인의 존재는 1791년 그레그와 신부로 대표되는 보편주의와 공화국의 해방이념을 선전할 수 있는 유용한 정치적 도구였다. 알제리 정복과 동시에 유대인 해방은 선언한 프랑스는 이른바 ‘문명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었다. 식민행정과 군대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던 유대인들은 무슬림에 비해 빠르게 동화되어 나갔다. 프랑스 정부는 1870년 크레미외 법령을 통해 모든 유대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유대인의 동화만으로 알제리 프랑스인의 규모가 무슬림을 지배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알제리는 지중해 세계에서 프랑스인들 보다는 중세 이래 스페인과 이탈리아인의 이주가 활발한 지역이었다. 비프랑스계 이주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는 1889년 국적법 제정과 함께 활발해 졌다.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서 알제리에서 태어나는 유럽계 이주자의 후손들에게는 모두 프랑스 시민권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프랑스인의 인구증가는 자연스럽게 가속화되었다.

본 발표문은 1894년 드레퓌스 사건 이후 프랑스 본토와 식민지 알제리에서 동시에 확산된 반유대주의 폭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1897년 5월 오랑에서 시작된 반유대주의 폭동 알제리 전역으로 순식간에 확대되었다. 폭동의 가담자들은 ‘분노한 인민의 이름’으로 크레미외 법령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공공연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반유대주의 폭동은 식민지에서의 유럽계 이주자들이 시민적 정체성을 획득해 나아가는 과정과 시민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인종적 담론을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다. 크레미외 법령 이후 나타난 알제리에서의 반유대주의 운동은 결국 시민권이란 어떻게 구성되는가? 왜 시민권의 문제가 반유대주의 운동에서 제기되었는가? 그리고 객관적인 시민권의 기준은 과연 반유대주의자들에 무엇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본 발표문은 19세기말 알제리에서 반유대주의 폭동을 통해 시민권을 인종적 기준으로 제한하려한 정치적 보수주의 운동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 2. 알제리를 향한 프랑스인들의 이주

18세기 바르바리아 해적의 활동이 주춤해지고, 항해 기술발달과 함께 증기선이 도입되면서 19세

2) 질 망스롱, 우무상 역, 『프랑스 공화국 식민사 입문: 인권을 유린한 식민침탈』, 경북대학교출판부, 2013, 134쪽.

기에는 지중해 도시들 간의 이주가 본격화 되었다. 1870년대 프랑스 남부의 항구도시 마르세이유 항에서 운용되는 연락선은 마르세이유와 알제, 오랑, 튀니지, 마르세이유와 콘스탄티노플, 마르세이유와 알렉산드리아, 이스미르를 연결하고 있었다.<sup>3)</sup> 코르시카, 시실리,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다양한 지역 출신들로 이루어진 이주자들은 혈연, 지역, 직업으로 얽힌 공동체에서 지중해 이주에 관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받았다.<sup>4)</sup>

1830년~1962년까지 알제리를 지배한 프랑스 식민화 사업은 대규모의 병력을 파견해 빈번한 군사 행동을 필요로 했던 이주-식민지라는 특성을 지닌다. 알제리의 식민화 사업은 초기 40년간 무력을 통해 선주민을 학살하고 토지를 빼앗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sup>5)</sup>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된 정복전쟁(1830~1836년, 1840~1847년)이 종료된 이후 프랑스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은 알제리를 프랑스의 일부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인 이주자와 원주민(indigènes), 정복자와 선주민, 문명인과 미개인의 구분, 즉 알제리 무슬림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불평등 구조는 사라지지 않았다.

알제리로 향한 프랑스 이주정책은 프랑스 식민주의가 지녔던 알제리에 대한 정책의 난맥상을 잘 드러낸다. 1830년 소위 ‘부채 가격’사건으로 촉발된 샤를 10세의 군사적인 침략이 시작된 이후,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20여 년간 군사적, 행정적 정책의 방향은 결정되지 못했다. 1830년 처음으로 알제리에 관한 문제가 의회에서 제기되었을 때, 의회의 견해는 세 개로 나뉘어졌다. 먼저, 식민주의자들은 알제리에 대한 항구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점령을 주장하였고, 다음으로 반식민주의자들은 “지배하기 위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전혀 없는 곳”이라며 알제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알제리에 대한 식민정책이 오류로 판명되지 전까지는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절충안이 제시되었다.<sup>6)</sup>

1835~37년까지 알제리 주둔 아프리카 군 총사령관 이었던 끌로젤(Clauzel)은 원주민으로부터 약탈한 밀리자(Mitidja) 평야에 퇴역군인과 농부를 이주시켜 ‘새로운 생-도맹그(nouveau Saint-Domingue)’를 건설하려 하였으나, 계획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초기 이주자들이 농업에 관심이 있는 정착민이라기 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약탈자, 모험가 혹은 부랑자에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알제리의 뜨거운 태양과 건조한 공기 그리고 풍토병은 프랑스에서 이주한 농민의 정착을 방해했다.<sup>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의 빈민, 걸인, 정치범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불안요소의 배출구로 알제리 이민은 유용한 정치적 수단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프랑스로 만들자(Faire de la France)”라는 목표아래 1848년 혁명에 가담한 ‘폭도’들과 1851년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 이후 발생한 정치범 등 정부가 지원한 약 1만 명의 사람이 알제리에 도착하지만 정착촌 건설의 준비부족으로 11%는 사망하고 20%는 돌아갔다. 이들은 가난한 남동부 지역과 코르시카의 농민, 1848년 공공작업장이 폐지된 이후 실업에 놓

3) 당시 해운회사 사이의 경쟁 때문에 화물과 여객의 요금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여객비용은 만만치 않았다.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표 값은 대략 6~8 개월 숙련공 임금에 해당하였는데, 지중해 노선을 운행하는 선박의 표 값은 미국 노선에 비해 저렴하였다.

4) 1860~1950년 약 1세기 동안 이스탄불의 인구는 50만에서 백만으로, 도시의 외곽 지역을 포함한다면 1백 50만에서 5백 70만으로 증가하였다. 마르세이유는 20만에서 60만, 나폴리는 50만에서 1백 20만, 제노바는 20만에서 60만, 바르셀로나는 20만에서 1백 30만, 아테네는 몇 만 정도에서 50만 등, 지중해 연안 도시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인구의 급속한 증가현상이 발생되었다. 19세기 동안 마르세이유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연결하는 프랑스 식민활동의 중심 항구도시였다. 마르세이유 항은 프랑스 전체 교역의 1/4을 담당하면서 마그레브 지역으로 프랑스 전체 수출품의 83%를 운송하는 지중해 최대의 항구로 성장하였다. Claude Liauzu, *Histoire des migrations en Méditerranée occidentale*(Paris: Editions Complexe, 1996), p. 25.

5) 알제리 정복전쟁은 1871년까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 우선 서부에서 압델카데르의 저항을 꺾어야 했고(1840~1847), 다음에는 카빌리족(1851~1857), 그리고 남부 지방을 제압해야 했다. 남부 지방에서는 1864년 봉기한 올레드 시디 셰이크 부족과 1871년 가빌리 지방에서 일어난 봉기를 분쇄하면서 정복은 안정화 되었다.

6) Daniel Leconte, *Les pieds-noirs: histoire et portrait d'une communauté*(Paris: Seuil, 1980), p. 143.

7) Benjamin Stora, *Histoire de l'Algérie coloniale (1830-1954)*(Paris: la Découverte, 2004), p. 28.

인 노동자, 반나폴레옹 진영에 가담한 정치범들이었다.<sup>8)</sup>

계속된 이주 정책의 실패에도 제3 공화정은 이주-식민지 건설을 통해 문명화 사명에 충실한 공화국 이념과 프랑스 민족의 위대함을 선전하고자 꾸준히 이주를 장려하였다. 1871~1882년 사이에 프랑스인의 알제리 이주는 활발해 졌다. 특히, 알자스-로렌 지역에 거주하던 독일인들에 의해 쫓겨난 프랑스인들의 이주지로 알제리가 선택되었다. 알자스-로렌 출신의 이주자에게 프랑스 정부는 10만 헥타르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며 이주하였다. 불과 12만 명의 프랑스로 알자스-로렌 사람들 중 4~5천 명 만이 정착했을 뿐이지만, 1871~81년 사이에 약 40만 헥타르의 땅이 새로이 분배되면서 3만여 명의 이주자를 위한 264개의 촌락이 건설되었다. 새로운 촌락은 약 절반 정도만 유지되었고 이주자 중 1/2을 차지하는 프랑스인은 빈곤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1/4은 10개의 중부 도(코르스, 부세 뒤 혼, 센, 가르 등) 출신이었다.

프랑스인 이외의 유럽계 이주자들의 대다수는 스페인, 이탈리아, 말트 등지에서 떠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알제리리 오랑지역에서 실시된 인구조사에 따르면 1836년 14,500 명중 8,000 명; 1845년 95,000 중 41,000명 (43%); 1886년에는 46.8%에 이르렀다.<sup>9)</sup>

1889년 국적법 제정과 함께 속지주의 원칙이 확립되기 전까지 알제리-프랑스에서 유럽계 이주자들은 각자 자신들의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다. 프랑스 이주정책의 실패가 거듭되자 알제리 총독 티르망(Tirman)은 “외국인의 귀화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새로운 국적법은 제정 이후 태어나는 아동들에게 프랑스인 국적을 부여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인의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1898년에는 38만 프랑스인들 중 10만 명의 귀화자였고, 13만이 프랑스에서 이주해온 사람, 14만이 알제리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sup>10)</sup> 프랑스인 이주자를 바탕으로 프랑스는 알제리에 대해 정치적, 문화적 동화 정책을 시행했으며 알제리를 프랑스의 한 지방을 간주하였다. 세네갈처럼 지리적으로 떨어진 식민지나 튀니지, 모로코 같은 보호령과는 다른 지위였다.

유럽계 이주자들은 시민권을 획득해 프랑스 국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언어와 풍습, 전통을 유지하였다.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급격한 귀화정책에 프랑스로 이주자들은 자신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그에 따라 정치적인 대표성이 상실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다. 귀화한 스페인계 이주자들이 모국에서 친족들을 알제리로 초청함으로써 스페인계 이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자 스페인인들에 대한 혐오와 공포감이 조성되었다. 식민지에서 다수자의 위치를 상실할 수 있다는 프랑스인들의 공포와 두려움은 이후에 나타난 반유대주의 운동의 자양분이 되었다.

한편, 프랑스인 스스로의 정체성이 강화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프랑스 이주자들은 골족 신화를 통해 프랑스 인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였다. 프랑스 민족의 특성은 용감하고, 정직하며, 귀족적이라고

8) René Gallissot, *La République française et les indigènes: Algérie colonisée, Algérie algérienne(1870-1962)* (Paris: Edition Ouvrières, 2006), p. 39.

9) 1886년 오랑(Oran) 지역의 인구구성

프랑스인	65417	7.7%
유대인	16006	1.9%
무슬림	655356	76.8%
튀지니인, 모로코인	15535	1.8%
스페인인	90253	10.6%
이탈리아인	5348	0.6%
말트인	573	0.1%
독일인	1714	0.2%
기타	2349	0.3%
총합계	852551	

Geneviève Dermenjian, *La crise anti-juive oranaise(1895-1905)*(Paris: L'Harmattan, 1986), p. 21.

10) Benjamin Stora, *Histoire de l'Algérie coloniale (1830-1954)*, op. cit., p. 25.

상상되었기 때문에 프랑스 공화국은 압제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미개한 사회를 정복하고 문명화시키는 위대한 국가였다. 프랑스인들은 스스로 좋은 시민이자, 좋은 군인, 좋은 애국자들이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고 프랑스인은 명예로운 자격이었다.<sup>11)</sup>

결국 순수한 프랑스로 이주자들에게 1870년과 1889년에 식민모국이 일방적으로 실행한 대규모 귀화정책은 자격 없는 자들을 시민으로 편입시키는 나쁜 정치이면서 파렴치한 정치적 술책이었다. 요구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았고 프랑스인이 된다는 영예스러움에 무지한 유럽계 이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프랑스 식민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sup>12)</sup> 프랑스 혈통은 무시되었고 프랑인의 민족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계 이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스페인계와 이탈리아계 이주자들, 그리고 유대인은 대부분 교육받진 못한 사람들로 문맹이었고 가난한 비참한 존재들이었다.

### 3. 알제리 유대인의 시민권(1870년 크레미외 법령)

유대인은 프랑스의 식민화로 인해 해방되었는가? 라는 질문은 프랑스의 식민지 정책의 정당성과 연관된다. 알제리 식민주의 역사의 권위자 스토라(Stora)에 의하면 마그레브 유대인은 세 번의 추방을 겪었다. 첫 번째는, 프랑스의 침략이후 1870년에 제정된 크레미외 법령에 의해 무슬림 세계와 단절되고 두 번째로는, 1940년과 1943년 사이 비시정부에 의해서 시민권이 박탈됨으로서 추방을 겪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1962년 알제리 독립과 함께 알제리에서 추방되었다.<sup>13)</sup>

프랑스가 알제리를 침략했을 때 알제리에는 전체 3백만 인구 중에서 약 1만 5천명에서 1만 7천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인구의 5%에 불과했지만 알제를 비롯한 콩스탄틴, 오랑 등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재단사, 자수장인, 시계장인, 주물제조업자, 방직공, 금은세공사 등 전통적인 유대인 직업에 속해있던 이들은 프랑스인의 식민지 정책과 함께 경제적,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알제리 유대인에 대한 프랑스의 식민화는 먼저 프랑스 유대인에 의한 재유대인화(régénération religieuse)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1845년 프랑스는 알제리 유대인 공동체에 새로운 유대교 종무국(consistoire)제도를 도입하였다. 프랑스 유대인들이 청원하여 왕령에 의해 알제와 오랑, 콘스탄틴에 각각 종무국이 설치된 것이다. 이는 프랑스 유대인들에 의한 알제리 유대인의 재유대인화 정책이었다. 프랑스 유대인과의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동화를 위해서 알자스의 랍비들이 알제리로 파견되었으며, 이른바 문명화 사명은 알제리 유대인들을 프랑스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으로 출발하였다.<sup>14)</sup> 부르몽 장군과 알제리 태수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유대인들은 이슬람 제국에서의 차별적 지위인 딘미에서 벗어나 무슬림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루이 필립과 나폴레옹 3세 시기 알제리에 대한 식민정책에 있어서 유대인은 프랑스인과 가까워 질수 있는 대상이었다. 1830년 프랑식 교육이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은 무슬림에 비해 빠르게 프랑식 학교 교육을 받아들였다. 1845년 유대인 학교는 가톨릭 학교처럼 프랑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특히 쥘 페리가 공교육에서 세속주의와 정교분리를 강조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알제리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또한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었다. 교육을 통한 유대인에 대한 동화정책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자 유대인 시민권에

11) Geneviève Dermenjian, op. cit., p. 23.

12) Claude Liauzu (dir.), *Colonisation: droit d'inventaire*(Paris: Armand colin, 2004), p. 172. 이 문제는 20세기 초 프랑스의 정치적 남부주의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13) Benjamin Stora, *Les trois exils: Juifs d'Algérie*(Paris: Un ordre d'idées, 2006), p. 13.

14) Valérie Assan, *Les consistoires israélites d'Algérie au XIXe siècle*(Paris: Armand Colin)을 참고하시오.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알제리 시민권에 관련된 최초의 법령은 1865년 원로원결의 사항이다. 이 결의로 인해 원주민이었던 알제리 무슬림과 유대인은 개인적 지위를 포기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알제리 식민정부는 유대인은 무슬림에 비해 보다 동화하기 쉽고 식민지배에 유용한 대상이라 간주하였다. 하지만 유대인 해방은 알제리 도의회와 알제리 유대인 장로회의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대인 장로회는 사법적 판례와의 불일치, 복잡한 갈등의 발생 등의 이유로 거부하였다. 프랑스 판사들의 법적 보편성과 통일성을 확립하려는 시도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대인 신민의 시민화에 대한 법률가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 대표적 인물인 카시미르 프레지에(Casimir Frégier)는 서적과 신문을 통해 유대인 해방을 옹호하였다. 매우 예외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는 프레지에의 활동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1820년 프랑스의 남부지역에서 태어난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결혼 후 부인마저 사망하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1848년 알제리로 떠났다. 1860~1869년 사이에 출간한 『알제리에 대한 입법과 사법 고찰(Etudes législatives et judiciaires sur l'Algérie)』에서 알제리의 사법 제도의 불규칙성을 비판하면서 모든 원주민과 외국인에 대한 귀화정책이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sup>15)</sup> 물론 그의 주장이 프랑스 사법계에서 일반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다. 1830년 프랑스가 알제리를 정복한 이래 알제리 유대인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추진된 동화주의에 비추어 보건데 프랑스의 유대인과 흡사한 존재로 생각되었다. 식민모국에서는 알제리 유대인이 묶여 있는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문명국의 사명으로 인식되었다.<sup>16)</sup>

1870년 법무부 장관 에밀 올리비에(Emile Ollivier)에 의해 시민권에 대한 거부권을 포함하는 유대인에 대한 집단적인 시민권 부여가 제출되었으나 제2제정의 몰락으로 인해 실현되지는 못했다. 1870년 임시정부 아래에서 새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크레미외에 의해 실시되어 약 3만 5천명의 알제리 유대인은 프랑스 시민이 되었다. 이 법령에는 알제리 무슬림의 시민권 획득을 쉬운 절차로 정비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크레미외는 임시정부 내각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알제리 상황에 해박한 정치인이었다. 그는 1840년 다마스쿠스 사건과 이집트 여행을 통해 북아프리카 유대인의 상황에 관심을 가졌다. 1852년과 1870년 사이 여러 차례 알제리를 방문한 크레미외는 유대인들이 프랑스 언어와 문화에 빨리 익숙해지기를 장려하였다. 또한 프리메이슨의 적극적 활동가였던 크레미외는 유대인 신민들을 프리메이슨 조직의 회합(Le Grand Orient)에 참여할 수 있게 프리메이슨 조직을 변화시키기도 하였다.<sup>17)</sup> 1863년 크레미외가 '세계 유대인 동맹(Alliance israélite universelle)'의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존재하던 세파라드와 아쉬케나즈 공동체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였다. 그는 법 앞에서의 평등과 문화적 자유를 주장하면서 전통적 유대법률을 폐지하고 시민공동체 내부로 유대인들이 편입되기를 원하였다.<sup>18)</sup>

15) 식민모국인 프랑스로부터 독립해 미국과 같은 새로운 인종혼합 국가 건설에 대한 주장은 다음을 참고하시오. Charles-Robert Ageron, *De l'Algérie française à l'Algérie algérienne*(Paris: Edition Bouchene, 2005), p. 146.

16) 사법제도를 비롯한 제도적 동화가 시도되었는바, 이는 이탈리아가 트리폴리와 리비아의 동부지역에서 실시한 정책과 유사하다. 알제리 유대인에 대한 동화정책은 프랑스 식민주의에 있어서 고유한 요소로 간주되나, 실제 유대인에 대한 동화정책은 다른 식민주의 국가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17) 알제리에는 여러 프리메이슨 단체가 존재하였다. 알제의 벨리세르(Bélisaire), 오랑의 아프리카 연합(Union africaine), 블리다의 미티자의 형제회(La fraternité dans la Mitidja), 오를레앙빌의 세리프 형제단(Les frères unis du Chélif) 등이 대표적인 프리메이슨 단체들이다. 이에 대해서는 Xavier Yacono, *Un siècle de Franc-maçonnerie algérienne*(Paris: Maisonneuve et Larose, 1969)를 참조하시오.

18) Florence Renucci, « Les juifs d'Algérie et la citoyenneté (1870-1902). Les enjeux d'un statut

하지만 크레미외 법령은 공포되자마자 반대에 부딪혔다. 먼저 알제리 유대인의 반발이 나타났다. 이들은 새로운 법을 번거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후견제도, 결혼, 상속 등에서 적용되는 프랑스 법률을 수용하지 않았다. 다수의 랍비들이 유대교 공동체 내부의 이혼과 결혼에 대한 프랑스식 법률 해석을 거부하면서 중혼제도가 유지되었다. 한편, 유대인의 저항과 더불어 알제리에 이주한 프랑스인의 반발도 거세졌다. 유대인이 프랑스 시민권을 획득하자 이들은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시민들은 선거에서 주로 공화주의 후보에게 표를 주었다. 유대인들은 전체 유권자가 15만 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만큼 큰 영향력을 지녔다.

1871년 아돌프 디에르(Adolphe Thiers) 총리가 선출되자 알제리 총독 귀동(Gueydon) 제독은 크레미외 법령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법령이 폐지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유대인 시민권 획득에 대한 조건이 람브레스트(Lambrecht)에 의해 제한되었다. 크레미외 법령을 제한하기 위해 람브레스트 법령에는 고전적 사법 이론이 적용되어 “알제리 도의 유대인 원주민”이라는 조항의 원주민의 정의를 재해석 하였다. 따라서 프랑스가 정복하기 이전에 알제리에서 태어난 유대인, 혹은 알제리를 정복했을 때 알제리 출생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유대인이 유대인 원주민으로 재정의 되었다. 유대인을 증명하기 위한 ‘원주민 신분’ 증명서는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조건이었으며, 원주민 신분은 오로지 직계 후손에게만 전승되는 될 수 있었다.<sup>19)</sup>

1871년 알제리 원주민들의 대규모 반란이 발생했을 때, 2만 2천여 명에 불과한 프랑스군은 약 20만의 반란군과 싸워야 했다. 반란의 원인은 군정이 실시되면서 민정에 비해 지역의 유력 가문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고 식민주의가 전통적 풍습을 변화시키며 원주민의 재산을 약탈 것에 있었다. 1875년 보수주의 국회의원, 레옹 드 라 시코티에르(Léon de la Sicotière)의 주도아래 작성된 국민방어 정부의 행위에 대한 위원회 보고서(*Rapport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nquête sur les actes du gouvernement de la défense nationale*)에서는 1871년의 원주민 반란이 크레미외 법령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많은 군인들의 증언을 포함하고 있는 이 보고서에서 원주민과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은 아랍인들이 명예롭지도 자격을 갖추지도 못한 자신들에 비해 열등한 유대인들에게 시민권이 부여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반란에 참여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은 1880년 중반부터 프랑스 본토의 반유대주의 담론에 전유되었다. 1886년 에두아르 드뤼몽트(Edouard Drumont)이 출간한 『유대인의 프랑스(La France juive)』와 조르주 메이니에(Georges Meynié)의 『유대인의 알제리 (L'Algérie juive)』(1887) 와 『알제리에서의 유대인들(Les juifs en Algérie)』(1888)은 아랍인의 반란이 유대인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1881년 알제리 무슬림의 반란은 지역의 전통적 지배자들이 식민지 정부의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식민지 정부가 추진한 원주민 토지 몰수, 과도한 세금부과, 전통적 문화에 대한 금지, 지역 유력가문의 특권 폐지 등이 반란의 주된 동기였다.

알제리 유대인의 시민권 부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무슬림과 유대인의 대립이라는 신화는 1882년부터 1884년 사이 반유대주의 운동이 확산되는 것에 크게 기여하였다. 알제리 반유대주의 운동의 출발점이었던 유대인 시민권 문제는 1894년 드레퓌스 사건이후 급진화된 프랑스 반유대주의 운동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알제리와 프랑스에서의 반유대주의는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혼합되기도 하고 서로의 운동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contesté », dans B. PIRET, C. BRAILLON, L. MONTEL et P.-L. PLASMAN (dir.), *Droit et justice en Afrique coloniale. Traditions, productions et réformes*(Bruxelles: Publications de l'Université Saint-Louis de Bruxelles, 2013), p. 103.

19) *ibid.* p. 104.

#### 4. 반유대주의의 확산

1882년 출판업자 에밀 로제(Emile Roger)는 『크레미외 법령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Nécessité de réviser le décret Crémieux)』이라는 정치 팸플릿을 출간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다음의 3가지 근거를 들어 크레미외 법령의 폐지를 주장한다. 첫째, 정치적인 이유로 유대인 유권자가 행사하는 표의 매수 가능성, 둘째, 경제적 이유로 유대인에 의한 알제리 경제의 침체, 셋째,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이유로 유대인의 습속을 동화시키는 것의 불가능성 등이다.<sup>20)</sup> 유대인은 시민으로서의 자격, 즉 자존감, 명예 등이 부재하여 시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로제의 주장은 프랑스 신문들에서도 빈번히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당시 반유대주의 여론의 근간이 시민권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되어 정치인과 시민들의 정치적 견해를 지배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로제가 제기한 시민권 부여의 기준, 즉 시민으로서의 자존감과 명예 그리고 공화국에 통합되려는 의지는 현재 프랑스에서도 여전히 반이민자, 반무슬림 담론의 중심을 이룬다. 특히 크레미외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로제는 국적이 이미 부여된 유대인들에게 프랑스 시민권을 재선택 하는 절차를 도입하고자 하였다.<sup>21)</sup> 그는 시민공동체에를 향한 통합의 의지를 다시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유대인을 다시 시민공동체 외부로 추방하려하였다.

1892년부터 1895년 사이 알제리에서는 식민모국 정부에 태도에 대한 비난과 자치권에 대한 요구, 외국인 혐오정서의 확산, 반유대주의 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불만과 연이은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특히 반유대주의 운동은 드레퓌스 사건과 함께 식민모국과 식민지에서 동시에 타올랐다.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읽힌 반유대주의 서적 『프랑스의 유대인』(La France juive)의 저자이면서 반유대주의 운동의 이데올로그이자 정치적 지도자인 에두아르 드뤼몽(Edouard Drumont)이 1898년 5월 8일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지역구는 다름 아닌 알제리의 알제였다. 또한 알제리 반유대주의의 특징은 무엇보다 반유대주의 폭동과 정치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대부분 비프랑스계 유럽 이주자들이었다. 사회주의자임에도 드뤼몽의 반유대주의 정치운동의 동반자였던 막스 레지스(Max Régis)는 이탈리아 이주자의 아들로 알제리에서 태어난 프랑스인이었다. 마찬가지로 벨기에 출신 프랑스인으로 귀화한 언론인 폴 비덴(Paul Bidaine)은 신문을 통해 공격적인 반유대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sup>22)</sup>

반드레퓌스 진영의 지도자였던 드뤼몽은 『유대인의 프랑스』에서 크레미외 법령의 반대자들의 주장을 재구성하고 전유하고 있다. 그는 1871년 반란이 크레미외 법령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되풀이 하고 있으며, 반란의 지도자였던 모크라니(Mokrani)가 유대인이 시민이 되는 것에 복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sup>23)</sup> 특히 1871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할 정도로 프랑스에 대해 우호적인 ‘아랍’과 임시정부가 제정한 느슨한 기준 덕택에 시민이 된 ‘유대인’을 대립시킨다. 이러한 유대인과 아랍인에 대한 대비는 성을 둘러싼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드뤼몽에 의하면, 유대인은 남성성이 없어서 진정한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알제리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고도 유대인 남성 앞에서 머릿결을 드러낼 수 있으며, 알제리 남성또한 유대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명예심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알제리 원주민들이 프랑스 식민정부와 이주자들에 의한 토지 강점과 반란의 진압 명분으로 진행

20) Emile Roger, *Nécessité de réviser le décret Crémieux*(Oran: Imprimerie du Publieur Oranais, 1882), p. 4.

21) *ibid.*, p. 13.

22) Marie Muyl, *Les Français d'Algérie: socio-histoire d'une identité*(Thèse: Univ. Paris I, 2007), p. 77.

23) Edouard Drumont, *La France juive: essai d'histoire contemporaine*(Paris: Marpon et Flammarion, 1886), vol. 2, p. 23.

된 초토화 작전의 명백한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드뤼몽은 아랍인 역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들의 피해자로 이해한다.<sup>24)</sup> 식민정부에 의해 몰수된 토지가 다시 유대인에 의해 싼값으로 매입되면서 결국 식민지에서 유대인은 이익을 보고 아랍인은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세계금융을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망상 때문에 알제리 유대인은 알제리 사회와 행정, 정치, 사법을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는 원흉으로 지목된다.<sup>25)</sup> 따라서 드뤼몽에게 알제리는 “유대인의 발에 의해 계속 짓밟힌다면 아랍인의 가슴에서 조용한 분노가 축적되고 있는”<sup>26)</sup> 장소로 프랑스 반유대주의 운동의 시발점이자 약속의 땅이다.

1895년 크레미외 법률이 의회에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알제리에서는 광범위한 반유대주의 폭력이 나타났다. 「반유대 급진 사회주의자 동맹(Ligue radicale socialiste antijuive)」과 「알제리 반유대주의 동맹(Ligue antijuive d'Alger)」이 수립되어 크레미외 법령의 철폐운동을 시작하였다. 식민정부가 프랑스 유대인과 외국인 유대인에 대한 유권자 명부 작성을 을 시작하자 유럽계 이주자들은 이웃 보호령 튀니지에서 이주한 유대인과 원주민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유대인이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다는 이유로 반유대인운동을 전개하였다. 식민정부는 자신의 원주민 지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대인만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선거인 명부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알제리 유대인들 중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므잡(Mzab)의 유대인에 대한 국적부여 문제도 행정적, 사법적 논란을 낳았다. 므잡 지역은 1882년 프랑스에 병합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하는 유대인에게 크레미외 법령은 적용되지 않았다. 므잡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시민권을 요청하자 1890년 알제리 도의회는 “알제리 도의 유대인에게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한 크레미외 법령은 므잡 지역에서 태어나거나 이 지역 출신인 유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1891년 고등법원은 비슷한 결정을 내렸고, 1895년 알제리 총독은 1865년 원로원 결의 사항을 근거로 개인적인 귀화 신청을 제안하였다. 마침내 프랑스 대법원은 1896년 크레미외 법령은 오로지 법령이 공포된 시점 이전 시기의 유대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적, 사법적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므잡 지역의 유대인은 1961년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프랑스인이 되지 못하였다.

반유대주의 선전은 여러 신문을 통해 확산되었다. 신문이 반유대주의를 선동하면 반유대주의 상점이나 주택에서 발생한 약탈, 방화 등 여러 폭력사건이 이어 발생하고 다시 신문이 이를 크게 보도하는 형태로 발전 한 것이다. 많은 수의 급진주의자들은 정치적 이유로 반유대주의 운동에 동참하였다. 유대인들은 급진주의자 보다는 기회주의자에게 표를 던지는 성향이 컸기 때문에 유럽계 이주자들은 유대인의 투표행위에 대해 경멸하였다. 1896년과 1898년 사이 오랑에서의 시의원, 국회의원, 도의원, 예산심의위원회 등, 유력한 식민지 사회의 공직은 반유대주의 운동의 지도자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유대인들을 향한 괴롭힘과 모욕이 일상적으로 반복되었고 1897년 5월 격화된 반유대주의 감정은 폭동으로 전환되어 많은 수의 유대인이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폭동이 지나간 후 도시는 빠르게 폭동의 흔적을 지워버렸지만, 유대인을 향한 박해는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부터 공적인 시민의 영역까지 계속되었다.

하지만 2년 후 반유대주의 운동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는 먼저, 드레퓌스 사건에 대한 열기가 식어감에 따라서 정치적 지형이 변하였고, 다음으로 알제리 무슬림들이 유럽계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유럽계 이주자들이 주장하는 알제리 독립, 즉 분리주의자들의 위협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식민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자치권이 1898년과 1900년 사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허용되면서 겨우 1895년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었다. 더불어 이후에는

24) *ibid.* p. 404.

25) Florence Renucci, *op. cit.*, p. 108.

26) Edouard Drumont, *op. cit.*, p. 47.

반유대주의가 선거에서 득표를 위한 정치적 의제로 그 힘을 잃었기 때문에 반유대주의자들은 1902년 국회의원 선거와 1905년 시장선거에서 연속적으로 패배하였다. 선거에서 반유대주의는 더 이상 선거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선거운동 소재가 아니었다.

## 5. 결론

프랑스 정부와 알제리 프랑스는 종속과 지배의 관계였다. 130년에 이르는 식민시대 동안 식민자(colon)들은 식민모국의 간섭을 벗어날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국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알제리-프랑스인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을 어머니 나라 프랑스에 소속된 존재로 정체성을 형성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모국은 이해하지 못하는 알제리인 이라는 정체성을 소유하였다. 프랑스계 알제리인들을 피에 누아르라고 불린다. 하지만 이들이 동일한 공동의 정체성을 19세기 말부터 형성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경제적 빈곤, 정치, 종교적 박해 등으로 인해 다양한 이주자들이 모여든 알제리에서는 프랑스계 이주자를 정점으로 하는 프랑스계 이주자/비프랑스계 이주자/유대인/무슬림(베르베르인/아랍인)으로 강하게 사회적, 문화적 위계화 수립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신분질서는 인구증진론자들의 주장에 의해 추진된 시민권 확대 정책과 더불어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한 동등한 시민권 확대는 프랑스인으로서의 동화를 낳기도 했지만 동시에 프랑스인 사이에 차이를 가시화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차이의 가시화는 동화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켰고 새롭게 시민에 포함된 집단 혹은 소수자에 대한 적대의식으로 나타났다.

19세기 말부터 격화된 반유대주의 운동은 알제리 프랑스인이 유대인 원주민에 대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가 무슬림의 상황을 개선시키려 할 때마다 알제리 프랑스인들은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우익들: 분열과 논거 약화

박상철(전남대)

1. 서론
2. 러시아 우익들의 적대국과 동맹국
3. 자유주의자들과의 투쟁
4. 결 론

### 1. 서론

18세기말의 이른바 이중혁명, 즉 프랑스혁명과 영국 산업혁명 이후 서유럽의 여러 나라는 몇 차례의 크고 작은 전쟁, 사회경제적 발전, 그리고 정치적 격변을 경험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확대하면서 점차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갔고 특히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의 한 분수령으로서 1차 세계대전은 오랜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 과정에 대한 시험대가 되는 동시에, 그런 과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 과정은 보수주의 세력이 변화된 정치체제를 비판하면서도 그 체제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수반하였다.

러시아제국도 비록 19세기 전반기에는 서유럽의 이런 변화와 발전을 억누르려는 ‘유럽의 헌병’ 역할을 수행했지만, 19세기 중엽 크림 전쟁의 패배 직후에는 다시 ‘서구화’ 정책을 채택하면서 점차 이런 변화와 발전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즉 1860-70년대에는 농노해방을 비롯하여 지방자치기구인 zemstvo 설치, 사법개혁, 군사개혁 등 서구 문물과 서구식 제도를 도입하였고, 1880년대에는 국가 주도의 급격한 공업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상공인 집단과 노동자 집단이 성장하였다. 이런 변화에 힘입어 러시아제국에서는 1890년대에야 영국의 입헌군주정이나 프랑스의 공화정 체제를 지향하는 자유주의 운동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자유주의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명확하게 낼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이 마련된 것은 1905년 혁명을 계기로 해서였다. 러일전쟁의 패배와 악화된 경제상황 속에서 발생한 1905년 혁명은 러시아제국 전체를 뒤흔들었고 러시아 황제는 사회여론을 되돌리기 위해 러시아국민들에게 시민적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입법권을 지닌 국가두마를 설치하겠다는 이른바 ‘10월 17일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선언문을 구체화한 ‘새로운 체제’는 황제가 여전히 ‘거의 전제적인’ 권력을 지녔던 반면에 국가두마의 권한은 매우 제한된 사이비 입헌주의 체제의 틀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은 국가두마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 또는 사회 조직들, 증대된 언론의 자유 등 중요한 기반을 확보하였고, 실제로 이런 기반들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정부에게 점진적 개혁조치들의 실행을 요구하였다.

이런 상황 변화는 이전까지 대부분 정치적으로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던 군주정의 지지 세력들에게도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그들은 이제 러시아의 오랜 역사적인 정치체제인 군주정과 그 군주정이 건설한 러시아제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을 조직하고 나아가 주민 대중들을 동원할 우익적인 정치 운동을 창출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에 따라 궁정과 의회 또는 귀족들 내의 개인적인 연줄

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전의 전통적인 보수단체들과 달리, 긴박한 위기의식을 지닌 채 국가정치에 적극 참여할 대중적인 정치조직을 지향하는 새로운 우익 조직들이 등장하였는데,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인민동맹’으로서 전성기에는 전국에 걸쳐 수십만 명의 회원과 수백 개의 지부를 거느렸다. 따라서 러시아 집권세력은 정부의 공권력, 그리고 국가두마를 견제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평의회 이외에도, 1905년 혁명 이후의 정치적 변화에 반발하여 조직된 귀족연합, 러시아인민동맹 등 우익 단체들을 사회적 지지기반으로 이용하여 자유주의세력들의 요구에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05년 혁명 이후의 ‘새로운’ 정치상황은 1914년 7월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제국의 모든 정치적, 사회적 세력이 외적의 격퇴를 위해 단합해야 한다는 명분 위에서 ‘신성한 동맹’이 결성됨에 따라 자유주의자들을 포함하여 국가두마의 거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처음으로 보수적인 러시아정부를 지지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하지만 ‘신성한 동맹’은 오래 가지 못했다. 1915년 봄-여름 러시아군이 연이어 군사적 패배를 당하면서 많은 영토를 상실하자 자유주의 세력들은 정부의 비효율적인 전쟁 수행노력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전쟁수행 노력을 고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뢰내각’, 즉 사회의 신뢰를 받는 인물들로 구성된 강력한 내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집권세력은 이런 요구에 전혀 양보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자유주의자들의 정부 비판은 더욱 격렬해졌다. 그리고 이런 대치국면은 1917년 2월말 대중혁명이 터져 전제정 정부가 무너질 때까지 계속되었고, 2월 혁명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한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은 8개월 후에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많은 역사가들은 1차 세계대전 중에 러시아제국이 붕괴된 원인으로 흔히 전제정의 비타협적인 완고성을, 아니면 자유주의자들의 급진성 또는 혁명성을 거론한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가 전쟁 기간에 자유주의 세력의 지속적인 공격 앞에서 권위가 추락하고 지지 기반이 축소되었던 데에는 친정부적인 러시아 우익세력들이 분열되고 그들 주장이 설득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1차 세계대전 시기에 러시아의 우익세력들이 정부의 국내외 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1차 세계대전 직전과 진행과정에서 러시아 우익세력들이 적대국인 독일에 대해 그리고 동맹국인 영국과 미국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검토할 것이며, 3장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국내정책과 러시아의 정치체제에 대한 우익세력들의 입장 변화를 추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우익’ 또는 ‘우익’ 정치세력이라는 용어를 러시아 역사가 이바노프의 개념규정을 받아들여 사용할 것이다. 그는 ‘우익’ 또는 ‘우익’ 정치세력이란 혁명전 러시아의 정치적 전통에 따라 그리고 현대 러시아 역사학계의 용례에 따라 “무제한의 짜르 전제정을 옹호하고, ‘정교, 전제정, 국민성’이라는 [니콜라이 1세 시대의 문교대신인] 우바로프의 세 요소를 정치적 신조로서 변함없이 믿는 정당과 집단들”을 가리킨다고 정의하였다.

## 2. 러시아 우익들의 적대국과 동맹국

1차 세계대전 직전에 러시아 우익들이 당시의 유럽 정세를 어떻게 보았는가는 1914년 2월에 국가평의회 우익 그룹 지도자인 두르노보(П. Н. Дурново)가 황제에게 제출한 ‘메모’가 잘 보여준다. 그 메모에서 두르노보는 영국과 독일 사이의 경쟁이 결국 전쟁으로, 그리고 영-독 전쟁은 삼국동맹과 삼국연합의 전쟁으로, 즉 유럽전쟁 또는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독일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의 외교정책을 친독일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당면 전쟁에서 “독일 방어선의 가장 두터운 곳을 뚫고나갈 송곳의 역할을” 러시아가 담당할

것이며, 따라서 독일과의 전쟁은 러시아에 커다란 고통과 함께 엄청난 인적, 물질적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게다가 다가올 전쟁은 막대한 재정적 지출을 요구할 것이므로 러시아는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에도 연합국들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될 위험성이 컸다. 그런데 사실 두르노보가 독일과의 전쟁을 피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와 독일의 전쟁이 어느 나라가 승리하든지 간에 군주정 원칙의 약화를 초래해 양국 모두에게 매우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시 국제관계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민주적 원칙”을, 그리고 러시아와 독일은 “보수적 원칙”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독-러 전쟁은 보수적 원칙의 대변자들 사이의 싸움이 될 것이며, 따라서 그 결과에 상관없이 보수적인 원칙을 약화시킨다는 것이었다. 또한 전쟁이 끝난 후 두 나라에서는 사회혁명 발생 가능성이 크며, 패배한 나라의 경우 “그 결말을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암담한 무정부상태”로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두르노보의 이런 친독일적 태도는 전쟁 직전까지 러시아 보수 세력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되었다. 물론 1914년 봄에 러시아 우익들은 독일이 러시아의 비옥한 토지를 욕심내는 잠재적인 적국이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우익들은 그때에도 자신들의 친독일적인 방향성을 공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러시아 우익들은 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자신들의 입장을 급격히 바꿔야 했다. 우선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는 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의 영토와 함께 “러시아의 명예, 존엄, 안전, 그리고 열강들 사이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모든 충성스런 신민들이 일치하여 그리고 자기희생적으로 일어나...파렴치한 적의 공격을 물리칠 것”을 호소하였다. 뒤이어 황제는 군 고위 지휘관들에게 1812년 알렉산드르 1세의 맹세를 인용하여 “나는 조국의 영토에 적이 한 명이라도 남아 있는 한 강화를 맺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했다. 황제의 이런 명확한 입장 표명은 대다수 우익세력들에게는 거의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전쟁 초기에는 열정적인 애국심의 물결과 함께 반독일 감정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연합국 측이 곧 그리고 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널리 퍼져 있었다. 따라서 대다수 우익세력들은 군주에 대한 충성심, 조국에 대한 의무감, 동맹국들에 대한 신뢰 등을 거론하면서 당시 확산되던 애국심과 반독일 적대감의 물결에 합류하였다. 사실 당시에는 “공개적으로는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없었다.”

이런 고양된 분위기에서 러시아 우익들은 자유주의자들과 함께 당면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논의를 전개하면서 자신들의 반독일적인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특히 우익들은 독일 군국주의를 독일 또는 독일인들의 고유한 문화와 민족적 특성의 산물로 간주하면서 독일을 러시아의 불구대천의 원수이자 인류 공동의 적으로 묘사했다. 예컨대 러시아인민동맹<sup>1)</sup> 의장이자 국가두마의 우익 지도자인 마르코프는 독일인들이 “인간, 그것은 독일인을 의미하고 인류, 그것은 독일 민족을 의미하며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독일인들을 위해 짐을 끄는 가축이거나 박멸되어야 할 짐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일의 승리는 곧바로 도시와 촌락들의 전면적인 파괴, 평화로운 주민들의 학살, 여성들의 강간을 의미한다”고 단언하였다. 또한 유명한 사회평론가인 로자노프(B. B. Розанов)는 전쟁의 원인을 “성스럽고” “인간적인” 정교와 “비기독교적인” 루터교 사이의 충돌에서 찾았고, 사실상 독일인들이 “신에 대한 두려움”을 잃은 “무신론자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은 선과 악의 투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국가평의회 우익의원인 니콘 대주교는 당면 전쟁을 “고귀한 기독교 민족들에 대한

1) 러시아인민동맹은 1907년 이후에 몇 차례 분열을 경험하였다. 1908년 3월에 푸리시케비치(B. M. Пуришкевич)가 이끄는 미하일 아르한겔 러시아인민동맹(Русский народный союз имени Михаила Архангела)이 떨어져 나왔고, 1909년에는, 1907년부터 러시아인민동맹에 일시적으로 참여했던 러시아인 동맹(Союз русских людей)이 독립하였다. 그리고 1910년에는 러시아인민동맹 자체가 두 조직으로 분열되었는데, 마르코프가 이끈 한 조직은 기존의 명칭을 계속 사용했던 반면에, 두브로빈(A. И. Дубровин)이 지도하는 다른 조직은 전 러시아 두브로빈 러시아인민동맹(Всероссийский дубровинский союз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이 되었다.

뻔뻔스럽고 인간적인 면모를 상실한 괴물 같은 변종 인류의 사악한 음모”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가 군사적 패배를 경험하면서 점차 사라졌다.

그런데 일부 우익 인사들은 독일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친독일적인 입장을 견지한 채, 당장 독일과의 단독 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재무대신과 대신회의 의장을 역임했던 비테였다. 그는 러시아의 초기의 군사적 성공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러시아는 “빠앗은 영토를 지킬 힘이 없을 것”이므로 러시아의 “유일한 구원책은 우리의 일시적인 성공을 이용하여 독일 및 오스트리아-헝가리와 강화를 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실 비테는 전쟁이 처음에는 독일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에서 혁명을 야기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또한 그는 러시아가 영국을 위해 너무 많은 인적 그리고 물적 희생을 치를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러시아 역사의 악명 높은 ‘비선실세’인 라스푸틴도 이전부터 전쟁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였고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이런 견해를 황후에게 끊임없이 피력하였다. 그 이외에도 궁정 주변에는 독일과의 전쟁에 반대하거나, 나아가 독일과의 단독강화를 선호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궁정 주변의 친독일적 인물들의 영향을 받아 두브로빈을 비롯한 일부 우익 활동가들은 이미 1915년에 유럽의 두 주요 군주정 국가를 구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러시아가 독일과 단독 강화를 체결하기를 바라면서 은밀하게 이전의 친독일적인 입장으로 되돌아갔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단독강화설은 러시아가 별다른 군사적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리고 전쟁 부담 때문에 대중들의 경제적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 분위기가 악화되면서 우익들 사이에서 점차 설득력을 얻어갔다.

아마도 이런 움직임은 동맹국들, 특히 영국에 대한 그들의 오랜 반감과 함께, 영국 등이 러시아를 일종의 전쟁 소모품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지녔다는 그들의 깊은 불신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예컨대 영국 대사인 부캐넌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의 친독일 세력들, 즉 우익들은 영국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러시아를 전쟁에 밀어 넣었다고,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가 전쟁의 주된 부담을 지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들은 러시아군이 카르파티아 산맥에서의 격렬한 전투로 수백수천명이 죽어갈 때 “영국 병사들은 참호에 앉아 있고 영국 배들은 항구에 조용히 머물러 있다. 러시아는 무엇을 얻기 위해 이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영국을 위해 계속 싸워야 하는가?” 질문을 던졌다.

이런 불신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익들은 독일과의 단독강화에 반대하면서 영국 등 동맹국들과 함께 승리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계속 지지하였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우익들은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의 정치적 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나아가 반독일 감정이 러시아의 군주정 체제를 비판하고 자유주의적 개혁을 요구하는 논거로 이용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 결과 그들은 때때로 독일의 군주정체제를 찬양하는 듯한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예컨대 국가두마의 우익 지도자 마르코프는 전쟁 승리를 위해 의회주의적 개혁을 추진하자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장관들이 극좌정당 출신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인....민주공화국 프랑스”와, “왕이 아니라 의회가 장관들을 임명하는 완전한 의회주의” 국가인 영국과 벨기에도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정부가 결코 책임내각이 아니며, 독일 제국 의회의 어떠한 소망이나 동의와는 무관하게 카이저에 의해 임명되는” 독일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전쟁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마르코프의 이런 발언은 좌익의원들로부터 “그럼, 독일로 가시요”라는 야유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우익들은 러시아 사회에 확산된 반독일 감정이 독일 황제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통해 러시아 황제에 대한 비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였다. 1916년 7월에 우익 언론인인 블라쉴

(П. Ф. Булацель)은 독일의 전쟁범죄에 대해 독일황제 빌헬름 2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에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그는 독일 정부의 다양한 부처와 관료들이 자행한 행위들에 대해 빌헬름 황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멍청한” 짓이며, 독일황제를 재판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다른 황제, 즉 러시아 황제도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생각을 국민 대중에게 주입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하지만 블라쉴의 이런 논설은 러시아 국민 각계각층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미하일 아르한겔의 러시아인민동맹 지도부는 사회여론이 블라쉴의 “돌출행위”를 러시아의 모든 군주정주의 단체와 연관 짓고 러시아 군주정주의자들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황제들을 역사적 처벌로부터 구해주려 한다고 비난하지만, 자신들은 블라쉴의 발언에 비판적인 입장에서 서 있으며, 나아가 이들 왕조의 괴멸과 굴욕을, 러시아와 모든 기독교 세계를 위한 기쁜 승리로 환영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이 동맹의 지도자인 푸리시케비치는 “러시아의 국가적 임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청맹과니”의 “비열하고 극히 반애국적인 행동”을 비난하면서 “20세기 훈족,” 즉 독일인들에 맞서 함께 싸우고 있는 “위대하고 용감한 우리 동맹국” 영국에게 찬사를 보냈다. 이런 입장에서 푸리시케비치는 1916년 12월에 유수포프(Ф. Юсупов)의 제안에 따라 라스푸틴을 암살하였는데, 유수포프는 라스푸틴이 니콜라이 2세를 폐위시키고 황후 알렉산드라 페도로브나를 섭정으로 내세워 독일과의 단독강화를 맺으려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전쟁 초기에 고양된 애국심과 반독일 적대감의 물결에 휩쓸렸던 우익들은 러시아가 계속 패전을 경험하고 전쟁이 장기화되자, 대외정책을 둘러싸고 세 방향으로 분열되었다. 즉 두브로빈을 비롯한 일부 우익들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러시아와 독일의 군주정 체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독일과의 신속한 단독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전의 ‘친독일적인’ 입장으로 되돌아갔다. 마르코프 등 많은 우익들은 러시아가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동맹국들과 함께 전쟁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감추지 못하였고 때로는 자유주의적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 독일 군주정체제의 우수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푸리시케비치 등 소수의 우익들은 놀랍게도 공공연하게 동맹국들에 우호적인 태도를 과시하면서 동맹국들과 함께 전쟁을 승리로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런 분열 이외에도, 우익 세력의 입지를 급속히 약화시켰던 것은 전쟁 기간에 쉽게 “조국에 대한 반역”과 동일시되었던 ‘친독일적’이라는 비난이었다. 러시아 자유주의자들은 러시아가 영국 및 프랑스 등의 동맹국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하였다. 그들은 이들 나라와의 빈번한 접촉이 러시아 정치제도의 ‘자유화’ 및 ‘민주주의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동시에 러시아 우익들이 근본적으로 “친독일적” 성향을 지녔다고 판단한 러시아 자유주의자들은 독일과의 단독강화가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독일의 승리로, 그리고 독일의 승리는 러시아에 대한 독일의 영향력 증대와 그에 따른 러시아 군주정체제의 강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독일과의 단독강화를 ‘친독일적인,’ 즉 조국에 대한 반역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의 이런 비난은 전쟁 전에 우익들이 친독일적인 입장을 주장했었고, 전쟁 기간에도 적어도 일부 우익이 독일과의 단독강화를 주장하는 ‘친독일적인’ 입장을 견지하였고, 그렇지 않은 우익들도 종종 그런 오해를 야기할 발언을 했기 때문에 큰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 3. 자유주의자들과의 투쟁

러시아의 우익세력들이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유럽의 보수주의 원칙에 대한 위협으로만 본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러시아의 참전 성명이 발표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겨울궁정 앞에 황제의 초상화

를 든 채 모여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충성을 표현하는 등 애국적 열정이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평의회와 국가두마가 긴급히 소집된 7월 26일 회의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정부의 참전 결정을 지지하면서 ‘신성한 동맹’을 선포했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전쟁의 발발이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애국적 열정을 고양시켰고 나아가 모든 국민을 군주를 중심으로 단합하게 만들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우익세력들은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이며 전쟁기간에 보수적 원칙에 입각하여 러시아가 다시 태어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우익들은 이런 고양된 애국심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입장이 갈렸다. 많은 우익들은 전쟁으로 애국심이 고양된 상황을 이용하여 1905년 혁명 이후 확립된 “민주적인” 기관 및 제도들을 무력화시키거나 가능하다면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논거에서 일부 우익들은 원칙적으로 자유주의적인 반정부세력들과 어떠한 대화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여러 사회집단이나 소수민족들을 전쟁수행노력에 동원하면서 어떤 양보도 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 심지어 몇몇 우익 언론은 전쟁 기간에 국민대의제 원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가두마와 국가평의회를 소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게 조언하였다. 요컨대 이들 우익은 국가와 사회 간의 상호관계를 일방적인 명령-의무적인 복종의 주종관계로 파악하여 전쟁수행노력의 동원과 관련된 모든 정치적 문제를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일방적인 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해결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반면에 일부 우익들은 러일전쟁 때와는 달리 1차 세계대전 초기에 애국심이 고양된 것을, 1905년 혁명 이후 도입된 여러 민주적인 기관 및 제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신성한 동맹’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정부세력들에 대한 타협과 양보를 겁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애국심이 고양된 전쟁 상황에서 오히려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로부터’ 필요한 개혁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들은 국민대의기구인 국가두마가 국민들의 전쟁수행노력을 동원하는 데에, 그리고 전시 정부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지지를 표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두마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러시아제국의 소외된 여러 사회집단과 소수민족을 정부의 전쟁수행노력에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더 많고 더 평등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믿었다.

우익들의 이런 입장 차이는 전쟁 초기에 자유주의자들이 ‘신성한 동맹’의 유지라는 명분 아래 정부 주도의 전쟁수행 노력을 거의 무조건 지지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1915년 봄-여름에 러시아가 연속적인 군사적 패배를 당해 많은 영토를 상실하면서 계속 후퇴하자, 자유주의 세력들은 중도적인 정치세력들을 끌어들이 ‘진보블록’을 결성하였고, 정부를 본격적으로 비판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이른바 ‘신뢰내각’ 또는 국가두마의 다수당이 주도하는 ‘책임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정치상황의 변화는 그에 대응하는 우익들의 활동을 급격히 증대시켰다. 우선 1915년 6월에는 비러시아인이나 비정교도도 가입할 수 있는 더 개방적인 우익 단체인 ‘조국애국자동맹’(Отечественный патриотический союз, ОПС)이 조직되었다. 그리고 1915년 8월 27-29일 사라토프, 1915년 11월 21-23일 페트로그라드, 그리고 11월 26-29일 니쭈니 노브고로드 등 세 차례에 걸쳐 수백 명이 참석한 우익 군주정주의자들의 협의회가 열렸으며, 그와 함께 분열된 우익들의 활동을 조정할 새로운 지도부를 조직하거나 지방 우익조직들의 활동 강화를 촉구하려는 여러 우익 단체 지도부의 활동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또한 이들은 황제와 대신회의 의장 앞으로 군주정체제와 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국가두마 또는 진보블록의 개혁 요구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전보를 대규모로 발송함으로써 진보블록이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하지만 우익단체들 상호간의 오랜 반감, 주요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 정부의 물질적 지원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등 때문에 통합된 우익 지도부를 조직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다른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활동가들이 전쟁 또는 전쟁지원업무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지방 조

직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다만 자유주의 세력들의 정부 비판 때문에 전쟁 초기부터 계속된 우익 내부의 노선 투쟁은 오히려 더욱 명확하게 부각되었다.

우선 마르코프와 두브로빈을 비롯한 많은 우익들은 1915년 8월에 니콜라이 2세가 러시아군 최고 총사령관에 취임한 것을 환영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황제가 최고 총사령부에 있는 기간에, 즉 그가 수도에 없는 기간에 자유주의자들이 황제의 전제권력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할 때 정부 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표현하였다. 따라서 황제가 없을 때 좌익 언론과 국가두마의 “혁명 선동”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고한” 인물에게 권력을 맡겨야 한다고, 아니면 후방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강력한 독재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정부가 더 강경한 국내정책을 더 엄격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예컨대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여 국민들을 동요시키고 당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언론에 대한 강력한 규제, 흉흉한 소문을 퍼트릴 수 있는 유대인, 특히 전선지역에서 소개된 유대인에 대한 격리와 감시의 강화, 군수산업의 국유화 및 관련 노동자들의 ‘군대화’, 독일계 주민의 재산 몰수와 외국인의 경제활동 규제,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의 국가독점과 전국적인 고정가격제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들은 진보블록이 요구하는 ‘신뢰내각’ 또는 ‘책임내각’은 러시아의 ‘국가기본법’, 특히 군주의 특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관련된 정치세력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동시에, 국가두마를 즉각 해산하거나, 심지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정치개혁 문제는 국민 대중은 전혀 관심이 없지만 “지식인계층과 부유한 산업계급들”의 권력욕 때문에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바로 독일이 원하는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왜냐 하면 지금은 국가의 모든 힘을 전쟁 승리를 위해 집중해야 하는데, 정치개혁 문제는 논쟁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런 움직임은 정부 당국이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 곧바로 쉽게 사라질 것이지만, 몇몇 ‘자유주의적’ 대신들이 “황제의 의지를 왜곡하면서” 국가두마와 이른바 사회여론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정부는 그런 “반혁명” 투쟁에서 충성스러운 세력들, 즉 우익세력들의 조언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정부 당국은 이들의 주장과 제안이 사회적 분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들의 지원 및 협력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들의 활동을 규제하려고 하였다.

반면에 푸리시케비치와 그의 추종세력들은 정부가 전쟁 승리를 위해 국가두마 및 국가평의회보다 다수파인 진보블록과 정치적인 대화와 타협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물론 이들은 진보블록이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군주정주의자들이 당파적인 연설과 행동으로 분열과 갈등을 악화시키기보다는 묵묵히 정부의 전쟁수행 노력에 협력하는 것이 낫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황제가 임명한 정부는 만약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부르주아지의 입헌주의적 열망을 구체화한 국가두마 다수파의 요구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두마의 그런 요구는 전쟁초기부터 정부가 취했던 양보정책에서 초래된 것이며 정부는 그런 정책을 지금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야 한다고 이들은 생각했다. 심지어 이들은 전쟁 이후에 자유주의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우익들도 그런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입장에서 이들은 1917년 2월초에도 정치 상황을 많은 우익들과 완전히 다르게 판단하였다. 다수파 우익들이 “거의 모든 러시아가 국가체제를 전복하려는 목적의 음모로 단합되었다고,” 그리고 “[국가]평의회, 국가[두마], 귀족연합, 군에 봉사하는 모든 사회단체,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은 모든 러시아인들을 반역자라고” 비난했다면, 이들은 “현재 소수를 제외한 모든 러시아인들은 적에게 승리하려는, 그리고 고통 받아 지친 조국을 위한 확고하고 장기적인 평화를 확보하려는 공동의 노력에서 사이 좋게 단합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요컨대 이들은 전쟁으로 전례 없는 국민적 단결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단결을 반정부세력이 아니라,

국민 대중들의 애국적인 활동에 두려움을 느낀 정부 관료들이, 그리고 일부 우익들이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푸리시케비치는 1916년 11월 19일 국가두마 연단에서 공개적으로 황후와 라스푸틴 등 궁정 주변의 ‘어둠의 세력들’이 황제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들의 친독일적 성향을 공격하였고, 뒤이어 자신의 처신을 공격하는 국가두마의 우익 정파에서 탈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황제와 정부는 정부의 적극적인 책임 아래 전쟁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지도 못하면서 사회세력들과의 진지한 대화 및 협력에 나서지도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는 사이 국내의 경제적 위기는 계속 악화되면서 사회여론은 점차 혁명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다. 이에 일부 우익세력들은 심지어 국가기본법을 개정하여 정부 권력을 강화하자고 주장했지만, 자신들의 주장이 니콜라이 2세의 책임 회피적 태도와 약한 의지, 황후와 라스푸틴의 지나친 국정 개입 때문에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론에 빠져들었다. 또한 많은 우익들은 광범위한 사회여론의 반정부적 비판 속에서 황후와 라스푸틴 등 ‘어둠의 세력’을 옹호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처지에 깊은 환멸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따라서 많은 우익들은 1916년 말과 1917년 초에 이르면 점차 자유주의 세력들의 신뢰내각 주장에 공감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신들에 대한 무력감 또는 황제와 정부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결국 정치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 4. 결 론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러시아의 정치적 세력구조를, 그에 따라 우익세력들의 활동 방향과 성격 그리고 그 규모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전쟁 초기에 러시아 자유주의세력들은 전쟁 승리를 위해서 정부의 전쟁수행노력을 무조건 지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신성한 동맹’에 참여했고 당연하게도 러시아 우익들은 이를 기꺼이 환영하였다. 하지만 자유주의 세력들은 전쟁 승리를 위한 단결이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애국심을 부각시키면서 우익들의 친독일적인 성향을 매국적인 행태로 비난할 수 있었다. 반면에 우익 세력들은 자유주의자들을 러시아의 풍토에 맞지 않는 서구적 정치사상에 물들어 러시아를 분열시키는 비애국적이고 반러시아적인 지식인 세력으로 계속 비난하기가 어려워졌다. 또한 러시아 우익들은 ‘총력전’ 상황에서 자신들의 친숙한 구호인 ‘강력한 정부’에 대한 독점권도 상실하였다. 즉 자유주의 세력들도 ‘강력한 정부’를 지지했는데, 그들은 우익들의 논리와 달리 강력한 정부란 사회의 진정한 신뢰를 받을 때에만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사회집단 및 소수민족들과의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우익세력들이 주장하는, 황제에게만 충성스러운 강력한 정부란,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전세를 뒤집지 못한 채 사회경제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기존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게다가 우익들이 기대했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그들의 조언을 따를 의지가 없었다. 따라서 러시아 우익 세력들은 분열과 절망감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의 격렬해지는 공격에 맞서 점점 신망을 잃어가던 러시아 정부와 기존 체제를 옹호할 의지를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푸리시케비치 등이 우익 진영을 버리고 자유주의 진영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의 행태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이 지닌 전제정 개념과 일정한 관련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즉 러시아의 전제군주는 러시아 역사에서 한편으로는 강력한 권력으로 러시아제국의 단합과 역사적 체제를 지키는 체제 수호자로 그려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표트르 대제와 알렉산드르 2세처럼 시대 변화에 발맞춰 대담한 개혁을 과감하게 주도하는 계몽군주로서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쟁 기간에 러시아 우익의 분열은 러시아 전제정을 보는 상반된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 “트럼프 민주당원”의 탄생: 2016년 미국 대선과 백인 노동계급

이찬행(성균관대 사학과)

2016년 대선이 끝난 지금 곰곰이 다시 생각해본다. 과연 트럼프 승리-힐러리 패배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을까? 뒤늦은 감이 없진 않으나 미국 현대 정치사를 훑아보면 힐러리의 패배는 어쩌면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힐러리 패배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1970년대 이후 민주당 정권의 권력 기반에서 벌어진 커다란 변화, 즉 전통적으로 백인 노동계급의 지지를 받던 민주당이 전문가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화의 구조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백인 노동계급의 민주당 이탈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민권 운동 이후 남부 백인 노동자들의 정치 성향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뉴욕커』(*New Yorker*) 기자 조지 패커에 따르면, 20세기 대부분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정체성은 비교적 분명했다. 공화당은 앞서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대변했고 민주당은 공정한 몫을 원하는 자들을 대변했다. 공화당은 비즈니스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1955년부터 1976년까지 시카고 시장을 역임했던 민주당 보스 정치인 로버트 J. 데일리와 시카고 가축 수용소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비록 부패했고 엘리트들이 당을 지배했으나, 민주당은 노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었다.<sup>1)</sup> 하지만 역사가 제퍼슨 코워에 따르면, 미국 현대사의 특이한 점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던 1970년대 오히려 계급에 관한 언어는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 시기 노동계급이라는 통념은 예전과는 달리 자신의 정치적 중요성을 상실하고 있었던 셈이다.<sup>2)</sup> 왜 그랬을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1968년 시카고에서 개최된 민주당의 이른바 피의 전당대회에서 찾을 수 있다. 당원과 일반 유권자들이 예비선거, 즉 프라이머리를 통해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제도가 1920년대 혁신주의 시기 이래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60년대에는 오늘날과 달리 예비선거에서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가 실제 선거인단 숫자로 반영되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반면 코커스는 폐쇄적인 측면이 강했으며 언론에 잘 보도되지도 않았기에 당을 지배하던 보스와 노동조합 소수 엘리트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나 1968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주에서는 당원만이 참석하는 코커스 제도를 통해 대통령 선거인단을 정하곤 했다. 1968년 민주당 시카고 전당대회는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 프라이머리에서 31퍼센트를 얻은 뉴욕 상원의원 로버트 케네디 피살, 베트남 전쟁 등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시계제로의 상황에서 치러졌다. 미국 대도시들은 폭동으로 불타오르며 많은 수의 젊은이들은 베트남 전쟁 반대를 외치면서 길거리로 뛰쳐나왔다. 하지만 전당대회 결과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39퍼센트 지지를 받으며 주목을 끌었던 미네소타 상원의원이자 베트남 전쟁 반대파 유진 매카시 대신에 린든 B. 존슨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역임했던 베트남 전쟁 찬성파 휴버트 험프리가 단 한 차례의 예비선거도 거치지 않은 채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선정되고 말았다. 코커스 제도를 악용한 당의 소수 엘리트들이 만든 작품이었다. 비민주적인 선거 절차와 전쟁 찬성파 후보자 선출에 대한 항의로 베트남 전쟁 반대를 외치던 청년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시카고 7인”이라고 불린 젊은이들은 심지어 돼지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기도 했으나 당의 보스 가운데 한 명인 데일리 시장은 시카고 경찰로 하여금 무자비하게 청년들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이

1) George Packer, “Hillary Clinton and the Populist Revolt,” *New Yorker*, October 31, 2016.

2) Kim Phillips-Fein, “1973 to the Present,” in Eric Foner and Lisa McGirr, eds., *American History Now*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11), p. 181.

자멸하는 순간이었다. 루스벨트, 트루먼, 케네디를 배출했던 민주당이 이처럼 내부로부터 무너지면서 그해 11월 대선에서 공화당의 닉슨에게 패배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었다.<sup>3)</sup>

맥거번-프레이저 위원회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분출된 이른바 “새 정치(New Politics)”를 지향하는 리버럴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당의 단결 도모를 통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주당 기구이다. 사우스다코타 상원의원 조지 맥거번이 1971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미네소타 하원의원 도널드 프레이저가 주도한 이 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당 구조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위원회”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맥거번-프레이저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오늘날과 같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 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보스 정치의 폐해를 도려내는 것이었다. 1971년에 발표한 보고서 등에서 이 위원회가 제안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새 정치”를 주창하는 리버럴 세력의 요구를 받아들여 각각의 개별 주에서 민주당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정해진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1972년부터는 사전에 공표될 뿐만 아니라 원하는 당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비선거에서 혹은 공개된 코커스에서 대의원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셈인데, 이러한 규칙이 궁극적으로 그 동안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좌지우지했던 당의 보스들과 산별노조총연맹(AFL-CIO)과 같은 노동조합 리더들의 영향력 감소를 가져오리라는 점은 분명했다. 두 번째는 후보자 지명 대회에 청년, 마이너리티, 여성 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쿼터를 배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 역시 지금까지 당의 소수 엘리트들과 노동조합이 차지하고 있던 권한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낳았다.<sup>4)</sup> “새 정치”를 외치던 젊은 민주당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노동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사안은 제대로 된 참정권이 없는 사람들, 환경, 정부의 부패, 군국주의 등이었다. 당의 미래는 더 이상 시카고 가축 수용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아니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급, 특히 백인 노동계급은 당으로부터 홀대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는 1972년 대선에서 다수의 백인 노동자들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온 맥거번이 아니라 닉슨에게 투표함으로써 그의 재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설상가상으로 백인 노동계급의 이탈은 1972년 대선에서 멈추지 않았다. 비록 노동으로부터 멀어지긴 했으나 1968년부터 1972년까지 맥거번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좌경화되고 있었다. 맥거번은 베트남 전쟁 반대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지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보았듯이 여성, 마이너리티, 동성애자, 활동가 등에게 전당대회 참여를 약속했다. 그 결과 민주당 정치는 점점 “반-제국주의, 반-인종주의, 친-페미니즘, 친-낙태, 친-동성애”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었다. 민주당의 좌경화는 노동과 리버럴리즘의 분열을 초래하면서 백인 노동계급의 이탈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잘 알려져 있듯이, 유태계 잡지 『코멘터리』(Commentary)의 편집장 노먼 포도레츠와 민주당 성향의 대표적인 보수 지식인 어빙 크리스톨 같은 이른바 뉴욕 지식인들이 리버럴리즘을 버리면서 신보수주의자로 전향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sup>6)</sup> 백인 노동계급의 이탈과 민주당의 혼란으로 대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3) Jerry F. Hough, *Changing Party Coalitions: The Mystery of the Red State-Blue State Alignment* (New York: Algora Press, 2006), p. 142; Taylor E. Dark, “From Resistance to Adaptation: Organized Labor Reacts to a Changing Nominating Process,” in William Mayer, ed., *The Making of the Presidential Candidates 2004*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2004), pp. 161-198; Steven E. Schier, *By Invitation Only: The Rise of Exclusive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2000), pp. 78-79; Gary L. Rose, *The American Presidency Under Siege*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7), pp. 55-57.

4) Andrew Battistap, *The Revival of Labor Liberalism* (Illinoi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8), p. 50; Taylor E. Dark, “From Resistance to Adaptation,” p. 172.

5) George Packer, “Hillary Clinton and the Populist Revolt.”

6) Adam L. Fuller, *Taking the Fight to the Enemy: Neoconservatism and the Age of Ideology* (Lanham, MD: Lexington, 2012), p. 18; Donald T. Critchlow, “The Conservative Ascendancy,” in Donald T. Critchlow and Nancy MacLean, eds., *Debating the American Conservative Movement:*

없었던 민주당의 새로운 방향기를 잡은 사람들은 예일대 출신의 젊은 법률가로서 맥거번 선거 캠페인 매니저 역할을 했던 개리 하트와 예일대 로스쿨 학생으로서 하트에 의해 텍사스 지역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빌 클린턴이었다.<sup>7)</sup> 하지만 브루스 미로프가 주장하듯이, “아이러니하게도” 하트와 클린턴은 맥거번 선거 캠페인을 위해 뛰었던 현장의 주역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72년 대선 이후 맥거번의 좌파 리버럴리즘에 반대하는 노선을 취하게 된다.<sup>8)</sup> 그렇다면 이들이 노동과 리버럴리즘의 봉합을 추구했을까? 그렇지 않다. 하트와 클린턴은 모두 작은 시골의 노동계급 출신이었다. 하트는 소년이었을 때 캔사스 철도에서 일했으며 클린턴은 가난한 야간사스 출신이다. 교육이야말로 이들의 신분을 바꿔놓은 셈이다. 1972년 맥거번의 대패 이후 하트와 클린턴 앞에 놓인 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민주당의 노동계급 정체성을 복원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들처럼 교육 수준이 높은 전문가들이 당의 다수를 차지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하트와 클린턴은 결국 후자를 택하였는데 이로써 백인 노동계급의 이탈을 빚은 민주당 권력 기반에서의 변화는 더욱 완결된 모습을 취하게 된다.<sup>9)</sup>

민주당의 변화는 비교적 최근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관찰된다. 지난 2008년 미국을 강타한 금융위기 이후 미국 자동차 제조업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가라앉고 있었다. 미국의 위기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번져가면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낳고 있었다. 해결책으로 당시 미국 정부는 약 800억 달러를 자동차 산업 구제를 위해 제공하였고 이 금액 가운데 80퍼센트가 크라이슬러와 제너럴 모터스에게 주어졌다.<sup>10)</sup> 오바마 행정부는 이처럼 자동차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디트로이트 등 미국 중부 지역의 경제를 되살리고자 했지만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정이 달랐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권력 중심은 중부에서 서부 및 동부 해안가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미시건의 존 데이비드 당겔 하원의원과 미주리의 리처드 앤드류 “딕” 게파르트 하원의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산업 노동자를 기반으로 중부 지역은 민주당 안에서 어느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오바마 행정부 시기 민주당은 더 이상 이들이 주역인 당이 아니었다.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과 매릴랜드의 스테니 호이어 하원의원의 활동이 보여주듯이, 오늘날 민주당의 권력 중심은 해안가에 자리 잡았다.

2016년 미국 대선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주당에서 백인 노동계급이 이탈하고 당의 권력 기반이 전문가 엘리트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필연적인 현상이다. 힐러리가 정계에 입문한 이후 보여준 모습은 이러한 대선 패배의 필연성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것이었다. 오바마에게는 정치적 레토릭과 철학적 깊이가 있었으나 힐러리에겐 이러한 덕목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었다. 대신 힐러리를 특징짓는 것은 정치적 추진력이었다. 힐러리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특히 정책에 강하였고 교육, 건강, 아동 복지 등의 부문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데 능했다. 하지만 그들은 분열적인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하곤 했으며 경제 성장이라는 친-비즈니스 태도를 유지하였다.<sup>11)</sup> 힐러리는 민주당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가 폭발 직전으로 악화되던 소득 불균형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함으로써 많은 수의 젊은 유권자들과 노동계급의 지지를 받았던 사실에 주목했어야 했다.<sup>12)</sup> 사회경제적 불균형은 2016년 대선이 계급 정치의 구도로 치러질 수 있었음을 의미했으나 계급 정치라는

*1945 to the Present*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9), p. 37.

7) 당시 힐러리는 빌 클린턴의 새 여자 친구로서 맥거번 선거 캠페인을 위해 텍사스 샌안토니오로 가게 된다.

8) Bruce Miroff, “From Friends to Foes,” in Jonathan Bell and Timothy Stanley, eds., *Making Sense of American Liberalism* (Illinoi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12), p. 106.

9) George Packer, “Hillary Clinton and the Populist Revolt.”

10)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Auto Industry: Lessons Learned from Cash for Clunkers Program*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0), p. 1.

11) George Packer, “Hillary Clinton and the Populist Revolt.”

12) Steven Greenhouse, “Taking Trump’s Populism Seriously,” *American Prospect*, November 10, 2016.

통념 자체가 힐러리에게는 낯선 것이었다. 클린턴 부부는 노동계급을 위해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노동자를 자신들처럼 전문가로 만들 수 있을가에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sup>13)</sup> 퍼스트레이디, 상원의원, 장관을 역임했던 힐러리, 골드만삭스에서 연설한 대가로 2십2만5천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힐러리, 그녀는 기득권 세력("Ms. Establishment")이자 연속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반면에 트럼프는, 그가 아무리 거짓말을 일삼고 타인에 대한 혐오를 거침없이 드러내는 인물일지라도, 노동계급, 특히 많은 수의 백인 노동계급에게 변화의 상징으로 부각될 수 있었다.<sup>14)</sup>

1970년대 이후 민주당은 전문가 엘리트 중심의 당으로 변화했지만 오바마 행정부 시기 이민자에 서부터 동성애자에 이르기까지 마이너리티 세력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았고 그 결과 민주당은 전문가 엘리트 집단과 마이너리티 사이의 연대를 핵심 지지 기반으로 삼기 시작했다. 반면에 비즈니스 세력을 대변하던 공화당은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한 백인 노동계급을, 최소한 레토릭으로나마, 자신의 기반에 편입시킴으로써 이질적인 연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당선은 전문가 엘리트와 마이너리티의 연대가 아직 충분히 무르익지 못하면서 비즈니스 세력과 백인 노동계급 사이의 연대에 밀린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백인 노동계급, 특히 중부 지역 백인 노동자들의 트럼프 지지는 민주당의 보루였던 러스트 벨트 주들이 무너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sup>15)</sup> 그렇다면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하던 백인 노동계급은 왜 지난 해 공화당의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트럼프 민주당원"으로 바뀌었을까? 백인 노동계급의 지지를 이끌어낸 트럼프 정치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선거 캠페인 내내 트럼프가 제시한 것은 크게 보았을 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보호무역을 통해 미국 제조업 일자리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샌더스가 힐러리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연결시키면서 공격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선거 캠페인을 치렀다. 트럼프의 생각은 이렇다. 제조업의 좋은 일자리들이 무역 불균형과 수입 증가로 말미암아 사라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임금과 실업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35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주장 혹은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주장은 이와 같은 생각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두 번째는 이민 장벽을 공고하게 만듦으로써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기에 이들을 추방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주장의 핵심이다. 무려 1천1백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를 일단 미국에서 추방한 후에 "좋은 이민자들"만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트럼프가 이민에 대해 품고 있는 생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sup>16)</sup> 첫째, 이민자들이 제조업을 비롯해 많은 부문 일자리를 미국인들로부터 빼앗고 있다. 둘째, 이민자들이 복지 혜택 등을 받음으로써 미국의 공공 자산을 유출시키고 있다. 셋째, 이민자들은 미국에 동화하지 않는다.<sup>17)</sup> 이민에 대한 트럼프의 주장은 심지어 그에게 반감을 지니고 있던 티파티(Tea Party)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유용하기도 했다.

힐러리는 친-노동이라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무역과 이민이라는 사안을 일자리와 엮으면서 백인 노동자들을 향해 강력한 근육질의 언어를 사용했다. 그 결과 힐러리가 기득권 세력의 일부로 인식되었다면 트럼프는 이러한 기득권층에 도전하는 분노의 싸움꾼으로 등장하였다.<sup>18)</sup> 선거

13) George Packer, "Hillary Clinton and the Populist Revolt."

14) Steven Greenhouse, "Taking Trump's Populism Seriously"; Tamara Keith, "5 Ways Bernie Sanders and Donald Trump Are More Alike than You Think," National Public Radio, February 8, 2016; Molly Ball, "What Trump and Sanders Have in Common," *Atlantic*, January 6, 2016.

15) Ronald Brownstein, "How the Rustbelt Paved Trump's Road to Victory," *Atlantic*, November 10, 2016.

16) Tom McCarthy, "Donald Trump Wants to Deport 11 Million Migrants: Is That Even Possible?" *Guardian*, August 27, 2015.

17) Sally Kohn, "Nothing Donald Trump Says on Immigration Holds Up," *Time*, June 29, 2016.

18) Steven Greenhouse, "Taking Trump's Populism Seriously."

캠페인에서 사용했던 트럼프의 언어는 검사로서 로젠버그 부부를 1953년 소련 간첩 혐의로 사형시키고 조셉 매카시의 자문 대표 역할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초반 트럼프 회사를 직접 변호하기도 했던 로이 콘의 언어와 상당히 유사하다. 트럼프는 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권력을 휘두르고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는지 배웠다. 그 방법은 단순했다. “공격하고, 반격하고, 결코 사과하지 않는 것”이다.<sup>19)</sup> 트럼프가 오바마의 출생을 끈질기게 문제 삼으면서 정치인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힐러리에 대해서 그녀가 거짓말을 한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모습에서 사악한 법률가 콘의 모습을 발견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sup>20)</sup> 나아가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의 주권을 파괴할 국제 은행들을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는 트럼프의 악의적인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역사가 리처드 호프스태터가 주목한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의 피해망상적(paranoid)이고 극우적인 사이비-보수주의자(pseudo-conservative)들의 언어, 즉 배반과 음모라는 언어로 백인 노동자들이 느끼고 있던 계급적인 분노에 목소리와 형체를 부여하는 데 달인이었다.<sup>21)</sup>

지난 해 트럼프의 선동적 언어는 백인 노동자들을 “트럼프 민주당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의 주장은 분명 근거가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백인 노동자들은 트럼프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생각했다.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의 어느 한 60대 노인이 말하듯이, 백인 노동자들은 “마침내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사람을 얻었다”고 믿었다.<sup>22)</sup> 오하이오 웨스트캐롤턴에 있는 편의점 직원 콘테사 힘멜이 주장하듯이, 트럼프는 이해하기 쉬운 분명한 언어로 백인 노동계급에게 다가갔다.<sup>23)</sup> 1970년대 존스앤러플린 철강 회사가 1만7천 명을 고용하고 있었던 제조업의 중심지 펜실베이니아 앨리쿼파. 하지만 1980년대 탈산업화의 거센 회오리 속에서 공장 폐쇄와 인구 감소를 경험하면서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앨리쿼파 비버카운티에서도 제조업을 부흥시킬 것이라는 트럼프의 약속은 노동계급에게 공명하였고 그 결과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당적을 옮긴 사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꾼 사람보다 일곱 배나 많았다.<sup>24)</sup> 뉴욕과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트럭운전수 조합 로컬 282의 조합원 안토니오 까라치올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적지 않은 수의 노동자들이 힐러리가 아니라 샌더스에 호감을 갖고 있었으나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결국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공감하면서 트럼프 지지자로 돌아서고 말았다.<sup>25)</sup> 상당수의 학자들과 민주당 전략가들은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진단하였으나 이처럼 2016년 백인 노동계급은 “트럼프 민주당원”으로 컴백했다. 1980년대 “레이건 민주당원”으로 미국 정치사에 등장하면서 바로미터 역할을 수행했던 그들이 이번에는 “트럼프 민주당원”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는 기존의 비즈니스 세력에 이들 백인 노동계급이 합쳐지면서 발생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건이었다.

19) Robert O'Harrow Jr. and Shawn Boburg, “The Man Who Showed Donald Trump How to Exploit Power and Instill Fear,” *Washington Post*, June 17, 2016.

20) Mark Danner, “The Real Trump,” *New York Review of Books*, December 22, 2016.

21) Ibid. 호프스태터와 사이비-보수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찬행, 「미국 우파에 대한 역사 서술의 궤적」, 『서양사론』 제129호, 2016년.

22) Mark Danner, “The Real Trump.”

23) Alec MacGillis, “Revenge of the Forgotten Class,” ProPublica, November 10, 2016.

24) Jim O'Sullivan, “In Pa., Reagan Democrats Turn to Donald Trump,” *Boston Globe*, April 11, 2016.

25) Steve Inskeep, “Trump Gains Support from Teamsters, Who Normally Vote for Democrats,” National Public Radio, March 7, 2016.



---

## 제5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

---

좌장: 황보영조(경북대)

토론: 권윤경(공주대) / 염운옥(고려대) / 김윤경(서울대)

▶ 프랑스혁명기의 수동시민과 민주주의

발표: 박윤덕(충남대)

▶ 최초의 러다이트운동과 기계파괴의 정치경제학: “기계 파괴”와 “기계 규제”의 정치적 역설(emphasis)

발표: 박찬영(명지대)

▶ 라틴아메리카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포퓰리즘의 출현-아르헨티나의 사례

발표: 박구병(아주대)



## 프랑스 혁명기의 수동시민과 민주주의

박윤덕(충남대 사학과)

1. 서론
2. 재산제한 선거제
  - 1) 선거법과 ‘수동시민’
  - 2) 수동시민의 규모와 상태
3. 수동시민과 민중운동
  - 1) 수동시민의 자기 인식
  - 2) 수동시민의 저항과 혁명
4. 결론

### 1. 서론

1791년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1주일 동안 프랑스의 시민들은 혁명을 이끌어갈 두 번째 의회인 입법의회(Assemblée législative)를 구성할 의원들을 선출하였다. 제헌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 Constituante) 뒤를 잇게 될 입법의회는 1791년에 제정된 헌법에 따라 각종 법률들을 제정하고 혁명 과업을 완수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입법의회는 몇 가지 점에서 두드러졌는데, 첫째는 745명의 의원 전원이 초선의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1791년 5월 16일 로베스피에르(Maximilian Robespierre)의 제안에 따라, 제헌의회가 사심 없이 혁명의 대의를 위해 헌법을 제정하는 임무에 충실하자는 취지로 제헌의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결과이다. 둘째는 재산자격에 의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능동시민” 즉 3일치 일당에 해당하는 액수의 직접세를 납부하는 성인 남성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이러한 재산자격을 갖추지 못한 “수동시민”에게는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을 인간과 시민의 기본권으로 선언한 1789년의 인권선언을 무색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제헌국민의회를 지배했던 온건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출된 입법의원들은 제헌의원들보다 정치적으로 더 진보적이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부르주아 출신이었던 입법의원들은 계몽사상의 세례를 받은 부르주아들이었지만, 훨씬 더 젊은 신인들로서 혁명의 대의에 동참한 자들이었다. 제헌의회에서와 달리 이제 더 이상 의회 안에는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입법의회 선거의 투표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지방에 따라 그리고 도시와 농촌에 따라서 투표율은 25~30%에 불과했고, 파리의 경우는 투표율이 10%를 넘지 못했는데, 이는 국왕의 바렌(Varennes) 탈주사건과 샹드마르스(Champ-de-Mars) 광장의 학살 사건, 그리고 필니츠(Pillnitz) 선언 등으로 야기된 정치적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의외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마저도 약 430만 명의 능동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계수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의 프랑스인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벌써 혁명적 열기가 식어버린 것인가? 아니면 제헌의원들의 바램처럼 혁명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인가?

본 연구는 재산제한 선거체제 아래서 이른바 “정치적 국민”의 대열에서 배제된 “수동시민”들의 실태와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민주주의가 프랑스 혁명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립·발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혁명기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의 수립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프랑스 혁명기의 선거제도,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 규정, 선거 절차 및 관행 등을 살펴 보면서 정치적 권리를 부정당한 시민들이 누구였는지를 밝히고, 두 번째로 “수동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파악할 것이다. 제헌국민의회가 제정한 1791년의 헌법과 선거법에 따라 설정된 재산자격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설정에 대해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규정이 혁명기의 프랑스 사람들을 어떻게 “피에 의한 신분제”에서 “돈에 의한 신분제”로 재편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정치적 의사결정이 선거 절차 및 관행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선거권의 유무가 정치생활에서 실제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이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사실 구체제의 합법적인 틀 안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폭력적인 해결책을 선택했던 것인데, 이런 점에서 재산제한 선거제는 또 다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냄으로써 제2의 혁명을 불러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동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한다면, 혁명의 양상과 진로를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망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둘째, 수동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거시적·미시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가능하면 지역별·직업별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 교육수준 등 그들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가늠해볼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제시함으로써 수동시민들의 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수동시민들이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이유, 다시 말해서 재산제한 선거제를 정당화하는 혁명부르주아지들의 논변을 검토함과 동시에, 수동시민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했으며 혁명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살펴보고 혁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재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혁명적 군중의 구성과 행태를 고찰함으로써 수동시민의 정치적 참여의 한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프랑스 혁명 초기 자유와 평등의 혁명이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평등이 야기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추적해봄으로써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헌국민의회와 입법회의 의 의사록, 빈민위원회, 봉건제위원회, 조사위원회 등 의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청원서 및 관련 문서들, 그리고 당대에 발간된 정치적 팸플릿 및 정기간행물 등 문헌 사료를 조사하고 독해하여 전체적인 맥락과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최초의 러다이트운동과 기계파괴의 정치경제학  
: “기계 파괴”와 “기계 규제”의 정치적 역설(emphasis)

박찬영(명지대)

1. 최초의 러다이트운동(1811~1816)에 대한 시각과 문제 제기

- 러다이트운동의 의미와 역사적 맥락
- 러다이트운동 연구와 몇 가지 쟁점
- 연구 목표 및 주요 연구 문제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인류 사회는 18~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된 기술과 과학 발전의 관성 속에서 살아왔으며, 그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최초의 기계화와 산업화, 원자력 등 대체 에너지의 혁신 등을 넘어 컴퓨터를 매개로 한 전산화, 정보화와 함께 이제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인간과 과학기술의 공존은 발전과 성장 뿐 아니라 동시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끌고 왔다. 작금의 인공지능이라는 혁신 또한 찬란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그로 인해 사라질 일자리를 떠올리게 한다. 이는 실제로 고용 불안과 경기 침체 속에 있는 우리 사회에 미래에 대한 우려와 공포를 가중시킬 수 있다.

본 발표는 이러한 인간과 과학기술의 공존, 그리고 그 상호관계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한 기획이다. 이를 위해 최초의 러다이트운동을 촉발한 잉글랜드 중부의 상황을 중심으로 ‘기계 파괴 행위’와 ‘입헌주의적 청원운동’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과연 산업화와 기계화라는 격동 속에서, 아직 참정권이 없었던 노동자들이 ‘인간과 기계의 충돌’ 문제를 러다이트운동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투영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러다이트운동은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건인 동시에, 왜곡되고 오해받아온 개념이기도 하다.<sup>1)</sup> 역사적 사건으로서 러다이트운동은 1811~1816년 사이 잉글랜드의 중부와 북부의 직물산업지역에서 일어난 양말편물공과 수직포공들에 의한 편물기와 역직기, 전단기 등의 파괴 행위이다. 이들은 노팅엄 셔우드의 ‘네드 러드(Ned Ludd)’라는 상징적 지도자를 설정하고 그의 주도를 따르는 무리임을 자처하면서 ‘러다이트(Luddites)’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 이름이야말로 그들에게 다른 기계파괴자들과는 구별되는 정체성을 부여해주게 된다.<sup>2)</sup> 이처럼 약 200여 년 전 영국 중북부 직물산업 노동자의 기계파괴 행위를 뜻하는 러다이트운동, 혹은 러다이즘은 기계파괴자들의 전형으로서, 당대 산업화의 폐해에 대항하는 대표적인 저항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이후에는 현대의 과학기술, 컴퓨터 등 기술혁신과 현대사회의 진보에 반대하고 기술발전 전반을 두려워하는 기술포비아적 성향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아울러 현대 기술사회를 등지려는 개인적 성향까지도 포괄하는 ‘네오 러다이트운동(Neo-Luddite)’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다.<sup>3)</sup> 그러한 의미에서 “러다이트”라는 말은 역사적 사건이면서, 현재 사회에 대한 비판적 태도임과 동시에, 미래 사회에 대한 공포와 부정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말할 수 있다.<sup>4)</sup>

1) Kirkpatrick Sale. “Lessons from the Luddites.” [In English]. *The Ecologist* 29, no. 5 (1999), pp. 314-17.

2) K. Binfield, *Writings of the Luddite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4.

3) S.E. Jones, *Against Technology: From the Luddites to Neo-Luddism* (Taylor & Francis, 2006).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의 시기-대략 1780~1832년까지의 기간-는 영국 사회가 혁명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때로 간주되곤 한다.<sup>5)</sup> 이 시기 영국에서는 대내외적 경제문제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소요가 잇달았고 정치적 급진주의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810년대 초(1811-1816) 잉글랜드 중부에서 시작된 러다이트운동은 피털루 사건, 스윙폭동, 차티즘 등과 함께 이 시기를 대표하는 주요 사건이다.

특히, 양말편물산업(hosiery)과 \*편물공(frame-work knitter)의<sup>6)</sup> 문제는 톰슨(E.P. Thompson), 홉스봄(E.J. Hobsbawm) 등 유명 학자들이 러다이트운동을 본격적으로 조명하면서, 상당 정도의 학문적 관심을 받았다.<sup>7)</sup> 이들은 러다이트운동을 노동계급 형성의 주요한 단초이자, 산업화 초기 노동자들의 유의미한 경험의 사례를 제시하려 하였다. 예컨대 홉스봄은 초기 노동자들의 저항의 몸짓을 ‘단순히 실험실 동물들의 의미 없는 몸부림’ 썸으로 치부하려는 기존의 논의들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노동자들의 ‘기계파괴’ 행위와 동기에 대한 진지한 조망을 시도하였다.<sup>8)</sup> 그리고 그 전형으로 널리 알려진 중동부 러다이트운동을 평가하면서, 이들의 기계파괴 행위는 ‘기계에 대한 혐오’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타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기계파괴를 선택한 다소 특수한 사례였다고 지적했다.<sup>9)</sup>

톰슨의 저작에서도 북부 전당모공들과는 구분되는 노팅엄의 “셔우드 사내들”이 주도한 러다이트운동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그 공격 대상의 선별성, 구체적 요구의 표명 등에 주목하면서, 이들의 행위를 초기 노동자들의 노동계급의식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조명하였다.<sup>10)</sup> 특히 중부 양말 편물공들

4) 러다이트운동이라는 단어의 의미론적 변화에 대해서는, Linton, David. "The Luddites: How Did They Get That Bad Reputation?" *Labor History*, 33 Issue 4 (Fall 1992), pp. 529-37.

5) Daron Acemoglu, and James A Robinson, "Why Did the West Extend the Franchise? Democracy, Inequality, and Growth in Historical Perspectiv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15, no.4 (2000), pp. 1182-1183; J. Stevenson, *Popular Disturbances in England, 1700-1832* (Longman, 1992), pp. 94-159; R. J. White *Waterloo to peterloo*, Heinemann, 1957 (1968).

6) 편물공은 양말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이들의 작업기계의 이름을 따서 편물기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양말 편물기(stocking frame)는 편물기계, 편기(編機, frame)로 불리기도 하는데, 주로 수동식 편기를 가지고 작업하는 수동 편기 작업공(frame-work-knitter)을 편물공(knitter)으로 줄여 칭하며, 이들은 양말공(stockinger, 혹은 양말쟁이)으로 불리기도 했다. 양말 혹은 스타킹 편물기(stocking frame)는 사실 양말류 뿐 아니라 대부분의 편물제조에 사용되었으며, 양말과 장갑이 그 주력 생산물이었지만, 이외에도 스웨터, 셔츠나 목도리 등 다른 제품들도 생산되었다: D.M. Smith, "The British Hosiery at the Middle of the Nineteenth Century: An Historical Study in Economic Geography," *Transactions and Papers of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 32 (1963), p. 142.

7) 러다이트운동 관련 고전으로 평가받는 선구적 연구로는 J.L. Hammond, and B.B. Hammond, *The Skilled Labourer: 1760-1832* (London, 1919); Frank Ongley Darvall, *Popular Disturbances and Public Order in Regency England: Being an Account of the Luddite and Other Disorders in England During the Years 1811-1817 and of the Attitude and Activity of the Author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34); 러다이트운동의 성격 논쟁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진 저술로는, E.P. Thompson,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London, 1963), 특히 14장 4,5절 pp.569-627; E.J. Hobsbawm, "The Machine Breakers," *Past & Present* 1 (1952), pp.57-70; R. Church and S.D. Champman, "Gravener Henson and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E.L. Jones, J.D. Chambers, and G.E. Mingay, ed., *Land, Labour and Population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Essays Presented to J. D. Chambers* (London, 1967), pp. 131-161; M.I. Thomis, *The Luddites: Machine-Breaking in Regency England* (David & Charles, 1970); M.I. Thomis, *Luddism in Nottinghamshire* (Phillimore, 1972); 러다이트운동과 관련한 담론 연구서로는 N. Fox, *Against the Machine: The Hidden Luddite Tradition in Literature, Art, and Individual Lives* (London, 2004); K. Binfield, *Writings of the Luddites* (Baltimore, 2004).

8) E.J. Hobsbawm, "The Machine Breakers", *Past & Present* (1952), pp. 57-70.

9) *Ibid.*, pp. 58-61.

10) 톰슨은 중부의 양말편물공들을 북부도시의 전모공들과 함께 러다이트운동의 주요한 축으로 다루었으며, 주로 14장 4절("Croppers and Stockingers")과 5절("The Sherwood Lads")에 걸쳐 논의하였다: E.P. Thompson,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London, 1963), pp. 569-627.

의 기계파괴 사례가 러다이트운동의 최초의 신호였다는 점, 그리고 복부 전모공들의 기모기처럼 위협적인 새 기계가 없었다는 사실 등, 매우 ‘복잡(complex)’하며, 설명하기가 난해하다고 보았다.<sup>11)</sup> 톰슨이 이들 노팅엄 편물공들의 경험을 초기 노동계급 형성의 주요 논제로 다룬 후, 그에 대한 처치(R. Church), 토미스(M.I. Thomis) 등의 반론이 뒤따르기도 했다.<sup>12)</sup>

본 연구발표에서는 중부의 러다이트운동기(1810년대)를 넘어 19세기 중반까지 이어지는 편물산업의 내부적 문제점을 말하고, 그 속에서 심화되는 편물공의 경제적 생활고와 박탈감의 경험을 소개한다. 편물공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 상황 개선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저항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편물공의 임금저하와 그 구조적 문제점에 따른 좌절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러다이트운동의 주체였던 양말쟁이들(stockingers)로 하여금 그토록 치열한 투쟁을 촉발하도록 한 그 삶의 무게가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 또 그와 같은 경제적 박탈감의 체감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 볼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잉글랜드 중부의 러다이트운동(1811~1816)을 전후하여 ‘기계파괴 운동’과 ‘기계규제(산업규제)를 위한 청원 운동’에 참여한 편물노동자들의 투쟁의 의미와 그 표현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화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극단적으로 경험하고 있던, 소위 사양산업의 노동인구였던 편물공들이, 참정권이 없었던 상황에서, ‘러다이트운동’을 통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는가? 그것은 편물산업 내의 기존 기계파괴 행위와 어떻게 차별화 될 수 있었는가? 또, 러다이트운동 과정 중 특정 국면에서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각각 ‘즉각적이고 폭력적인 기계파괴 행위’를, 혹은 ‘보다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선택하게 되었는가? 이들 저항의 구체적인 양상과 표현 방식은 어떠한 것인지, 이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과 연대의 가능성이 있었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이어지는 “경제적 불평등과 노동자를 위한 참정권 확대”라는 맥락 속에서 러다이트운동을 통해 표현된 “기계파괴”와 “기계규제” 담론이 가지는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 2. 불평등의 구조: 편물산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양말공의 빈곤 c.1780~1850

- 중부 지역의 상황과 편물산업의 구조: 삼분제, 작업장 산재, 컷업, 실업, 기술 후진성
- 양말공의 빈곤과 “임금 분석”: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 가내수공 체제와 가정경제의 몰락: 편기 임대료, 중개제, 현물급여제(truck system)

영국의 산업혁명기, 양말편물산업은 수동편기에 기반한 가내수공업의 장기간 유지하면서 19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확연히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86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증기기관과 동력기계를 사용하는 공장제조방식으로 전환되기 이전까지는 내리막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양말 편물공들은 최악의 처우를 감내해야만 하는 사양산업의 일원으로 몰락하게 된다.

이러한 양말산업의 구조는 그 조업 공간구성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18세기 중후반부터 비용절감을 위해 런던으로부터 중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동해온 수동편기는 이곳에서도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외곽으로 분산·임대되었다. 그 결과 편기와 편물공들이 중동부 3개 주-노팅엄셔(Nottinghamshire), 레스터셔(Leicestershire), 더비셔(Derbyshire)- 내의 주도(主都) 및 촌락으로 산재하는 양상으로 조업공간이 형성되었다. 18세기 후반을 지나면서는 그 산재현상 속에서

11) *Ibid.*, pp. 579-583.

12) M.I. Thomis, *The Luddites: Machine-Breaking in Regency England* (David & Charles, 1970).

자본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며, 도시 주도의 일감 분배 구도가 발전하였다. 이와 함께 양말업자와 중개인, 그리고 편물공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삼분제가 확립되었다.<sup>13)</sup> 그리고 여타 산업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던 도시보다는 외곽의 촌락지역에서 편물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 특히 주도에서 멀리 떨어진 촌락에 거주하는 다수의 편물공들은 양말편물산업이 침체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대안 없이 그대로 생업을 이어나가곤 하였다. 결국 기존의 중개업자들과 임대 단편기에 계속 의존하면서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그 후 19세기 중반까지 대체로 이어지게 된다.<sup>14)</sup>

1811년 러다이트운동 당시, 잉글랜드 중부의 편물공 약 5만 여 가구가 임금하락으로 인해 몰락했고, 이후 약 사십 여 년 동안, 사실상 1850년대까지도 이들의 평균 주급(weekly earning)은 6실링(shilling)을 넘지 못했다.<sup>15)</sup> 19세기 중반 재앙에 가까운 편물공들의 실태는,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 부분 이외에도, 더 이상 실크 스타킹이 귀족의 바지를 대신하는 겉옷이 아니라 속옷의 기능으로 축소되는 등 패션의 변화와 관련되었다. 또 단기적으로는 나폴레옹 전쟁이 초래한 국제 시장의 변동 및 외국 상품과의 경쟁에 따른 편물산업의 침체 속에서 그 맥락을 설명할 수 있다. 또, 산업 구조상, 증기기관 같은 동력에 기반한 기계도입과 공장제 생산이 유보된 점, 장편기의 사용과 컷업 생산 증대,<sup>16)</sup> 선대제적 관례의 잔재 하에 가내수공업을 바탕으로 한 외부 공정이 건재했다는 점도 그 곤궁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러다이트운동이 끝난 1820년부터 1850년대까지는 영국 노동자 전반의 실질임금이 공통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시기지만, 편물공의 임금은 여전히 정제와 하락을 거듭하며, 1840년 중반까지 다른 부류들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숙련공, 비숙련공과의 비교에서는 물론 그 중 가장 증가세가 완만했던 농업노동자와 비교해도 그 격차는 너무나 확연하게 커져갔다. 이는 산업 혁명기, 부상하는 여타 산업들의 운명과는 달리, ‘사양화’를 경험하며 최악의 생활고를 겪고 있는 편물공들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19세기 중반까지 편물공들의 실질임금은 앵겔계수 65-70%에 육박하는 절대적 빈곤의 수준에 해당하였을 뿐 아니라, 동시대 영국의 다른 노동자들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가장 뒤쳐져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편물산업의 여러 특이점들이 포함되었다. 임대료, 중개비 등 공제비용은 정확한 기준

13) 양말 산업에는 기계소유자인 양말업자들, 작업을 하는 편물공(frame-knitter)과 하청 노동자들, 그리고 일감을 직접 나누어주고 외부 하청 공정을 마친 완성물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중개업자(middle-man) 격인 “자루 양말업자(bag-hosier)”로 이루어진 세 부류의 종사자들의 구분이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편물기계가 매우 고가였으므로, 상당 정도의 자본을 가진 부유한 사업가, 양말업자(hosier)들만이 구입할 수 있었다. 이들이 먼저 스타킹 편물기계를 사들인 후 임대형식으로 편물공에게 재료와 함께 내어준 후, 완성물을 받아 판매하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여러 작업장에서 상이한 공정을 마친 결과물들이 노팅엄 양말업자들의 도매상 창고로 전달되고 이를 양말업자가 창고에서 수거하는 방식이었다. 양말업자(hosier)는 편물기를 보통 일주일 단위의 사용료를 받으면서 장기임대료 내주었고 그 사용량과 관계없이 임대기간에 따라 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노팅엄 등지에서는 대체로 임대한 편물기계로 작업했으며, 주요 작업은 이들 가족을 동원한 가내작업을 통해 이뤄졌다. 양말제조업 공정에서는 주로 양말 편물은 남성이, 그 바느질과 마무리는 여성과 아동이 맡았다.

14) 단편기(短編機, narrow frame)는 폭이 20in(인치)이하로, 리의 발명 당시 크기와 유사하며, 장편기(長編機, wide frame)는 20-50in로 폭이 넓다. 수동편기의 경우 1840년대까지 약 2세기 동안 몇몇 편의상의 개선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인 기술발전이 거의 없었으며, 이처럼 편기의 크기 확대가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Head, “Putting out,” p. 45.

15) Felkin, *A History of the Machine-Wrought Hosiery*, p. 239.

16) 1810년 무렵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컷업은 종래의 좁은 편물기(단편기, 短編機)보다 폭이 넓은 편물기(장편기, 長編機)에서 생산되었는데, 원래 폭 넓은 편물기는 판타롱이나 고급 능직물—트윌(twills), 팬티스타킹, 타이츠—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었다가 나폴레옹 전쟁 이후 고급 스타킹과 양말 수요가 사라지자, 장편기 소유자들이 “이 기계를 쓸모없는 것으로 버리는 대신,” 넓은 천을 짜고 그 위에서 원하는 모양의 앞뒤 판을 오려내 봉제하는 방식으로 한꺼번에 여러 개의 저렴한 양말을 만드는데 사용하였으며, 이를 컷업(cut-ups)이라고 불렀다.

이 없이 임금 총액의 1/3을 차지하였으며, 편물공들은 임대업자와 고용주, 중개인들의 횡포에 언제라도 노출되어 있었다. 편물공들은 계절적 고용과 실업의 불안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불합리한 요구에 따라야 하는 구조였다. 특히, 현물급여의 관례는 고용문제가 더욱 심각한 촌락의 경우, 편물공들의 생계에 더욱 치명적이었고, 고용주의 대표적 횡포 수단으로서, 편물공들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잠먹고 삶의 질을 저하시켰음은 물론, 일상생활 전반을 엮매는 장치였다. 그러나 편물산업에서 이처럼 현물급여가 매우 만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구조상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기는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되곤 했다. 편물공 임금의 내부적 문제들은, 그간 생활수준 논쟁에서 낙관론의 주요 근거가 되어온 ‘실질임금’ 논의의 문제점들, 즉 임금의 ‘비공식적 측면,’ 완전고용의 허상과 임금 지급방식 등의 문제를, 말 그대로 직접 ‘체현’해 보여주는 사례였다.

### 3. 편물공의 저항: 기계파괴와 입헌운동의 전개

-1780~1810년: 결사금지법, 편물공의 청원, 기계파괴와 임금협상(1777~79)

-1811~1816년\*: 러다이트운동(1811-16)의 전개와 성격, 그리고

편물공조합(Framework knitters' Union)과

의회구제 추진회(Society for Obtaining Parliamentary Relief)의 청원운동

-1817~1845년: 청원운동(편물공 임금문제, 실태조사 요구 청원), 차티즘과의 연계, 편물공 실태 조사위원회(머게리지 위원회의 보고, 1844), 현물급여(규제)법(1831, 1874)

수동편기를 사용하는 양말 편물산업에서는 18세기 중엽 이래 나폴레옹 전쟁까지 국내외 소비재 시장의 변동에 맞추어 비용 절감의 경향이 지속되었으며, 그 산업의 중심 또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중동부로 옮겨 왔다.<sup>17)</sup> 직인의 도제고용을 3인 이하로 제한하려는 런던 편물공 회사의 규제에 맞서 소송에서 승리한 후, 중부 지역에서는 1740년대부터 도제공의 수를 자유롭게 거느리기 시작했다. 이에, 1740-1750년 사이 교구 도제공을 포함, 편물공들의 임금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특히 의복과 주거 수준이 매우 악화되어, 한 작업장의 도제공들이 단 한 벌 뿐인 코트를 돌려 입는 정도였다.<sup>18)</sup>

이후 30여 년간 도제공 수는 계속 늘어났으며, 임금 상승은 매우 더뎠다. 1776년에는 양말공 상호 보호회(Stockingmakers' Association for Mutual Protection)가 생겨나 의회에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1777~1778년에는 런던과 서리 지역의 편물공들과 함께 중부 세 개 주의 편물공의 이름으로 “임금저하와 편기 임대료 및 유지와 수리 등 다른 부대비용 때문에 아무리 성실히 일해도 기본적인 생필품 구입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임금 안정을 규정하는 법안’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였다.<sup>19)</sup>

또 1779년에는 노팅엄 편물공들의 이름으로, ‘짜구려 노동 등에 대한 규제 법안’을 요청하는 대규모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sup>20)</sup>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의 통과는 재차 저지되었고, 곧바로 실크 양말공들의 임금이 삭감되면서 1779년 6월에는 노팅엄 등지에서 수일 동안 소요가 지속되고 고용주 가호와 수백 대의 편물기가 파괴되었다.<sup>21)</sup> 그 결과 주요 고용주들은 기존 수준의 임금

17) 양말 편물산업의 기원과 중부로의 집중 문제는 박찬영, 「사양 산업의 공간」, pp. 92-120 참조.

18) Felkin, *A History of the Machine-Wrought Hosiery*, p. 82.

19) *Ibid.*, pp. 115-116.

20) “Frame-work knitters' wages, 31 March 1779,” *Journals of the House of Commons*, volume no. 37. p. 301. (Fourteenth Parliament of Great Britain; 5th session, 1779).

21) 1779년 7월 10-19일 사이에 니드(Need)라는 편물업자의 편기 300대가 파괴되고, 그의 가옥 역시 공격당했

지불을 약속하며 사태를 진정시켜야 했다.<sup>22)</sup>

편물산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시기는 미국의 독립전쟁 종전(1783년)을 전후해서였는데, 이때에 임금이 약간 개선되었으나 1790년대부터는 어려움이 다시 감지되기 시작했다. 대체로 프랑스와의 개전(1793)을 기점으로 그 이전까지는 편물공의 가족 부양이 가까스로 가능했지만, 그 이후 특히 1810년을 전후해서는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10~1812년 대륙봉쇄로 인해 대외무역, 특히 북유럽과의 교역이 타격을 받고, 미국에 있는 영국 시장도 1812년 프랑스와의 대결 상황에서 악영향을 받았던 것이다.<sup>23)</sup>

결과적으로 1790년대 말부터 1810년 중반까지 편물공의 임금에는 이렇다 할 개선이 없었으며,<sup>24)</sup> 1811-1812년 무렵이 되자 편물산업 기반의 중부 3개 주의 곤궁은 가히 위험 수위에 달할 지경이 되었다. 고용상향도 악화되어 1811년 러다이트운동 발생 직전, 편물공 임금은 상당부분 삭감되었으며, 그마저 받을 수 있는 일거리 자체가 별로 없었다. 1810년 말부터 노팅엄에서는 빈곤이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었으며, 1812년 1월 말이 되자, 실업으로 인해 빈민구호를 수령하게 된 가족이 3개 교구 안에서만 4,248가구에 달했다. 이는 15,350명 정도의 규모로 거의 해당 지역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것이었다.<sup>25)</sup> 이처럼 극단적인 빈곤이 확산되면서 임금삭감을 주도한 노팅엄 지역 양말업자들에 대한 원성 및 위협이 거세졌으며, 1811년 3월 11일 편물공들의 대규모 집회와 기계파괴 행위가 일어났다. 바로 이것이 러다이트운동의 최초의 신호로 손꼽히는 ‘셔우드 사내들(the Sherwood lads)’의 기계파괴운동의 시작이었다.<sup>26)</sup>

앞서 1779년의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편물산업에서의 기계파괴 전략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노팅엄에서 최초의 ‘러다이트’라는 명칭을 얻게 되는 1811년 기계파괴운동은 이전에 비해 더욱 조직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러드’라는 이름을 통해 그 기계파괴 행위 내부에 지도력, 조직력, 정통성을 부여받으려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었다.

편물산업에서는 고용주와 편물공 사이에 임금협상을 벌이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으며, 1799년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편물공들의 기계파괴 행위는 임금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편물산업과 관련한 청원이나 법안의 상정, 혹은 통과 여부와 관련해서도 종종 기계파괴 소요가 촉발되곤 하였으며, 편물공들의 분노와 좌절, 혹은 요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이미 일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사실상 1811년 3월 11일 러다이트운동을 촉발한 최초의 사건이 벌어진 날의 상황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었다. 편물공들은 이날 노팅엄 시내 시장광장에서 회합한 후 외곽 농촌 마을인 아놀드에서 60여 대의 편기를 파괴하는 것으로 러다이트운동을 시작하였는데, 이 첫 공격행위는 당시 임금협상을 위해 편물공과 마스터 및 편물업자들의 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타협안이 체결되는 와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시에 발생한 일이었다.<sup>27)</sup>

이 기계파괴 행위는 당시 임금협상 중 노동자의 세를 과시하며 보다 유리한 입장을 강화하려는 의도의 표현이었다. 애초부터 러다이트의 기계파괴는 편물공들 사이에서 ‘협상을 통한 타협’과 ‘기계파괴라는 행동’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갈림길에서 발생하였을 뿐, 궁극적으로는 임금협상을 유

다: Felkin, *A History of the Machine-Wrought Hosiery*, pp. 116-117, 228-229.

22) *Report on the condition of the frame-work knitters*. BPP 1845 [609] XV.1, p. 12(24).

23) R.A. Church, *Economic and social change in a Midland town: Victorian Nottingham, 1815-1900* (London, 1966), p. 48.

24) *First Report on Employment of Children*, BPP 1833 [450] XX.1, Appendix, p.183(519).

25) Felkin, *A History of the Machine-Wrought Hosier*, p. 231.

26) 셔우드는 노팅엄의 숲으로, 로빈훗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노팅엄의 러다이트 지도자로 알려진 네드 러드(Ned Ludd)의 본거지이자 사무실 주소로 기재되곤 했다: Thompson, *The Making*, pp. 126-127.

27) J.L. Hammond, and B.B. Hammond, *The Skilled Labourer*, pp. 258-259.

리하게 이끌려는 목표를 향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어느 쪽을 선택했든 다분히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sup>28)</sup>

이처럼 1811년 러다이트라는 이름하에 단행된 기계 파괴는 애초에 편물공들에게 전혀 새로운 전략도, 혹은 고립되고 분리된 단독 전략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1811년 러다이트운동의 차별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차별성은 역설적으로 이들에게 붙여진 러다이트라는 이름에서 출발하는 것이었다. 1811년 러다이트운동에서, 처음으로 “네드 러드”라는 상징적 지도자를 상징하고, 그의 이름을 통하여 기계파괴 전략을 이전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정당성 있는 지도력에 입각한 행위, 따라서 “정당한 이유와 절차에 따른 행동”으로 선전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러다이트운동의 촉발은 기계파괴 행위 자체를 새롭게 발명해낸 것이 아니라, 기계파괴 행위에 대해 스스로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일종의 새로운 선전전을 결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기존에 이미 알고 있었던 기계파괴 행위의 유용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임과 동시에 그것이 가지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러다이트의 공격대상이 무작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만한 자들과 그들의 부정한 기계들에만 국한된다는 점이었으며, 이야말로 “러다이트”라는 새로운 이름, 즉 “러드 장군의 사람들”을 널리 알리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건이었다. 중부 러다이트운동에서 나타나는 공격대상의 선별성은 이처럼 러다이트운동을 이전의 기계파괴와 차별화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811년 러다이트운동 원년, 이들의 기계파괴 행위는 거의 철저히 ‘저가의 컷업을 생산하는 장편기와 이미 협상한대로 임금을 주지 않는 고용주’들에 제한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소위 ‘러드의 약속’으로도 불렸는데, “러드 장군의 승리”라는 노래구절에도 잘 표현되어 있었다.<sup>29)</sup> 이 같은 원칙은 러다이트운동의 절정기인 첫해와 이듬해 봄까지 매우 철저히 지켜졌으며, 1812년 1월 딱 한 번 노팅엄의 랜턴 지역에서 기존의 임금을 지켜 잘 지불해온 작업장을 공격하게 된 실수에 대해 해당 고용주가 직접 항의했던 일이 회자될 정도였다.<sup>30)</sup> 노팅엄 러다이트운동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공격대상의 선별성은 그 이름과 함께 이들의 기계파괴 행위가 ‘산업적 목표’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특징으로, 북부의 러다이트운동과 구분되는 중요한 차이점으로 언급되곤 한다. 애초에 노팅엄의 편물공들이 발명한 것은 새로운 기계파괴가 아니라 새 이름이었고, 그들 스스로 러다이트라는 기계파괴의 새 이름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을 우선적으로 실천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공식적 입장은 러다이트운동이 발발한 그 이듬해인 1812년 새해 첫날에 ‘편물공들의 선언문’ 형식을 빌려 포고되었다. 여기에서 편물공들은 찰스 2세 시기 편물업이 인허장을 받은 이래, 이들에게는 편물산업을 정직하게 수행하고 지켜가야 할 의무와 권리가 합법적으로 부여되었다고 주

28) 해먼드는 이 러다이트의 첫 공격 행위에 대해, 당시 ‘협상을 통해서 임금문제를 해결하려는 친구들보다 조금 더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했던 편물공 동료’들이 촉발한 행위로, 임금협상 일정과 겹치며 그와 연이어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Ibid.*

29) Hammond, and Hammond, *The Skilled Labourer*, pp. 259-260.

죄지은 자들만 두려워할지니,  
정직한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에 대해 응징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의 분노가 향한 곳은 순전히 장편기,  
그리고 예전 임금을 지키지 않고 삭감하려는 자들에게 한하노라.

해약을 미치는 저 기계들에 대하여  
편물공들은 만장일치로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러드는 모든 방해를 무릅쓰고  
결국은 그 사형집행을 하고야 말지니.

30) *Ibid.*

장하였다. 따라서 “속임수로 제품을 만드는 모든 편기들과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엉터리 제품들 또한 폐기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 선언문에서는 또 1788년(조지 3세, 재위 28년) ‘편기파괴를 중죄로 다스리는 법’이 통과된 것은 그 법안의 의도나 동기에 대해 영국 의회가 기만당한 결과로, 명백한 잘못임을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편물공들은, 편물업이 부여받은 인허장의 법적 권위에 기반하여, ‘편기파괴를 중죄로 처벌’하는 1788년의 법을 ‘무효이자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선언하며, 그 의도와 동기를 모두 거부하기로 공표하였다.

편물공들은 구체적으로 첫째, 1810년과 1809년 협상에 따른 노동 방식과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고용주의 기계들, 둘째, 일부 실크편물처럼 게이지에 따라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 셋째, 영국의 온전한 화폐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현물급여), 그들을 응징하고 그 기계들을 파괴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sup>31)</sup>

아울러 선언문 말미에는 소위 러드의 이름을 팔아 이웃과 동료에 강도질을 하는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해 러다이트운동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리고 ‘러드의 이름으로’ 이들 가짜 러다이트 행위자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약속하며, 이 도적들은 물론이고, 러다이트에 대해 잘못된 정보나 비방을 퍼뜨리는 자들에게도 공히 1,000파운드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이 선언문은 “이 산업(편물업)에 신의 가호를” 이라는 문구와 함께, 네드 러드의 사무국(Ned Ludd' Office)이라는 발급처와 셔우드숲(Sherwood Forrest)이라는 주소를 명시하는 것으로 끝맺음되어 있었다.<sup>32)</sup>

러다이트들의 기록과 메모 등 그 담론을 연구한 빈필드는 바로 이 1812년 편물공 선언문이야말로 이들의 기록들 중 가장 정치적 의도가 돋보이는 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들이 기계파괴의 정당성을 편물산업 인허장에서 찾는 부분, 또 1788년의 법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공격 목적과 그 정당성을 공식 문서의 형식을 빌려 역설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하였다.

보통 러다이트 기계파괴자들이 공격행동을 개시하게 될 경우에는 얼굴에 검은 칠로 변장하는 방법을 통해 행동대원들 개인의 신원을 철저히 감추려 했는데,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행위가 러드의 지휘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당한 징벌”임을 알리기 위해 반드시 증표를 남기려 하였다. 이들은 기계를 파괴한 후 현장에 러드가 남긴 서명이 있는 서한 형식의 메모를 남기거나, 혹은 홀링워즈 가택 침입의 경우처럼 미리 경고 편지를 보내어 임금삭감 등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다.

1811년 12월에는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팅엄 시당국이 비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요 진압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군대 파견을 미리 요청한 것이 알려졌다. 러다이트들은 12월 16일 즉각 러드의 이름으로 대담하게 경찰서로 직접 경고서한을 보내, “시당국이 임금협상을 위해 당장 편물업자들을 모아 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수일 안에 우리는 20,000명을 소집하여 도시를 파괴할 것이며, 군대도 왕도 두렵지 않다”고 위협하였다. 결국 시당국은 열흘 만에 지역 신문에 협박편지 관련자에게 500파운드의 현상금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그러한 공개적 모욕에 대응해야만 했다.<sup>33)</sup> 러다이트들은 이러한 형태로 시정 당국의 내부 정보를 통해 사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 위협하는 등 시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를 시도하려는 흔적을 공공연히 보이기도 했다.

노팅엄을 위시한 중부의 러다이트운동의 담론은 정치적이면서도 법적인 권위를 표현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실제로 이들 러다이트운동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메모와 서한 등 문서를 보면

31) Home Office(H.O.) 42/119: Binfield, *Writings of the Luddites*, pp. 87-91 reproduced.

32) 1811 연말이 되면서 더비셔 등지에서는 기계파괴의 혼란을 틈타 러드의 동료라는 명목 하에 강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Thomis, *The Luddites: Machine-Breaking in Regency*, p. 179.

33) "Resolved anonymously," *Nottingham Review*, 27 Dec. 1811.

대체로 영장(writ)같은 법정 문서나 일반 공공 문서의 형식을 모방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어휘나 문장 구성 뿐 아니라 글자 모양과 배열 형태까지 차용하기도 했다. 또 북부 산업도시에서의 러다이트 운동의 문서들은 보통 무기명이었던 것에 반해, 중부의 경우에는 대부분 서명이 있고 발신 지역이 명시되곤 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는 러드의 이름과 서명, 본부 주소까지 표기하면서 그 정통성과 조직력, 권위를 강조하려는 중부의 러다이트운동의 목적에 부합하며, 그전의 기계파괴 행위들과의 명백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서신이나 메모는 대체로 노팅엄 시에서 쓰여져 주변 농촌지역으로 송달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특히 러다이트운동의 절정기이자 사실상 대부분의 기계 파괴 공격이 집중된 1811년 가을에서 1812년 봄까지의 기간, 또 러다이트운동이 재개되기 시작하던 1814년 가을과 이후 기계파괴가 본격화되는 것처럼 보였던 1816년 봄에 걸쳐 만들어진 대부분의 러다이트 서술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러다이트의 기계파괴 전략과 입헌적 전략이 명백하게 분리되었다고 보는 견해, 즉 ‘폭력적 기계파괴는 변두리와 농촌 지역의 보다 빈곤한 편물공들에 한해서 주로 수행’되었으며, ‘입헌주의적 전략은 상황이 다소 나았던 도시의 편물공들의 저항 방식’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경향이 있었고, 심지어 양자는 거의 연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처치 등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적어도 프로파간다의 경우, 기계파괴자들이 남긴 경고장과 선언 및 서한 등은 대부분 노팅엄 시를 중심으로 생산되고 주도되었다는 점이 명백하였으니 말이다.

이는 러다이트운동의 절정기로, 대부분의 공격이 집중되었던 1811년 가을에서 1812년 봄까지의 기계파괴 빈도와 양상을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1811년 3월 첫 공격사건 이후, 뒤이어 같은 달 말까지 노팅엄셔 북서부 외곽의 불월, 우드버러우, 램블리, 커비, 칼베르톤, 울버로우, 더비셔의 일크스틴 등지에서 약 100여 대의 편기가 더 파괴되었다. 4월 중순이 되자 기계파괴자들에 100기니의 현상금이 붙었으며, 이에 아랑곳 않고 가을에 들어서면서 기계파괴는 점점 더 과감해졌다. 급기야 11월 10일 불월의 홀링워즈라는 고용주의 가택침입 과정에서는 러다이트였던 존 웨슬리가 총상으로 사망하였으며, 같은 날 싸구려 노동자 고용주로 알려진 킴벌리의 작업장에서는 20대의 편기가 파괴되는 등 11월 한 달 동안 기록된 것만 약 25여 회의 기계파괴사건이 보고되었으며, 최소 편기 160여 대 이상이 파괴되었다. 기계파괴를 위한 공격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으며, 특히 11월 동안 하루에도 수차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순차적으로 기계가 파괴되었다. 이러한 격렬한 파괴행위는 12월에도 이어져 최소 37회의 기계파괴 행위 동안 최소 120대가 넘는 편기가 파괴되었다.

이 같은 러다이트운동 원년의 후반기 기계파괴의 특징은 공격 지역이 주로 노팅엄셔 지역으로 집중되었고, 특히 11~12월 동안 기계파괴 공격은 변두리의 농촌 지역에서 더 많이 행해졌으며, 같은 빈도는 아니지만 노팅엄 시내에서도 수차례 행해졌다는 점이었다.<sup>34)</sup> 따라서 기계파괴 행위가 성난 농촌 편물공들이 일으킨 노팅엄 시내의 편물업자 혹은 장편기 편물공에 대한 일방적 공격이라는 도식은 정확하게는 들어맞지 않는다.

중부의 러다이트 공격행위는 이처럼 원년 가을에서 연말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1812년 1월말까지 격렬하게 집중되었다. 1812년 1월에는 그 추세가 가장 강해졌는데, 1일부터 말일까지 거의 빠짐없이 기계파괴 행위가 일어났다. 한 달간 35여 회의 공격으로 인해 최소 210여 대의 편기가 파괴되었으며, 그 중 4~5회 정도의 공격이 노팅엄 시내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1811년 11월에서 1812년 1월까지 절정을 이루던 기계파괴 공격이 1812년 2월에 들어서는 갑자기 눈에 띄게 잠잠해졌다는 점이다. 노팅엄 지역사가인 토미스(M. Thomis)는 2월 첫 주의 상황을 설명하며 서너 지역에서 편기 몇 개가 파괴되었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지만 그 수가 정확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그 전주인 1월 마지막 주에 비해 확연히 조용한 주였다고 서술하였다.<sup>35)</sup>

34) Thomis, *The Luddites: Machine-Breaking*, pp. 177-178.

이처럼 1812년 1월 말까지 절정에 다다랐던 기계파괴 행위가 2월 첫 주에 갑자기 일거에 사그라진 것은 곧이어(2월 11일) 헨슨이 공표하게 될 새로운 의회 캠페인의 시작과 맞물리는 현상이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마치 그에 상응하는 조치처럼 보였는데, 순전히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러다이트운동의 기계파괴 전략과 입헌운동 전략 사이의 일종의 상호 소통, 혹은 상호 조율의 결과로 보이는 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러다이트의 최초 기계파괴 사건이 일어난 3월 11일, 임금 협상을 진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순차적으로 러드의 기계파괴 공격을 감행한 상황과도 유사한데, 다만 이번에는 집중적인 기계 파괴 공격을 먼저 휘몰아친 후, 이어서 새로운 의회 캠페인을 공표하는 식으로 그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다!

전술했듯이 1811년 봄에 시작된 러다이트의 기계파괴는 11월을 지나면서 절정에 다다랐으며, 이후 같은 해 연말과 1812년 1월까지 대부분의 기계파괴 사건이 집중되었다. 1811년 한 해 동안의 최소 약 450여대의 편기 파괴 중 11~12월 사이에 파괴된 편기가 280대가 넘었고, 1812년에는 1월 달에만 210대가 넘는 편기가 파괴되었다. 1812년의 경우, 1월 한 달 동안 파괴된 편기가 사실상 그해에 파괴된 편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약 85% 이상). 그리고 1812년 1월이 지난 후에는 러다이트의 편기파괴 행위 자체가 매우 산발적이며 드물게 일어났다.<sup>35)</sup> 따라서, 1811년 11월부터 1812년 1월 사이에 러다이트의 추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던 상황에서, 1812년 2월이 되자 갑자기 편기파괴가 모두 소강되어 버린 것 같은 현상은, 헨슨의 의회 캠페인의 시작을 준비하는 일종의 전조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1812년 2월이 되자, 편물공들에게 주요한 소식들이 의회를 통해 들려왔다. 2월 11일에는 편물공 청원운동의 지도자인 그레브너 헨슨에 의해 ‘양말과 레이스 편물산업 규제를 위한 의회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불과 사흘 후 2월 14일, 정부는 편기 파괴에 대해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음을 발표하였다.<sup>37)</sup>

1785년생인 그레브너 헨슨(Gravener Henson)은 노팅엄에서 양말편물공 도제를 거쳐 20대 중반에 직인이 되면서 편물공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되었으며,<sup>38)</sup> 1810년 파업과 협상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었다. 그는 특히 이 과정에서 결사금지법으로 기소되는 등 법률의 부당함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 이듬해 1811년 편물공 조합회(the Union society of Framework Knitter)를 결성하고, ‘편물제조업의 엉터리제품과 (기계)오용 방지 법안’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본다. 헨슨은 본격적인 입헌운동을 개창하면서 결사금지법과 같은 부당한 법의 수호를 강요당하고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대응해야 하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불법적 분노의 표현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법 자체를 바꿈으로써(혹은 개선함으로써)’ 정당한 법적 테두리를 확보하자는 의도를 표방하였다.

헨슨이 직접 초안을 작성한 ‘편물 제조업의 엉터리 제품과 기계 오용을 방지하고 편물고용인들에게 적정 임금을 지불하는 법안’에서는 첫째, 저가품 편물 생산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둘째, 다양한 편물 제품에 대하여 고정된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며, 셋째, 현물급여를 불법으로 다스려 임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주장하였다. 이 같은 세 가지 요구는 이보다 약 한 달 앞서 러다이트의 이름으로 공표한 편물공 선언에서 밝힌 3부류의 공격대상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었다.

35) Thomis, *The Luddites: Machine-Breaking* p. 180.

36) 일부 학자들은 중부의 러다이트운동 기간을 1811~ 1816년이 아니라 1811~1812년 초까지만 지속된 현상이며, 이후 1814년에 부분적으로 다시 재개되어 1816년에 일시적으로 강해지다가 소멸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D. Hey, "Luddites," *The Oxford Dictionary of Local and Family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37) 이 법안에 대한 의회의 논의는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바이런은 편물공들의 처지에 대한 동정심을 표현하는 연설을 통해 이 법의 부당함을 역설한 바 있다: Lords Sitting of Thursday, February 27, (1812).

38) 독학과 감리교의 교회 학교 등을 통한 학습 과정을 통해 다양한 기록의 기술을 물론 당대 주요 정치 경제 학자들의 책을 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Champman and Church, "Gravener Henson", p. 133.

그가 구성한 이 법안은 1812년 7월 24일 현물지급 금지 부분을 제외한 형태로 수정되어, 일차적으로는 하원을 통과했으나, 이내 상원에서 기각되었다. 특히, 상원에서 이 법안은 찬성 의견이 전혀 없이 기각되었으며, 심지어 ‘우리는 신을 믿건대’, 하원은 이런 식의 주장을 담은 법안을 다시는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연설까지 들어야 했다.<sup>39)</sup>

1812년 헨슨 법안의 기각은 그 전에 확정된 ‘기계 파괴범에게 사형 구형을 가능하게 하는 법’과 함께 상당한 반향을 가져왔다. 런던에 대표단까지 파견하며 헨슨 법안에 희망을 걸었던 편물공 입헌운동권에서의 좌절은 상당하였으며, 당장 지역의 소요를 염려하게 되었다.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해왔던 지역의 의회의원들도 법안 기각이 가져올 분노를 위로하기 위하여 헨슨의 중재 역할을 각별히 당부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새로 설립된 것이 바로 ‘기계공 장려와 기계발전을 위해 의회법에 의거한 구제를 얻기 위한 추진회(a Society for Obtaining Parliamentary Relief and the Encouragement of Mechanics in the Improvement of Mechanism, 이하 의회구제 추진회)’였다. 이는 노팅엄에 중앙 사무위원회 본부를 두고,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포함하는 식의 전국적 규모의 연합체로 구성되었다. ‘의회구제 추진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되고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813년 1월로 알려져 있지만, 그 결성을 적극적으로 제안 받게 된 것은 그 이전인 1812년 7월 헨슨의 편물제조 관리 법안의 기각 직후였으며, 사실상 본격적인 입헌적 운동 전개를 위해 이처럼 새 편물공조합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보다도 훨씬 앞선 1812년 2월 11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의회구제 추진회’의 설립을 결정한 시기가 언제였는가의 문제는 러다이트운동과 입헌주의적 운동의 연계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한편에서는, 헨슨의 주요 입헌주의적 전략이 좌절된 1812년, 마침 ‘기계 파괴범에게 사형구형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러다이트운동의 입지도 크게 손상되었고, 따라서 러다이트와 입헌주의 진영 모두 정치적인 조직 및 전략의 재구상이 필요해짐에 따라, 함께 새로운 전국 규모의 ‘의회구제 추진회’ 설립을 결정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같은 기반확대 시도를 통해 러다이트 전략과 입헌주의적 전략의 연계가 모색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의회구제 추진회’ 설립 문제는 사실 1812년 7월이 아니라 헨슨의 법안 기각과 사형처벌법이 통과되기 훨씬 전인 1812년 2월 11일에 전적으로 입헌주의자들만의 의견에 기반하여 이미 결정됐었고, 따라서 여기에는 러다이트와의 연계 가능성은 전혀 없었고 주장하였다.<sup>40)</sup> 특히, 톰슨은 전자의 견해를 견지하면서, 헨슨의 법안이 최종 기각된 건 7월이지만 통과 여부에 대한 정보는 이미 훨씬 이전부터 러다이트운동과 입헌주의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으며, ‘의회구제 추진회’ 설립이 결정된 시기에 러다이트 주동자들도 그 결과에 대해 미리 알고 함께 대비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하였다.<sup>41)</sup>

또, 7월 헨슨의 법안이 기각된 직후에 지역 유력자들이 ‘의회구제 추진회’ 결성을 후원하며, 헨슨으로 하여금 노팅엄의 성난 편물공들을 위로하고 만약의 폭력사태를 잠재우기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특별히 부탁한 점을 보더라도, 헨슨과 러다이트운동 참여자들과의 관계가 공공연히 인정되고 있었던 정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입헌운동의 주도자로서 헨슨이 기계파괴자들과 일부 소통하고 있었으며, 최소한 어느 정도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진회의 결성 과정만을 놓고 러다이트들과 입헌주의자들 간의 상호 연계 관계를 논의하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보다는 추진회 결성 이후의 상황을 좀 더 논의하고, 과연 기계파괴 운동이 의회구제 추진회 활동의 주요 국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는가를 알아볼

39) J.L. Hammond, and B.B. Hammond, *The Skilled Labourer*, p. 229.

40) Church and Champman, “Gravener Henson and the Making,” pp. 135-136.

41) Thompson, *The Making*, pp. 916-940.

필요가 있다.

의회구제 추진회는 결성과 함께 중부 3개 주의 대표위원회의 매년 회의, 또 3년마다 개최되는 전국회의를 표방하며, 상당한 기금을 모았다. 또 1812년 이후부터 급격히 약화되어 산발적으로만 발생하던 기계파괴 행위에 대해 반대 원칙을 정하고, 사건 발생시 자체 조사를 벌이는 등 합법적 투쟁 노선을 분명히 했다. 1813년 11월에는 조합회원들에 한해서 실업자들에게 일감을 제공한다거나, 일부 저임금 고용의 경우 일정 보조금 수당을 지급하는 등 입헌운동과 함께 편물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실크편물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편물제조에서 약 18개월 동안 기준 임금 수준을 대략 수호할 수 있었다.

추진회의 위기는 1814년 4월 실크편물공의 임금 개선을 위해 파업을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는데, 결정적으로 그 파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추진회 기금은 점차 고갈되었다. 한편으로 이 위기는 추진회 결성 불과 5개월 뒤부터 비밀협회를 만들어 이들을 분쇄하려고 노력해왔던 편물업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 편물업자들의 비밀협회는 1814년 7월경 의회구제 추진회의 자금 유용 등 부정을 빌미로 내부 사찰을 단행하고 밀고자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결사범 위반으로 추진회의 주요 인물들을 기소하였다. 그리고 결국 같은 해 8월 14일 ‘의회구제 추진회’는 해산되었다.

러다이트와 입헌주의자들과의 연관은 추진회의 결성과 활약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와 붕괴 및 그 이후의 상황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먼저, 러다이트의 기계파괴는 1812년 2월 이후 급속히 약화되어 사실상 소강상태에 가까웠었다. 실지로 일부 학자들은 중부의 러다이트운동은 1811~1816년이 아니라 1811~1812년 초까지만 지속된 현상이며, 그러다가 1814년에 부분적으로 다시 재개되어 1816년에 일시적으로 강해지다가 소멸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처럼 소멸된 것처럼 보였던 기계파괴 공격이 다시 재개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추진회의 위기가 시작된 1814년 4월부터였다. 그리고 의회구제 추진회가 최종적으로 붕괴된 8월을 지나 1814년 가을까지 이처럼 기계파괴가 재개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최소 50여대의 편기가 파괴되었으며, 1816년에는 일시적으로나마 조직적인 기계파괴 사건이 줄을 잇기도 했다.<sup>42)</sup> 이러한 현상은 추진회의 위기와 붕괴에 따른 편물공들의 좌절과 분노의 즉각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입헌주의적 전략이 흔들림에 따른 기계파괴 전략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동안 소강되었던 러다이트운동이 재개될 기미를 보이자, 당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전에 없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1816년을 기해 러다이트운동 주동자들을 대상으로 정보전을 방불케 하는 취조를 계속하면서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배후 조사와 단호한 처벌이 잇달았다. 일례로 블랙번 사건 같은 경우, 20대 중반의 한 러다이트 청년의 밀고로 13명이 기소되고 이 중 6명이 처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핸슨도 이 시기에 주요 관련자로 지목되어 1816년 4월에서 1817년 11월까지 투옥 당하였으며, 1816년 6월 28일 중부 러다이트운동 중 최대의 사건으로 기록된 레스터셔의 러프버러(Loughborough)지역의 히스코트(Heathcoat)공격 사건 이후 사실상 중부에서 러다이트운동은 소멸되었다.

이처럼 엄중한 처벌과 지역 치안감 및 군대가 동원되면서, 러다이트운동은 종말을 고했으며, 이제 편물공들은 그 이전의 전략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회합과 청원운동이었다. 그러나 러다이트운동의 종결과 함께 핸슨의 입헌운동도 1817년을 기점으로 점차 약화되고 있었다. 그는 1823년에 ‘양말과 레이스 편물산업 구제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 재차 의회를 설득하려고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채 노팅엄의 한 빈민원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된다. 그의 죽음은 이 지역 편물산업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당대의 저술가 펠킨의 다음과 같은 평가를 떠올리게 한다.

42) 1814-1816년에 걸친 러다이트운동 후반기에는 주로 레이스 편기가 공격대상이 되었는데, 1816년 유명한 히스코트사건으로 러다이트운동이 대체로 종식될 때까지 이러한 경향이 보다 분명해 졌다.

중부의 러다이트운동은 50,000여 편물공과 가족의 굶주림과 비참함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었으며, 그 같은 빈곤은 이후 40여 년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았으며, 편물공들은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중부 지역의 상당수 편물공들은 이후 1830~40년대에는 차티스트 집회에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 러다이트운동(1811~12년)에서 그랬듯이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투옥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이 시기 오히려 편물업의 상황은 예전보다도 훨씬 더 악화되었으며, 1844년에는 2만 5천 여 명의 편물공들이 ‘편물산업 실태 조사를 위한 청원’ 운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 1844~5년 머게리지를 중심으로 편물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근거들이 수집되었으나 그에 따른 개선은 거의 없었다. 머게리지 조사위원장은 편물산업의 내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충분히 주장하였지만, 개선을 위한 그의 제안(조치)은 정부에 의해 대부분 채택되지 않았으며, 법령으로 귀결되지도 못했다.<sup>43)</sup>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편물공들의 입헌 운동은 사실상 1840년대 ‘편물공 실태 조사 청원’과 그 결과인 이 머게리지 보고서(1845년)로 마무리되었다고 보기도 한다.<sup>44)</sup>

결과적으로 1811~1816년에 걸친 중부지역 편물공들의 러다이트운동(기계파괴)과 청원 운동은 모두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장편기 사용과 컷업은 여전히 계속 증가하였으며, 기존의 수동 단편기에 기반한 양말편물업은 19세기 중반까지 사양산업의 길을 걷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양말 편물공들은 주기적인 침체와, 임금하락, 그리고 고질적인 저고용과 실업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 산업의 구조상 침체의 문제를 편물공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편물산업의 침체는 곧잘 지역의 빈곤 문제로 직결되곤 하였다.<sup>45)</sup> 결국 빈민원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헨슨의 삶의 궤적은 이 같은 편물공의 투쟁과 편물산업의 운명을 닮은 쓸쓸한 단상이었다.

중부 러다이트운동의 시기, 편물공들에게 있어 기계파괴와 기계규제의 전략은 결국 어느 쪽에서 보다 높은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어떤 방식을 보다 강조하는가의 문제였다. 그리고 이처럼 극단적인 빈곤과 혼란 속에서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찾고, 더 좋은 선택을 고민하는 중부 편물노동자들의 저항 방식은 1830~40년대에는 차티스트 운동으로, 또 이후에는 편물산업 실태 조사를 위한 청원운동으로, 호기가 생길 때마다 다시 반복될 양상이었다.

이들은 19세기 후반 드디어 노동자 참정권이라는 그 정치적 표현방식을 찾을 때까지 그러한 모색과 좌절을 계속하게 될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험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그에 대한 명백한 문제인식은, 노동자들이 이처럼 오랜 시간 끊임없이 새로운 저항 방식을 모색하게 만든 진정한 의미의 증기기관, 즉 그 동력이 된 셈이다.

43) 머게리지 보고서(Muggeridge report)로 불리는 1845년의 ‘편물공 실태 조사 위원회’의 결과는 보고서와 그 부속자료를 포함하여 총 1,000페이지에 달하는 규모로 정리되었다. 특히, 보고서와 따로 출간된 2권의 부속 자료는 당시 의회 주도의 사회조사 전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자료이며, 특히 사례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한 심층 조사를 망라하는 13,000여 호의 증언 목록으로 구성된 방대한 규모로, 조사책임자였던 머게리지(Richard Michaux Muggeridge) 보고서로 불림: *Report of the commissioner appointed to inquire into the condition of the frame-work knitters. With appendices, BPP 1845 [609] XV.1; Appendix to Report of the commissioner appointed to inquire into the condition of the frame-work knitters. Part I. Leicestershire, BPP 1845 [618] XV.151; Appendix to Report of the commissioner appointed to inquire into the condition of the frame-work knitter. Part II. Nottinghamshire and Derbyshire, BPP 1845 [641] XV.665.*

44) M. Palmer, *Framework Knitting* (Princes Risborough, 1984), p. 18.

45) F.A. Wells, *The British Hosiery Trade, Its History and Organization* (London, 1935), p. 95.

## 라틴아메리카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포퓰리즘의 출현-아르헨티나의 사례

박구병 (아주대)

- I. 들어가며
- II. 라틴아메리카의 대공황과 고전적 포퓰리즘의 등장
- III. 페론의 포퓰리즘 체제
- IV.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의 재생과 포퓰리즘의 정의(定義)에 대한 문제제기
- V. 민주주의 논의에 대한 포퓰리즘의 기여

### I. 들어가며

1930년대 초부터 21세기 초까지 라틴아메리카 정치를 언급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는 포퓰리즘이다. 그것은 다른 대륙에서 발생한 같은 이름의 현상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정치적 유산으로 부각되었다. 19세기 후반의 미국과 러시아의 인민주의 또는 포퓰리즘이 농민 공동체에 기반을 둔 운동이었다면, 20세기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은 도시 노동계급에 기반을 둔 정치 운동이었다. 고전적인 사례로는 브라질의 제툴리우 바르가스의 ‘신국가(Estado Novo)’ 시대(1937-1945)와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 체제(1946-1955)를 들 수 있다. 집권에 성공하진 못했지만 1930년대 페루의 빅토르 라울 아야 데라 토레의 <아메리카인민혁명동맹>(APRA)이나 1940년대 콜롬비아 자유당 급진파를 이끌던 호르헤 엘리에세르 가이탄의 사례 역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로 묶이곤 한다.<sup>1)</sup>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에 대해 논의할 때 좀 더 명확히 정리해야 할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유럽의 사례와는 다른 색채의 정치 이념을 지닌 세력에게 이 용어가 붙여진다는 점이다. 이는 포퓰리즘을 지역적 제한을 넘어 포괄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데 혼선을 초래한다. 유럽에서 인종차별적이고 배타적인 극우적 포퓰리즘 세력은 흔히 정치 체제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지만,<sup>2)</sup> 라틴아메리카에서 대공황기 이래 자리 잡은 포퓰리즘 체제는 대개 극우적 성향과 거리가 멀었고 대체로 정치적 중심부에 자리 잡았다.

둘째,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에 대한 주된 비판의 근거는 이념적 일관성이 약한 인기영합적인 전술을 구사하고, 적자 재정과 인플레이션의 위험, 비시장적 정책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반응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심지어 국가의 파탄을 이끈 핵심적 요인이라는 점 등이었다. 하지만 이런 견해는 포퓰리즘 운동과 체제가 제시한 긍정적인 효과를 간과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맥락에서는 과두지배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포퓰리즘을 통해 그때까지 조직되지 못한 도시 노동자 대중을 정치 체제 내로 통합시키고 일정한 지분을 제공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포퓰리즘을 규정할 때, 그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1970-

1) Rothermund, Dietmar, *The Global Impact of the Great Depression 1929-1939*, 양동휴·박복영·김영완 역, 『대공황의 세계적 충격』(예지, 2003), pp. 211-212.

2) Cas Mudde, “The Populist Radical Right: A Pathological Normalcy,” *West European Politics*, vol 33, no. 6 (2010), p. 1173.

1990년대의 논의가 대체로 사회경제적 강령과 정책을 포퓰리즘 운동이나 체제의 공통적 요소로 강조하는 반면, 후속 연구는 포퓰리즘의 사회경제적 양상을 본질적인 정치적 양식의 부수 현상으로 간주하고 포퓰리스트의 담론과 대중을 향한 직접적 호소의 수사(修辭)나 ‘정치하는 방식’에 주안점을 두곤 한다.

이런 쟁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고전적 포퓰리즘이 등장한 맥락과 배경뿐 아니라 1990년대 포퓰리즘의 재생에 주목함으로써 그 개념의 변화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혀온 아르헨티나의 페론 체제에 초점을 맞춰 포퓰리즘의 의미와 특성을 정리하고자 시도하면서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의 변화와 재생이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의 진전과 심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라틴아메리카의 대공황과 고전적 포퓰리즘의 등장

대공황기 이래 포퓰리스트 정부는 대체로 국제무역 질서의 교란과 수출 주도 성장 기제의 붕괴에 직면해 초보적인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 즉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으로 선회했다. 이런 관점에서 라틴아메리카의 고전적 포퓰리즘은 대공황과 그 여파에 대한 일련의 대응책이자 정치경제적 위기 극복의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연구자는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의 노동계급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포섭과 통합이 고전적 포퓰리즘의 등장을 낳았다고 정리한다.<sup>3)</sup>

대공황은 라틴아메리카의 수출과 국내총생산에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다. 예컨대 1932년 멕시코의 수출은 1929년 실적과 비교해 1/3 수준에 불과했고 1929년과 1932년 사이 국내총생산은 연간 6.5% 하락했다. 이 위기는 라틴아메리카의 지도자들에게 적절한 발전 방식에 대한 고민을 안겼다. 침체기에 고전적 포퓰리즘 체제는 관세, 수입 통제, 환율 조정뿐 아니라 국내 기업에 대한 신용 제공, 보조금 지급, 공적 투자 등 확대 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화 과정을 개시하거나 가속하려 했다.<sup>4)</sup> 결국 경제 위기의 탈출과 노동계급의 정치적 포섭을 동시에 이루려는 포퓰리스트의 기획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대략 1860-1914년) 라틴아메리카 지배 엘리트층의 유럽화 정책과 과도제로 귀결된 자유주의의 기초를 뚜렷이 바꾸었다.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대공황에 직면한 여러 국가에서 기존의 자유방임주의가 정부 주도의 투자와 통제 정책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포퓰리즘 체제의 접근 방식을 라틴아메리카의 뉴딜 정책으로 인식할 만 했다. 또 포퓰리즘 체제는 소득 재분배의 약속과 복지 정책의 추진을 통해, 달리 말해 인정(認定)의 정치와 재분배의 정치를 결합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개선과 대중의 정치적 동원을 모색했다.

고전적 포퓰리스트들의 공통점으로는 노동자 대중이나 농민층을 정치 체제 내로 끌어들이었다는 점 외에 특히 자원에 대한 민족주의적 통제를 주장하는 등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다는 점, 빈민 대(對) 부자, 동지 대 적 등 선명한 대립 구도와 이분법적 전략을 구사한 점, 기존 정당 체제를 우회해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존재와 반(反)제도적인 속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념

3) Francisco Panizza, “What Do We Mean When We Talk About Populism?,” Cynthia J. Arnson and Carlos de la Torre, eds., *Latin American Populism in the Twenty-First Century* (Baltimore, 2013), p. 102.

4) 영국의 역사가 앨런 나이트에 따르면, 대공황의 충격에서 벗어나려는 이런 정책 기초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라기보다 관세를 통한 보호와 개입의 오랜 전통을 크게 강화하면서 통제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촉진한 것이었다. Alan Knight, “The Great Depression in Latin America: An Overview,” Paul Drinot and Alan Knight, eds., *The Great Depression in Latin America* (Durham and London, 2014), pp. 298-299.

적 일관성이 약한 포괄적(catch-all)이고 인기영합적인 강령과 개혁적 수사의 존재 역시 필수적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해 지도자와 인민 대중 간의 직접적 관계 자체라기보다 정치 체제 내에서 대변자를 갖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지도자의 능력을 포퓰리즘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sup>5)</sup>

하지만 나이트에 따르면, 대공황 시기의 중요한 유산이 1940년대와 그 뒤까지 존속했지만 포퓰리즘과 같은 1940년대 중반과 1950년대의 ‘새로운 현상’을 대공황의 결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sup>6)</sup> 사실 라틴아메리카에서 포퓰리즘 체제의 등장보다 더 뚜렷한 대공황의 정치적 여파는 입헌 통치의 중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클라우디오 벨리스의 분석에 따르면, 1929년부터 1932년까지 멕시코의 두 드러진 예외를 빼고 라틴아메리카에서 17개의 정부가 전복되었다.<sup>7)</sup> 1930년부터 1983년까지 아르헨티나의 역사는 22년의 군부 통치, 12년의 후안 페론 집권기, 19년의 제한적 민주주의(유력 정당들의 활동 금지 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열 차례 가까이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고, 집권한 대통령 23명 가운데 15명이 군 장교 출신이었다. 민선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쿠데타로 집권하거나 정치적 입지를 넓힌 군 출신 정치인 가운데 후안 페론 대령을 비롯해 두 명만 법정 임기를 끝마쳤을 따름이다.<sup>8)</sup> 가히 군부 통치의 본보기라고 할 만 했다.

그러므로 아르헨티나의 1930년대는 포퓰리즘의 시기라기보다 오히려 보수적인 엘리트층에 의해 그런 움직임이 저지된 ‘악명 높은 10년(*década infame*)’에 가까웠다. 1930년 9월 군부쿠데타로 집권한 호세 펠릭스 우리부루 장군은 포퓰리스트적인 예산의 과다 지출을 없애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sup>9)</sup> 1930-1940년대에는 대공황과 전쟁에 뒤이은 자동적인 보호주의 또는 경제적 민족주의 정책의 결과로 제조업 분야가 성장했을 뿐 아니라 다양해졌다. 페론의 집권 이전에도 1940년 피네도 계획(Plan Pinedo)으로 상징되는 관세 인상을 통한 자국 산업의 보호 강화, 산업 발전 은행 설립, 영국인 소유의 철도 매입, 통화 정책을 통한 정부 규제의 증대 등으로 아르헨티나는 경제 회복의 속도에서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나 미국보다 훨씬 더 나은 실적을 보였고 실업률은 5%를 넘지 않아 서유럽의 수준보다 낮게 유지되었으며 외채 원리금 상환도 지불 유예 없이 지속할 수 있었다.<sup>10)</sup>

### III. 페론의 포퓰리즘 체제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경제 팽창 국면에 등장한 아르헨티나의 페론 체제는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 체제의 대표격으로 손꼽혀왔다. 정치적 좌파와 거리가 먼 군 장교 출신의 페론은 대지주와 농축산물 수출업자 중심의 과두지배 구조 속에서 오랫동안 배제되었던 노동계급을 끌어들이어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펼치면서 새로운 정치사회적 기반을 다지고자 했다. 페론 체제는 국가와 노동 부문의 담합주의적 연계라는 특징 외에 강력한 민족주의적 호소, 국내 시장에 맞도록 설계된 철저한 제조업 보호 정책 등 앞선 군부 통치 시대의 유산을 유지하고 있었다. 대공황의 여파와 페론 체제 등장 간의 연관성을 과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체제의 등장이 국내 산업의 활성화, 노동계급의 도시 집중을 배

5) Panizza, “What Do We Mean When We Talk About Populism?,” p. 95.

6) Knight, “The Great Depression in Latin America,” p. 278.

7) Claudio Veliz, *The Centralist Tradition in Latin America* (Princeton, 1980), p. 279.

8) Alain Rouquié, “The Military in Latin American Politics since 1930,” Leslie Bethell, ed., *Latin America: Politics and Society since 1930* (Cambridge, 1998), p. 161.

9) Carlos F. Díaz Alejandro, “Latin America in the 1930s,” Rosemary Thorp, ed., *Latin America in the 1930s: The Role of the Periphery in World Crisis* (London, 1984), p. 33.

10) David Rock, *Argentina 1516-1987: From Spanish Colonization to Alfonsín* (Berkeley and Los Angeles, 1987), p. 231; Knight, “The Great Depression in Latin America,” p. 281.

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공황이 가져온 변화의 간접적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11)</sup>

그동안 적잖은 이들이 페론의 노동계급 동원과 노동 친화 정책을 ‘아르헨티나 병’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경제 성장률의 둔화와 쇠퇴,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해왔지만 병의 원인은 훨씬 더 복잡했다. ‘병균의 주입자’ 페론의 흔적을 지우고 기존의 엘리트 통치를 그토록 복원하고 싶어 했던 후속 정권도 아르헨티나의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합리화를 이루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노동계급에게 정치적 지분을 허용하고 타협 구조에 편입시킨 페론의 새로운 통치 형태는 기존의 과두지배 세력과 대다수 군부 통치자들에게겐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페론은 아르헨티나의 정치 공간을 대중화시키고 재선에 성공했지만 군부 쿠데타로 밀려났으며 그 뒤 아르헨티나의 정치는 페론 대 반(反)페론의 구도로 양분되었다.

1946년 선거에서 페론을 지지한 세력은 도시와 농촌의 하층 계급뿐 아니라 일부 군부 집단, 가톨릭교회의 고위 성직자, 일부 보수주의 세력, 우익 민족주의 지식인 집단 등이었다. 그를 반대한 이들은 농축산업 부문의 경제 엘리트, 대다수 보수주의 정당, 자유주의적·좌파 정당과 지식인 집단 등이었다.<sup>12)</sup> 사회학자 카를로스 와이스만은 일부 보수 세력이 혁명과 공산주의 득세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때문에 페론을 지지했고 페론 자신도 엘리트층을 향한 메시지에서 이 두려움에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한다.<sup>13)</sup> 연설에서 페론은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적 교역의 시대가 재개되어 1930-1940년대에 구축한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그 결과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해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하는 등 파멸을 초래할지 모른다고 예측했다. 물론 페론은 혁명 예방의 필요성뿐 아니라 경제적 독립과 국방에 대한 고려에서 철저한 보호주의 정책 기조를 정당화했다.<sup>14)</sup> 대다수 경제 엘리트층은 페론을 노동 대중 선동에 대한 해결책이라기보다 그 원인으로 본 반면, 엘리트층의 일부는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이데올로기적 고려, 즉 좌파의 부상에 대한 우려와 그 대비책으로서 페론을 지지한 것이었다.

페론의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은 배타적으로 내부지향적이진 않았다. 나중에 종속이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페론 시대의 경제학자 라울 프레비시는 식민시대 이래의 유산인 경제의 외부지향성이나 ‘신식민지적’ 대외 종속성을 교정하고자 했으나 그의 수입대체산업화 모델은 내부지향적 발전 (*desarrollo hacia adentro*)이라기보다 활발한 국내 이주와 도시화의 시대에 내부로부터의 발전 (*desarrollo desde adentro*)을 강조했다. 프레비시나 페론은 기본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경제가 국제 경제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부정하지 않았다.<sup>15)</sup>

1940년대 말에서 1950년대 초 밀 생산, 정육(精肉)업, 시멘트 제조 등에 토대를 둔 꾸준한 경제 성장이 주춤하면서 아르헨티나에 닥친 경제적 침체는 여러 집단(*corporación*)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켰고 이는 페론의 제2차 집권기(1951-1955)뿐 아니라 후속 정부에게도 정치 불안이라는 달갑지 않은 유산을 물려주었다. 1950년대 초부터 어려움에 봉착한 아르헨티나의 일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1983년까지 약 1%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비슷한 수준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을 기록한 스위스나 스웨덴은 물론 후발국인 브라질이나 멕시코의 증가율에 훨씬 못 미쳤다.<sup>16)</sup>

11) Knight, “The Great Depression in Latin America,” p. 291.

12) Manuel Mora y Araujo and Ignacio Llorente, eds., *El voto peronista* (Buenos Aires, 1980).

13) Carlos H. Waisman, “Counterrevolution and Structural Change: The Case of Argentin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 no. 2 (1989), p. 165.

14) Juan Domingo Perón, *El pueblo quiere saber de que se trata* (Buenos Aires, 1944); Juan Domingo Perón, *El pueblo ya sabe de que se trata* (Buenos Aires, 1946)

15) Rosemary Thorp, “A Reappraisal of the Origins of Import-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 1930-1950,”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24 Quincentenary Supplement (1992), p. 189.

16) Waisman, “Counterrevolution and Structural Change,” p. 161.

페론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라면 다른 국가의 포퓰리즘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회경제적 정책 이라기보다 정치적 분열을 조정할 수 있는 방도를 제도화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수직적 상하관계(*verticalismo*)”라고 불릴 만큼 체제 자체가 한 인물에게 의존하는 ‘일인 통치’의 전형이었다는 데 있다.<sup>17)</sup> 페론은 노동계급의 후원자가 되었지만, 1946년 5월 모든 정당을 해산시킨 뒤 자신의 신념과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견고한 정당 조직을 구축하지 않았다. 페론은 정당이나 제도적 틀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대중에게 호소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 IV.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의 재생과 포퓰리즘의 정의(定義)에 대한 문제제기

대공황이라는 사회경제적 위기 이래 아르헨티나의 정치 문화에 더 지속적으로 지울 수 없는 자취를 남긴 것은 페론 체제의 유산이라기보다 입헌 정부를 타도한 군부의 정치적 개입이나 과두제적 정치 폐쇄와 퇴행, 보수파와 군부가 제휴한 연합 체제의 출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18)</sup> 1930-1940년대 고전적인 사례가 자취를 감춘 지 한참 뒤, 그리고 군부 통치가 종식된 뒤인 1990년대와 21세기 초에 라틴아메리카에서 포퓰리즘 운동이나 체제가 재등장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군부 통치와 경제 개방의 결과로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의 전략적 유효성이 거의 사라지는 듯 보였을 때, 포퓰리즘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던 도시 중심의 계급 연대 체제가 약화되었다. 특히 정치적 지지의 반대급부였던 소득 재분배와 복지의 토대가 약해지면서 포퓰리즘의 틀은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없을 듯 보였다.

하지만 1990년대 초 신자유주의 전환기를 선도한 아르헨티나의 카를로스 메넴, 멕시코의 카를로스 살리나스,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등은 포퓰리즘의 전통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조직화되지 않은 도시와 농촌의 빈민층에게 직접 혜택을 베푸는 선별적 포퓰리즘 정책을 유지했다. 따라서 그들은 ‘네오포플리스트,’ 즉 새로운 형태의 포퓰리스트라고 불리게 되었다. 네오포플리스트들은 경제적 신자유주의 노선과 포퓰리즘이라는 정치적 지배 유형 간의 특이한 결합을 보여주었다.<sup>19)</sup> 그런 현실과 함께 1930-1940년대에 등장한 어떤 정치 세력도 포퓰리스트라고 자칭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낯선 용어는 고전적 포퓰리즘 체제가 사라진 뒤 후속 세대 정치인들과 논객들에 의해 전략적 표현으로 유포되었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예컨대 멕시코에서는 1980-1990년대에 살리나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반대파를 “우둔한 포퓰리스트”로 지칭한 바 있었다.

결국 포퓰리즘이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일방통행식 표현은 정파의 성격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된 셈이고 대조적인 두 가지 정치 세력을 포퓰리스트 또는 네오포플리스트라는 동일한 용어로

17) Frederick C. Turner and José Enrique Miguens, eds., *Juan Perón and the Reshaping of Argentina* (Pittsburgh, 1983), p. 4: 이는 발표자가 멕시코의 라사로 카르데나스 체제(1934-1940)를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카르데나스가 카리스마적 지도력을 발휘하며 대중 친화적 정치를 전개했지만, 1938년 ‘혁명 정당’의 재편을 통해 향후 오래 지속될 일당 체제의 제도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18) Waisman, “Counterrevolution and Structural Change,” p. 168: 드레이크는 1930년대를 가리켜 “독재의 10년”이라고 부른다. Paul W. Drake, *Between Tyranny and Anarchy: A History of Democracy in Latin America, 1800-2006* (Stanford, 2009), pp. 158, 165.

19) 동시에 다른 부류의 연구자들은 우고 차베스, 에보 모랄레스, 라파엘 코레아 등 21세기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에서 등장한 좌파 성향의 정치인들을 네오포플리스트 또는 급진적 포퓰리스트로 지칭한다. 예컨대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포퓰리즘이라는 통치 양식이 우고 차베스라는 정치가를 통해 21세기의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재등장”했다고 주장한다. 자크 랑시에르, 「찾을 수 없는 포퓰리즘」, 알랭 바디우 외 (서용순·임옥희·주형일 옮김), 『인민이란 무엇인가』(현실문화, 2014), p. 173.

호명하는 혼란스런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물론 어떤 연구자의 경우 1980년대 초 민주화 이행기 이래 권좌에 오른 카를로스 메넴 같은 포퓰리즘의 변형, 즉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포퓰리즘이 고전적 포퓰리즘의 조야한 모방을 통해 그 수사와 의례를 재현하긴 했지만 실제 내용을 재생산할 수 없었다고 둘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기도 한다.<sup>20)</sup>

대공황기에 출현한 고전적 포퓰리즘의 사례와 1990년대 초 네오포퓰리즘은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 배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기존의 정치 체제가 폐쇄적이거나 반응이 없다고 느끼는 이들을 동원하려는 전략은 모든 포퓰리스트들의 공통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또 라틴아메리카의 고전적 포퓰리스트와 최근의 '급진적 포퓰리스트'들은 모두 정부 주도의 소득 재분배 정책을 수용했다.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위기와 포퓰리즘의 상관성이 높다고 인식되듯이 1980년대 초 이래 라틴아메리카의 '잃어버린 10년'과 네오포퓰리즘의 친화성 역시 매우 높은 편이다.

네오포퓰리즘의 등장은 포퓰리즘이 일부 지역의 특산물이거나 특정 이데올로기적 성향, 즉 좌파와 우파 어느 한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양한 색채의 정치 세력과 결합할 수 있는 정치적 관행, 말하자면 확장성을 지닌 정치적 전략이나 지배 유형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르헨티나의 정치이론가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의 진술에 따르면, "어떤 체제가 단순히 포퓰리스트적일 수 없다는 게 문제이다. 동시에 다른 어떤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포퓰리즘은 어떤 운동의 이데올로기를 규정하고 명료화하지 않는다. 그것이 규정하는 바는 두 진영으로 나뉜 어떤 사회의 분리를 통해 파생되는 정치적인 것의 구성 형태이다."<sup>21)</sup> 이는 어떤 사회의 급진 좌파가 포퓰리즘을 구현할 수도, 반대로 극우 세력이 이를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이념적 성향을 지닌 체제를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로 환원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포퓰리즘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경제적 강령과 정책에 주목하는 경우와 기존 정당을 우회해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등의 '정치하는 방식'을 강조하는 경우가 부딪힌다. 최근 들어 후자에 주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포퓰리즘 체제의 사회경제적인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이들에게 포퓰리즘이란 경제적 포퓰리즘을 의미한다. 이들은 재정 확대 정책이라든가 재분배 정책이 초(超)인플레이션과 국제 수지 악화,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적 안정을 해치는 취약성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sup>22)</sup> 반면 역사학자나 정치학자들은 대체로 포퓰리즘의 본질적 의미와 특성을 정치적 지배의 유형이나 방식, 지도자와 지지층의 관계, 정책 입안과 결정 방식 등 운동과 체제의 '정치하는 방식'에서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커트 웨일랜드에 따르면, 포퓰리즘의 본질을 알기 위해선 분배의 영역이 아니라 지배의 영역을 검토해야 하며 포퓰리즘의 사회경제적인 정책은 '정치하는 방식'의 부수적인 현상일 뿐이다.<sup>23)</sup>

20) Hector E. Schamis, "From the Peróns to the Kirchners: "Populism" in Argentine Politics," Cynthia J. Arnson and Carlos de la Torre, eds., *Latin American Populism in the Twenty-First Century* (Baltimore, 2013), p. 177.

21) Ernesto Laclau, "Laclau en debate: Postmarxismo, populismo, multitud, y acontecimiento (entrevistado por Ricardo Camargo)," *Revista de Ciencia Política*, vol. 29, no. 3 (2009), pp. 825-826.

22) Rudiger Dornbusch and Sebastian Edwards, eds., *The Macroeconomics of Populism in Latin America* (Chicago, 1991), pp. 7, 9.

23) Alan Knight, "Populism and Neo-Populism in Latin America, Especially Mexico,"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30, no. 2 (1998), p. 226; Kurt Weyland, "Clarifying a Contested Concept: Populism in the Study of Latin American Politics," *Comparative Politics*, vol. 34, no. 1 (2001), p. 12.

## V. 민주주의 논의에 대한 포퓰리즘의 기여

라틴아메리카에서 포퓰리즘이 등장하고 재생하는 이유와 관련해 포퓰리즘과 민주주의가 어떤 점에서 연관성을 갖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흔히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위협과 파괴, 제도라기보다 대중 선동과 인기영합 전략 등을 통해 열정에 의존하는 정치 방식이나 일탈로 취급되곤 한다. 그러나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는 포퓰리즘이 인구의 하위 2/3가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우려를 뜻한다면, 라틴아메리카에서 그것은 그리 나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들은 이전의 체제와 경제 정책 아래에서 빈곤하게 살았고 아무 것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sup>24)</sup>

더욱이 최근의 논의는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라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라클라우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대변자를 갖지 못한 집단이나 불만을 품은 유권자들을 정치 과정에 끌어들이고 그들의 염원에 부응하려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속성과 맞닿아 있다.<sup>25)</sup> 샬탈 무페, 벤저민 아르디티, 카를로스 델 라 토레 등도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대립물이라기보다 그 본질적인 구성 요소라는 점에 동의한다.<sup>26)</sup> 그러므로 포퓰리즘을 불안한 통치의 전형이고 한 국가를 몰락할 지경까지 이르게 한 원인으로 평가하는 주장은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 일방적인 정치적 진영 논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아르디티는 포퓰리즘을 민주 정치와 관계가 없는 주변적이거나 병리적인 정치 현상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또 포퓰리즘을 혁명적 운동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예컨대 정치 체제로부터 배제된 집단을 참여시키고 선거권을 부여하는 등(페론의 첫 임기 동안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어 전체 투표율이 18%에서 50%로 늘었다) 정치적 통합과 사회 정의를 역설함으로써 그것은 민주화 과정을 진전시키는 데 기여한다.<sup>27)</sup> 캐노번이 언급하듯, 포퓰리즘은 기존의 권력 구조, 지배적 이념과 가치에 맞서 인민 대중에 호소하고 대중의 불만과 견해를 대변함으로써 민주적 요구를 드러낸다. 따라서 포퓰리즘의 어떤 측면이 민주주의가 지닌 회복과 보상의 본질(redemptive nature), 달리 말해 정치를 통한 구원의 전망<sup>28)</sup>을 되새기고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지 포착해야 할 것이다. 아르디티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적 관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갱신하는 역설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은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동행하고 계속 출몰해 그것을 괴롭히는 ‘유령’이다.<sup>29)</sup>

고전적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은 광범위한 대중의 효과적인 정치적 대표성을 박탈해온 과두제 질서의 민주적 결함을 맹렬히 비난함으로써 민주적 증명서를 획득했다. 페론은 이렇게 선포했다. “정치 영역에서 아르헨티나 민주주의를 효과 없고 무가치하게 만든 과거의 폐해, 선거 사기, 부정 선거를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새롭게 시작했다.”<sup>30)</sup> 또 그는 이렇게 강조했다. “누가 정당성을 지니고 누가

24) Joseph Stiglitz, “Is Populism Really So Bad for Latin America?” *New Perspectives Quarterly*, vol. 23, no. 2 (2006), p. 62.

25) Ernesto Laclau, *On Populist Reason* (London, 2007), pp. 167, 176-177.

26) Carlos de la Torre, “¿Es el populismo la forma constitutiva de la democracia en Latinoamérica?” Julio Aibar Gaete, ed., *Vox Populi: populismo y democracia en Latinoamérica* (México, D.F., 2007), p. 78.

27) Schamis, “Populism in Argentine Politics,” p. 155.

28) Margaret Canovan, “Trust the People! Populism and the Two Faces of Democracy,” *Political Studies*, vol. 47, no. 1 (1999), p. 10. 포퓰리즘이 지닌 ‘해방의 약속’에 대해선 Francisco Panizza and Romina Miorelli, “Populism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vol. 23, no. 1 (2009), pp. 44-45 참조.

29) Benjamin Arditi, “Populism as a Spectre of Democracy: A Response to Canovan,” *Political Studies*, vol. 52, no. 1 (2004), p. 141.

30) Juan Domingo Perón, “Discurso del 25 de julio de 1949.”

그들의 의지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가? 우리는 아르헨티나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에서 인민에게 우리와 상대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인민은 우리를 선출했고 그리하여 문제는 해결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제 아르헨티나 공화국에서 이루어졌다.”<sup>31)</sup>

대중의 정치 참여를 제한해온 과두지배 체제와 약식(略式) 또는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를 넘어서려 했던 이력 덕분에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은 생명력을 잃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샴이스가 강조하는 바대로 이런 까닭에 포퓰리즘이라는 종(種)은 사라졌지만 그 유산이 남았으며 특히 포퓰리즘의 본질적인 관심사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듯하다. 고전적 포퓰리즘이 제기한 복지국가, 사회 정의, 정치적 통합, 실질적 평등, 노동계급의 존엄성 인정,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등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대중의 참여를 촉발하는 근거로 남아있기 때문이다.<sup>32)</sup> 칠레의 외무부 장관을 역임한 이그나시오 워커의 말대로 포퓰리즘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전과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의 역할을 맡아왔다. 워커는 이렇게 묻는다. 포퓰리즘이 문제인가 아니면 빈곤과 불평등의 지속이 문제인가? 또 포퓰리즘이 더 큰 문제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정치 제도나 엘리트층의 부패와 변질이 더 큰 문제인가?<sup>33)</sup> 이 질문들은 포퓰리즘에 대한 좀 더 균형 잡힌 이해와 민주주의의 심화에 대한 포퓰리즘의 기여 가능성을 숙고하는 데 꼭 필요할 것이다. 또한 통합과 평등이라는 관념과 목표를 안정적인 절차와 제도라는 동등하게 중대한 목표와 어떻게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것인지가 긴요한 숙제일 것이다.

31) Juan Domingo Perón, “Discurso del 25 de julio de 1949.”

32) Schamis, “Populism in Argentine Politics,” p. 177.

33) Ignacio Walker, “The Three Lefts of Latin America,” *Dissent*, vol. 55, no. 4 (2008), p. 12.



---

## 제6부 민주주의 위기와 대안 모색

---

좌장: 김창성(공주대)

토론: 정용숙(중앙대) / 신동규(창원대) / 김경현(홍익대)

▶ 민주주의 위기를 넘어 - 독일 68의 구심점 APO(의회외부저항운동)의 '위대한 거부'

발표: 정대성(부산대)

▶ 세기 전환기 반자본주의 운동과 신(新)사회운동의 딜레마: 탈(脫)물질주의와 문화주의 이론의 한계와 참여민주주의의 변질

발표: 박우룡(한국외대)

▶ 아렌트와 소렐의 폭력론 비판: 대안으로서의 고대 그리스 시민사회

발표: 최자영(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민주주의 위기를 넘어 - 독일 68의 구심점  
APO(의회외부저항운동)의 '위대한 거부'

정대성(부산대)

- I. 들어가며
- II. 지나간 미래: 민주주의 위기의 가능성과 비상사태법 반대운동
- III. 돌아온 과거: 민주주의에 임박한 위협과 극우정당 반대운동
- IV. 위기의 현재: 6월 2일 사건과 민주주의 위기의 현실성
- V. 나가며

I. 들어가며

우리가 68혁명이나 운동이라 부르는 세계사적 사건은 실로 다면적인 얼굴을 하고 있다. 베트남전 반대 같은 국제적인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나라마다 원인과 배경이 각양각색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물론 68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합의된 지점도 그리 넓지 않다.<sup>1)</sup> 하지만 서구로 한정할 경우 공히 '참여민주주의'를 포함하는 '민주주의 문제'와 결부된다.<sup>2)</sup> 68을 둘러싼 의제는 당대 서구 사회의 민주주의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진단과 비판의 문제로 연결되었던 때문이다. 더불어 '참여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민주화'라는 차원에서 '의회외부 정치'가 '거리시위'나 '직접행동'이라는 전략전술을 통해 '정치의 의미'를 재규정하거나 새로이 환기하는 일이기도 했다.<sup>3)</sup>

독일 68운동의 핵심 의제를 보면, 1950-60년대 고도의 경제 성장과 나란히 펼쳐진 의회민주주의라는 정치적 날개가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진단과 문제제기가 중요했다. 이런 당대 민주주의의 상황 진단 및 의미를 둘러싸고 벌어진 비판과 대립 및 저항이 그 거대한 격동의 시기를 수놓았다. 결국, 나치 전체주의 운동의 후신으로 비방하고 격하하는 일부 견해를 차치한다면 68은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공고화한 운동으로 평가된다.<sup>4)</sup> 즉 독일 68운동의 본령은 '민주적인 사회로의 돌파'<sup>5)</sup>로, 서독사

1) 68을 둘러싼 연구사에 대해서는 Dae Sung Jung, *Der Kampf gegen das Presse-Imperium: Die Anti-Springer-Kampagne der 68er-Bewegung* (Bielefeld, 2016), pp.9-16, pp.24-27; 정대성, 「'68'-문화혁명-국가권력」, 『역사와 문화』 29 (2015.5), pp.87-114 가운데 p.88f; 정대성, 「독일 68운동의 역사는 다시 써야 하는가 - 서독 경찰 쿠라스의 정체와 동독의 영향력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 50 (2016.12), pp.103-133 가운데 pp.104-110 참조.

2) 68운동과 참여민주주의 문제는 Ingrid Gilcher-Holtey, "Political Participation and Democratisation in the 1960s: The Concept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its Repercussions", pp.1-20 참조. 이 미 발표 논문은 다음 책에 실릴 예정이다. Jussi Kurunmäki, Jeppe Nevers and Henk te Velde, ed., *Democracy in Modern Europe: A Conceptual History* (Oxford/New York: Berghahn, 2018).

3) 정치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68운동의 '문화혁명'에 대해서는 필자의 「'68'-문화혁명-국가권력」 참조.

4) 정대성, 「독일 68운동의 역사는 다시 써야 하는가」, p.109f 참조.

5) Matthias Frese and Julia Paulus, "Geschwindigkeit und Faktoren des Wandels - die 1960er Jahre in der Bundesrepublik," in: Matthias Frese, Julia Paulus and Karl Tepe, eds., *Demokratisierung*

의 유의미한 분수령이자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장시킨 ‘제2의 건국’으로도 불린다.<sup>6)</sup>

21세기 벽두에 역사가 제프 일리(Geoff Eley)는 유럽 민주주의의 지난 150년 여정을 다루는 책을 ‘민주주의 버리기’(Forging Democracy)라는 제목으로 내놓았다.<sup>7)</sup> 책의 중심을 이루는 좌파의 역사가 “불평등의 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이다.<sup>8)</sup> 여기서 일리는 유럽 좌파의 역사와 미래를 바꿔놓은 분기점으로서 68이 남긴 주요한 유산으로 ‘의회외부 정치’의 부활을 꼽았다.<sup>9)</sup>

기실, 독일 68운동의 저항을 대변하는 조직의 이름이 다른 아닌 ‘의회외부저항운동’(APO: Die Außerparlamentarische Opposition)이었다. APO는 1966년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의 대연정 출범과 더불어 야당의 견제력 상실을 지적하며 의회 밖에서의 비판과 항의 및 압력 행사를 주도한 상징적 연합조직이자 사회운동이었다. 대연정이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의 불구화를 낳는다고 비판한 각종 정치세력과 노조 및 학생단체가 포함된 일종의 상부 네트워크인 APO는 국가 기관과 법원, 학교와 가정을 망라하며 사회 곳곳에서 전통적인 권위에 비판의 화살을 겨누고 문제를 제기했다.<sup>10)</sup>

나아가 APO는 비상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비상사태법’(Notstandsgesetze)과 베트남전을 비판의 도마에 올리고 침묵된 나치 과거를 들추며, 친미반공의 보수 언론제국을 구축한 악셀 슈프링어 출판그룹(Axel Springer Verlag)뿐 아니라, 전후 재결집해 정치력 확장의 기지개를 켜던 극우정당의 선전선동에 맞서 반대캠페인을 벌이고 시위했다. 이런 다양한 비판 대상은 신생 서독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로 비치기에 모자람이 없었고, 계몽캠페인과 나란히 Go-in(진입시위)와 Sit-in(연좌농성) 같은 직접행동의 옷을 입은 새로운 항의형태가 도처에서 시험되고 실험되었음은 물론이다.<sup>11)</sup> 무엇보다, 1967년 한 대학생이 시위도중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은 민주주의 역사의 징후이자 심각한 ‘위기의 현실성’을 증거하는 것으로 비치며 운동의 거센 폭발과 확산을 불질렀다. APO의 관점에서, 나치즘의 기억과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독의 민주주의는 다면적으로 위기에 처한 듯했다.

본고는 독일 68운동이 당대의 민주주의 위기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대응하고 응전하는지를 세 가

*und gesellschaftlicher Aufbruch. Die sechziger Jahre als Wendezeit der Bundesrepublik* (Paderborn, 2005), pp.1-23, 여기서는 p.1.

6) Gerrit Dworok and Christoph Weißmann, eds., *1968 und die 68er: Ereignisse, Wirkungen und Kontroversen in der Bundesrepublik* (Wien/Köln/Weimar, 2013), p.12.

7) Geoff Eley, *Forging Democracy: The History of the Left in Europe, 1850-2000* (Oxford, 2002)[제프 일리, 유강은 옮김, 『The Left, 1848-2000: 미완의 기획, 유럽좌파의 역사』, (뿌리와 이파리, 2008)]

8) 일리, 『The Left』, p.14. 그는 민주주의를 둘러싼 이 장구한 고군분투의 역사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고도 확신한다. 같은 곳.

9) 같은 책, p.661. 일리가 말하는 의회외부 정치는 ‘직접행동’과 ‘공동체 조직하기’, ‘참여의 이상’, ‘소규모의 비관료적 조직 형태들’, ‘폴뿌리에 대한 강조’, ‘일상생활의 정치화’ 같은 것을 포함한다. 같은 곳과 Eley, *Forging Democracy*, p.364 참조[번역은 필자가 일부 수정].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정치 행위의 형태와 방식을 다루지 않고, 의회 ‘외부’ 정치라는 전체 형상을 중심으로 논한다.

10) 잉그리트 길허홀타이, 정대성 옮김, 『68혁명, 세계를 뒤흔든 상상력』, (창비, 2009), p.96, 주) 6 참조. APO의 대표 조직은 ‘독일사회주의학생연합’(Der Sozialistische Deutsche Studentenbund: SDS)이었다. 물론, APO라는 명칭은 지금도 68운동을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들의 총합을 상징하는 이름이자 그 운동 자체로도 쓰인다. APO(Die Außerparlamentarische Opposition)를 직역하면 ‘의회외부반대파’나 ‘재야(在野)가 되지만 내용적인 의미를 살려 ‘의회외부저항운동’으로 쓴다.

11) Ingrid Gilcher-Holtey, *Die 68er Bewegung: Deutschland - Westeuropa - USA* (München 2008)[잉그리트 길허홀타이, 정대성 옮김, 『68운동: 독일·서유럽·미국』, (들녘, 2006)]; Norbert Frei, *1968. Jugendrevolte und globaler Protest* (München, 2008); Deutsches Historisches Museum, ed., *Deutsche Geschichte in Bildern und Zeugnissen* (Stuttgart, 2016), p.368. 악셀 슈프링어 그룹 반대캠페인에 대해서는 Jung, *Der Kampf gegen das Presse-Imperium: 정대성, 「독일 68운동과 반(反)슈프링어 캠페인」*, 『독일연구』 28 (2014.12), pp.181-217 참조.

지 주요한 사건과 영역을 통해 분석하고 설명한다. '비상사태법 반대운동'과 '극우정당 반대운동'을 비롯해, 국가공권력의 폭력적 민낯이 드러난 '6월 2일 사건'이라는 프리즘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독일 68의 주체이자 그 운동 자체의 이름이기도 한 의회외부저항운동(APO) 진영이 당시 서독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비판하며 대결해 나갔는지의 지형도가 그려질 것이다. 더불어 이는 68의 사상적 스승이던 마르쿠제의 정치적 요청인 '위대한 거부'<sup>12)</sup>가 독일에서 생생히 관철되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 II. 지나간 미래: 민주주의 위기의 가능성과 비상사태법 반대운동

1960년대 후반 대연정은 비상사태법을 통과시키려 했다. 전쟁이나 다른 비상사태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부에 예외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이었다.<sup>13)</sup> 비판자들이 나치와 히틀러 독재로의 길을 열어준 바이마르 시기의 관련 법조항을 연상하기에 충분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제국헌법 48조는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무효화하고 긴급명령으로 통치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반대자들은 비상사태법의 결과로 의회주의에 구멍이 나고 파시즘이 다시 대두할 가능성을 내다봤다.<sup>14)</sup> '나치법'(NS-Gesetze)이나 '독재법'이라는 낙인의 명칭으로 불린 것도 그런 맥락에서였다.<sup>15)</sup> 비상사태법에 민주주의를 위기로 빠뜨릴 위험이 내재한 듯 보였고, APO 진영은 법률의 오남용과 독재의 가능성을 점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다.

비상사태법의 도입은 사실 바이마르 말기의 혼란과 나치 집권이라는 과거가 떠오르는 '지나간 미래'로 비쳤을 법하다. 그 결과, 악몽으로서의 과거가 다시 미래의 일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우려와 두려움 속에서, APO에 집결한 비판자들은 의회 내에서 이 법안의 저지를 경주할 야당의 부재를 통탄하며 '의회외부'에서 반기를 들었다. APO는 '민주주의 비상사태 감시국'(Kuratorium Notstand der Demokratie)을 조직하고 수년간 격렬한 반대와 항의를 통해 법률의 도입을 가로막으려 힘썼다. 술한 거리 시위와 나란히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파업과 점거가 꼬리를 물었다.<sup>16)</sup>

특히 68년 5월은 '뜨거운 저항'으로 들끓으며 주목할 만한 동원에 성공했다. 우선, 5월 11일 연방 의회가 있는 '본(Bonn)으로의 집결행진'은 6만 명이 운집한 거대한 시위집회로 발전한다. 이날 서독 각지에서 버스 및 특별기차 및 자가용 편으로 수많은 비상사태 반대자들이 본으로 도정에 올랐다. 도착 후 세군데 집결지에서 시내로 행진한 다음 결국 본 대학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민주주의 비상사태 감시국' 서기인 샤우어(Helmut Schauer)와 독일사회주의학생연합(SDS) 연방의장 볼프

12) Herbert Marcuse, *One-Dimensional Man* (Beacon: Boston 1964)[독일어판: *Der eindimensionale Mensch* (Berlin, 1967), 국역본: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박병진 옮김, 『일차원적 인간』, (한마음사, 2009)]; Jakob Tanner, "The Times They Are A-Changin'". Zur subkulturellen Dynamik der 68er Bewegungen, in: Ingrid Gilcher-Holtey, ed., *1968 - Vom Ereignis zum Gegenstand der Geschichtswissenschaft* (Göttingen, 1998), pp.207-223, 여기서는 p.209. '위대한 거부'는 체제(System)로부터 중요한 운용자원을 급진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사회가 완전히 새로운 토대 위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하려는 희망에서 기인했다. Ibid.

13) Friedrich Schäfer, *Die Notstandsgesetze : Vorsorge für den Menschen und den demokratischen Rechtsstaat* (Köln, 1966).

14) 길혀홀타이, 『68혁명』, p.96-97.

15) Stefanie Pilzweiger, *Männlichkeit zwischen Gefühl und Revolution: Eine Emotionsgeschichte der bundesdeutschen 68er-Bewegung* (Bielefeld, 2015), p.214.

16) Michael Schneider, *Demokratie in Gefahr? Der Konflikt um die Notstandsgesetze: Sozialdemokratie, Gewerkschaften und intellektueller Protest (1958-1968)* (Bonn, 1986); Boris Spornol, *Notstand der Demokratie: Der Protest gegen die Notstandsgesetze und die Frage der NS-Vergangenheit* (Essen 2008).

(KD Wolff), 작가 하인리히 뵐(Heinrich Boll), 금속노조(IG Metall)의 수뇌부 벤츠(Georg Benz) 같은 APO의 대표자들이 열정적인 비판연설을 했다. 거대한 성공이자 비상사태법 반대파의 평화적인 절정을 상징하는 집회였다. 『슈피겔』에 따르면 5월에만 약 15만 명이 비상사태법 반대시위에 참가해 어깨를 걸었다.<sup>17)</sup>

그러나 68년 5월 30일 대연정이 주도한 연방의회는 수많은 비판과 분노를 뒤로 하고 끝내 비상사태법을 통과시킨다.<sup>18)</sup> 물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조항은 APO의 격렬한 반대와 저항에 힘입어 온건화 및 약화의 형태로 수정되었다. 이런 결과 자체가 운동 진영의 ‘부분적 성공’<sup>19)</sup>을 의미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분’이라는 규정이 가리키듯, 그 법은 폐지되지 않았고 오늘날까지 엄연히 존재한다. 난민과 테러의 지금 시대에 유럽이나 독일이 이른바 ‘비상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비상사태법이 발동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리하여 여전히 ‘민주주의 위기의 가능성’을 이 법 속에서 읽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법을 둘러싼 수년간의 갈등에는 대립과 대결뿐 아니라 저항과 압력을 통한 소통과 변화의 과정도 포함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가 미하엘 슈나이더(Michael Schneider)는 비상사태법을 둘러싼 충돌을 ‘서독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졸업시험’이라고 평가했다.<sup>20)</sup> 그래서 독일 68운동이 수행한 격렬한 비상사태법 반대투쟁은 민주주의 위기의 진행을 저지하고 봉합한 ‘일정한 성공’으로 기록되기에 모자람이 없다. 서독 민주주의는 APO의 강력한 저항과 압력을 통해 일차시험을 통과하며 위기의 현실화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 III. 돌아온 과거: 민주주의에 임박한 위협과 극우정당 반대운동

독일은 60년대 들어 극우세력의 발호를 경험한다. 전후 이합집산을 거듭하던 극우진영은 독일 민족민주당(NPD)의 놀라운 성공 속에서 희망과 오아시스를 발견한다. NPD는 대외적으로 보수의 깃발을 내걸었지만 인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나치 유산과 결부된 명실상부한 극우정당이었다.<sup>21)</sup> 일종의 극우세력 집합체인 NPD는 지방의회 선거에서 60년대 중반부터 파죽지세의 기세를 이어가 연방의회 진출까지 능히 내다보고 있던 상황이었다. 사실, 독일의 의원내각제 구조를 감안하면 극우정당의 연방의회 진출은 나치 과거의 직계인 극우세력이 중앙정치의 공식적인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의미가 되기에 결코 무시하거나 간과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사뭇 달랐다. 민족민주당(NPD)은 1969년 연방의회 선거에

17) Wolfgang Kraushaar, *1968: Das Jahr, das alles verändert hat* (München, 1998), pp.146-149; Spornol, *Notstand der Demokratie*, p.84f; Schneider, *Demokratie in Gefahr?*, p.245ff; Jung, *Der Kampf gegen das Presse-Imperium*, p.294; Christoph Kleßmann, *Zwei Staaten, eine Nation: Deutsche Geschichte 1955-1970* (Göttingen, 1988), p.249. 1968년 5월 15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점거한 학생들은 비상사태법에 맞서 독일 국가를 이렇게 개사해 불렀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사상의 자유도 저항도 모른다. ‘비상사태’의 나라가 되기 전에 우리가 구해내자. 늦기 전에 ‘비상사태’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해내자.” »1968 - Das Jahr der Revolution« (München, 2008) [Audio-CD, Track 8, 4분 55초경부터].

18) Wolfgang Kraushaar, *Achtundsechzig: Eine Bilanz* (Berlin, 2008), p.163; Deutsches Historisches Museum, ed., *Deutsche Geschichte*, p.368.

19) Kraushaar, *Achtundsechzig*, p.175.

20) Kleßmann, *Zwei Staaten, eine Nation*, p.250.

21) Benedikt Sepp, *Linke Leute von rechts? Die nationalrevolutionäre Bewegung in der Bundesrepublik* (Marburg, 2013), pp.13-14; Jan-Ole Prasse, *Der kurze Höhenflug der NPD: Rechtsextreme Wahlerfolge der 1960er Jahre* (Marburg, 2010), pp.25-34; 정대성, 「독일 뉴라이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서양사론』 129 (2016.6), pp.48-49.

서 5% 장벽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NPD의 연방의회 진입 좌절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66년 두 지방선거에서의 성공 이후 극우정당의 대두에 놀라 다양한 형태의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던 탓이다. 한편에서는 NPD 금지법안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피어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나치 트라우마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루어진 극우정당의 예기치 못한 도약에 맞서 치열한 반대캠페인이 벌어졌다.<sup>22)</sup> 의회외부저항운동(APO) 진영에서도 결연히 NPD 반대에 나서 '신나치와 복고에 맞서는 민주행동'을 결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결국, 69년 선거집회와 관련해 각종 폭력사태로 물의를 일으키던 NPD는 9월 카셀에서 APO 시위대와 맞서던 당 의장 경호원의 총기발사로 여론의 못매를 맞고 연방의회 진입에 실패하며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sup>23)</sup>

68운동의 주요 연구자인 크라우스하르(Wolfgang Kraushaar)는 NPD의 연방의회 진출 저지가 그동안 거의 무시된 APO의 주요 공적이라고 본다. 나아가 NPD가 실제로 연방의회에 진입했다면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탓에, 1969년 "사회자유주의 연정의 성립은 위협적인 민족민주당에 대한 APO의 반대운동 없이는 거의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평가한다.<sup>24)</sup>

여하튼, 민족민주당을 중심으로 뭉친 극우세력은 '돌아온 과거'에 다름 아니었다. 세계를 불구덩이로 몰아넣은 나치 역사의 악몽을 생생히 기억하는 APO 비판자들의 눈에 이 과거는 절대 현재로 호명되어서는 안 되는 '금단의 땅'이었다. 다행히 그 영토로의 입구는 다시금 봉인되었고, 돌아온 과거의 악몽은 기억으로 되돌아갔다.<sup>25)</sup>

#### IV. 위기의 현재: 6월 2일 사건과 민주주의 위기의 현실성

1967년, 대학생 베노 오네조르크(Benno Ohnesorg)가 시위 도중 경찰의 총에 사망하는 이른바 '6월 2일 사건'<sup>26)</sup>은 독일 민주주의 위기의 중요한 징후의 표현이었다. 특히 베를린에 팽배한 심각한 반공일색의 냉전 분위기 속에서 경찰과 공권력 및 정부는 인권이나 시위권 자체에 의문이 들 정도

22) Ingo Deffner, *Die Reaktionen der Parteien und der Öffentlichkeit auf die Wahlerfolge der NPD in der zweiten Hälfte der 60er Jahre* (München, 2005), pp.46-73; 정대성, 「독일 뉴라이트」, p.50.

23) Wolfgang Kraushaar, *Achtundsechzig: Eine Bilanz* (Berlin, 2008), pp.175-182; Prasse, *Der kurze Höhenflug der NPD*, pp.44-47; 정대성, 「독일 뉴라이트」, p.50.

24) Kraushaar, *Achtundsechzig*, p.286, 288. 반면 마누엘 사이텐베허(Manuel Seitenbecher)는 크라우스하르의 이런 주장에 반기를 든다. 즉 60년대 후반 민족민주당 반대 운동은 외연이 너무 넓어 APO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Manuel Seitenbecher, *Mahler, Maschke und Co.: Rechtes Denken in der 68er-Bewegung?* (Paderborn, 2013), p.209. 하지만, 사실 민족민주당 반대캠페인의 핵심 세력이 68운동의 APO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1969년의 연방선거와 민족민주당(NPD)을 다룬 상세한 설명은 Uwe Hoffmann, *Die NPD: Entwicklung, Ideologie und Struktur* (Frankfurt a.M., 1999), pp.117-133을 참조.

25) 하지만 지금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라는 포퓰리즘 뉴라이트 정당의 무서운 상승세 속에 독일은 엄청난 정치적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오는 2017년 가을 연방의회 선거에서 전후 처음으로 극우 성향에 가까운 이 뉴라이트 정당이 연방의회에 진출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게다가 AfD의 예상득표는 10%를 넘어, 기민기사와 사민당에 이어 제3당이 될 공산이 아주 높다. 정대성, 「독일 뉴라이트」 참조. 최근(2017.4.20.) 선거 여론조사 전문기관(Infratest dimap)의 발표에서도 AfD는 10%로 기민기사련(35%)과 사민당(30%)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http://www.wahlrecht.de/umfragen/> 참조.

26) Uwe Soukup, *Der 2. Juni 1967: Ein Schuss, der die Republik veränderte* (Berlin, 2017); Eckard Michels, *Schahbesuch 1967: Fanal für die Studentenbewegung* (Berlin, 2017); Pilzweiger, *Männlichkeit zwischen Gefühl und Revolution*, p.305f. 대학생 오네조르크를 겨냥한 총격은 단순히 한 사람만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았다.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물론이려니와, 정치적으로 활발했던 학생을 넘어 전체 학생 개개인의 분노를 야기했다. 학생들은 그 총알이 자신에게도 날아왔다고 느끼고 광범위한 '분노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Schröder Meinhard, *Mein 2. Juni 1967: Von der Studentenrevolte zum Kleingärtnerprotest* (Hützel, 2017), p.33. 6월 2일, 오네조르크가 총에 맞기까지의 사건 진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Soukup, *Der 2. Juni 1967*, pp.13-132; Michels, *Schahbesuch 1967*, pp.183-218을 참조.

로 강압적/폭력적이고 권위적인 대응과 정책으로 일관했다. 사망자는 사실 그 결과물인 것이다. 더  
불어 6월 2일 사건은 대학생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 진행을 포괄하는 일종의 ‘과정으로서의  
사건’이었다.<sup>27)</sup>

그를 증언한 것이 사건 직후 정치권 및 체제의 대응이다. 거의 만장일치된 목소리로 경찰의 폭력진  
압을 정당화하고 운동진영에 책임을 돌렸음이다.<sup>28)</sup> 주류 보수언론 역시 앵무새처럼 경찰과 정권의 편  
을 들었다.<sup>29)</sup> 이런 상황에서 6월 2일 사건은 독일 68운동의 핵불로 작용하고 시위와 저항이 베를린  
장벽을 넘어 전국으로 들불처럼 확산되었다. 결국 그해 연말 베를린 시장과 내무장관이 학생의 죽음과  
과잉진압에 책임을 지고 물러남으로써, 사건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운동진영의 판정승으로 종결된다.

사실, 사건의 발생과 더불어 저항과 분노를 집결시킨 주체 역시 의회외부저항운동(APO)이었다.  
APO의 핵심인 SDS(독일사회주의학생연합)를 필두로 수많은 대학생 단체들은 각종 시위 집회와 추  
모식을 조직하며 반기를 든다. 오네조르크의 죽음은 특히 학생층에서 미증유의 항의행동과 폭넓은  
연대의 물결로 이어지고, 물결 10만 명을 상회하는 대학생이 6월 2일과 9일 사이에 경찰의 야만성  
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다.<sup>30)</sup> APO 저항의 오랜 진원지이자 오네조르크가 적을 둔 베를린 자유대학  
(FU)의 총학생회는 술한 항의 및 연대의 편지를 받느라, 서독내 거의 모든 학생 대표단이 베를린 학  
생들과 ‘저항의 연대’를 천명했음이다.<sup>31)</sup> 수많은 학생 신문이 6월 2일 사건을 강한 비판 논조로 다  
루고 보도하는 한편,<sup>32)</sup> 다양한 정치색의 학생 조직과 각 대학 총학생회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서베  
를린 경찰의 행위에 십자포화를 날렸다.<sup>33)</sup>

27) 역사가 잔드라 크라프트(Sandra Kraft)는 이런 맥락에서, 학생들의 분노가 총을 쏜 행위자로서 경찰 쿠라  
스(Karl-Heinz Kurras)를 향한 게 아니라 소위 ‘파시스트적으로 비친 체제’를 겨냥한 것으로 본다. Sandra  
Kraft, *Vom Hörsaal auf die Anklagebank: Die 68er und das Establishment in Deutschland und  
den USA* (Frankfurt a.M./New York 2010), p.234. 라이너 로발트(Reiner Rowald)의 노래 「6월 2일」(2.  
Juni)에서도 운동 측의 분노와 상황인식이 잘 반영된다. “미망인 한 사람만 울고 있지, 아버지 없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네. 살인자는 어디에, 구타자는 어디에 있는 거야? [...] 경찰 구타 때문이 아니야, 그 명령 때문  
이 아니야. 책임은 저항에 맞선 투쟁을 독립한 체제와 사람들이 져야해.”[이탤릭 강조는 필자]. Werner  
Sellhorn (ed.), *Protestsongs* (Berlin 1968), p.60. 경찰의 총에 희생된 26세의 오네조르크는 기혼이었고  
아내는 임신상태였다.

28) 가령 당시 베를린 내무장관 같은 사람은 실제로 시위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경찰폭력을 일방적으로 승인  
하고, “사망자가 나와도 상관없다”며 놀랍고도 위압적인 발언조차 마다하지 않았다. Gretchen Dutschke,  
*Rudi Dutschke. Wir hatten ein barbarisches, schönes Leben. Eine Biographie* (München, 1998),  
p.118. 사실, 총을 쏜 사복경찰 쿠라스뿐 아니라 체제 전체가 정당방위를 주장한다. 시위 학생들이 먼저 공  
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Meinhard, *Mein 2. Juni 1967*, p.33.

29) 이런 보도의 선봉을 자처한 신문들은 운동진영과 어김없이 각을 세운 슈프링어 출판그룹에서 나왔다. 운동  
세력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숨기지 않은 슈프링어 신문들의 보도는 Jung, *Der Kampf gegen das  
Presse-Imperium*; 정대성, 「독일 68운동과 반(反)슈프링어 캠페인」 참조.

30) Kurt Nevermann, ed., *Der 2. Juni 1967. Studenten zwischen Notstand und Demokratie -  
Dokumente zu den Ereignissen anlässlich des Schah-Besuchs* (Köln, 1967), p.5.

31) 당시 팸플릿 »Flugblatt der FU«, 날짜 미상(1967년 6월 추정), in: APO-Archiv, Berlin FU Allgemein,  
FU/TU-Flugblätter, Juli-Oktober 1967. 독일 68운동과 관련된 베를린 자유대학의 역할이나 위상에 대해  
서는 윤용선, 「국가권력과 대학 - 냉전 시대의 베를린자유대 학생운동」 『역사와 문화』 29 (2015. 06), 115  
~143쪽을 참조.

32) 다음의 여러 학생 신문을 참조. *FU SPIEGEL* (Studentenzeitung der FU Berlin), Nr.58, Sonderdruck,  
Juni 1967; Bernhard Wilhelmer, »Bericht«, in: *FU SPIEGEL*, Nr.59, Juli 1967, p.3; R.M.S trecker,  
»Politischer Mord«, in: *DISKUS* (Frankfurter Studentenzeitung), Nr.5, Juli 1967, p.3; Georg Ahrweiler,  
»Polizei probt den Notstand«, in: *Marburger Blätter*, Nr.113, Juli 1967, p.3; »Der Fall Ohnesorg«, in:  
*notizen* (Tübinger Studentenzeitung), Nr.77, Juli 1967, pp.3-10; Hanjo Berg, »Dieser Tage in Berlin«,  
in: *skizze. studenten zeitung an der universität kiel*, Nr.4, Juni 1967, p.14f; Kerstin Leitner,  
»Westberliner Demokratie«, in: *Freiburger Studenten Zeitung*, Nr.4, Juni 1967, p.3f.

33) Gerhard Bauß, *Die Studentenbewegung der sechziger Jahre in der Bundesrepublik und  
Westberlin* (Köln, 1977), p.53f. 대표적인 도시로는 아헨과 보훔, 뒤셀도르프, 기센, 쾰른, 본, 하이델베르

물론, 경찰의 폭력진압을 옹호하고 학생들을 비난한 정치권에 대한 분노도 꼬리를 물었다. 가령 6월 5일 서베를린에서는 자유대학 총학생회가 베를린 시정부의 폭력적이고 관료국가적인 통치 행위를 비판하고,<sup>34)</sup> 괴팅엔에서 6천명의 시위대가 베를린 경찰의 야만적이고 비민주적인 태도<sup>35)</sup>를 도마에 올리며 “관료주의 국가를 통한 베를린 시민의 정치적 자율에 대한 침해”<sup>36)</sup>에 항의한다. 프랑크푸르트와 마르부르크 집회에서는 서베를린 학우와의 연대 성명서를 통해 “경찰 태도뿐 아니라 정치 대표자들의 태도”<sup>37)</sup>에도 날선 비판을 퍼부었다. 2천명이 참가한 6월 6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추모집회에서는 “베를린 시장 알베르츠를 즉시에 회부하자!”라는 현수막까지 등장한다.<sup>38)</sup> 이튿날 브라운슈바이크와 자르브뤼켄에서 수천 명이 모여 두 대학 역사상 최대 집회를 조직하는 동안, 기센에서는 2천5백 명의 학생들이 베를린 시장 알베르츠(Heinrich Albertz)와 내무장관 뷔쉬(Wolfgang Büsch)의 퇴진을 소리 높인다.<sup>39)</sup> 같은 날 쾰른에서는 상이한 정치 성향의 여러 학생 단체가 공동으로 조직한 오네조르크 추모 및 침묵행진이 벌어진다. 대학생뿐 아니라 조교와 교수들도 포함해 6천명이 함께한 이 행진은 결국 “베를린 시정부의 폭력정치에 반대하는” 거대한 집회로 이어진다.<sup>40)</sup>

이렇게, 의회외부저항운동(APO)의 중핵 SDS를 포함한 수많은 대학생 조직들은 베를린 경찰과 이를 옹호하는 체제 및 그 대변자들에게 신랄한 비판의 화살을 겨누고 운동의 폭발력을 배가시켜나갔다. 또한 그 출발점인 6월 2일은 “그 어떤 날보다 독일의 역사를 바꿔놓게 될”<sup>41)</sup> 서독 “저항운동의 핵심적인 날”<sup>42)</sup>로 역사에 이름을 올린다. 노팅엄 대학의 역사학자 닉 토마스(Nick Thomas)는 같은 맥락에서, APO의 저항을 불 지르며 68운동의 폭발점으로 작용한 오네조르크의 죽음과 6월 2일 사건이 “서독의 정치 지형을 불가역적으로 바꿔놓았다”고 강조한다.<sup>43)</sup>

여하튼, 사건 발생과 배경 및 진행과정의 향배를 보면 서독과 베를린 정권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와 정치가 명확해진다. 시위자의 죽음을 불사하는 폭력적 시위진압 자체가 얼마나 수월하게 승인되고 인정받는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는 민주주의 위기가 당대 독일에서 ‘현실의 문제’임을 의미한다. 정당한 의사표현 방식인 시위가 흡사 불법으로 간주되며 폭력으로 진압되는 ‘위기의 현재화’는

크, 뮌헨, 프랑크푸르트, 뮌스터, 에어랑엔, 다름슈타트, 슈투트가르트, 마부르크, 괴팅엔, 하노버, 함부르크, 빌레펠트 등을 꼽을 수 있다. 당시까지 종합대학이 없던 빌레펠트에서도 6월 6일 오네조르크를 추모하는 침묵시위가 벌어졌다. Hans-Jörg Kühne, *Bielefeld '66 bis '77: Wildes Leben, Musik, Demos und Reformen* (Bielefeld, 2006), p.14.

34) »Resolution der außerordentlichen Sitzung des XIX. Konvents der FU vom 5. Juni«, in: Nevermann, *Der 2. Juni 1967*, p.88.

35) Siegwald Lönnendonker, Tilman Fichter and Jochen Stadt (eds.), *Hochschule im Umbruch, Teil V: Gewalt und Gegengewalt* (1967-1969), p.15.

36) Tilman Fichter and Siegwald Lönnendonker, *Kleine Geschichte des SDS. Der Sozialistische Deutsche Studentenbund von Helmut Schmidt bis Rudi Dutschke* (Bonn, 2008), p.165.

37) Anne Rohstock, *Von der „Ordinarienuniversität“ zur „Revolutionszentrale“? Hochschulreform und Hochschulrevolte in Bayern und Hessen 1957-1976* (München, 2010), p.171.

38) Katja Nagel, *Die Provinz in Bewegung. Studentenunruhen in Heidelberg 1967-1973* (Heidelberg, 2009), pp.41-44.

39) Fichter and Lönnendonker, *Kleine Geschichte des SDS*, p.165; Lönnendonker/Fichter/Stadt, *FU. Teil V: Gewalt und Gegengewalt*, p.19.

40) Kurt Holl and Claudia Glunz (eds.), *1968 am Rhein. Satisfaktion und ruhender Verkehr. (Köln, 1998)*, p. 50f; Jeanette Seiffert, *»Marsch durch die Institutionen?« Die 68er in der SPD* (Bonn, 2009), p.76.

41) Michael Brenner, *Kinder der Verlierer. Erinnerungen einer Generation* (Norderstedt, 2010), p.130.

42) Meike Vogel, *Unruhe im Fernsehen: Protestbewegung und öffentlich-rechtliche Berichterstattung in den 1960er Jahren* (Göttingen, 2010), p.171.

43) Nick Thomas, *Protest movements in 1960s West Germany: A social history of dissent and democracy* (Oxford/New York, 2003), p.107.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권위주의 정권 및 정책과 쉽사리 동화되거나 비민주적인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을 잘 보여주었다.

결국, 이 사건을 둘러싼 APO 저항의 동원과 위력이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며 권위주의적인 정치의 확립을 저지했음을 보여준다. 68운동에 대한 연구사에서도 지적되듯,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서 독일 68운동은 서독사회의 근본적인 자유화나 근대화 및 민주화에 기여했던 것이다.

## V. 나가며

60년대 중후반 독일 민주주의는 심각한 시험대에 올려졌다. 첫째, 바이마르 시기의 혼란 속에서 히틀러 나치 정당의 독주에 길을 내어준 법안과 비견되는 비상사태법이 의제에 올랐고, 둘째로 나치 악몽의 역사가 끝나고 채 20년도 되기 전에 극우세력의 재정치화가 성공리에 진행되며, 셋째로 한 대학생의 죽음으로 연결된, 경찰이 시위대에 가하는 폭력의 행사가 쉽사리 용인된 정치사회적 환경이 백주 하에 드러났다. 즉 민주주의라는 옷을 걸치고 권위적이고 경찰국가적인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그 옷을 ‘민주주의 수의’로 탈바꿈하는 정치와 국가권력의 실체가 바로 민주주의 위기의 징후였으며, 독일 민주주의의 유약성이나 허약성의 결과이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험대는 68운동의 거부와 돌파에 힘입어 잠정적으로 종결되었다. 비상사태법은 애초보다 훨씬 약화된 형태로 통과되며, 민주주의의 거대한 구멍이 될 뻔한 악수는 피하는 타협적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극우의 발호를 넘어서는 반대운동의 열기와 결기 속에서 민족민주당(NPD)의 연방의회 진출도 극적으로 좌절되었다. 나아가 경찰국가라는 오명으로 비판된, 냉전반공의 이름 아래 횡행하던 공권력의 폭력과 권위주의 정권이 펼쳐나간 독선적 정치와 정책은 APO로 체현된 ‘의회외부’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해 결국 경로를 수정했다.

60년대 말 독일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닌지’를 질문하고 질타하는 68 저항운동의 궤기와 동원 속에서, 자유화와 근대화 및 다소 안정된 민주화로의 궤도에 진입하는 길을 다진 것이다. 즉, 68의 궤기는 놀라운 경제번영과 60년대를 건너가며 전후 민주주의로의 실험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던 서독에서 권위주의적 유산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무기를 앞세워 민주주의 각성 및 수호의 의미를 묻고, 의회주의의 만능을 경계하는 의회외부적인 비판과 저항이라는 거리의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 재장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만하다. 따라서 68의 문제제기와 투쟁은 서독사회가 권위주의로 점철된 과거의 유산과 유물을 털고, 좀 더 안정된 민주주의로의 행보를 위한 결정적인 전환점이자 분기점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또한 68운동의 주요한 유산과 교훈은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인식과 학습의 무대를 펼쳐보인 대목이다. 무엇보다, 위임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허술하고 대의제가 투표권 행사로 전락할 경우 민주주의 위기는 언제나 발생 가능하다는 말이었다.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참다운 비행을 위해서는 의회라는 날개뿐 아니라,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적인 목소리인 의회‘외부’의 비판과 압력이라는 살아 꿈틀대는 ‘매의 날개’도 필요하다는 생생한 역사적 가르침에 다름 아니었다.

독일 68운동의 구심점인 APO는 민주주의 후퇴와 위기를 탐지하는 지진계처럼 다방면을 가로지르며 궤기와 저항으로 ‘위대한 거부’의 현실성을 입증했다. 독일사회는 ‘APO의 위대한 거부’를 날개로 민주주의 위기 너머를 비행했다. 그 속에서 ‘해방의 가능성’이라는 역사적 지평도 한 뼘 더 넓혀졌다.

세기 전환기 반자본주의 운동과 신(新)사회운동의 딜레마 :  
탈(脫)물질주의와 문화주의 이론의 한계와 참여민주주의의 변질

박우룡(한국외대)

- I. 머리말
- II. 신 사회운동의 '새로움' 논쟁
- III. 왜 신자유주의적 전환인가
- IV. 도시의 대규모 시위
- V. 구 신 사회운동의 한계
  - 1. 탈물질주의와 문화주의 이론의 한계
  - 2. 민주주의의 변질
- VI. 맺는 말

I. 머리말

본 발표문은 20세기 후반 서구에서 발생하여 전개되어온 신(새로운) 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s)에 관한 세 번째 연구이다.<sup>1)</sup> 발표자가 이 주제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은 두 가지 동기에서였다. 그 하나는 2008년 봄 촉발된 '촛불 시위'에서 받은 깊은 인상 때문이었다. 당시의 시위는 '광우병의 공포'가 대대적인 시민 저항운동을 촉발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삶의 질'에 관한 절박한 위기의식을 '새로운' 방법을 통해 표출한 사회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공개적 토론도 없이, 각 개인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도 여겨졌다.

당시 '촛불 시위'가 전개되었던 방식은 서구의 '신 사회운동'과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운동은 19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는 동안 미국의 신좌파(New Left)<sup>2)</sup>의 새로운 가치관과 유럽의 68운동<sup>3)</sup>이 제기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념적 기반으로 발생한 운동이다. 이 운동은 "자신들의 경제적·계급적 이익과 무관하게"<sup>4)</sup>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유럽과 미국을 휩쓸었다. 중간계급이 다수를 차지한 그 운동의 참가자들이 우선적으로 추구한 것은 '삶의 질' 혹은 '민주적 절차'와 같은 문제들이었다.<sup>5)</sup> 여성운동, 학생운동, 반핵운동, 생태운동, 동물보호 운동, 평화

- 1) 발표자는 New Social Movements를 그동안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표현해왔지만 본고에서는 '신' 사회운동으로 부르기로 한다. 머리말은 주로 다음 글의 내용에 의존해 작성한다. 박우룡, 「서양의 '새로운 사회운동'의 역사」, 『역사학보』 제200호(2008.12), 165-168쪽.
- 2) 신좌파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두 문헌을 참조. 김봉중, 「신좌파운동」, 김덕호·김연진 엮음, 『현대 미국의 사회운동』(비봉출판사, 2001), 95-129쪽; Geoff Andrews, *New Left: taking the sixties seriousl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9).
- 3) 68운동의 지향점과 역사적 의미는 다음 문헌을 참조. 송충기, 「68혁명의 역사화」, 『역사비평』 제78호(2007), 68운동의 범국가적 기원, 유럽의 여러 국가별 시위, 운동의 확산과 범국가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근의 내용은 다음을 참조. Martin Klimke and Joachim Scharloth (eds.), *1968 in Europe: A History of Protest and Activism, 1956-1977*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 4) Joshua Gamson, "The Dilemmas of Identity Politics," Jeff Goodwin and James M. Jasper (eds.), *The Social Movements Reader: Cases and Concepts*(Oxford, Blackwell, 2003), p. 335.

운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그동안 알려진 신 사회운동은 정치적 혁명이나 노동운동 등 권력이나 물질을 추구한 과거의 운동 문화를 탈피해서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했던 운동이었다. 그러므로 그 운동의 내용과 실체를 본격적으로 파악해 우리의 운동과 비교해 보는 일은 우리 운동 문화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또 그 미래를 점쳐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겼다.

두 번째 동기는 신 사회운동이 우리의 현실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촛불 시위’ 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주제였기 때문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전대미문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뤘고, 짧은 기간의 급속한 성장이 불러온 허다한 사회·경제적 폐단을 겪어왔다. 국가 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억압되었던 노동운동이 뒤늦게 분출되었다면, 압축 성장은 근대화의 파괴적 효과를 보다 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을 보다 강력하게 촉발하고 있다.<sup>6)</sup>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서 다수 지식인이 이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sup>7)</sup>

첫 논문은 신 사회운동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그 역사적 기원, 구 사회운동과의 차이점, 민주주의관을 지적하고, 그 구체적 사례로 환경·평화·여성 운동을 들었다. 특히 이 운동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에 주목하였다. 이 운동은, 자유 민주주의와 정당 제도를 비판하면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대안은 바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즉, 풀뿌리 민주주의였다.<sup>8)</sup> 1960년대와 1970년대 나타난 ‘새로운’ 사회운동은 “민주주의의 부활”<sup>9)</sup>을 지향했을 뿐만 아니라, 역시 그들 자신들의 “내적 민주주의”<sup>10)</sup>를 크게 강조하였다.

이 세 번째 글을 쓰기로 한 것은 두 번째 글을 쓰면서 가졌던 의문 때문이었다. 발표자는 이들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과 문화 이론을 소개하면서 그 내용에서 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세기 전환기에 발발한 반자본주의운동(Anti-Capitalist Movement)들을 고려할 때, 또 2008년 금융위기가 세계를 강타한 이후 발생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2011)’ 시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는 현상을 보면서, 기존 신자유주의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이나 문화이론이 그러한 전 지구적인 시위들을 설명하는 데 모순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미 서구의 신 사회운동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본 발표는 우선 그에 관한 관점의 차이를 보고, 이러한 의문을 바탕으로 세기 전환기의 신 사회운동을 네 측면에서 재고찰 하려고 한다. 우선, 신 사회운동 연구자들 사이에 이 운동이 진정으로 새로운 운동이었는가의 여부를 두고 벌어진 논쟁을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2차 세계대전 이

5) 박우룡, 「새로운 사회운동 이론: 진정으로 ‘새로운’ 운동들인가?」, 『서양사론』 제117호(2013.6), 105쪽.  
6) 박형신, 「새로운 사회운동의 이론적 이해: 기원, 전개, 전망」, 김종길 외, 『새로운 사회운동의 이론과 현실』 (문월, 2000), 16쪽; 박우룡, 「서양의 새로운 사회운동의 역사」, 『역사학보』 제200집(2008.12), 168쪽에서 재인용.  
7) 새로운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은 1991년 가을부터 계간지 『사상문예운동』, 『사회와 사상』, 『현대사회』가 특별 기획과 특집으로 다루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잇달아 1992년 『경제와 사회』와 『현상과 인식』이 이와 관련된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면서 우리나라의 사례까지를 다뤘다. 저서와 번역서로는 정수복, 이병천, 박형준 등이 이 운동의 지적 기반에 관한 다양한 내용과 해석을 소개하면서 우리 지식계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주제에 관한 90년대의 지속적 관심은 박형신·조대엽 등의 사회학자들의 공저 『새로운 사회운동의 이론과 현실』(2000)을 통해 그 한 결실을 맺은 것으로 여겨진다.  
8) Greg Martin, “New Social Movement and Democracy” in Malcom J. Todd and Gary Taylor (eds.), *Democracy and Participation: Popular protest and new social movements*(The Merlin Press, 2004), p. 29.  
9) R. Eyerman (2002) “Music in Movement: Cultural Politics and Old and New Social Movements”, *Qualitative Sociology*, Vol. 25:3, p. 444.  
10) N. Crossley (2002), *Making Sense of Social Movements*(Buckingham: Oxford University Press), p. 150.

후부터 자본과 노동 간의 일종의 계급타협이 이뤄졌던 것이 1970년대부터 무너지고 신자유주의적 전환이 이루어진 이유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셋째, 신자유주의적 경제세계화가 촉발한 세기 전환기 도시들의 대규모 반자본주의 시위를 시애틀의 시위를 그 한 전형으로 파악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반자본주의 운동을 통해 이전 신 사회운동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과 문화주의 이론이 보인 한계를 지적하고, 기존 신 사회운동이 추구한 직접(풀뿌리) 민주주의가 다소 후퇴한 모습을 인식해 보려고 한다.

## II. 신 사회운동의 '새로움' 논쟁<sup>11)</sup>

신 사회운동이 과연 '새로운' 운동인가의 문제를 놓고 사회운동 연구자들 사이에 입장이 대립한다. 이 운동이 '새롭다'는 것은 “노동운동의 이데올로기적·조직적·제도적 틀을 벗어났다”는 것을 뜻한다.<sup>12)</sup> 잉글하트(Ronald Inglehart), 투렌느(Alan Touraine), 오페(Claus Offe), 멜루치(Alberto Melucci), 그리고 하버마스(Jurgen Habermas)와 기든스(Anthony Giddens) 등이 이러한 입장에 속한다.<sup>13)</sup>

신 사회운동의 초기 이론화를 주도한 잉글하트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균열은 그 사회에 내재한 근본적인 결함보다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산업화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약 20년간에 걸쳐 구미 여러 나라가 공전의 번영을 경험했다는 사실과 전면 전쟁이 없었다는 점이 특히 그러한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게 살며 식생활에 곤란을 겪지 않게 되면서 물질주의적 가치(material value)로부터 탈물질주의적 가치(post-material value)로의 '조용한 혁명'<sup>14)</sup>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잉글하트에 따르면, 이제 물질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되면서 산업사회의 계층체계를 반영했던 쟁점의 중요성이 저하되고, 이데올로기, 민족성, 생활양식 등이 점차로 중요성을 띠게 된다. 따라서 그는 신분정치, 문화정치, 혹은 '이상적인' 정치가 번창하여 계급정치는 쇠퇴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에 따라 정치적 항의세력 역시 새로운 중간계급의 성원들로 대체되고 있다.

투렌느와 멜루치 같은 문화주의적 접근을 시도하는 학자들은 탈산업사회 또는 정보사회가 갖는 통제 위협 또는 공포에서 새로운 갈등의 영역을 찾고 있다. 즉 고도 정보사회의 조작과 통제에 대한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추구운동이 바로 새로운 사회운동의 주된 갈등영역으로 설정된다. 즉 갈등이 경제적 산업적 체계에서 문화영역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투렌느는 현대사회를 통상적 의미의 '탈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라고 표현한다.<sup>15)</sup> 그는 탈산업사회와 '프로그램화된 사회(programmed society)'에 관한 문화주의적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현대사회가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노동과 자본의 계급갈등으로부터 기술관료제적 통제기구와 그로부터 배제된 사람들 사이의 갈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그러한 새로운 갈

11) 이 역시 발표자의 신 사회운동에 관한 다음 두 번째 논문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다. 「새로운 사회운동 이론 -진정으로 '새로운' 운동들인가?」, 『서양사론』 제117호(2013. 6).

12) 정수복, 『의미세계와 사회운동』(민영사, 1994), 213쪽.

13) 신 사회운동을 '새롭다'고 보는 이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적으로는 정수복 편역,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문학과 지성사, 1993).

14) Inglehart,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15) 투렌느의 새로운 사회운동에 관한 분석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 A. Touraine, 「노동운동의 제도화와 새로운 사회운동의 전개」, 정수복 편역,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2장.

등의 표현이 새로운 사회운동이라고 본다.

사회학자 멜루치(Alberto Melluci)는 과학과 정보체계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 사회운동은 물질적 생산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집합적 통제에 저항하는 자율성과 자기 정체성의 추구로 사회운동이 바뀌었다고 파악한다. 즉, 그는 지금 우리는 ‘복잡사회(complex society)’에 살고 있으므로 사회운동은 ‘일상생활의 민주화(democratisation of everyday life)’를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다.<sup>16)</sup>

한편 기든스에 따르면 이제 현대 사회운동의 목표는 착취와 불평등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에서 선택과 자기실현과 자기정체성의 새로운 추구로 바뀌어 가고 있다.<sup>17)</sup> 그의 용어로 표현하면, ‘해방의 정치(emancipatory politics)’에서 ‘삶의 정치(life politics)’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sup>18)</sup> 이처럼 탈물질주의적 가치관과 문화주의적 관점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주된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탈물질주의적·문화주의적 관점들에 대해 신 사회운동은 결코 노동운동을 대체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스코트(Alan Scott)와 밀리밴드(Ralph Miliband)는 각각 다원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앞의 관점들을 거부한다. 스코트는 대부분의 운동은 이미 과거에 존재했던 것이며 이익단체의 성격을 지닌다고 본다. 그리고 앞의 문화주의적 관점들은 운동의 초기단계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 시간이 지나면 제도권 내로 편입될 것이라고 본다.<sup>19)</sup>

밀리밴드는 스코트와 다른 입장에서 신 사회운동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이 사회운동은 노동운동이나 사회주의 정당이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절망과 요구와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지만 노동운동을 대치할 중심적인 사회운동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관점이다.<sup>20)</sup>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보수 세력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조직된 노동과 사회주의 좌파세력이지 결코 이 사회운동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운동을 배제한 신 사회운동만으로는 근본적인 개혁과 혁명적인 변동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sup>21)</sup>

이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지난 20세기 후반에 맹위를 떨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적 전환이 이루어진 경제적·정치적 세계질서에 대한 반발로 세기 전환기에 대대적으로 발생했던 반세계화 운동 혹은 반자본주의 운동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sup>22)</sup>

16) Martin, “New Social Movement and Democracy”, p. 30.

17) 정수복,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162-189쪽.

18) 정수복, 『의미세계와 사회운동』(민영사, 1994), 214쪽.

19) 정수복,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247-279쪽.

20) 정수복, 같은 책, 190-216쪽.

21) 정수복, 『의미세계와 사회운동』, 215-216쪽.

22) 이 논문을 전개하는 데 있어 우선 이 운동에 관한 호칭을 반세계화운동과 반자본주의운동 가운데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할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세계화운동으로 하려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비난받는, 현재의 경제적·정치적 세계화의 모습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하지만, “실제로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운동의 극히 일부만을 점하고 있다..... 대체로 그 운동을 반세계화 운동(Anti-Globalist Movement)이라고 부른다면 부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실제로 운동에 참가한 주요 그룹들 중 다수는 세계화를 수용한다. 그들은 정치적·경제적 세계화를 국제적 정치적 연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 대규모의 경제발전과 평등의 잠재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는 판스워스(Kevin Farnsworth) 등의 주장(Kevin Farnsworth, “Anti-Globalisation, Anti-Capitalism and the Democratic State” in Democracy and Participation, p. 56)을 고려할 때, 반세계화운동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반자본주의운동의 한 지도자이자 핵심 사상가인 몬비오투(George Monbiot)의 지적대로, 운동 내부의 어느 누구도 자신을 지칭하는 데 반세계화운동가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려고 하지 않는다.( J. Hari, 'Whatever happened to No Logo?', New Statesman, 11 November 2002; 15(732), p. 20.)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운동 내부의 많은 사람들은 세계화와 그와 연관된 신자유주의의 확산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상당수

### III. 왜 신자유주의적 전환인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반적인 국내 평화와 질서의 주요 보증자로서 자본과 노동 간의 '계급 타협'이 주창되었다. 서구의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관찰되는 전후 안정 조건의 하나는 상위 계급들의 경제적 힘이 제약되면서, 경제적 파이의 훨씬 더 많은 몫을 노동자들이 갖게 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소득자의 상위 1퍼센트가 갖는 국가 소득의 몫이 전쟁 전 17퍼센트에서 전쟁 직후에는 8퍼센트 이하로 떨어졌으며 거의 30년 동안 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sup>23)</sup>

서구의 선진국들은 이러한 새로운 분배구조를 기반으로 산업정책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다양한 복지체계(보건의료, 교육 등)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임금을 위한 표준을 설정하고자 했다. 이러한 형태의 정치-경제적 조직은 보통 "착근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sup>24)</sup>로 불렸다. 이 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 동안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sup>25)</sup> 이러한 경제 성장을 토대로, 잉글하트가 파악한 바대로, 이른바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새로운 사회운동의 중심 가치로 공유될 수 있었을 것이다.

성장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그러한 제약이 문제되지 않았다. 파이는 계속 커져갔으므로 상위계급은 그 파이의 안정적인 몫을 챙기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러나 1970년대 성장이 붕괴되어 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되고 매우 낮은 배당 및 이윤만을 받는 생활이 일반화되자, 세계 곳곳의 상위계급들은 위협을 느꼈다. 미국에서 국민 상위 1퍼센트에 의한 부의 통제는 (소득과는 달리) 20세기 전반에 걸쳐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자산가치(주식, 부동산, 저축)가 붕괴되면서 이는 급속히 무너졌다. 상위 계급들은 정치적·경제적 파멸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해야만 했다.<sup>26)</sup>

그처럼 한 세대의 기간 동안 순항하던 선진국의 정치와 경제는 1970년대에 와서 신자유주의화의 이론적·정치적 프로젝트에 의해 커다란 격동을 겪게 된다. 이론적 프로젝트는 저명한 오스트리아의 정치철학자 하이에크(F. A. Hayek) 주변으로 모여들었던, 주로 학계의 경제학자, 역사학자, 철학자 -미제스(L. Mises), 프리드먼(M. Friedman) 심지어 포퍼(Karl Popper)까지- 등 소수의 배타적이고 열정적인 집단이 참여한 몽펠랭회(Mont Pelerin Society)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생겨난 수많은 싱크탱크들과 시카고학파에서 그 이론화는 지속되었다. 그 이론을 기반으로 정치적 프로젝트는 1980년대에 대처주의(Thatcherism)와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의 정책들이 실행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자유주의화가 그 이론과 정책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하비는 그것을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중 두 번째가 실제로 지배적"<sup>27)</sup>이라고 하였다. 뒤메닐(G. Duménil)과 레비(D. Lévy)는 그에 관한 자료들을 세심하게 재구성한 뒤 "신자유주의화는 애초부터 계급 권력의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학자는 반자본주의(anti-capitalism)운동이라는 명칭이 반세계화운동보다 보다 적절한 표현일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해왔다.

23) David Harvey,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최병두 옮김,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한울, 2007), 31-32쪽.  
24) Harvey,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28쪽.  
25) P. A. Glynn Armstrong and J. Harrison, *Capitalism Since World War II: The Making and Breaking of the Long Boom*(Oxford: Basil Blackwell, 1991).  
26) Harvey,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33쪽.  
27) 같은 책, 36쪽.

였다”<sup>28)</sup>고 결론을 내렸다.

신자유주의화는 세계적 자본축적을 재할성화함에 있어서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가지지 않지만,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거나 또는 어떤 경우(러시아와 중국) 새롭게 창출하는 데 탁월한 성공을 보였다. 신자유적 주장의 이론적 유토피아주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들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체계로서 우선적으로 작동했다. 이 프로젝트의 구조적 함의로 간주되는 재분배 효과와 사회적 불평등의 증가는 신자유주의화의 지속적인 특징이 되었다.<sup>29)</sup>

#### IV. 도시의 대규모 시위

19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화가 본격화되면서, 미국에서 상위 1퍼센트가 전국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급상승해 20세기 말 무렵에는(제2차 세계대전 전의 몫에 가까운) 15퍼센트에 달했다(상위 0.1퍼센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8년의 2퍼센트에서 1999년에는 6퍼센트로 증가했다). 게다가 부시행정부의 조세 개혁의 효과가 드러나면서, 사회의 상층부로 소득과 부의 집중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세(부에대한 조세)가 단계적으로 철회되고 투자로 얻은 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가 감소한 반면, 임금과 급여에 대한 조세는 유지되었기 때문이다.<sup>30)</sup>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영국에서 소득자의 상위 1퍼센트는 1982년 이래 전국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을 6.5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배가 시켰다. 영국에서도 미국처럼 역진적 과세(regressive taxation)가 도입되었다.<sup>31)</sup>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에는 극빈층인 하위계급(underclass) 인구의 숫자가 급속히 불어났다.<sup>32)</sup>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목격되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미국은 투옥정책을 강행했고, 대처정권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경찰관 수를 대폭 늘렸다. 미국 북서부의 도시 시애틀에서 최초로 반자본주의 운동이 시작된 것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었다. 좀 더 넓게 살펴보면, 부와 권력의 비정상적인 집중을 거의 모든 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예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기습적으로 시행되었던 1990년대 러시아, 1992년 민영화 이후의 멕시코, 자유 시장 지향적 정책들이 채택된 후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비정상적으로 커졌던 중국, 1980년대 이후 상당한 불평등의 증가를 기록한 OECD 국가들, 세계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에서 가장 큰 증가를 보였던 동유럽과 독립국가연합(CIS)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빈민층의 생활수준도 국가별로 극단적인 격차를 보였다.<sup>33)</sup>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세력을 떨치게 된 신자유주의와 경제 세계화는 새로운 사회운동을 반자본주의 운동으로 변화시켰다. 90년대 중반에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더욱 거세진 신자

28) G. Duménil and D. Lévy, *Capital Resurgent: Roots of the Neoliberal Revolution*, trans. D. Jeffer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29) Harvey,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35-37쪽.

30) T. Piketty and E. Saez,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13-1998,”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2003), pp. 1-39.

31) 대처 정권 하에서 부가세 비율은 이전의 2.5퍼센트에서 17.5퍼센트로 크게 상승했다. 대신 고소득 자산가에 대한 세금은 80퍼센트 대에서 40퍼센트 대로 극단적으로 줄어졌다.

32) 미국의 하위계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이정우, 「미국의 하위계급 논쟁」, 『경제논집』(1999), vol. 38, no. 1; 영국에 관해서는 박우룡, 「영국의 하위계급 논쟁 -위험한 계급인가, 아니면 희생양인가?-, 『서양사론』 제78호(2003.9).

33) 국가 간의 빈부격차도 극심해져 최부유국들에 살고 있는 세계인구의 5분의 1과 최빈국들에 살고 있는 5분의 1 사이의 격차는 1960년대 30대 1에서 1990년대 60대 1, 그리고 1997년에는 74대 1에 달하게 되었다. Joseph Stiglitz,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New York: Norton and Co.), p. 225.

유주의의 세계화는 도시의 거대 시위를 연달아 촉발하였다.

이 운동들에 선행한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났었다. 1980년대 운동의 패배 경험이 사람들의 머리를 짓누르고, 운동이 ‘정체성의 정치’, 혹은 ‘단일 쟁점’ 운동으로 파편화된 동안에는 대처주의·레이거노믹스 등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저항을 보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동유럽의 국가자본주의 정권이 붕괴하자 1989년 미국의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다. 자유 시장 체제 - 신자유주의 - 말고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운동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여러 나라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반발하는 저항이 발생했다. 먼저, 1994년 1월 1일 멕시코 치아파스(Chiapas)에서 사파티스타(Zapatista)가 멕시코 중앙정부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다.<sup>34)</sup> 이듬해인 1995년 프랑스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총파업이 벌어졌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파업 중 하나였다. 노동자 2백만 명이 한 달 동안 파업을 벌였고 무려 5백90만 일의 작업 손실을 입히면서 우파 정부와 기업주들을 굴복시켰다. <르몽드>는 이 파업을 “세계화에 반대하는 최초의 투쟁”이라고 불렀다.

세기 말이 다가오면서 분산됐던 반 신자유주의 운동단체들이 결집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는 1998년 아딱(ATTAC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이, 미국에서는 ‘50년이면 충분하다’(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창설 50주년에 항의하는 의미에서)나 ‘세계는 상품이 아니다’가 결성됐다. 또, 노엄 촘스키, 아룬다티 로이, 하워드 진, 피에르 부르디외 등 현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로 보는 사상가들의 책이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

마침내 20세기 마지막 해인 1999년에 “세기의 시위”<sup>35)</sup>로 불리는 시애틀 전투(Battle of Seattle)가 일어났다. 이 시위는 11월 29일 저녁에 시작되었다.<sup>36)</sup> 시위대는 인간 띠(a human chain)를 만들어 운동장을 둘러싸면서 부채 위기의 치명적 효과를 극적으로 표현하였다. “부채의 사슬”에 대한 인간 띠의 상징은 제3세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캠페인의 하나였다.<sup>37)</sup>

시애틀 시위는 시위자들에게 세계적 교역시스템이 크게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세계적 무역 체제에 반대하는 한 주 동안의 도로 시위와 궤기대회를 불러왔다. 환경과 사회정의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들이 참가한 이 시위에는 “세계무역기구에서 구현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세계화의 실천”<sup>38)</sup> 속에서 신자유주의는 “공동의 적”<sup>39)</sup>으로 확인되었던 것이다. 이들 시위단체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 정책의 확산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반대를 드러냈다. 실로, 그들 시위들은 국제교역의 합의에 대해 대규모로 도전할 수 있는 능력과, 세계적인 인권, 노동권, 그리고 환경보호에 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신자유주의적 경제 세계화에 대한 저항의 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sup>40)</sup>

시위를 마친 참가자들은 그들의 가슴 속에 승리감을 안고 시애틀을 떠났다. 이것은 그 운동을 다

34) 이 반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문헌을 참조. Noam Chomsky, *Profit over People: neoliberalism and global order* (New York·Tronto·London: Seven Stories Press, 1999), 121-130.

35) Jackie Smith(2001), 'Globalising Resistance: The Battle of Seattle and the Future of Social Movements', *Mobilisation*, vol. 6:1 : 1.

36) 이그때 시애틀의 기업과 정계의 지도자들은 미식축구장에서 제 3차 세계무역기구 장관급 회담에 참가한 각국 대표단을 위한 정성들인 환영파티를 열고 있었다. 같은 시간, 수많은 시위대(경찰 추산 1만4천 명, 시위대 3만명 주장)가 시애틀의 차가운 폭우 속에서 노조 복장과 ‘세계무역기구를 반대한다’는 구호가 적힌 우의를 입고 운동장으로 행진했다.

37) Jackie Smith (2001) 'Globalising Resistance: The Battle of Seattle and the Future of Social Movements', *Mobilisation*, vol. 6:1 : 1.

38) I. Welsh (2000) “New Social Movements”, p. 55.

39) *Ibid.*, p. 56.

40) Smith, “Globalising Resistance”, p. 2.

른 운동으로 이어갈 동력, 즉 “진정한 시애틀 효과”<sup>41)</sup>였다. 시애틀 전투 이후 연속해 발생하는 도시 운동들을 분석할 때 시애틀은 어떤 설명에서도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sup>42)</sup> 찰턴(John Charlton)이 지적한 것처럼 시애틀의 시위는 여러 요인<sup>43)</sup>이 결합하여 전 세계에서 반향을 얻었다. “시애틀 전투를 목격한 많은 관찰자들이 ‘시애틀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sup>44)</sup>했던 대로, 시애틀의 시위에서 발견되는 운동의 패턴과 내용은 향후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도시운동들의 모델이 되어 그 영향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애틀에서 처음 촉발된 도시의 대규모 시위(Battle of Seattle, 1999)는, 제노바, 퀘벡, 멜버른, 프라하를 거쳐 바르셀로나(2002)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여러 대륙의 크고 작은 도시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운동은 2008년 서울에서 거대한 ‘촛불 시위’로 부활하였다. 같은 해 금융위기가 세계를 강타한 이후 수년 후 발생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2011)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금융자본주의의 세계화’가 초래한 폐단에 대한 전 지구적 반발을 표출했다.

그 운동의 성장과 팽창은 많은 인류를 깜짝 놀라게 했다. 알갭게도, 그것은 ‘좌파’ 정부들이 집권하고 있는 유럽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신속하고 강력하게 성장했다. 1998년 15개의 EU정부들 가운데 13개가 사회 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적 연대 세력이 집권을 하였다. 실로, 유럽에서 반자본주의 운동이 발생한 것은 이 정권들에 대한 다수 대중의 실망 때문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정권 대부분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계속 옹호하거나 열성적으로 추종하고 있었다.<sup>45)</sup> 클라인(N. Klein)의 지적처럼 “유권자들은 자유당, 노동당 혹은 민주-사회당 정부를 선출함으로써 보수주의적 흐름을 뒤집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경제정책은 여전히 바뀌지 않거나 혹은 국제적 기업들의 번덕에 훨씬 더 노골적으로 돌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sup>46)</sup> 이러한 상황에서 거대 운동들이 연쇄적으로 발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도시의 시위들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시위들의 운동 문화가 “현대성(modernity)”<sup>47)</sup>을 보였

41) John Charlton, “Action!,” Emma Bircham and John Charlton (eds.), *Anticapitalism: A Guide to the Movement*(London and Sydney: Bookmarks, 2001), p. 346.

42) *Ibid.*, p. 344.

43) 1. 전 세계의 활동가들이 모였다. 북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또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북서도시 시애틀 한곳으로 모여드는 경이로운 모습은, 앞으로 여러 대륙의 도시에서 열릴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전 세계의 활동가들이 먼 거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모여드는 한 선례로 자리 잡았다.

2.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성분을 가진 활동가들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수십 개의 환경·생태·제3세계 부채·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정치적·사회적 성분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데 모였다. 시위에서 외친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 세계 여러 지역으로부터 온 활동가들이 그 메시지들을, 단순히 미디어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직접 알리게 될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

3. 노동조합들이 다수 참가했다. 지난 반세기 이상의 기간 동안, 미국만 하더라도, 기업의 반동적 통제 하에서 노동자들의 정치적 시위가 차단되었다. 지배계급의 공격과 탈산업화로 말미암아 기업주가 노조를 탄압하면서, 노조지도자들을 소외시켜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시애틀로 가서 반신자유주의 시위에 가담하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다수의 노동자가 시위현장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끔찍한 일은 노동자들이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경찰에 두들겨 맞고 있는 시위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경우였다.

4.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위가 WTO가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실질적으로 막는데 있어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다.

5. 보다 중요한 요인은 시애틀에서의 승리가 가져다 준 긍정적 영향이었다. 2-3일 동안의 대규모 시위로 WTO의 회담이 중단되었다. 경찰의 폭력과 대규모 체포는 실망이 아니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체포된 자들은 희생자들이 아니라 영웅들이었다.

*Ibid.*, pp. 344-6.

44) *Ibid.*, p. 343.

45) Martin, “New Social Movement and Democracy”, p. 60.

46) N. Klein, *No Logo* (London: Flamingo, 2000), p. 341.

47) Martin, “New Social Movement and Democracy”, p. 31.

다는 점이다. 실로, 사회운동은 미디어와 정보 테크놀로지(특히 인터넷)를 통해 정치적 소통과 동원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것이다.<sup>48)</sup> 이메일의 사용으로 국제적 운동조직은 실질적인 연락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sup>49)</sup> 또 다른 현대성은 “적응력이 뛰어난 프리랜서 운동가들, 운동가들의 국제적 이동성, 배낭을 메고 코치들을 동반한 젊은 운동가들에서”<sup>50)</sup>에서 확인되었다.

## V. 구 신 사회운동의 한계

### 1. 탈물질주의와 문화주의 이론의 한계

시애틀에서 바르셀로나에 이르는 반자본주의 시위들을 볼 때, 신 사회운동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은 현대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각 시위의 참가자들은 신자유주의를 공동의 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가져다주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에서 찾았다. 또한 시애틀 시위에서 ‘인간 띠’를 만들어 제3세계의 부채 문제를 제기한 것도 탈물질주의적 가치관과 모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이 현실과 동떨어진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세기 전환기에 인류가 겪고 있는 빈곤의 문제를 고려할 때 더더욱 그렇다. 무엇보다도 빈곤은, “20세기 말의 빈곤의 세계화는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이다”<sup>51)</sup>, “어떤 다른 사회적 문제도 빈곤만큼 것처럼 학문적·정치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없다”<sup>52)</sup>는 말들에서 절감할 수 있듯이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의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잉글하트가 선도적으로 제시한 탈 물질주의적 가치관은 아직은 현실과 동떨어진 가치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잉글하트가 그러한 가치관을 도출한 국가들이 서구의 부유한 선진국 몇 나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에 불과<sup>53)</sup>하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그러한 가치관은 나머지 국가의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삶과는 전적으로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애틀 시위와 이후 연쇄적으로 발생한 반자본주의 시위에서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모습을 고려할 때, 신 사회운동이 계급정치의 시대가 끝나고 “노동운동의 이데올로기적·조직적·제도적 틀을 벗어난 것”으로 보는 관점이 성급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세기전환기 여러 대륙의 도시의 거대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 시위대 다수는 시위의 선봉에 서서 경찰의 공봉세례를 받으며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시애틀·프라하·니스·서울·퀘벡에서 시위가 일어나기 거의 5년 전에 거의 모든 대륙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들이 일으킨 대규모 정치적 파업과 시위들은 자본주의적 세계화의 영향과 제도에 대해 사회적으로 깊이 반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sup>54)</sup> 이러한 실상을 볼 때 노동운동의 시대

48) A. Scott and J. Street(2000), 'From Media Protest to E-protest: The Use of Popular Culture and New Media in parties and Social Movements',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Society*, vol. 3:2; p. 215.

49) M. Diani (2000), 'Social Movement Networks Virtual and Real',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Society*, vol. 3:3; pp. 394-6.

50) A. Beckett(2002), 'When Capitalism Calls', *London Review of Books*, 4 April; p. 21.

51) Michel Chossudovsky, *Global Poverty and New World Economic Order*(Third World Network, 1997), 이대훈 옮김, 『빈곤의 세계화(당대, 1998), 28쪽.

52) Vic George, "Globalization and Poverty," in George and Robert M. Page(eds.), *Global Social Problems* (Polity Press, 2004), p. 62.

53) Russell J. Dalton and Manfred Kuechler eds., *Challenging the Political Order: New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s in Western Democracies* (Cambridge UK: Polity Press, 1990), 박형신·한상필 옮김, 『새로운 사회운동의 도전』(한울 아카데미, 1996), 71-99쪽.

가 종결된 것으로 보는 신 사회운동 이론가들 다수의 관점이 옳지 않고, 오히려 앞에서 본 대로, “신 사회운동은 결코 노동운동을 대체할 수 없다”는 밀리밴드의 주장이 보다 현실적인 시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민주주의의 변질

또한 상당수 학자의 지적처럼 세기 전환기에 등장한 반자본주의 운동은 “그 조직들이 내적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며 그 구성원 사이에 위계질서를 만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sup>54)</sup>에서 기존 신 사회운동이 추구해온 참여 민주주의적 경향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 하에서는 참여 민주주의가 변질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이해관계가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서 진지한 민주주의적 토론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거대 시위역시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인다. 시위 지도부가 다양한 참가단체의 의사표현의 기회를 억제하고 단일 운동으로 거대 시위의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즉, 반자본주의 시위의 핵심 이론가인 몬비오프(George Monbiot)가 이끄는 지도위원회(Globalise Resistance steering committee)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반자본주의 운동의 단체와 조직에 관한 규정집(Directory of Groups and Organizations)<sup>56)</sup>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반자본주의 운동의 핵심조직들을 엄선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조직을 선정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소규모의 주요 집단들이 거명되고 있으며, 그것들은 영국과 북아메리카에 지역에 주로 근거를 두는 영어 웹사이트에서 언급된다. 규정집은 거기에서는 반자본주의 운동 단체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극소수 단체들(4개) -ATTAC (The Association for the Tax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for the Aid of Citizens), Friend of the Earth, Indymedia, the International Socialist Tendency - 에서부터 시작하라고 권한다. 이 단체들의 선정도 소수의 특정인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짐작된다.

다수 노동조합이 참여하면서 동행한 노동자들은 “맹목적 위계질서”<sup>57)</sup>를 가진다. 그 극단적인 예는 조합 지도부가 경찰이 폭력적 진압을 하는 시위현장으로 노동자들을 투입하는 경우이다. 또한 효율적 시위를 위한 명분으로 시위 지도부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통제와 운동방식을 추종한다. 시애틀 전투에서 제3세계부채 문제에 운동의 중점을 두면서 다른 단체들이 목소리를 낼 기회를 제한한 것이 그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 비민주적 관행은 시애틀 시위 다음 해 뉴욕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April 2000)에서 한 환경 운동가(Earth First!er)가 연설도중에 “시애틀은 생태운동에 한 재앙이었다”<sup>58)</sup>고 주장했던 데서 확인된다. 이처럼 거대시위에서 특정 운동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면서 개별운동에 제약을 가하는 비민주적인 관행이 자리 잡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VI. 맺는 말

세기 전환기에 신 사회운동이 반자본주의의 거대 운동으로 전개되면서 기존 신 사회운동의 이론

54) Kim Moody, “Unions,” in *Anticapitalism*, p. 291.

55) A. Beckett “When Capitalism Calls”, *London Review of Books*, 4 April(2002), p. 21.

56) "Directory" in *Anticapitalism*, pp. 271-290.

57)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지적은 다음 두 글을 참조 . R. Blaug “Blind Hierarchism and Radical Organisational Forms”. *New Political Science*, Vol. 22:3(2000), pp. 379-95; “Engineering Democracy”, *Political Studies*, Vol. 50:1(2002), pp. 102-16.

58) John Charlton, “Action!”, p. 345.

적 기반이나 참여 민주주의적 운동문화가 달라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반자본주의 운동에서 분명해진 사실은 기존 신 사회운동이 그 이념적 기반으로 삼는 탈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다른 물질적 이슈가 적극적으로 주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로드(Roland Roth)는 신 사회운동과 구 사회운동 사이의 구분이 너무 엄격하고, 최근의 신 사회운동 역시 실업, 무주택과 빈곤 같은 ‘옛’ 사회문제들을 중요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신 사회운동을 탈 물질주의적 문제들과만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한다.<sup>59)</sup>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이나 문화주의적 관점은 50-60년대에 서구에 도래한 풍요의 시대에 부유한 선진국들에서 생겨난 운동 이론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담론이 활기를 띠고 개진되었던 것은 신자유주의적 전환이 있기 이전이었다고 할 것이다. 수년간 반복된 도시의 거대 운동들은 자본주의의 지구적 확산에 따라 생겨나는 물질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sup>60)</sup> 이제 서구 선진국 몇 나라를 놓고 탈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신 사회운동의 핵심적 가치로 보는 기존의 관점이나 문화주의적 해석들은 전 인류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관점들 가운데서도 신 사회운동을 ‘후기 자본주의의 제도정치적 한계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오페의 시각은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정치에 시사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테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대 시위에 수많은 노동자 운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또 운동의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사례들이 구 신 사회운동이 추구하는 참여(풀뿌리) 민주주의를 변질시키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모습에서 아직 계급정치의 종말은 요원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기 이전 1970년대 후반에 계급정치의 종말을 선언했던 학자들의 생각은 오늘날에는 하나의 ‘고상한 꿈’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신 이 시위에서 주목되는 ‘맹목적 위계질서(blind hierarchism)’가 어떻게 구 신 사회운동이 강조했던 민주주의적 요소를 후퇴시켰는가를 제대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제 신 사회운동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세계화에 맞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 반자본주의 운동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현실에서, 한편으로는 운동을 뒷받침 할 새로운 가치관과 이론을 개발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민주주의적 요소를 변질시키지 않고 효과적으로 싸워야 하는가하는 기로에 서 있다. 하지만 여러 난국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점차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세계적 시민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으뜸가는 희망으로 보이고 있다.<sup>61)</sup> 신 사회운동의 미래는, 비록 오래된 말이지만, “효율적인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계급적·비 계급적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옛’ 요소와 ‘새’ 요소를 함께 묶는, 전략적 사회적 연대를 형성해야만 한다”<sup>62)</sup>는, 오페(K. Offe)의 주장을 고려한 데서부터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 사회운동의 가치관과 논리도 시의성 있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직 신자유주의가 일상을 지배하는 우리 현실에서도 올바른 사회운동의 방향과 방법론을 심사숙고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IMF 이후 20년 동안 우리 국민은 양극화의 빈곤, 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비정규직의 고통, 청년들의 심각한 실업난,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율, 무거워지는 가계부채

59) R. Roth, “New Social Movements, Poor People's Movements and the Struggle for Social Citizenship,” in P. Hamel, H. Lustiger-Thaler and M. Mayer (eds.), *Urban Movements in a Globalising World* (London: Routledge, 2000), pp.26-39.

60) Martin, “New Social Movement and Democracy”, p. 41.

61) K. Nash(2002), “Political Sociology Beyond the Social Democratic Nationstate”, *Sociology*, vol. 36: 2, p. 438.

62) K. Offe(1985), “New Social Movements: Challenging the Boundaries of Institutional Politics”, *Social Research*, Vol. 52:4, p. 835.

등 암울한 현실에 직면해 왔다. 지난 수개월에 걸쳐 흑한 속에서 전개되었던 ‘촛불 시위’에 우리 인구의 삼분의 일에 달하는 연인원 1700만 명이 참가한 것은 비단 독재 권력과 부정부패에 대한 저항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 모두의 가슴 속에는 세계 10위권의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으면서도 ‘헬조선’의 절망적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한날한시에 2백만 명의 대중이 시위를 하면서도 아무런 사건사고가 없었다는 점은 우리나라 국민의 시민의식이 선진화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뿌리 내린 자랑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2008년과 2016-17년에 보여 온 시위문화는 인류에게 21세기 시위문화의 한 전범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 시위대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와 관행의 굴레에서 모두가 벗어나야 한다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론을 모색하는 일은 지식인들의 몫이다.

## 아렌트와 소렐의 폭력론 비판 : 대안으로서의 고대 그리스 시민사회

최자영(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 I. 서언
- II. 근대의 합법적 조직폭력과 고대의 원심적 시민사회의 대립
  - 1. 사회적 폭력과 개인적(생물적) 폭력
  - 2. 고대 그리스 시민사회의 담론에 대한 비판
- III. 원심적 분권의 고대 그리스 시민사회
  - 1. 원심적 분권과 시민사회
  - 2. 시민과 노예 간 유동성과 신분의 중첩 가능성
- IV. 결론

### I. 서언

20세기 초 독일에서 태어나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는 나름대로 폭력(violence)과 권력(Power)의 개념을 구분했다. 폭력의 대립물은 비폭력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것이다. 이 때 폭력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목적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 권력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제휴하고 행동할 때 생겨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이미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 권력이 폭력을 사용할 때, 그 권력은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권력을 폭력수단으로 필사적으로 만회하려는 불가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이다. 더 급진적인 해석으로 나아가간다면, 폭력을 사용하는 권력은 이미 권력이 아니며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권력 세력이 아니라 폭력세력이 되는 것이다. 오히려 권력은 폭력에 대항하는 자들에게 있다. 권력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토론하고 함께 행동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제도화된 정치권력은 인민에 기초하는 것이면서, 인민의 의견과 행동에 좌우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렌트는 제휴하여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조응하여, 그로부터 생성되고, 그러한 능력의 상실과 더불어 소멸하는 것으로 권력의 개념을 설정했다.

아렌트는 20세기가 어떻게 인간의 고유한 행동 능력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폭력행동과 그 수단만이 특권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녀에 따르면, 근대사회는 사회구성원의 활동에 수많은 규칙을 부과하여 그것을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표준화, 획일화시킴으로써 행동능력을 크게 제약해버렸고, 개별적인 사적 영역이 확장됨으로써 함께 모여서 말과 행동을 통해 서로를 드러내고 집단적으로 교류하는 공적 영역이 소멸되었다. 아울러 노동을 예찬하고 그것을 지배적인 활동으로 형상화시킴으로써 정치적 행동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없애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이성'의 이름을 통해서 정당화되었다고 한다. 나아가는 필연적인 '진보'에 대한 믿음이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행동을 억압했으며, 오히려 '진보'를 핑계 삼아 그 외의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폭력의 일반화를 야기했다고 한다. 과학기술은 언제든지 인류전체를 전멸시킬 수 있는 고도의 파괴수단을 만들어냈을 뿐이다. 결국 폭력의 확산과 그 수단의 발전, 이 모든 것이 20세기 '진보'의 직

접적 산물이고, 남은 것은 권력은 무능하다는 역설(권력은 능력에 조응하는 것이므로)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아렌트는 행동능력을 복원함으로써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적 영역의 새로운 구축이다. 인간의 행동능력은 항상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언제 어느 곳에서도 발현될 수 있지만, 공적 영역을 통해서 그것을 안정적으로 제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렌트는 행동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정당성이 결여된 폭력의 대항마로서 권력의 개념을 설정하고, 그 권력은 각자의 행동능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공적인 제도의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의한다.

그러나 아렌트는 어떻게 그런 이상적 상태를 현실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필자는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할 수 없었던 아렌트의 한계가 바로 문제의 원인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렌트는 정당성이 없는 폭력이 난무하는 원인으로, 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 영역의 확대, 노동에 대한 예찬, 이성과 진보에 대한 믿음 등으로 정리를 했으나, 필자가 보기에 이것은 근원적인 원인이 아니라 원인에 따르는 현상에 불과하다. 즉, 함께 모여서 말과 행동을 통해 서로를 드러내고 집단적으로 교류하는 공적 영역이 축소된 것은 폭력이 난무하게 된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로 초래된 현상이므로, 그 근원적인 이유 자체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예찬도 인간의 자연성이 아니라 결과로서 빚어지는 한 이데올로기로서 강요되는 한 시대의 가치관일 뿐이다. 나아가, 폭력과 함께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 욕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하며, 이성과 진보에 대한 믿음 탓으로만 환원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대 고도의 파괴수단이 횡행하게 된 원인이 이성과 진보에 대한 믿음이라고 아렌트가 말할 때 그녀는 자신이 경계하고 있는 사회적 폭력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을 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아렌트가 제시하는 권력과 폭력의 이분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모순이 있다. 폭력은 물론 권력도 한 가지로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다. 각각이 다양한 목소리를 담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분쟁과 분열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아렌트는 숙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즉, 민중의 공적 소통의 장과 행동에 의해 권력이 결집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입장의 차이가 있을 때 그 권력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그녀에게 결여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그녀는 폭력과 권력의 이분법으로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아렌트는 바람직한 권력을 공동의 핵을 가진 공동감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sup>1)</sup>

이렇게 아렌트는 민중의 중지를 모은 정당성 있는 ‘권력’의 개념을 통하여 이른바 ‘정당성이 없는 폭력’을 지양하려고 했으나, 그녀에게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할 수 없었다. 필자가 보기에, 그 이유는 그 원인 자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아렌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서, 행동능력을 진작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환경의 구성이 선행 혹은 동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이른바 ‘권력’과 ‘폭력’을 서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권력 자체의 집중을 막음으로써 이른바 폭력의 피해를 방지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사회적 폭력’과 ‘생물적 존재로서의 개인의 폭력’을 구분하며, 그 가운데 특히 ‘사회적 폭력’을 담론의 주제로 구성하여 경계하고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개인이 갖는 폭력적 근성은 사회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서 삼가야 할 대상일 뿐이다. 그러나 사회적 폭력의 폐해는 원심적 분권의 구조를 통해, 혹은 조직적 폭력의 제거에 의해서 가능하며 그 한 전형을 바로 고대 그리스 시민의 정치체제에서 찾으려 한다. 아렌트는 노동자의 폭력적 행동의 ‘생

1)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 University of Chicago, 1958]. 이진우, 태정호 옮김 (한길사, 1996), p.271f.

디칼리즘'을 지지한 소렐을 비판적 입장에서 보았으나, 필자가 보기에, 소렐의 '생디칼리즘'에 대한 지지는 부르조아 국가권력의 타파에 의한 원심적 권력구조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아렌트의 참여적 다수에 의해 정당성을 갖는 '권력'의 개념보다 훨씬 더 적중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렌트와 소렐이 다 같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고대 그리스 사회 구조에 대해 일견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고대 그리스 시민사회가 남성과 여성 간 불평등, 노예노동에 기초하여 시민의 자유가 가능했던 비민주적인 사회 등으로 이해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은 불평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시민과 노예의 신분은 유동적이었고, 반드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중첩되기도 했다. 특히 아렌트는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사회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했으나 고대 그리스 사회는 양자가 분명히 구분된 사회가 아니었다. 아렌트가 폴리스와는 대조적인 사적인 영역의 하나로 이해했던 부족(phyle), 형제단(phratry)이 바로 그녀가 공적인 영역으로 이해했던 폴리스의 핵심을 이루었다. 폴리스는 이른바 사적 영역을 기초로 하는 하나의 의제적인 집단이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하면, 폴리스 시민사회는 정치권력 자체가 발달하지 않았으므로 공적, 사적 영역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렌트가 말하는 이른바 사적인 영역의 시민들이 공동체의 필요성을 위하여 구성된 민회가 정치의 핵심을 이루었을 뿐이다. 권력의 핵심을 시민단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중앙의 집권화된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차제에 원심적 권력구조에 입각한 고대 그리스 시민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노예, 여성 등의 존재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담론에서의 잘못된 인식 몇 가지를 아울러 지적하게 될 것이다.

## II. 근대의 합법적 조직폭력과 고대의 원심적 시민사회의 대립

### 1. 사회적 폭력과 개인적(생물적) 폭력

아렌트는 정치적 폭력을 '폭력의 조직화'와 동등하게 다루는 것은 국가를 지배계급의 손 안에 있는 억압도구로 보는 마르크스적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sup>2)</sup> 예를 들면, 라이트 밀즈(C. Wright Mills)가 "정치는 권력을 위한 투쟁이다. 그리고 그 권력의 궁극적인 본성은 폭력이다"라고 하거나,<sup>3)</sup> 막스 베버(Max Weber)<sup>4)</sup>가 "정당한, 다시 말해서 정당하다고 주장되고 있는, 폭력 수단에 기초를 두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로 국가를 정의하는 것이 그러하다.

이들과 다른 입장에서 폭력을 생물적 지배본능과 연관 짓는 사상으로 아렌트는 베르트랑 드 쥬브넬 (Bertrand de Jouvenel)의 저서 『권력』을 든다. 쥬브넬은 "시대의 흐름을 응시하는 자에 있어서 전쟁은 국가의 본질에 적합한 국가의 활동으로 나타난다"고 적고 있다.<sup>5)</sup> 이런 쥬브넬의 주장에 대해 아렌트는 "이 말은 전쟁 상태의 종말이, 그렇다면 국가의 종말을 의미할 것인가라고 즉각 반문 하도록 만든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폭력의 소멸은 권력의 종말을 초래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

2) 한나 아렌트, 『폭력의 세기』, p. 62f.

3) C. Wright Mills, *The Power Elite* (N.Y., 1956), p.171.

4) Max Weber, "Politics as a Vocation" in *Gesammelte Politische Schriften* (München, 1921), pp. 396-450의 첫 단락. 베버는 Brest-Litovsk에서 한 트로츠키의 "모든 국가는 폭력에 기반한다"라는 언급을 인용하고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진실이다"라고 한다. [한나 아렌트, 『폭력의 세기』, p. 63에서 재인용]

5) Bertrand de Jouvenel, *Power: The Natural History of Its Growth* (London, 1952), p. 122. [한나 아렌트, 『폭력의 세기』, p. 63에서 재인용]

기하고, 그 대답은 우리가 권력을 무엇으로 이해하는가에 달려있는 듯하다. 그런데 그 권력은, 결국 증명되듯이, 지배의 도구이며, 반면에 지배의 존재는, 이미 알고 있듯이, “지배본능(instinct of domination)”<sup>6)</sup>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또 쥘브넬은 “명령하고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없다면,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있다면 다른 어떤 속성도 권력이 존재하기 위해서 요구되지 않는다. [...] 없다면 권력이 존재할 수 없는 것. 그 본질은 명령이다.”<sup>7)</sup>고 한다.

그러나 권력 성립의 계기와 관련하여 아렌트는 생물학적 폭력의 기원에 관련한 논의를 거부한다. 즉, 폭력이나 권력은 자연적인 현상, 즉 생명과정의 발현이 아니라, 인간사의 정치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낳고 태어나는 것은 창조와 소멸이 아니라 동일한 것의 상이한 국면,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붙잡혀있는, 영원히 회귀하는 순환의 상이한 국면일 뿐이기 때문이다.

권력이 폭력과 동일시되는 전통적 개념에 따르면, 권력은 본성상 팽창주의적이다. 권력은 ‘내적 충동을 갖고’ 있으며, ‘성장본능은 권력 특유의 본능’이기 때문에 창조적이다.<sup>8)</sup> 파농이 폭력행동 속에 ‘창조적 광기’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여전히 이런 생물학적 전통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아렌트는 말한다. 아렌트는 정치문제에 있어서 권력과 폭력이 생물학적 개념들로 해석되는 유기체적 사유전통보다 이론적으로 더 위험한 것은 없다고 한다. 폭력이 창조성에 의거하여 정당화되기 때문이다.<sup>9)</sup>

아렌트는 폭력이나 권력은 자연적인 현상, 즉 생명과정의 발현이 아니라고 한다. 그것들은 인간사의 정치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동능력,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보증되는 인간의 특성이다. 나아가 그녀는 어떤 나라가 인구, 물건, 소유의 측면에서 더욱더 거대해질수록, 행정부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행정가들의 익명적인 권력의 필요성도 더욱더 증대할 것이라고 한다.<sup>10)</sup>

또 아렌트에 따르면, 폭력과 권력의 구별이 갖는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이로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저자가 알렉상드르 파스랭 당트레브(Alexander Passerin d'Entrèves)이지만, 그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당트레브는 “강제력은 적법(혹은 제도화)해졌다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해서, 강제력이기를 멈춘다”<sup>11)</sup>고 보았는데, 아렌트가 보기에 당트레브는 권력을 일종의 완화된 폭력 정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와 같이 정치적 차원의 권력을 논의하는 곳에 생물적인 본능에 기초한 폭력을 혼동한 채 논하면 안 된다고 하는 아렌트의 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아렌트는 이와 같은 전제를 기초로 하면서도 정작 논의의 핵심으로서 항상 다수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권력과 도구에 의존하는 폭력을 서로 구분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이 점에서 필자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모호하고 자의적인 ‘권력과 폭력’ 개념의 상호구분이 아니라, 사회적,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폭력과 개인 혹은 생물적인 본능에 기인하는 폭력을 서로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보기에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폭력에 대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해 정치사상가들이 참으로 무관심한 사실은 당트레브의 ‘적법한 강제’의 개념에서 증명된다. 당트레브는 ‘적법’하다는 것을 ‘제도화’된 강제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으나, 만일 제도화된 강제가 아렌트가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 소수에 의해 이루어지고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라면 그것은 정당성 없는 폭력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6) B. de Jouvenel, *Power: The Natural History of Its Growth*, p. 93.

7) B. de Jouvenel, *Power: The Natural History of Its Growth*, p.110. [한나 아렌트, 『폭력의 세기』, p. 62f.에서 재인용]

8) Jouvenel, pp. 114, 123.

9) 한나 아렌트, 『폭력의 세기』, p. 112ff.

10) 한나 아렌트, 『폭력의 세기』, p. 125ff.

11) Alexander Passerin d'Entrèves, *The Notion of the State: An Introduction to Political Theory*(Oxford, 1967), pp. 64, 70, 105 [한나 아렌트, 『폭력의 세기』, p. 64ff.에서 재인용]

당트레브는 ‘적법한’ 혹은 ‘제도화된 강제’는 강제(즉 비합법적 폭력)이기를 멈춘다고 했으나, 필자가 보기에는 그냥 적법하다는 개념은 아무 것도 말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아렌트는 당트레브의 이런 정의를 ‘완화된 폭력’ 정도로 이해하고, 더 구체적으로 다수의 동의에 기초한 정당성 있는 권력을 소수의 폭력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필자는 그냥 ‘소수’가 아니라 소수의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사회적 환경에 대한 반성이 따라야 하며, 그 반성은 군대 경찰 등 사회의 조직적 무력의 강화에 그 잘못 행사되는 폭력의 원천이 있다고 본다. 나아가 비정치적, 생물학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 폭력을 사회의 제도적 폭력과 혼동하여 같은 비중으로 다룬다면 사회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조직적 폭력에 기초한 정당성 없는 소수의 전횡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반성조차 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사회, 경제, 정치적 불평등의 구조를 가중시키는 데는 소수의 폭력이 큰 역할을 해왔으며 그 폭력의 현실적 근거가 바로 군대와 경찰 등의 조직적 무력이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자명한 것으로서 깨닫는 데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 2. 고대 그리스 시민사회의 담론에 대한 비판

바로 앞에서 아렌트는 “어떤 나라가 인구, 물건, 소유의 측면에서 더욱더 거대해질수록, 행정부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행정가들의 익명적인 권력의 필요성도 더욱더 증대할 것”<sup>12)</sup>이라고 한다. 이런 아렌트의 논의는 현대 국가의 규모가 커질수록 행정부와 익명성의 권력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게 되며,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폴리스) 체제는 이와 다르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아렌트의 논의는 시종일관 집중된 ‘권력’이 어떻게 정당성을 갖게 되는가 하는 데 관심을 두고, 이것을 다수의 동의로 설정했다.

아렌트에 따르면, 아테네 고대 도시국가가 자신의 정체를 ‘isonomia(법적 평등)’라고 하고 또 로마인들이 자신의 정부형태를 ‘civitas(시민국가)’라고 할 때 그들이 염두에 두었던 권력 및 법 개념은 그 본질이 명령-복종 관계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권력과 지배를 또는 법과 명령을 동일시하지도 않았다. 근대 공화국의 지배는 인민의 권력에 근거하면서 ‘노예에 적합한 정부’라고 여겨졌던 인간의 지배를 종결시킬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복종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으며, 그것은 법에 의한 복종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일반시민이 동의를 표하는 법, 즉 칼로 위협하여 주머니를 털거나 총으로 은행을 털 때에 범죄자가 기대하는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인민의 지지에 기초한 것이다. 모든 정치제도는 권력의 발현이자 물질화이며, 그것은 인민의 살아있는 권력이 떠받치기를 그만두자마자 화석화되고 부패한다. 이것은 메디슨(Madison)이 “모든 통치는 여론에 기초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sup>13)</sup>

아렌트의 권력은 인민의 지지, 혹은 여론에 기초한 집중된 상태를 뜻한다. 고대 그리스 사회의 권력구조에 대한 오해는 소렐에게서도 발견된다. 소렐에 따르면 사회당 후보자들은 가장 수가 많고 가장 가난한 계급에게 단일한 집단으로 뭉치라고 요구하며, 이 집단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선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상황과 그리 멀리 떨어져있지 않다고 한다. 의회사회주의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대중 선동가들, 즉 부채탕감과 토지 분배를 줄곧 외치며 부자들에게 온갖 공공부담금을 물리고 많은 재산을 빼앗을 수 있도록 음모를 꾸미는 대중선동가들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이다.<sup>14)</sup>

그러나 고대 그리스 사회는 구조적으로 근현대 국가와 차이가 있으므로, 민중과 부자 과두주의자 간의 투쟁을 현대적 계급투쟁으로, 또 그의 『정치학』에 언급되는 통일성의 개념을 근대국가의 권력 집

12) 한나 아렌트, 『폭력의 세기』, p.125ff.

13) 한나 아렌트, 『폭력의 세기』, 69f.

14) 한나 아렌트, 『폭력의 세기』, p.90.

중에 비유하기는 어렵다. 필자는 현대 정치의 질곡이 권력의 집중과 함께 그와 연관된 조직적 무력의 증대에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음에서는 원심적 권력구조의 고대 그리스 사회에 대해 일견하려고 한다.

### III. 원심적 분권의 고대 그리스 시민사회

#### 1. 원심적 분권과 시민사회

아렌트는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사회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폴리스의 경우 폴리스는 공적 영역이 되고 필레(phyle, 부족)와 프라트리아(phratría, 형제단) 등 혈족에 의존하는 사회는 사적 영역이 된다. 그녀의 말을 빌리자면,

Phratría와 phyle와 같이 혈족에 의존하는 모든 조직단위를 해체함으로써 폴리스의 토대가 구축된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었다.<sup>15)</sup>

그러나 이런 아렌트의 언급은 폴리스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녀가 폴리스와는 대조적인 사적인 영역의 하나로 이해했던 부족, 형제단이 바로 그녀가 공적인 영역으로 이해했던 폴리스의 핵심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폴리스의 시민이란 폴리스 자체에 시민 등록부 같은 것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족 혹은 형제단을 구성하는 하위 집단인 데모스(demos, 촌락) 혹은 가문 내부에서 합법적인 자식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성립된다.<sup>16)</sup> 또 아렌트가 말하는 형제단과 부족은 반드시 협의의 혈연조직이었던 것만은 아니고 일종의 ‘의제적’ 혈연조직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데모스’와 같이 지역적 촌락 단위로 구성되기도 했다.

폴리스 시민사회는 정치권력 자체가 발달하지 않았으므로 공적, 사적 영역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렌트가 말하는 이른바 사적인 영역의 시민들이 공동체의 필요성을 위하여 구성한 민회가 정치의 핵심을 이루었을 뿐이다. 권력의 핵심을 시민단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중앙의 집권화된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집권에 대조적인 개념은 분권이 되며, 흔히 분권이라고 하면 지방분권을 떠올리게 된다. 중앙에 집중되어 불균형한 권력구조를 개선하고 그 권력을 지방에 분산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사회의 분권은 중앙과 지방의 균형 뿐 아니라 위정자나 정치기구 자체가 가지는 권력을 나누어서 시민들이 공유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도 물론 시정해야 하겠으나 더 근원적인 문제는 정치권력의 독주이다. 지방분권이 된다고 해도 지방 차원의 정치권력의 독주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중앙이나 지방의 권력 행사의 폐해 자체를 줄이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민들 자신이 자신의 권리 행사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시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어 위정자의 권력을 견제했던 사회의 한 예가 고대 그리스 시민 사회이다.

#### 2. 시민과 노예 간 유동성과 신분의 중첩 가능성

아렌트에 따르면, 노예에 대한 주인의 지배는, ‘항상 노예가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우세한 강제수단에 근거했던 것이 아니라 우수한 권력의 조직화, 즉 노예주인들의 조직화된 연대에 근거했다’고

15)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p.76.

16) Cf. Aristoteles, *Athenaion Politeia*, 42.1ff.

한다.<sup>17)</sup> 아렌트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크세노폰의 『히에로』(*Hiero*)(4.3)를 들었으나, 크세노폰의 이 구절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이 문장의 의미를 “시민들 가운데 그 누구도 폭력적인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예 및 범죄자들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서로서로 경호원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데 있다”로 풀이 했으나, 그러나 원래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고 “노예가 시민을 죽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노예로부터 경제적 수입이 없거나 나쁜 사람(*kakourgoi*)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보살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sup>18)</sup> 즉, 노예들이 시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 죽이는 것이 되고, 노예는 주인들에게 경제적 의무를 제공할 뿐, 이 구절에서는 노예와 시민 사이의 어떤 폭력적 계급 대립의 개념은 들어있지 않다.

아렌트의 견해와는 반대로 고대 그리스의 사회계층이 시민과 노예로 이분화되어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정황이 있다. 무엇보다 자유인이 형편에 따라 노예(예속노동자)로 고용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속노동자(*doulos*)와 자유인(*eleutheros*)의 개념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맡은 역할에 따라 유동적이었던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크세노폰에 나오는 다음의 구절이다. 에우테로스는 전쟁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사람인데, 물려받은 재산도 없으므로 아티카에 정착하여 직접 일을 하고 살아간다. 소크라테스는 그에게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힘으로 하는 것 말고 다른 일을 구하라고 충고하면서 대화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소크라테스 : … 나이가 많아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당장에 구하는 게 좋겠소. 더 부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지배인으로 일하면서 수확을 거둬고 재산을 관리하는 게 말이오.

에우테로스 : 나는 노역(*douleia*)을 참아내지는 못할 것이오.

소크라테스 : 그러나 나라를 통치하고 공무에 종사하는 것은 예속적(*douloprepesteroi*)이기 보다는 더 자유로운(*eleutherioteroi*)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우테로스 : 한마디로, 소크라테스, 나는 어떤 사람 밑(*hypaitios*)에서 있고 싶지 않소.<sup>19)</sup>

#### IV. 결론

근대국가에서 잘못 행사되는 폭력에 대한 반성으로 20세기 초 이래 여러 가지 이론이 제시되어 왔다. 아렌트는 다수의 동의에 기초한 정당성 있는 권력을 소수의 폭력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설정했고, 나아가 당트레브는 ‘적법한’ 혹은 ‘제도화된 강제’는 강제(즉 비합법적 폭력)이기를 멈춘다고 함으로써 합법적 제도화된 강제의 개념을 제시했다.

그러나 아렌트의 견해와 달리, 필자가 보기에는, 정당성 있는 권력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권력 그 자체를 분산시켜야 한다. 더구나 당트레브가 말하는 ‘적법’ 혹은 ‘제도적 강제’의 개념은 설득력이 없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불평등한 경향이 있을 수 있고, 제도화되었다고 다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냥 ‘소수의 폭력’을 지양해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소수의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사회적 환경에 대한 반성이 따라야 하며, 소수의 폭력 행사를 현실적으로 가능

17) Hannah Arendt, 『폭력의 세기』, p.82f.

18) Xenophon, *Hiero*, 4.3. “Again, to all other men their fatherland is very precious. For citizens ward one another without pay from their slaves and from evildoers, to the end that none of the citizens may perish by a violent death.” [cf. ἀλλὰ μὴν καὶ αἱ πατρίδες τοῖς μὲν ἄλλοις ἀνθρώποις πλείστου ἄξια. πολῖται γὰρ δορυφοροῦσι μὲν ἀλλήλους ἀνευ μισθοῦ ἐπὶ τοὺς δούλους, δορυφοροῦσι δ' ἐπὶ τοὺς κακούργους, ὑπὲρ τοῦ μηδένα τῶν πολιτῶν βιαίῳ θανάτῳ ἀποθνήσκειν.]

19) Xenophon, *Memorabilia*, II, viii. 1~5.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군대 경찰 등 사회의 조직적 무력에 있음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비정치적, 생물학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 폭력을 사회의 제도적 폭력과 혼동하여 같은 비중으로 다룬다면 사회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조직적 폭력에 기초한 정당성 없는 소수의 전횡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반성조차 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그것은 사회, 경제, 정치적 불평등의 구조를 가중시키는 데는 소수의 폭력이 큰 역할을 해왔으며 그 폭력의 현실적 근거가 바로 군대와 경찰 등의 조직적 무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른바 소수의 폭력을 배제하고 다수의 동의에 기초한 정당성 있는 권력을 옹호한 아렌트와 달리, 소렐은 집권적 국가권력에 대해 반성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노동자 계급의 ‘생디칼리즘’ 운동을 지지했다. 그가 부르주아화하는 노동자계층의 대표, 의회 사회주의자를 비난했으나, 필자가 보기에, 이런 현상은 집권이라는 권력의 구조에서는 피하기 어려운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필자가 보기에, 노동자나 부르주아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권력의 집중과 분산의 구조적 문제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가 지지하는 ‘생디칼리즘’도 집권적인 권력구조 하에서는 한갓 꿈에 지나지 않으나 분권적인 구조의 환경에서 적중할 공산이 크다. 이런 원심적 권력구조는 합법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폭력을 제거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필자는 피력했다.

나아가 권력의 분산은 위정자들 혹은 정치조직 간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시민들에게까지 권력이 분배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가장 잘 도모할 수 있다는 아주 평범하고 자명한 이치에 입각한 것이다. 필자는 한 대안의 실제 모형으로서 원심적 권력구조의 고대 그리스 시민국가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그리스 시민국가의 자유 시민은 각기 무장을 하고 유사시에 전쟁에 임했으며 경제와 정치적 결정의 주체가 되었다. 이 도시국가가 갖는 사회구조의 의미는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있지 않았고 또 군대, 경찰 등의 조직적인 무력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민의 자유는 집권과 조직적 무력에 대조적인 한 방향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문제는 권력구조에 관련한 것일 뿐, 지역이나 국가 규모의 대소와는 무관하다. 국가규모가 크므로 권력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 남한 크기의 반 정도에 조금 못 미치는 스위스는 현재 직접 민주정의 나라이고, 하의상달 식으로 민의(民意)가 중심이 되는 분권형 권력구조에 입각해있다. 이곳은 영세중립국으로서 국가의 군대조직이 크게 발달되지 않고 시민이 자체무장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조직적 무력의 강화와 반비례하는 사실을 현대의 스위스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또 근대국가는 반드시 집중적인 구조에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문제는 근대 국가는 집권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구조의 근대국가를 만드는가 하는 데 있고 그것은 우리의 소원과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또 시민의 자유가 노예노동을 기초로 가능했다든가, 혹은 남성 시민과 달리 여성은 종속적이었으므로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사실 자체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엉뚱한 데로 돌리는 것이다.

시민과 노예의 사회적 지위는 항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중첩적일 수도 있었다. 그리스의 노예 개념은 훗날 군사적 지배의 제국이었던 로마제국과는 아주 다르다. 즉 신체적 자유가 없는 고착된 신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 조선조의 계약직 ‘머슴’ ‘하인’ 정도로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자유 시민이 중심이 된 그리스 사회 노예의 개념은 훗날 조직적 무력의 지배체제였던 로마제국 하에서 전형적으로 발달된 노예제도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 또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관련해서도 여성은 종속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고, 남성과 같이 ‘시민’의 자격을 가졌다. 위정자들의 권력 자체가 발달하지 않았던 원심적 권력구조에서 여성은 사회경제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민사회에서는 남성들의 군대복무, 투표권 등은 의무적인 성격이 강했고 오히려 그런 면에서 여성들이 혜택을 보았던 점도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

## 제7부 서양사의 거울로 본 한국 민주주의

---

좌장: 곽차섭(부산대)

▶ 5.18광주항쟁의 성격과 세계사적 위상

발표: 최영태(전남대)

▶ 종합토론:

나인호(대구대) / 김동춘(성공회대) / 박태호(서울과기대)



## 5.18광주항쟁<sup>1)</sup>의 성격과 세계사적 위상

최영태(전남대)

1. 머리말
2. 한국 민주주의 발달사의 특징
2. 한국 민주주의와 광주항쟁
3. 광주항쟁의 세계사적 위상
5. 맺음말

### 1. 머리말

민주주의는 국민을 정치의 주체로 삼는 정치이념이자 제도이다. 이런 정치제도가 수립되는 과정에는 계몽주의와 시민혁명 그리고 국가마다의 다양한 민주화운동이 있었다.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대부분의 선진 민주국가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는 19세기부터 모습을 드러냈다. 보통선거제가 정착된 것은 그보다 더 늦게 20세기 초였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비로소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했고, 이들 국가들 중 현재까지 민주주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모든 사실들은 민주주의가 결코 간단치 않은 제도임을 말해 준다.

한국도 1980년대 중반까지는 군부독재정권하에서 신음했고 이런 측면에서 다른 제3세계 국가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특히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남한에서 사이비 민주주의자들은 남북대립의 특수성을 악용하여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위협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런 악조건에 굴하지 않았다. 4.19혁명, 반유신투쟁과 부마항쟁, 5.18광주항쟁, 6월항쟁 등에서 보듯 민주주의 발달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은 부단히 이어졌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평화적 정권교체가 계속되었고, 이와 함께 절차적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 2016-2017년 촛불혁명과 2017년 5월 10일 민주정부의 수립은 한국 민주주의가 그만큼 성숙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런 민주주의 발달사는 제3세계 민주화운동사에서 특별한 위상을 갖게 만들었다.

5.18광주항쟁은 이런 한국 민주화운동의 한 복판에 위치한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군부독재세력들은 색깔공세를 펼치고, 민주화세력들에 총칼을 들이대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국 민주주의가 처한 악조건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순간이었다. 광주시민들은 이런 만행에 처음에는 맨손으로, 나중에는 총을 들고 대항했으며 비록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계엄군을 물리치고 시민자치공동체를 일구었다. 도청 앞에 모여 민주주의를 외친 수십만 시민, 부상자 구제에 동분서주한 의료인들, 헌혈을 자청한 시민들, 주먹밥을 만들어 제공한 양동시장 아주머니들, 5월 27일 죽음을 각오하고 도청에 남아 산화한 시민군 등 5.18광주항쟁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치열성과 절제, 품격을 모두 간직했다.

1) 5.18은 '5.18민주화운동' 혹은 '5.18민중항쟁'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필자는 이 글에서 5.18을 5.18광주항쟁으로 표기한다.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최영태, 「5.18항쟁의 명칭문제-‘광주’와 ‘민중’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5/3(2015)를 참조하기 바람.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민주화세력들은 광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해 1980년대 내내 싸웠고 특히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광주항쟁과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를 이끌어냈다. 5.18광주항쟁은 1980년 일시적으로 실패했지만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승리했다. 광주항쟁이 한국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원동력으로 승화된 결과였다. 이처럼 광주항쟁은 한국 민주주의의 수난 및 이를 극복하고 제3세계 민주화운동의 모범으로 부상한 과정을 압축적으로 말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이 글은 먼저 한국 민주화운동사의 특징을 살피고, 이어서 광주항쟁이 한국 민주화운동사에서 갖는 위상과 의미를 살피며, 마지막으로 광주항쟁의 세계사적 위상을 살필 것이다.

## 2. 한국 민주주의 발달사의 특징

1919년 상해임시정부는 새로운 정부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했다. 해방 후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큰 틀내에서 각자의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소비에트식 사회주의를 지지했다. 이 가운데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승만과 보수주의자들이 권력을 잡는데 성공했고 이에 따라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으로 실험되기 시작했다.<sup>2)</sup>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은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했고 21세 이상 성인남녀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으며, 3권분립의 원리를 채택하는 등 민주국가의 헌법으로서 손색이 없었다. 서구식 민주주의의 경험은 없었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모토로 하는 민본주의의 전통과 조선시대의 3사 등은 서구식 민주주의의 실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싱가포르 수상인 지낸 리관유(李光耀)와 말레이시아 수상을 지낸 마하티르(Mahathir bin Mohamad) 등 일부 아시아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유교문화 등 아시아적 가치가 서구식 민주주의와 양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sup>3)</sup> 한국에서 유교문화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체가 된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그 나라 민주주의 수준은 국민의 민주적 소양과 비례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잠시 영국과 프랑스의 민주주의 발달사를 상기하고자 한다. 영국은 1688년 명예혁명 및 1689년의 권리장전 선포와 함께 입헌군주제의 역사를 시작했다. 그런 영국에서도 보통선거제가 완성되는 데는 수세기가 소요되었다. 1832년 제1차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이 부르주아지들로 확대되었고, 1867년 제2차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공업 노동자들로, 1884년 제3차 선거법 개정을 통해 농업노동자들로, 1918년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성인 남자와 30세 이상 여성에게, 그리고 1928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마침내 모든 성인 남녀에게로 선거권이 확대, 완성되었다.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은 점진적이었고, 선거권의 쟁취는 수혜 당사자들의 요구와 투쟁에 의해 달성되었다.

민주주의의 또 다른 모범국가인 프랑스의 민주주의 발달사 역시 민주주의가 결코 쉬운 제도가 아님을 말해준다. 1789년 대혁명, 1799년 보나파르트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 쿠데타와 독재, 1814년 군주제로의 복귀, 1830년 7월혁명, 1848년 2월혁명과 그 직후 나폴레옹 3세(Napoleon III)의 독재, 1870년 보·불전쟁과 패배, 1871년 파리코뮌 등 80여 년 동안 수많은 정치적 격변을 겪었다. 1930년대 파시스트들의 준동, 2002년에 이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전선(Front

2) 김영명, 『한국현대정치사』(을유문화사, 1999), 85-86쪽.

3) *Foreign Affairs*(1994. 3-4월호), 109-126쪽 참조 ; 이행, 「민주적 공고화와 아시아적 가치」, 『21세기 정치학회보』 15/3(2005), 187-188쪽; 김성건, 「아시아 세기의 도래와 아시아적 가치」, 『아시아연구』 14/1(2011), 85-86쪽.

National) 후보들의 결선투표 진출 등 프랑스 정치사는 파란만장했다.

우리는 영국, 프랑스 등 선진 민주국가들의 정치사 일부를 통해 민주주의의 운용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발견했다. 다음에는 권력구조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다.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케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은 내각제를 운용하고 있다. 1958년 드골(Charles De Gaulle)의 요구에 의해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바꾼 프랑스는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내정은 총리에게 맡기는 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 부분 제한했다. 순수 대통령제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오로지 미국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처음 헌법을 제정할 때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놓고 저울질하다가 이승만의 요구에 따라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채택한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미국 대통령제와 다르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중앙정부는 주로 지방정부가 담당할 수 없는 업무를 담당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 거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이에 따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권한도 그만큼 크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대통령 예산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의회가 예산안 심의에서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지출액을 늘리거나 새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사실상 반쪽 심의권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공직자를 임명할 때 대통령과 각 주 정부를 대표하는 상원 사이에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다. 상원의 인준을 필요로 하는 공직자로는 장·차관, 연방대법관, 연방검사, FBI 국장, CIA 국장, 대사·공사·영사 등 약 1,200여개에 이른다.<sup>4)</sup> 우리나라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무총리 외에는 국회의 동의를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권력분산과 견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안창호 재판관은 우리나라 제6공화국의 헌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권력형성’의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대통령 ‘권력행사’의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과거 권위주의적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편성·제출권, 광범위한 행정입법권 등 그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피청구인의 리더십 문제와 결합하여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가능하게 하였다.”<sup>5)</sup>

남북분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어렵게 만든 최대의 장애물이었다. 이승만 정부의 반공정책에 이어 1961년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와 정치군인들은 “반공을 국시의 제일(一)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고 선언했다. 1972년 박정희는 북한과의 체제경쟁 승리 및 공산주의 침략 저지를 명분으로 유신체제를 선포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1980년 전두환과 신군부가 5.17비상계엄확대조치를 취하고 광주에서 학살을 자행하면서 내건 제일 큰 명분도 북한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역대 독재정부와 극우보수 세력들은 걸핏하면 남북분단을 이유로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화운동 세력들을 용공시켰다. 1987년까지 지배권력은 전쟁 공포의 항상적인 동원을 통해 비상체제를 구축하였고, 한국 사회에서 국가 안보라는 말은 냉전질서하의 국가 간 대결체제를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내부의 사회적 관

4) 실제로 청문회가 열리는 대상은 600여개로 추정된다.

5) 『헌법재판소 결정문』(2017. 3. 10)

계를 설명하는 개념, 즉 내부의 적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의미했다.<sup>6)</sup>

반공 이데올로기 중에서도 가장 극단화된 형태는 ‘빨갱이’ 논리이다. 빨갱이 논리는 공산주의자를 포함한 좌익의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의식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sup>7)</sup> 빨갱이 논리의 적용대상은 때로는 좌파만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비판자나 정치적 경쟁자들까지로 확대된다. 빨갱이 논리는 정권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자들을 경쟁상대가 아니라 적과 동일시함으로써 학살의 집행자들을 법적·도덕적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다.<sup>8)</sup> 1948년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6.25전쟁 중 벌어진 보도연맹원 사건, 그리고 1980년 광주학살사건 등 해방 후 다반사로 저질러진 무자비한 민간인학살은 대개 이런 빨갱이 논리의 포로들에 의해 저질러졌다.<sup>9)</sup>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 부족, 중앙정부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구조,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는 1948년부터 1987년까지 많은 정치적 격변을 겪었다. 1948년 제주 4.3항쟁, 1960년 4.19혁명, 1961년 5.16쿠데타, 1972년 유신체제, 1979년 부마항쟁, 10.26사태, 1987년 5.18광주항쟁, 1987년 6월항쟁 등 지난 40여 년 동안 큰 사건만 하더라도 여덟 번이나 경험했다. 한국의 이런 정치사는 1789년 프랑스대혁명부터 1871년 파리코뮌까지 격변의 연속이었던 80여 년 동안의 프랑스 정치사를 상기시킨다.

그러나 1987년 6월항쟁 이후 한국 정치사는 그 이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그때그때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6월항쟁 이후 한국 정치사는 전체적으로 볼 때 민주적·점진적·평화적 발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1987년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1992년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의 이행, 1997년의 수평적 정권교체, 2016-2017년의 촛불혁명은 한국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안정 궤도에 도달했음을 시사해 준다. 영국의 점진적·민주적·평화적 정치발달사를 상기하게 만든다. 민주주의 경험의 축적, 경제발달에 따른 중산층의 증대, 한국인의 우수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 그 이전 독립했던 라틴 아메리카 국가 등 100여개 이상의 국가들이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 중 현재까지 민주주의 제도를 안정적 수준으로 정착시킨 국가는 거의 없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1987년 이후 한국이 유지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헌정질서 유린에 맞서 민주적·평화적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 낸 한국인의 민주적 성숙성은 다시 한 번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3세계의 모범으로 자리 잡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한국의 이런 민주주의의 발달, 그리고 국민의 민주적 성숙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큰 전환점 역할을 한 것은 1980년 5.18광주항쟁이었다. 다음 장에서는 5.18광주항쟁의 성격 및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갖는 위상을 살펴보겠다.

### 3. 한국 민주주의와 광주항쟁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사상이자 제도이다. 간접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국민이 주인

6) 조희연, 「국가폭력·민주주의 투쟁·희생에 대한 총론적 이해」, 조희연 편,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함께 읽는 책, 2002), 71쪽.

7) 김동춘, 『전쟁과 사회-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돌베개, 2000), 280쪽.

8) 최호근, 『제노사이드』(책세상, 2005), 390쪽.

9) 조현연은 한국현대사를 가리켜 국가폭력의 역사이자 살(殺)의 정치사였으며, ‘광기가 지배해온 야만의 역사’였다고 규정했다. 조현연, 『한국현대정치의 악몽-국가폭력』(책세상, 2000), 11쪽.

노릇을 할 수 있는 핵심적 장치는 선거이다. 우리 헌법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권선언 제21조는 국민의 대표를 자유롭게 선출할 권리까지도 인권의 범주 속에 포함시켰다.

1. 모든 인간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투표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서 표현된다.<sup>10)</sup>

그러나 1972년에 수립된 유신체제는 국민들이 직접 또는 자유롭게 정부를 구성할 권리를 박탈하였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능률적인 국회 상을 정립한다는 명분 아래 국회의원의 1/3은 사실상 대통령이 지명하였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체제 부정자로 취급받거나 긴급조치 위반죄로 처벌받았다. 유신체제는 또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를 훼손하였고, 정적과 민주화세력들을 체포, 구금, 고문하였으며,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해 각종의 차별을 가했다. 그것은 자유주의 사상에 토대를 두지도 않았고 민주주의 제도도 아니었다.

유신체제의 주인공인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직후인 1980년 봄, 민주화세력들은 유신체제에 의해 박탈당한 자유를 되찾고 국민이 직접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과 정치군인들은 국민들의 이런 권리 되찾기 운동을 외면했다. 그들은 오히려 5·17비상계엄확대조치를 통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민주화운동을 물리력으로 진압했으며, 민주화세력들을 체포, 구금, 고문하였다.

광주시에 소재한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에 진주한 계엄군은 5월 17일 밤 대학 교정에 남아있던 학생들을 구타하며 학교 밖으로 쫓아냈다. 그들은 다시 18일 아침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5.17비상계엄확대조치를 비판하는 학생들을 구타하고 체포했다. 계엄군의 만행은 18일 낮부터 더욱 기승을 부렸다. 공수특전단들이 광주 시내 곳곳에서 시위 가담자들을 두들겨 패고, 체포했다. 학생과 시민들이 계엄군의 만행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감행하자 계엄군은 급기야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다.<sup>11)</sup> 5월 21일 낮에는 도청 앞에 모인 수십 만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까지 행했다. 5월 27일까지 10일 동안의 항쟁 기간에 300여명의 사망자와 5,0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다.”<sup>12)</sup> 불행히도 1980년의 5월의 광주는 인권이 법에 의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이었고, 광주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봉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민군이 등장한 것도 이런 배경 하에서였다.

폭정에 대한 저항의 정당성을 주장한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동양에서는 일찍이 맹자가 민본주의와 왕도주의에 기초를 두고 폭정이나 학정을 일삼는 군주에 대한 역성혁명론을 주장하였다. 서양에서도 이미 그리스시대부터 저항권 사상의 싹이 트고 있었다. 근대에 접어들어 존 로크(John Locke)는 사회계약론에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권력을 남용했을 때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며, 정부는 해체되고, 계약 당시 정부에 이양되었던 자연권은 다시 국민의 수중에 되돌아온다고 말하였다. 이것이 저항권이며, 혁명사상이다.<sup>13)</sup> 동서양 모두 오래 전부

1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인권이란 무엇인가-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오름, 1995), 18쪽.

11) 최정기, 「5.18항쟁에서의 국가폭력」, 나간채·강현아 편, 『5.18항쟁의 이해』(광주광역시, 2002), 106-125쪽.

1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인권이란 무엇인가』, 13쪽.

13) 정태호, 「저항권행사로써의 5.18항쟁」, 나간채·강현아 편, 『5.18항쟁의 이해』, 172-173쪽.

터 지배자가 행사하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신탁된 것이어서 지배자가 신탁된 직무를 행사할만한 품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 드러나면 신탁된 권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상이 유행한 것이다.

1980년 광주항쟁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국민들은 광주에서 계엄군이 저지른 만행에 전율하였고, 계엄군의 폭압에 맞서 싸운 광주시민들의 용기와 투쟁에 감동했다. 5월 27일 새벽,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전남도청에 남아 싸우다 산화한 민주 열사들은 민주화세력들에게 큰 감동과 동시에 깊은 부채감을 안겨주었다. 이 감동과 부채감은 그 이후 한국 민주화운동을 이끈 정신적 원천으로 승화되었고 마침내 1987년 6월에 국민적 항쟁의 형태로 분출하였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7년항쟁<sup>14)</sup>이 전개된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은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세력과 반민주세력이 충돌한 최후의 대규모 시민항쟁이었으며 이 사건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두면서 민주화세력들의 발언권은 크게 강화되었다. 5.18광주항쟁 역시 6월항쟁의 승리와 함께 부활하여 궁극적으로 승리한 사건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한마디로 5.18광주항쟁은 4.19혁명, 반유신투쟁,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민주화의 봄을 있는 보편적·전국적 성격의 민주화운동을 계승했다.

그러나 광주항쟁의 성격에는 이런 보편성 외에 특수성도 존재한다. 이 특수성은 1980년 봄의 민주화운동이 전국적인 성격을 띠었고, 특히 '서울의 봄'이라는 용어처럼 서울지역이 중심적 역할을 하였는데 왜 5.17비상계엄확대조치 이후 광주에서만 저항이 계속되었는지를 밝혀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유신시대 때 광주지역의 민주화운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때 전남대는 서울대, 경북대와 함께 가장 많은 희생자들을 배출했다. 이들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들은 학교에서 제적되고 수감생활을 한 후 1980년 봄까지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긴급조치 9호가 발효 중인 1978년 6월에는 '교육지표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전남대 교수 11명이 국민교육헌장의 비민주적·비교육적 내용을 비판한 '우리의 교육지표'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가 체포, 해직된 사건이었다. 이 시국선언문은 본래 서울지역 교수들이 주도했고 전국 교수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었는데 도중에 사건이 탄로 나면서 이미 서명한 전남대 교수들의 성명서만 공개되었다. 이 사건으로 전남대 교수 11명이 체포되자 전남대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전개했다. 이 시위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제적되었다.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들과 교육지표 사건 관련자 등 유신시대 민주화운동 세력들은 1980년 봄까지 학교 밖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반정부 투쟁을 전개했다. 1980년 봄 전남대 민주화운동은 유신시대 때 구속 제적되었다가 복학한 이들 학생들이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들 제적학생들의 활동으로 광주지역 민주화운동의 저력이 그만큼 튼튼해졌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만으로 5.18광주항쟁의 특수성을 설명할 수는 없다. 시민들이 학생들의 시위에 적극 동참하여 시민항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광주 및 호남지역의 정치 및 사회경제적 배경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박정희 시대의 호남지역은 사회경제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첫째,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컸던 호남지역은 공업 우선 및 농촌 희생정책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둘째, 공업화 정책에서의 소외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고 이를 통해 형성된 것이 동남해안 공업벨트와 서울 경기지역의 공단이었다. 호남인들은 자연히 이 중첩된 모순구조의 최대 피해자가 되었다. 호남 푸대접론이 나오게 된 배경 중 하나이다.<sup>15)</sup> 박정희 정권은 인재등용에서도 호남

14) 필자는 1980년 민주화운동부터 1987년 6월 항쟁까지의 민주화운동을 '7년 항쟁'이라는 명칭 하에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1987년 6월항쟁까지 1980년대 모든 민주화운동은 좌절된 광주항쟁 정신의 계승이며 확대였기 때문이다.

15) 이종범, 『5·18항쟁의 지역적 배경』, 5·18기념재단,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2. 5·18항쟁의 원인과 배경』(2007), 363-381. 367-368쪽; 김동욱,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구조와 항쟁주체」, 5·18기념재단,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2. 5·18항쟁의 원인과 배경』(2007), 363-381쪽.

인들에 대한 차별정책을 펼쳤다. 관료사회의 호남 배제 분위기는 민간부분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호남출신들은 개인적 능력과 무관하게 출신지역 때문에 취업과 승진의 기회를 제약당할 수밖에 없었다.<sup>16)</sup>

호남인들은 이런 차별정책에 분개하게 되고 그 타개책을 민주정권의 수립에서 찾고자 했다. 박정희가 피살되자 호남인들은 당연히 유신체제는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호남인들은 민주정부가 들어설 경우 군부독재체제하에서와 같은 차별이 시정 내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호남인들은 김대중의 집권에 대한 기대감도 가졌다. 사회경제적 소외를 많이 겪은 호남인들에게 김대중은 반독재민주화 투쟁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동향인으로서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소외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로 각인되었다.<sup>17)</sup>

전두환과 신군부가 5월 17일 저녁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시켰다. 신군부는 비상계엄 확대를 통해 일체의 집회금지, 정치활동금지, 파업금지, 언론 사전검열, 대학휴교령 등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정지시켰다. 또 그들은 17일 저녁에 김대중 등 주요 민주인사들을 체포 구금했다. 사실상 쿠데타나 다름없는 폭거였다.

당연히 호남인들의 실망과 분노는 클 수밖에 없었다. 민주정권의 수립은 물론이요 호남인들에게 가해졌던 차별 시정의 기회가 사라져버렸다고 느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분노의 감정을 정의하면서 그것은 자기의 가치와 명예의 위반에 대한 반응이며,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뿐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이,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 일어난 일에도 반응하는 감정이고, 그것은 또한 부정의에 대한 느낌과 인식에 근원을 둔다고 말했다.<sup>18)</sup> 5월 18일 호남인들이 느낀 분노는 민주주의의 무산에 대한 분노, 자신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은 데 대한 분노, 자신들의 지도자이자 희망인 김대중의 체포에 대한 분노 등 복합적이었다.<sup>19)</sup> 제임스 월킨슨은 저항정신을 “반항적 기질과 이상주의의 혼합물”이라고 정의했는데<sup>20)</sup>, 5월 18일 전남대생들은 신군부의 5.17쿠데타에 대한 저항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이상주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시민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계엄군들의 폭력에 분노하여 항쟁에 참여했다. 분노는 시민들이 항쟁에 참여하게 만든 주된 동기였던 것이다.<sup>21)</sup>

1980년 5월에 광주시민들은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 정신적 위해보다는 아니라 체포와 같은 신체적 위해, 그 중에서도 특히 총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최악의 국가폭력을 경험했다. 시위에 나선 사람은 물론이요 시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어린이, 부녀자,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무차별로 때리고 총을 쏘는 만행은 사실 전쟁 중에도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도 전투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총을 겨누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군인의 경우에도 포로나 비전투원에게는 총을 쏘서는 안 되게 되어 있다. 계엄군이 광주에서 저지른 만행은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극도로 원초적인 폭력행위였다.

광주시민들은 이런 야만적이고 원초적인 폭력에 맞서 총칼을 들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의 행위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폭력정부를 무너뜨리고 민주정부를 세우기 위한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 행위였다. 광주항쟁이 위대한 것은 폭력적인 국가권력에 맞서 싸운 불

16) 김만흠, 『한국정치의 재인식: 민주주의 지역주의 지방자치』(풀빛, 1997), 178쪽 ; 최영진, 「정체성의 정치학」, 『민주주의와 인권』 1/2 (2001), 325-360, 332쪽.

17) 이광일은 김대중의 사상과 정치행위를 70년대와, 그 이후 현실정치인으로서 신자유주의에 순응한 시기로 구분하여 이해했다. 70년대의 경우 김대중은 진보적·개혁적 정치노선을 걸었으며, 이런 점에서 그의 존재는 기존의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으로부터 분화된 비판적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출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광일, 「5·18민중항쟁과 현재, 그리고 김대중: '정치사회학적 입장'에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5·18과 한국 민주주의, 그리고 김대중: 5·18민중항쟁 31주년 기념 학술회의』(2011), 55-68, 61-62쪽.

18) 김영미·이병호, 「분노 감정의 정치학과 <제인 에어>」, 『근대 영미소설』 19/1 (2012), 33-61, 34쪽.

19) 최영태, 「5.18민중항쟁과 김대중」, 『역사학연구』 57(2015), 199, 204-206쪽.

20) James D. Wilkinson, 『지식인과 저항: 유럽, 1930-1959년』, 이인호 역 (문학과 지성사, 1984), 11쪽.

21)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오월의 봄, 2012), 158쪽.

굴의 용기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목숨을 내던진 정의감과 숭고함 때문만도 아니다. 광주시민들은 군경이 철수한 이후 일주일 동안 자발적으로 질서유지에 나서고, 부상자들을 위한 헌혈에 참여하였다. 일주일 동안의 치안 부재상태와 2,000여명의 무장 시민군이 배회하는 속에서도 40여개의 금고가 안전하게 보존되고 평상시보다 범죄율이 더 낮았다. 총을 든 사람들 중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 소위 버림받은 최하층의 젊은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7일 동안의 범죄 없는 세상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광주는 국가권력으로부터는 인권과 평화를 유린당하였고, 반면에 국가권력이 부재한 시기에는 오히려 평온함과 화목함을 느끼는 역설적 현상을 경험했다. 제도화된 국민주권의 장치가 무너진 상태에서 광주시민들이 혼란과 무질서 대신 상호이해와 연대, 신뢰 등에 기초한 공동체적 집합의지와 자치를 실험한 것은 매우 독특한 경험이었다.<sup>22)</sup> 광주시민들은 5.18항쟁 기간에 세계 혁명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남북분단을 국내정치에 적절히 이용해 온 군부세력들은 1980년 광주항쟁 때도 어김없이 남북분단을 민주화세력을 짓밟고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데 활용하려 했다. 최규하 대통령은 '5·17비상계엄확대'를 발표하면서 "북괴의 격증하는 적화책동이 학원소요를 고무 선동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치인, 학생, 근로자들이 조성하고 있는 혼란과 무질서가 우리 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으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5월 21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지난 18일 수백 명의 대학생들에 의해 재개된 평화적 시위가 오늘의 엄청난 사태로 확산된 것은 상당수의 타 지역 불순인물 및 간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시설 파괴·방화·장비 및 재산 파괴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 선동하고 난동행위를 선도한 데 기인된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sup>23)</sup> 계엄군은 '독침사건'을 조작하여 간첩들의 소행으로 몰아갔고, 시위군중 속에 간첩들이 침투해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 시민들 중 상당수는 이런 사태를 예견했고 이에 대비했다. 광주지역 학생들은 5·18항쟁 발발 직전인 5월 중순의 대규모 시위 때 '김일성은 오판 말라'라는 구호를 외쳤다.<sup>24)</sup> 전남대학교수협의회는 5월 13일 발표한 시국선언문에 "북괴는 국민의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오판하지 말라"는 경고 구절을 포함시켰다.<sup>25)</sup> 5월 항쟁기간은 광주시민들이 정부와 계엄군에 대해 극도의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던 시기였다. 자연히 시민들의 구호와 시민군이 뿌린 유인물에는 과격하고 격렬한 내용들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투사회보」를 비롯하여 각종 단체와 개인들이 발표한 성명서와 유인물 등에서 이념문제와 관련하여 당국으로부터 의심을 살만한 구호나 주장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유인물들에서는 "김일성은 순수한 광주 의거를 오판하지 말라"라는 구호<sup>26)</sup>와, 계엄군들로 하여금 "부모형제를 향하여 겨누고 있는 총부리를 즉각 거두고 반공·국토방위 임무에만 전념해 주기 바란다"<sup>27)</sup>는 구절 등이 발견되었다.

광주시민들의 이런 절제는 신군부가 광주항쟁을 이념문제화하려는 시도를 실패하게 만들었다. 광주항쟁이 이념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은 항쟁 후 전국의 민주화세력들에게 광주항쟁의 진실규명과 학살자 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었다. 광주항쟁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비교적 빨리 이루어진 것은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광주항쟁의 이런 탈이념적

22) 한상진,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본 국민주권과 승인투쟁」, 5.18기념재단 주제 학술회의, 『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1998), 57쪽.

23)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1997), 20, 29, 141쪽.

24) 「김대홍의 증언」,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풀빛, 1990), 569쪽.

25)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50년사: 1952-2002』(전남대학교 출판부, 2002), 506~507쪽.

26) 「광주시민여러분께」(1980.5.26),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2, 81쪽.

27) 목포시기독교연합회비상국기도회, 「광주시민혁명에 대한 목포지역 교회의 신앙 고백적 선언문」(1980.5.26), 위의 책, 69쪽.

성격 때문이었을 것이다.<sup>28)</sup>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미국에 대해 매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인들의 눈에 비친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국가였다. 1980년 광주시민들도 미국에 대해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5월 27일 도청을 사수했던 항쟁지도부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 그들은 항쟁을 며칠 더 지속하면 미국이 독재자 전두환 세력을 응징하고 광주항쟁을 도울 것으로 기대했다.<sup>29)</sup>

그러나 이런 기대는 완전히 어긋났다. 광주항쟁이 진압된 얼마 후 광주시민과 한국인들은 미국이 신군부세력의 권력 장악을 묵인 내지 동조했고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행위에 대해서도 묵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광주시민과 전국 민주화세력들의 배신감은 매우 컸다. 이런 배신감은 1980년대 반미운동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광주항쟁의 경험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대한 시각에 대전환점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다.<sup>30)</sup>

광주항쟁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축소판적 성격을 지닌다. 민주화운동을 폭력으로 진압한 정부의 비민주적·비인간적 행위는 사실 광주에서 처음이 아니었다. 1948년 제주 4.3항쟁, 1961년 5.16 쿠데타, 1972년 유신체제의 등장, 유신체제하에서 발생한 수많은 인권유린행위, 부마항쟁 등 수없이 많은 국가폭력과 반민주적 행위가 있었다. 이런 반민주적 행위의 배후에는 항상 극우반공주의와 빨갱이 논리가 존재했다.

광주항쟁 때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을 향해 보인 투쟁과 용기, 계엄군이 철수한 이후 일주일 동안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은 한국 민주화세력들의 도덕성 및 평화에 대한 의지와 상통한다. 1980-1990대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최루탄과 곤봉에 맞서 행한 투쟁의 치열성, 2016-2017년 촛불혁명 때 한국인들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의식은 1980년 광주의 부활이었다.

한국 현대사에는 억눌린 대중들의 항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예들 들면, 1948년 제주 4.3항쟁, 1960년 4.19혁명,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6월항쟁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항쟁들 중에서 광주항쟁을 제외하고 그 항쟁을 직접 계승하고 진전시키려는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된 사례는 별로 없었다. 그러나 광주항쟁은 달랐다. 최소한 1987년까지 7년 동안 광주항쟁 계승운동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광주항쟁의 후속운동으로서의 5월운동은 항쟁 못지않게 지열한 투쟁의 과정이었으며, 그 결과 1980년 5월에 비극적으로 끝났던 항쟁을 다시 살려냄으로써 승리한 항쟁의 역사를 만들어 냈다.<sup>31)</sup>

### 3. 광주항쟁의 세계사적 위상

광주항쟁은 한국민주화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20세기 후반 세계 민주화운동사에서도 특별한 위상을 갖는다. 계엄군의 잔악성과 이에 맞선 시민들, 시민군의 등장, 7일 간의 자치, 항쟁기간 중 시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 5월 27일 새벽 시민군들의 장렬한 산화 등 여러 면에서 5.18은 세계인들에게 특별한 기억과 감동을 남겼다. 게다가 5.18항쟁은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적 발달에 힘입어 세계적 위상을 더욱 높였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서구 민주주의 발달의 이정표 역할을 했다면 5.18항쟁은 20세기 후반 제3세계 민주화운동의 이정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이런 점에서 5.18광주항쟁의 과제는 전국화뿐만이 아니라 세계화이기도 하다.

광주항쟁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운동사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과

28) 최영태, 「극우 반공주의와 5.18광주항쟁」, 『역사학연구』 26(2006), 139쪽.

29) 위 논문, 136-137쪽.

30) 이종인,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인물의 미국에 대한 인식」, 『사회과학연구』 36/2(2012), 92-93쪽.

31) 나간채, 「5월운동에서 국제연대의 발전과정 분석」, 『민주주의와 인권』 9/2(2009), 98쪽.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서 유사한 점들이 많다. 한국과 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한 지배와 해방투쟁, 새로 수립된 권위주의와 군사주의에 의한 억압체제 경험 등을 공유하고 있다. 또 1980년 광주항쟁 이후에 발생한 필리핀(1986), 타이완(1987), 미얀마(1988), 중국의 천안문(1989), 타이(1992), 네팔(1992), 인도네시아(1998) 등지의 항쟁사례들은 독재권력에 대해 저항한 민주화운동으로서 일정한 유사성을 갖는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아시아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항쟁들이 패배로 끝났지만, 광주항쟁은 항쟁 이후에도 5월운동을 통해서 가해자들을 단죄하고 그 당시에 폭도로 몰려던 민중이 민주화유공자로 명예를 회복하는 역사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이런 점들이 작용하여 광주항쟁과 5월운동은 자연스럽게 아시아를 포함한 제3세계 민주세력들에게 주목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sup>32)</sup>

세계 인권선언 50주년이 되는 해인 1998년 5월 17일, ‘아시아 인권선언’이 광주에서 공식 선포되었다. 산지와 리야나지 아시아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아시아 인권헌장’이 광주에서 선포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시아인의 민주주의의 불꽃을 상징”하는 곳이며 또한 “우리가 결별하고자 하는 세계와 우리가 미래에 구현하고자 하는 세계의 상징이다. 광주민중항쟁은 20세기 중 의미 있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지 못한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의 경험을 상징한다.”<sup>33)</sup> 아시아 인권위원회(AHRC) 바실 페르난도(Basil Fernand) 위원장은 2005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아시아민주주의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인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아시아에서 먼저 정치적 민주화를 이뤄낸 한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고 있는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sup>34)</sup>

아시아인권 광주포럼에 참석한 존 클란시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장은 “광주는 희망으로 가득한 도시이며 꿈의 도시”라고 말하고, “광주의 정신은 세계 타 지역에서 평화, 민주주의, 인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광주 시민들의 헌신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의 인권 운동가들이 광주에 온 것은 “계엄령과 압제의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이웃, 친구, 친척들이 광주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치며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당시를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광주 시민들은 압제 속에서도 신념으로 하나 되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역사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우리(아시아인)는 광주의 정신을 찬미하는 목소리에 우리의 소리를 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단지 과거를 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광주의 정신과 시민들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민주 정부 수립과 법치 사회 건설의 영감을 불어넣고 그러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타 지역 사람들과 광주시민들의 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돕고 그들이 자신들의 꿈의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sup>35)</sup>

조지 카치아피카스(Georgy Katsiaticas)는 1968년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 68혁명을 설명하면서 ‘에로스 효과(eros effect)’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카치아피카스는 “해방을 향한 본능적 욕구(에로스)에 대한 자각, 혹은 이 자각이 특정한 사회적 조건이나 시공간을 뛰어넘어 동시다발적으로 공명을 일으키는 현상이 바로 에로스 효과”이며, “자유를 향한 본능적 욕구의 집합적 승화”라고 정의했다.<sup>36)</sup> 카치아피카스는 ‘에로스 효과’의 개념을 적용하여 5.18광주항쟁이 아시아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32) 나간채, 「5월운동에서 국제연대의 발전과정 분석」, 106-107쪽.

33) 산지와 리야나지, 「아시아 인권헌장: 1998-2005, 그리고 아시아법치헌장」, 『아시아인권광주포럼발표문』(5.18기념재단, 2005), 72-73쪽.

34) 『한겨레신문』(2005. 6.12).

35) 존 클란시, 「민주주의, 인권, 평화, 그리고 법치」, 『아시아인권광주포럼발표문』(5.18기념재단, 2005), 66-70쪽.

36) George Katsiaticas, 『좌파의 상상력: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본 1968』, 이재원 역(난장, 2009), 28쪽.

고 주장했다. 그는 1988년 미얀마의 민주화운동, 1989년 중국의 천안문 사건, 1990년 네팔의 민주화운동, 1992년 태국의 민주화운동, 1998년 인도네시아의 민주화운동 등을 거론하면서 1980년 광주항쟁은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1980년대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민주화운동은 광주항쟁의 ‘에로스 효과’라고 주장했다<sup>37)</sup>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민주화가 각기 그 사회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전개되면서도 지구적인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팅턴은 1974년 포르투갈의 민주화 이행을 시작으로 민주주의의 “제3의 물결”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197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에 번진 민주화의 물결로 인해 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약 30여 개국이 다시 민주주의로 복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헌팅턴은 제3의 물결이 초래된 요인 중 하나로 생활수준 향상, 교육기회 증대, 도시 중간계급을 급속하게 증대시킨 1960년대의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들었다. 세보르스키 등(Przeworski, et al.)은 인접 국가들의 민주주의 수준이 높고 민주주의 국가의 수가 많을 경우 민주주의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검증했다. 올로그린 등(O’loughlin, et al.)은 지구적 차원에서 국가들의 민주주의 점수가 강한 균질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이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대상 국가들이 인접 국가들과 유사하게 변화되는 확산의 경향이 존재함을 입증하였다.<sup>38)</sup>

5.8기록물은 2011년 5월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011년 등재명은 ‘인권기록유산-1980년 5월 18일 군사정권에 대항해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항쟁 관련 기록물’이다. 유네스코는 5.18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그 사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5.18민주항쟁은 남한의 민주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냉전구조를 해체시키고 민주주의를 성취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이후 필리핀, 대국, 중국 등에서 여러 가지 민주화운동이 발생했고 또 그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의 발자국을 따르려는 시도가 있었다. 1980년 5월 18일-27일 사이에 한국의 광주에서 발생한 항쟁과 관련된 자료들은 시민들의 항쟁, 가해자들의 처벌 보상 등과 관련된 서류, 사진, 영상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sup>39)</sup>

유네스코가 밝힌 것처럼 5.18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5.18 민주화운동이 한국의 민주화는 물론 필리핀·태국·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민주화 과정에서 실시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 사례 등도 여러 나라에 좋은 선례가 되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세계의 학자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전환기의 정의(transitional justice)’라는 과거 청산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말한다. 그들은 남미나 남아공 등지에서는 국가폭력과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과거청산작업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광주에서는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 회복’, ‘피해 보상’, ‘기념사업’의 5대 원칙이 모두 관철되었다는 점을 주목했다.<sup>40)</sup>

5.18항쟁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5.18항쟁을 매개로 한국과 아시아국가 민주화운동가들 사이의 국제연대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광주시민연대가 중심이 된 국제연대활동은 광주항

37) George Katsiaficas, 「역사속의 광주항쟁」, 5.18기념재단, 『5.18민주항쟁과 정치·역사·사회-5.18민주항쟁의 의의』 (심미안, 2007), 96-99쪽.

38) 안승국, 「동아시아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공간적 확산분석: 분석모형의 구축과 확산효과의 측정」, 『지역연구』 13/2(2004), 53-54쪽.

39) UNESCO. 2011. “Human Rights Documentary Heritage 1980 Archives for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against Military Regime, in Gwangju, Republic of Korea”, Memory of the World.

40)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참조.

**2017 한국서양사학회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역사 속 민주주의 위기와 대안 모색**

쟁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항쟁의 정신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있다. 1994년 5월에 열린 ‘해외에서 본 5.18’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움, 1995년의 ‘반인륜행위와 청산’에 관한 심포지움, 1996년의 ‘5.18 정신계승 제1회 국제청년캠프’, 1998년에 있었던 ‘아시아 인권현장 선언대회’ 등이 그 사례이다. 특히 ‘아시아 인권현장 선언대회’는 98년 5월에 광주에서 아시아 지역 16개국 36명의 인권전문가와 운동가들이 국내의 활동가와 결합하여 아시아 지역의 인권현실,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형태, 인권기구의 필요성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거쳐 ‘아시아 인권현장’을 선포하고 ‘광주선언’을 채택하였다.<sup>41)</sup>

5.18기념재단도 국제연대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친선교류활동으로는 아시아민주희생자가족 초청, 광주국제평화캠프, 국제평화포럼 등이 있고, 교육활동으로는 해외 동포자녀 초청, 아시아NGO 인턴쉽, 광주아시아인권학교 운영 등이 있으며, 국외NGO재정지원사업도 있다.

2000년부터는 광주인권상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매년 1명씩 수여하는 광주인권상 수상자의 명단과 국적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인권상 수상자 명단

	수상자	국가	기타
2000	사나나 구스마오(Xanana Gusmao)	동티모르	
2001	바실 페르난도(Basil Fernando)	홍콩	
2002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한국	
2003	단테니야 자안티(D. G. Jayanthi)	스리랑카	
2004	아웅 산 수찌(Aung San Suu Kyi)	버마	
2005	와르다 하피즈(Wardah Hafidz)	인도네시아	
2006	말라라이 조야(Malali Joya) 양까나 닐라빠이짓(Angkhana Neelapijit)	아프카니스탄 태국	
2007	이롬 샤밀라 차누(Irom Sharmila) 레닌 라구와니쉬(Lenin Raguvanish)	인도 인도	
2008	무니르 말리크(Muneer A. Malik)	파키스탄	
2009	민 꼬 나잉((Mia Ko Naing)	버마(미얀마)	
2010	수실 파큐렐(Sushil pyakurel)	네팔	
2011	비나약 센(Binayak Sen) 특별상: 평화를 위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유가족협회	인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2012	문정현	한국	
2013	H.I.J.O.S 특별상: 주간지 ‘템포’(Tempo)	아르헨티나 인도	
2014	하바란의 어머니들(이란, 2014) 아딜루 라흐만 칸(Adilur Rahman Kahn)	이란 방글라데시	
2015	라띠파 아눔 실레가르(Latifah Anum Siregar) 특별상 솜바스 솜폰(Somebath Somphone)	인도네시아 라오스	
2016	누옌 단 쿠에(Nguyen Dan Que) 말레이시아 Bersih 2.0	베트남 말레이시아	
2017	자투팻 분팻타라락사(Jatupat Boonpattaraksa) 특별상수상자: 세르지 밤바라(Serge Bambara)	태국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스	

(2011년, 2013년에는 특별상 수상자도 선정함)

41) 나간채, 「5월운동에서 국제연대의 발전과정 분석」, 108쪽

#### 4. 맺음말

5.18광주항쟁은 계엄군의 만행, 항쟁의 치열성, 높은 시민의식, 그것이 향후 한국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사에서 특별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5.18광주항쟁은 또한 20세기 후반 지구상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다. 그것이 지향하는 정신과 이념은 세계사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카치아피카스가 말한 ‘에로스 효과’처럼 아시아의 민주화세력들에게 많은 용기와 영감, 그리고 자국에서의 민주화운동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었다.<sup>42)</sup> 당연히 5.18광주항쟁은 전국화 못지않게 세계화의 대상이다.

지금까지 5.18광주항쟁의 성격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의 흐름이 있었다. 첫째는 정부의 공식적 입장으로서 그것을 ‘민주화운동’으로 보는 견해이다. 둘째는 자유주의적 관점으로서 ‘의거’, ‘민주항쟁’ 또는 ‘시민항쟁’으로 보는 시각이다. 셋째는 진보적 관점으로서 ‘민중항쟁’으로 보는 견해이다.<sup>43)</sup> 명칭 및 성격 규정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일정한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의 차이를 내포하는 것으로서<sup>44)</sup>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 또 하나 5.18광주항쟁이 1970년대 반독재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있지만, 동시에 1980년대 혁명적 대항이데올로기의 원천이 되었다는 점<sup>45)</sup>도 그 성격 규정에 어려움을 던져 준다.

지금까지 사용된 5.18광주항쟁의 명칭은 다양했다. 그 변천 자체가 5.18광주항쟁의 역사적 평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노태우 정부 출범 직후 구성된 ‘민주화합추진위원회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이후 이 명칭은 정부의 공식적인 명칭으로 굳혀졌다. 다른 한편 재야·민주진영에서는 ‘5.18광주민중항쟁’, 혹은 ‘5.18광주항쟁’이라는 명칭을 널리 사용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전국화라는 명분으로 5.18광주항쟁의 명칭에서 ‘광주’라는 지역 명을 빼려는 움직임이 있어났다. 5.18광주항쟁관련단체 및 민주·진보진영에서 이를 선도하였다. 그 결과 5.18광주항쟁은 민주·진보진영에 의해 ‘5.18광주민중항쟁’ 혹은 ‘5.18광주항쟁’으로 불려졌다. 이런 시도는 정부의 명칭 사용에도 영향을 미쳐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명칭 및 각종 법률 등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18민주화운동’으로 바뀌어졌다.

5.18광주항쟁의 명칭에서 ‘광주’를 뺀 과정과 이유 등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명칭에서 광주가 삭제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과연 이런 조치가 당초 의도인 5.18광주항쟁의 전국화에 기여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역사적 사건의 명칭을 결정할 때 유·불리를 기준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5.18광주항쟁의 명칭에 대한 논의 때는 전국화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시민사회·재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5.18민중항쟁’이라는 명칭이 적절한지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5.18광주항쟁을 ‘민중혁명’으로 보는 견해는 5.18광주항쟁 이후 급격하게 변동된 이데올로기의 지형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5.18광주항쟁은 1970년대 민주화운동 및 1980년 봄 전국적으로 전개된 민주화운동의 계승적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 5.18광주항쟁에서 노동자·농민·빈민·소상공인 등 기층민중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항쟁의 횃불을 처음 든 대학생들, 항쟁 순간순간 함께 한 수십만 시민들의 존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통상적으로 사건의 성격

42) 최영태, 「관계·비교로 본 5.18광주항쟁」, 『역사에서의 지역정체성과 문화』(엔터 북, 2010), 216쪽.

43) 김창진, 「시민의 저항과 무장항쟁」, 광주광역시 5.18광주항쟁사료편찬위원회, 『5.18광주민중항쟁사』(도서출판 고령, 2001), 292-316쪽.

44) 손호철, 「80년 5.18광주항쟁: 민중항쟁인가, 시민항쟁인가?」, 『해방 50년의 한국정치』(새길, 1996), 171쪽.

45) 김정환, 「5.18광주항쟁 이후 사회운동의 이데올로기 변화」, 『민주주의와 인권』 10/2(2010), 161쪽.

이 명칭에 반영되는 수준은 대개는 혁명, 항쟁, 사건, 운동 등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5.18광주항쟁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 파리코뮌이나, 성격논쟁이 진행 중인 천안문사건, 프랑스 2월혁명의 명칭 등이 성격논쟁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필자는 5.18을 '5.18광주항쟁'으로 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sup>46)</sup> 향후 서양사학회에서 5.18의 성격 및 명칭문제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

46) 최영태, 「5.18광주항쟁의 명칭문제」, 142-145쪽 참조



2017

한국서양사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 역사 속 민주주의 위기와 대안 모색

한국서양사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Western History

---

(02447)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6 경희대 문과대학 사학과 민유기 교수 연구실

Tel. 02) 961-0716 E-mail. westernhistory@hanmail.net

Homepage <http://www.westernhistory.or.kr>